표지와 동일한 면지

목 차

• 축 사
• 발간사

Ⅰ _박근혜정부 13대 실정(失政) ····· 1

Ⅱ _총평 ····· 7

Ⅲ _상임위 분야별 박근혜정부 4년평가 ····· 15

운영위원회 ····· 17
법제사법위원회 ····· 22
외교통일위원회 (외교 분야) ····· 36
외교통일위원회 (통일 분야) ····· 39
국방위원회 ····· 44
안전행정위원회 ····· 55
정무위원회 (비금융 분야) ····· 64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 69
기획재정위원회 (경제 분야) ····· 75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분야) ····· 84
농해수위원회 (농림 분야) ····· 92
농해수위원회 (해양수산 분야) ····· 107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자원 분야) ····· 118
국토교통위원회 ····· 126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 분야) ····· 173
보건복지위원회 (복지 분야) ····· 183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분야) ····· 189
환경노동위원회 (노동 분야) ····· 200
여성가족위원회 ····· 215
교문위원회 (교육 분야) ····· 219
교문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분야) ····· 227
미방위원회 (과학기술 분야) ····· 240
미방위원회 (방송정보통신 분야) ····· 245

Ⅳ _통계로 본 박근혜정부 ····· 271

축사

추 미 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입니다.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취임식 선서는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준수, 국가를 보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던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는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고,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는 역대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받았고, 불통 정치와 분열의 정치로 대한민국은 갈등과 반목의 구렁텅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 약속은 '국민불행시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최악의 취업난에 이 땅의 청년들은 꿈을 접어야만 하고, 1천만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1,344조 역대최고치를 기록한 가계부채로 가계는 더욱 힘겨워 하고, 지난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어르신들은 노후준비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5천만 국민 모두가 한결같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무능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행위에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거라는 말만 반복하는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무전략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외교 활동을 펼치지도 못하고 있어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AI 사태에 이어 구제역까지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축산농가와 소비자 등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불행이 지속되어선 안 됩니다. 무너진 헌법과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으로부터 국민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경제 및 안보상황을 수시로 챙겨 국민 불안을 덜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보듬기 위한 노력과 튼튼한 외교안보 수립을 위해 책임지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오직 대통령 탄핵 방어에만 열중하는 상황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도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촛불민심을 받드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당이 펴내는「박근혜정부 4년 평가서」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평가서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냉철히 평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지침서로 널리 쓰이길 기대합니다. 평가서를 발행하기 위해 애쓰신 윤호중 정책위의장님과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정책실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7. 2. 23

발간사

윤 호 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아직도 1년이나 남았다고?"

박근혜정부 4년을 맞은 국민의 반응은 한마디로 "지겹다"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무능·무관심·무대책으로 우리나라를 "경제몰락" "안보몰락" "민생몰락" "외교몰락"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2013년 2월 25일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때만해도

우리 국민은 한국도 선진국처럼 여성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자부심과 비록 보수집권 세력이지만 경제민주화와 복지강화, 문화융성을 이룩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대로 박근혜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국민행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최순실과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하여 미르재단 등을 설립해 놓고 재벌·대기업의 약점을 잡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뜯어내 가로채려다 들통이 났다.

또한, 대기업을 압박하여 특정기업의 물품이나 광고가 그 대기업에 납품되도록 강요하는 등 사사로운 이익추구에만 몰두하고,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였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새빨간 거짓공약을 제시해 놓고, 이를 비판하는 원내대표에게 독설을 뿜어대며 대표직에서 내려오게 하더니 20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오기 정치'까지 했다.

대통령은 집권 2년차부터 자신의 무능정치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개선되지 않자, 모든 것을 "국회 탓"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최순실 혜택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서비스 발전법이나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기까지 했다.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수 백 명의 학생들이 수몰되고 있는데도 긴박한 7시간동안 대통령의 행적은 아직도 밝히지 않는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무능한 지도자가 국민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일본 수상과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 '삐짐 외교'와 섣부른 사드 배치로 중국 등 4강 외교에 적신호를 울린 것도 모자라,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외교에 한국은 끼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 탄핵 이후, 서민경제는 더욱 몰락하고, 국론은 분열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특검수사 거부와 헌재 재판지연 등으로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대통령은 4년 동안 무능과 부패를 이만큼 보여주었으면 됐다.
대통령은 얼마나 더 나라를 망쳐놓아야 속이 시원하단 말인가?
탄핵 인용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대통령의 결단만 내린다면 국민의 속은 시원해질 것이다.

며칠 전 청와대가 '박근혜정부 4년 실적 백서'를 만든다는 기사를 보고 혹시라도 박근혜정부가 거짓 실적으로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담아'박근혜정부 4년평가서'를 준비하였다.

다시는 무능한 정부로 인하여 국민이 고통 받는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보고서를 국민에게 바친다.

2017. 2. 23.

I

박근혜정부 13대 실정(失政)

박근혜정부 13대 실정(失政)

1. 비선실세 국정농단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재벌 등 대기업에 특혜 제공의 대가로 미르재단 486억원, K스포츠재단 288억원, 총 774억원의 기부금을 강제로 불법 모금 하였고, 비선실세가 대통령 연설문을 개인의 자격으로 수정하거나, 부처의 장·차관과 외국 공관장 인사를 좌지우지하여 정부의 인사시스템 붕괴를 초래하였음. 또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하여 70년대 통제사회로 회귀시켰고, 국가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각종 이익을 챙기도록 국정을 농단하는 등, 문화, 체육, 교육, 의료, 개발원조 등 전 분야에 걸쳐 이권개입과 특혜를 주고받아, 헌정사상 최초로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였으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정권

2.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국민안전대책

-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부재 : 제 역할을 못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정부·대통령의 무능·무책임으로 인한 세월호 사태 발생, 경주 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우려 등 대형재난·재해에 대한 대처 미흡
- 무책임하고 무능한 방역 :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을 '철새 탓', 확산은 '농가 탓'으로 돌리고 있고, '물 백신' 파동으로 무능함을 보였고, 살처분보상금 축소조치로 농가의 공분을 샀음. 메르스 사태는 초동대처 미흡, 방역 역량 부실, 컨트롤타워 부재, 정부의 비밀주의 등 박근혜정부 대응의 무능과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줌

3. 가계부채 1344조원으로 증가, 서민경제 적신호

박근혜정부는 대선 공약 1호를 '가계부채 해결'로 내세웠지만, 부동산경기 부양에만 급급하다보니 가계부채가 2016년말 현재 1344.3조원으로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 서민경제 위험수위 도달

4. 최악의 실업난, 최악의 청년실업난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로 2017년 까지 15~64세 고용률을 70% 달성을 제시하고, 매년 목표치를 제시하였으나 4년 연속 목표 달성 실패. 오히려 박근혜정부에서 20대 청년 실업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취업률은 하락

5. 주거빈곤 심화

주택가격에서 30%~50% 차지하는 토지를 상위1%가 55.2%, 상위10%가 97.6%를 독점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단 1평도 갖지 못하고 있음. 박근혜정부는 「목돈 안드는전세」 공약은 폐기했고, 「행복주택20만호」는 입주실적 3,500호에 불과. 13차례 부동산·주거대책은 경기부양수단으로 인식하여 무주택 서민 주거 빈곤은 더욱 심화

6. 경제민주화 공약 불이행

박근혜정부 4년간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은 총 18개 중 5개에 그쳐 이행 실적이 28%로 저조할 뿐 아니라 미흡이행한 공약 5개, 미이행 공약도 8개에 달함 오히려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단행, 입찰담합 등 기업비리에 대해 면죄부 부여, 재벌들로부터 사적인 기부금품 수령 등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후안무치를 자행

7. 노동개악

박근혜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의 노동개악을 추진.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은 재벌대기업들이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에 입금을 하고 그 대가로 노동개혁(노동개악5법+2대지침) 종합선물세트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8. 국민합의를 무시한 일방적·굴욕적인 협정체결 강행

-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 10억 엔에 합의 : 굴욕적 위안부 협상으로 10억 엔에 일본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음
- 한일군사보호협정의 일방적 체결 및 사드 배치 강행 :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안보 공백을 이유로 국회와 국민에 대한 설명과 이해 없는 사드 배치 일방적 강행

9. 개성공단 폐쇄, 냉전시대로 회귀

이명박 정부에서 금강산관광 중단에 이어, 5·24조치를 시행하면서도 개성공단만은 운영·유지해 왔으나, 박근혜정부 들어 개성공단 마저 완전 폐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회귀시킴

10.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박근혜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해 임시정부 법통 부정, 박정희대통령의 경제정책과 혁명 공약 미화, 박정희정권의 독재 정당화, 위안부 학살 은폐·축소 등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로 드러남. '국검정 혼용'이라는 꼼수를 쓰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11.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문화예술계 좌파에 대응하라는 등 지시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창작자의 작품 활동을 지원해야 할 문체부가 정치 검열과 문화계 통제 및 도구로 사용한 블랙리스트 작성. 문체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는 '불법시위 참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을 내부규정으로 두고 운영

12. 정권유지를 위한 언론장악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의 언론탄압 역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전히 언론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일삼고 있으며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야할 공영방송은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언론의 정권 눈치 보기와 권력의 대변자 역할이 극에 달하고

있음. 아직도 정부·여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치밀한 공작을 획책하고 있음

13. 국민연금, 삼성 경영승계 도구로 전락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음에도 '박근혜-최순실'의 외압에 의해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삼성 총수일가는 막대한 이익과 경영권을 공고히 한 반면 국민연금은 수 천 억 원의 손실을 입음

Ⅱ

총평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역대 최악의 박근혜정권 4년

박근혜 정권 4년은 그 어떤 정부와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역대 최악의 무능, 부패 정권의 4년으로 규정한다.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헌정질서가 중단된 사상초유의 사태 중심에는 박근혜대통령이 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비선실세에게 위임한 박근혜 정권을 더 이상 국민은 신뢰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민주정부가 구성되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친재벌정책, 「신정경유착」으로 재벌은 특혜를 입었고, 박근혜-최순실은 사익을 얻었다. 청년실업률 사상최대, 가계부채 폭증 등 민생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고, 우리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은 상실되었다. 남북관계 파탄, 안보위협 증가, 재난대처 실패 등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권 4년간의 총체적 실패와 헌정중단 상황에 대해 현상 진단, 상임위별 통계자료·데이터분석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상세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특히 실정의 평가 영역을 ▲비선실세 국정농단 ▲무능력·무책임 정권이 초래한 경제실패 ▲불통과 독선이 초래한 외교안보 위기 ▲민주주의 후퇴, 헌법적 가치 훼손 4대 부문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정권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사실상 주범으로 특별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였다. 헌정사상 최초로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들은 몇 개월째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고 있다. 대통령이 주범인 이번 사건으로 헌정질서는 파괴되었고, 국정은 마비되었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이 땅에 정의와 공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민주시민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우리 대다수 시민들을 허탈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박근혜정부에 권력을 위임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 권력을 회수하고자 한다.

- **전방위적인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정부의 인사시스템 붕괴, 문화·체육, 교육, 의료, 개발원조 등 전 분야에 이권개입과 특혜 논란**

박근혜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수첩인사, 회전문 인사 등으로 정권의 신뢰도를 상실하였다. 이런 부실한 인사에 더해비선실세가 외국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관장을 임명하고,부처의 장·차관인사에 개입하고, 자신에 불리한 결정을 한 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을 해임시켰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의 이권과 개입된 모든 인사를 최순실의 뜻대로 실행하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동의 이해를 갖고 국정을 농단한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여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강제적으로 모금하고, 문화체육분야 인사, 예산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익을 추구하였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에 일부 교수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그 대가로 이화여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8개를 따낸 교육농단 행위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의 불공정에 대하여 또 한 번의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의료분야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시술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순실과 정유라 모녀의 단골 병원인 김영재 성형외과와 관련기업인 '와이 제이콥스'에 정권차원의 각종 특혜를 제공하였고,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단골병원인 차병원 그룹에도 전방위적인 특혜를 제공하여 박근혜정부의 급격한 의료영리화 정책과 이해가 직결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적개발원조사업(ODA)과 관련하여서도, 최순실은 미얀마 사업이권에 개입하기 위하여 주미얀마 대사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을 자신의 뜻대로 임명하였고, 청와대, LH를 동원하여 이란의 K타워프로젝트 사업의 이권에 개입하였다.

이런 모든 최순실에 대한 특혜와 국정농단의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었고, 대통령은 최순실에 이권을 주기 위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 공기업을 동원하여 국정문란을 야기시켰다.

무능력·무책임 정권이 초래한 경제실패

박근혜정부 4년 동안 발표한 경제정책이나 계획들에 대하여 제대로 이행된 것이 전무하고, 집행된 정책에 대해서도 점검과 평가를 통해 반성과 교정을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전혀 없는 무능·무책임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국가성장동력은 상실되고, 가계부채는 급등하고, 청년실업문제는 악화되었다.

친재벌 대기업 경제정책과 「신정경유착」

「신정경유착」으로 재벌 대기업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하여 편법적 특허사업 확장(롯데, 한화 면세점 특허승인), 2세 승계를 위한 국민연기금 의결권의 편법적 동원(삼성물산 합병 승인), 오너 특혜 사면(SK 등)을 얻어내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뇌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자금 774억을 받아내었다.

MB 때 실시된 법인세 부자감세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지난 2016년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면 거부하였다.

버려진 국민과의 약속,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당선 이후 재벌과 대기업의 포로가 되어 경제민주화를 중도포기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로부터 사적이익을 얻기 위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민생경제 악화, 미래성장동력 상실

시대착오적인 재벌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 의존과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경제정책 시행으로 국가기간 산업은 몰락하고, 서민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청년실업률은 2016년 연간 10.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LTV·DTI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폭증해 가계부채 1,300조원시대가 열렸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중후장대(重厚長大)형 산업이 몰락하고 있고,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전략은 없으며, 4차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불통과 독선이 초래한 외교안보 위기

국민의사 무시한 일방통행 결정으로 대내외 혼란 야기

한일 외교장관간 위안부 합의는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국민적 자존심을 훼손시켰고, 이면합의 의혹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일본대사의 본국 소환으로 한일외교관계를 파국으로 만들었다.

또, 지난 MB 정권시절 국민적 반말로 무산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국회와 국민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추진·체결하여는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역시 군사적 효용성, 동북아 안보상황, 주변국 반발 등 보다 신중한 검토와 국회 논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정부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국내외의 반발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관계는 냉전시대 암흑기로 회귀

박근혜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오직 제재에만 몰두, 대화를 포기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점차 고도화되어 가고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지한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을 폐쇄하여 남북관계를 완전히 차단시켜 냉전시대로 회귀시켰다.

재난안전컨트롤 타워 부재

재난안전컨트롤 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허울뿐인 조직에 불과하여 세월호 사태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세월호 당일 7시간에 대한 해명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세월호 사태 이후 만들어진 국민안전처도 경주 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우려 등 대형재난·재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부실한 방역 체계로 국민 불안과 국가적 피해 야기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총 186명의 환자와 36명의 사망자, 누계기준 1만 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면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보건당국의 미흡한 초동대처와 컨트롤타워의 부재,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의 취약성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의 결정판을 보여주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났고, 3년만에 발생한 구제역에도

정부는 효율적으로 대비하지 못해 우리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음에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농가 탓', '철새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방역체계 실패, 구멍 난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대책도 마련치 않고, 책임회피와 전가에 급급했던 모습은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나쁜 정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였다.

민주주의 후퇴, 헌법적 가치 훼손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와 문체부가 주도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반민주적, 반헌법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권을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비판적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지원 자금'을 매개로 졸렬하게 압박한 박근혜정부의 행위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었다.

헌법을 부정하며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박근혜정부

집회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권력 행사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했다.

언론의 공공·공익성 침탈의 시대

박근혜정부는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언론탄압의 역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전히 언론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일삼고 있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공영방송은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언론의 정권 눈치 보기와 권력의 대변자 역할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6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총 180개국 중 2015년보다 10계단 떨어진 70위로 역대 최저순위를 기록하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박근혜정권 내내 친일독재미화를 위한 역사왜곡 행위가 자행되었다. 임기내 국정 역사교과서 발간을 위해 헌법, 국자재정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국무총리 훈령 등 위법을 자행하며, 변칙적, 졸속, 깜깜이, 꼼수, 누더기 교과서를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가 심판받았으나, 아직도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을 위해 온갖 꼼수를 자행하고 있다.

-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수사,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수사,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 남북정상대화록 관련 수사, 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과 관련하여 수사에 대한 외압행사, 눈치보기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훼손

〈결론〉

- 박근혜정권 4년 동안 민생은 파탄났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은 위협받고 있고, 민주주의적 가치는 훼손되었다.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헌정질서는 중단되었고, 국민의 상실감과 좌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생업을 포기하고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서는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박근혜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신속한 탄핵결정을 외치고 있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 안보, 사회 등 모든 정책은 더 이상 평가할 가치조차 없는 총체적 실패이다. 이로 인한 국민의 고통, 국가의 위기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그 유일한 해결책은 하루라도 빨리 탄핵이 인용되고, 정권교체를 통하여 새로운 민주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를 통해 박근혜정부 4년 동안 파탄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격을 회복하고, 중단된 남북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회복하고,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Ⅲ

상임위 분야별
박근혜정부 4년평가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영길**

1 총평

- **비선실세와 나눈 권력, 주권자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

비선실세인 민간인 최순실 등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관여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해 국가 행정에 대한 직·간접 관여함으로써 국가시스템을 혼란시킴

- 또한 최순실 등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고 재단을 사유화 하는 등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정부 출범 이전부터 각종 정책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이 개입하였고, 2016년부터 최순실 게이트로 비화되면서 검찰특별수사, 특별검사 수사로 이어짐
-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공동 정부라는 비판이 있음

집권초부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 윤창중 대변인 인턴 성추행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집권여당 대표와 중진의원, 비선실세들(대통령 측근들과 친인척)의 권력투쟁, 소위 십상시의 난 등으로 국정농단이 시작되고 결국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이어짐

국회는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범죄 등의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함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 失政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소추 당함

- 국회는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범죄 등의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음
  -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함)**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 **(각종 범죄로 법률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범죄 혐의가 있음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사실상 주범으로 특별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
  - 헌정사상 최초로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고,

국민들은 몇 개월째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고 있음
- 대통령이 주범인 이번 사건으로 헌정질서는 파괴되었고, 국정은 마비되었음
-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이 땅에 정의와 공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민주시민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우리 대다수 시민들을 허탈하고 분노하게 됨

- 전방위적인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정부의 인사시스템 붕괴, 문화·체육, 교육, 의료, 개발원조 등 전 분야에 이권개입과 특혜 논란
-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여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강제적으로 모금하고, 문화체육분야 인사, 예산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익을 추구함
-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에 일부 교수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그 대가로 이화여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8개를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음
- 의료분야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시술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순실과 정유라 모녀의 단골 병원인 김영재 성형외과와 관련기업인 ‘와이 제이콥스’에 정권차원의 각종 특혜를 제공함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단골병원인 차병원 그룹에도 전방위적인 특혜를 제공하여 박근혜정부의 급격한 의료영리화 정책과 이해가 직결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신정경유착」으로 재벌 대기업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하여 편법적 특허사업 확장(롯데, 한화 면세점 특허승인), 2세 승계를 위한 국민연기금 의결권의 편법적 동원(삼성물산 합병 승인), 오너 특혜 사면(SK 등)을 얻어내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뇌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자금 774억을 받아냄

인사 난맥상 : 인사검증 실패, 낙하산, 보은 인사

- 박근혜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수첩인사, 회전문 인사 등으로 정권의 신뢰도를 상실

- 당선인 때 내정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문제,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사퇴하고, 이후에도 방산업체 관련 의혹을 받고 낙마한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내정자 등 장관 후보자들이 일부 낙마
-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논란이 벌어져 비판이 크게 제기되었고, 특히 여론의 비판 및 야당의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스캔들을 일으키는 등 취임 초기부터 인사 문제를 겪어서 인사 참사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음
- "인사참사"는 집권 2년차에도 이어짐. 2014년 6월 24일, 전관예우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총리후보자 안대희에 이어 후보자로 지명된 문창극마저 사퇴함으로써, 4명의 국무총리 후보자 중 3명이, 또한 2명의 후보자가 연달아 인사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함
- 2014년 7월에는 김명수 교육장관 내정자가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지명이 철회되고, 문체부 장관 내정자는 위증 논란으로 사퇴하는 등 인사 문제가 계속되었음
- 종국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이 외국 공관장을 임명에 개입하고, 행정부처 장·차관인사에 개입하며, 자신에 불리한 결정을 한 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을 해임시키는 등 인사를 농단하였음

세월호 사건은 정권의 총체적 무능이 부른 참사

- **세월호 여객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정부의 초동대처 미흡과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로 생존자 구조에 실패**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문**
  -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답을 끝내 얻어내지 못했고, 참사 직후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던 대통령은 유가족이 그렇게도 염원했던 면담을 끝까지 거부함
  - 청문회와 국회 운영위에서도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끝없이 추궁했지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이라거나 대통령이 있는 곳이라면 그 곳이 집무실이라는 등의 애매한 답변만 함

- 또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책임 회피성 태도로 국민적 공분을 삼

3 박근혜정부 공약 미이행, 파기 실태

(박근혜공약) 일하는 국회, 공정한 국회를 위한 국회개혁 :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 (실적) 없음
- (평가) 애초에 실현하지도 못할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꼴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일환**

1 총평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수사,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수사,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 남북정상대화록 관련 수사, 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과 관련하여 수사에 대한 외압행사, 눈치보기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훼손

부정부패 및 비리의 만연, 검찰과 법원의 불신심화

- 집권1년차 당시 박근혜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김학의)이 성 접대의혹으로 취임 후 엿새 만에 사퇴하는 사상초유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함을 필두로, 집권 4년차에는 '비리의 종합선물센터'로 지칭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외에도 '주식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몰래 변론 등 전현직 검사의 각종 비리가 발생
-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 가중
  - 2016년 여론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7명(70.4%)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89,9%가 "검찰수사가 돈이나 인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응답하여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 법조분야에 대한 국민의 불신심화
  - 2016.12.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결과 기업인(일반기업체와 자영업자 종사자)의 3명중 2명 꼴로(66.9%) 공공부문의 부패가 '심하다'라고 응답하여

2013년 57.6%에 비해 기업인의 공공부문 부패심각도가 현저히 악화

- 법조(법원·검찰)분야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와 관련, 기업인 가운데 72.2%가 법조분야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2013년 61.4%)
- 공직내 직종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과 관련, 판사와 검사 등을 포함한 법조인의 부정부패 심각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9.1%가 법조인의 부정부패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
- 사법기관의 부패감시 및 통제기능의 수행정도와 관련, 기업인의 79.7%가 부패감시 및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 감사원의 부패감시 및 통제 기능과 관련, 응답자의 73,4%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

-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발표결과 우리나라는 176개국 가운데 52위(100점 만점에 53점)를 기록하여'절대부패를 벗어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 2015년의 37위에서 무려 15계단을 하락하여 1995년 부패인식지수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OECD 순위도 35개국 중 29위로 2단계나 하락하여 하위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아시아권에서도 싱가포르(7위, 84점), 홍콩(15위, 77점), 일본(20위, 72점), 대만(31위, 61점)보다 낮은 수준이며, 보츠와나(35위, 60점), 브루나이(41위, 58점), 르완다(50위, 54점)보다 낮은 수준

경제민주화 실종

- **대규모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보호, 집중투표제의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성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을 공약했으나 실행되지 아니하여 재벌 총수의 전횡 지속**
- **대기업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한다고 공약했으나 미이행**

- WEF가 발표한 201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박근혜정부는 참여정부 말기(2007년)에 비해 ▲기업이사회의 효율성은 23단계, ▲소수주주 이익보호는 21단계, ▲사법체계의 독립성은21단계,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무려 81단계나 하락
  - 기업이사회의 효율성 109위, 소수주주이익보호 97위, 사법체계의 독립성 72위, 정책결정의 투명성 115위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 失政

(1)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 훼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수사,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수사,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 남북정상대화록 관련 수사, 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과 관련하여 수사에 대한 외압행사, 눈치보기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 심화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은 대통령과 문고리3인방 등에 대해 정권 눈치보기 소극적 수사로 일관
  - 대통령 개입의혹과 관련,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변
  -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사실상 포기
  -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사건 관련성이 없다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 정호성도 즉각 소환하지 않고 늦장 소환
  -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은 우병우의 사퇴후 비리관련 늦장 소환에 착수하고,

-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된 지 80여 일이 지나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팀을 구성한 후 75일만에 소환
  - 민정수석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욕도 천명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결여된 뒷북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일관
- 국정원 특별수사팀에 대해 수사초기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법리 재검토 지시 등 부당한 외압 행사
  -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 일체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로 사퇴
  - 부당한 외압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한 윤석렬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을 '보고 누락'을 이유로 감찰, 각각 정직1개월의 중징계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하고 수사팀을 교체하여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
- 대화록 실종의혹 사건 관련자는 기소하고, 남북정상 회담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된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면죄부 주기'식 수사로 일관
- 이른바 '십상시'로 지칭되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모, 한모 경위만 기소하고 의혹의 핵심인 정윤회와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해서는 소극적 수사로 일관, 대통령 측근과 비선그룹의 각종 인사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시도조차 하지 않음
-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와 관련,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인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아 국민적 관심사인 새누리당 대선자금 제공 혐의와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금품전달의혹은 사실상 무혐의 처리. 부실수사와 면죄부 주기로 일관한 불공정 수사라는 비판이 대두

(2) 부정부패와 비리로 점철된 전현직 검찰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전현직 검찰 출신의 비리와 추문의 만연

- 집권1년차 당시 박근혜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김학의)이 성 접대의혹으로 취임 후 엿새 만에 사퇴하는 사상초유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함을 필두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집권4년차에는 '비리의 종합선물센터'로 지칭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외에도 '주식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몰래 변론 등 전현직 검사의 각종 비리가 발생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 및 정윤회 문건 유출관련 사전 인지 및 묵인 은폐와 여론조작, 직무유기 의혹,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의혹, ▲최순실 등 국정농단 주범과 비선실세 유착 의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증거인멸 및 조직적 은폐 의혹, ▲'검사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 ▲처가 강남부동산 넥슨 특혜 매입 의혹, ▲진경준 전 검사장 부실 검증 의혹, ▲홍만표 변호사와 몰래 변론 의혹, ▲의경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탈루 의혹, ▲화성 차명 땅 농지법 위반 의혹, ▲'효성그룹 형제의 난' 변호 의혹 등 각종 의혹의 당사자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검찰

- 스폰서 검사, 벤츠검사, 성접대 검사, 막말검사, 성추문검사에 더하여 급기야 해결사 검사와 수형자 편의제공 검사까지 등장, 검찰이 비리와 추문의 온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미봉책으로 일관. 자정능력을 상실한 퇴행적 검찰상을 노정
  -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이진한 검사에 대한 솜방망이 경고처분, 바바리맨 제주지검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피살된 재력가 송모씨와 관련한 정모 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부부장 검사의 음식점 여주인 금품 수수 감찰 도중 사표수리, 명동사채왕 금품수수 수사관 불구속 기소 등 다방면에 걸쳐 발생

- 검찰수사관 비리와 관련, ▲ 한국선급 압수수색과정에서의 수사정보 누설, ▲마약 전문 검찰수사관의 피의자 금품 수수와 날림수사, ▲고소인과 동거하면서 금품 수수, ▲버스에서 잠든 여성의 성추행, ▲구속 피의자의 아내 성추행, ▲명동사채왕 수사편의제공 및 금품수수의혹, ▲수조원대 사기범 조희팔 비호 및 금품수수 등 검찰수사관의 각종 범죄와 비리 및 추문이 잇달아 발생
- 국정원 불법 대선·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 좌천성 인사 단행, 부당지시 외압의혹의 당사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차장검사는 징계대상에서 제외
- 형사법체계를 교란하고 국기를 흔든 국정원 증거조작 개입의혹 사건과 관련, 재판부에 조직된 증거를 제출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는 정직 1개월, 당시 공안1부장이었던 최성남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3개월을 청구하고, 결재라인에 포함되었던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2차장은 징계에서 제외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

(3) 검찰개혁의 실종

법무부 문민화와 탈검찰화의 실종

-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미이행
  -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를 공약했으나 취임하자마자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필두로 다수의 현직 검사를 행정관으로 임명하고 검사의 편법파견을 되풀이
  -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법무부를 제외한 외부기관에 파견된 연도별 검사 수는, 2013년 62명, 2014년 63명, 2015년 9월 초 69명으로 오히려 증가
  - 법무부에 실국장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핵심 직책인 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감찰관을 모두 검사가 독차지 2016년 법무부에 근무중인 검사 수는 모두 71명으로 정원(662명)의 11%에 달하고 있는 실정

- 감찰 담당자는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한다고 있으나 현 법무부 감찰관을 검찰출신으로 임명

공수표로 그친 검찰권한의 정상화

- **비리 검사 퇴출, 검찰권한의 대폭축소와 검경수사권조정을 공약하였으나 미이행**
  -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적격 검사의 조기 퇴출, 징계사유의 명확화와 처벌 수위 강화, 비리 퇴직 검사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 공약 미이행
  -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미이행
  -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검경수사권조정 공약 미이행
-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기구특검적 성격을 지닌 상설특검제의 도입과 특별감찰관제를 공약했으나 제도특검적 성격을 지닌 상설특검제를 도입하여 시늉에 그침**
  -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청구를 비롯한 기소여부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미이행

무위로 끝난 검찰 인사혁신

-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시키겠다고 하였으나 유명무실한 추천위원회를 통해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고,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명**
-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소속검사장이 결정하는 한편,'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나 미이행**

(4) 공안통치의 부활과 인사난맥

공안검찰의 구축과 인사난맥

- 취임 초 법무부 장관(황교안)의 임명을 필두로 대통령 비서실장(김기춘), 청와대 민정수석(홍경식) 등 주요 요직에 공안 출신 검사들을 배치하여 공안통치의 부활을 기도
  - 김기춘 비서실장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검찰총장 재임당시 공안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도하며 공안정국을 주도, 법무부장관으로 승진. 법무부장관 재임당시 발생한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불법선거를 조장한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
  - 김기춘비서실장(경남 거제), 김진태 검찰장(경남 사천), 김수민 국정원제2차장(부산) 등 PK 출신 검사들을 주요 요직 배치
  - 이명제 전 검찰총장의 청와대 민정특보 임명, 우병우 민정수석, 유일준 공직기강비서관 등 검찰출신인사의 청와대 중용으로 정권의 검찰 통제와 길들이기 우려 고조
  - 청와대 하명에 따른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킨 최윤수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국정원 2차장으로 임명하여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공안통치 우려를 자초
  - 특수수사역량강화와 대형부정부패사건의 전담 수사 필요성을 명분으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설치하였으나,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수부를 부활
- 특정인맥의 구축을 통한 검찰 통제
  - 이른바 검찰의 '우병우 사단'으로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 윤갑근 특별수사본부 팀장,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김주현 대검 차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유상범 창원지검장,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안태근 검찰국장 등이 거론

검찰권의 무리한 남발과 공안국면 조성

- **민변소속 변호사에 대한 공소권 남용과 과다한 징계 신청**
  - 권영국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변호사 징계를 신청하여 공소권을 남용하고 사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변호권의 무력화를 기도
  -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과 진술거부권 고지 등 변론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당연한 기본권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 허위증언과 묵비권을 강요했다고 강변하며 징계를 신청했으나 변협은 정당한 활동이라며 이를 기각
-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의 국론분열을 언급하자마자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명예훼손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이버 검열 기도라는 비판을 자초**
  -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 공유로 허위사실 유포사범을 상시 적발, 명예훼손사범의 원칙적 구공판과 실형선고 유도 등 무관용 원칙의 적용 등 과도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음
  - 공직자나 유력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빌미로 사이버 검열을 시도하는 것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전체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권위주의시대로의 회귀에 다름아니라는 비판 대두
  - 카카오톡 압수수색 및 감청과 관련, 국민의 사생활보호와 통신 비밀보장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검찰의 압수수색청구와 법원의 영장 남발 가능 우려 야기
- **'헌법가치 부정세력 엄단',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과 안보위해사범 수사역량 강화', '불법시위 삼진아웃제 확대 실시 등 반복적 불법시위자 엄단 방침' 등을 빌미로 공안 통치 기조 강화**
  - 서울남부지검과 의정부지검에 공안부를 신설하고 서울남부지검에는 공안부를 지휘하는 2차장 자리를 신설하는 등 검찰의 공안 조직 강화

(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 훼손

세월호 참사관련 청와대 부실감사

-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과 청와대의 대응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구조실패와 관련한 청와대의 감사에 소극적으로 대응
  - 청와대 방문조사에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통령비서실과 보고라인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사하지도 않고 불과 하루 만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실무 행정관만 대면조사하고 A4 2장 분량의 서면 확인서만 받는 등 총체적 부실감사로 일관

정권실세 봐주기감사

- 중진공 채용비리관련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 감사원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비리 덮어주기 감사로 일관
  -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모두가 인정한 이사장의 최경환 의원실 방문 내용이 빠져 있고, 보고서에 언급된 청탁 관련자 3인은 비리주체를 밝혔으나 최경환 의원만 실명을 밝히지 않고 유일하게 '외부'라고만 언급
  -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 중진공 이사장 등 관련자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참고자료 송부로 대체

메르스사태 부실감사

- 적극적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킨 사태의 최고 책임자인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하등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고 중간 실무자만 문책, 문형표 장관은 오히려 퇴임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공직에 복귀하여 감사 발표지연과 관련하여 이사장 선임 시간 벌어주기 감사의혹 대두
  - 첫 감염자 발생 14일 만에 청와대가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과 관련, 복지부의 청와대 보고체계와 최종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늦장 대응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도 않음

사후약방문으로 일관한 감사원 뒷북감사

- 산업은행부실관련 구조조정 7개 기관감사, 해외자원개발감사, 4대강 감사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뒷북감사로 일관

(6) 경제민주화의 실종

무위로 끝난 대기업지배구조개선

- 대규모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보호, 집중투표제의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성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을 공약했으나 실행되지 아니하여 재벌 총수의 전횡 지속
- 대기업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한다고 공약했으나 미이행
  -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대기업 총수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4대강과 고속철도사업 등에 대한 입찰담합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기업 건설사를 사면대상에 포함
  -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제외되었던 대형건설사 입찰담합을 사면대상에 포함시켜 공정한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처사 노정

(7) 미진한 군사법개혁

지지부진한 군사법개혁

-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는 ▲현행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법원 산하 특수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두거나, 지방법원 합의부에 군사부를 설치하고, ▲ 선고된 형량을 지휘관이 감경해주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 일반장교가 법관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도'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특위권고안과는 달리 국방부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제도, 심판관제도 등을 사실상 존치

3 박근혜정부 공약 미이행, 파기 실태

말뿐인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

-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조사권을 부여해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했으나 국정농단의혹을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을 감찰내용누설이라는 터무니 없는 의혹을 제기하여 사퇴시키고 특별감찰관실의 사실상 해체를 청와대가 주도
- 상설특검도입과 관련, 현행처럼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구특검의 성격을 부여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하였으나 제도특검의 도입으로 무늬만 상설특검으로 전락하여 특검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함
-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특별감찰관제 등을 포함한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였으나 무위에 그침

검찰개혁의 실종

-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시키겠다고 하였으나 유명무실한 추천위원회를 통해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고,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명
-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소속검사장이 결정하는 한편,'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나 미이행
-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미이행

-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를 공약했으나 취임하자마자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필두로 다수의 현직 검사를 행정관으로 임명하고 검사의편법파견을 되풀이
-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법무부를 제외한 외부기관에 파견된 연도별 검사 수는, 2013년 62명, 2014년 63명, 2015년 9월 초 69명으로 오히려 증가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하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건 유출 사건 관련의혹의 당사자였던 우병우 민정비서관으로 임명
- 법무부에 실국장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핵심 직책인 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감찰관을 모두 검사가 독차지 2016년 법무부에 근무중인 검사 수는 모두 71명으로 정원(662명)의 11%에 달하고 있는 실정
- 감찰 담당자는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한다고 있으나 현 법무부 감찰관을 검찰출신으로 임명

비리 검사 퇴출, 검찰권한의 대폭축소와 검경수사권조정을 공약하였으나 미이행

-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적격 검사의 조기 퇴출, 징계사유의 명확화와 처벌 수위 강화, 비리 퇴직 검사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 공약 미이행
-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미이행
-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검경수사권조정 공약 미이행

공염불로 끝난 대기업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 미이행

- 대기업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한다고 공약했으나 미이행

- 대규모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미이행
  - 소액주주의 이익보호, 집중투표제의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성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 미이행

이행되지 않는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 대통령 소속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설치 등 정부차원에서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조치를 마련한다고 했으나 미이행

외교통일위원회 (외교 분야)

수석전문위원 **채규영**

1 총평

無전략·無원칙의 일방적인 독선외교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외교 네트워크 붕괴, 비선실세의 외교인사·개발협력사업 이권개입으로 우리 외교의 근간마저 망가져버린 총체적 외교실패

- 국익우선의 원칙 없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 눈치외교로 일관하고, 대일, 대러외교의 일관성 상실로 외교관계 악화
  - 집권전반기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승절 참석 등 친중행보로 일관하다 뚜렷한 계기 없이 사드 한반도 배치 등 반중 친미노선으로 급격히 전환하여 미국의 신뢰상실, 대중관계 최악
  - 위안부 해결 없이 대일관계 정상화 없다면서 대일강경책 고수하다, 대일관계 진전 없고, 미국이 압박하자 최악의 위안부 협상 합의
- 비선인사가 재외공관장인사에 개입하고, 개발협력사업 이권에 개입하는 등 우리의 외교시스템 전반에 걸친 농단으로 외교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상실과 국격훼손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차, 失政

(1)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대중, 대러관계 악화

-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대중, 대러관계 악화와 동북아의 불안정성 확산
  -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충분한 실효성 검증과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없이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가속화

-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 중국은 우리의 대중수출과 투자기업에 대해 직간접적인 방식을 통하여 규제
- 국내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도 분열

(2) 북한제재 올인 외교로 우리의 외교적 기반 붕괴

- **북한제재에 대한 국제사회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중국의 적극적 협력 없이는 대북제재 실효성 확보 불가능**
  -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외교적 자산을 대북제재노력에만 올인하여, 우리의 외교력을 낭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입지를 축소
  - 북한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미 공조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나, 중국의 협력보다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적 대결구도 형성

(3) 굴욕적 위안부 협상은 대통령의 역사인식과 외교전략의 부재를 반증

- **굴욕적 위안부 협상으로 일본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소녀상 문제로 주한 일본대사까지 본국으로 귀환하는 등 한일관계 최악의 상황**
  -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는 위안부 합의로 국내적 반발과 국제적 망신 초래
  - 일본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이면합의 의혹으로 국민적 불신 초래하고, 일본대사의 본국 소환으로 한일외교관계 파국

(4) 외교전반에 걸친 비선실세 개입으로 국민적 신뢰 상실과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신 추락

- 비선실세 최순실이 미얀마 대사 임명에 개입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이권에 개입함으로서 외교인사와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 상실

3 박근혜정부 공약 미이행, 파기 실태

북핵문제 해결

- 실적 없음
- (미이행)
  - 남북한 간 북핵문제 해결 위한 실질적 협의 추진
  - 6자회담에 새로운 동력 주입 위해 노력
  -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 조치 강구

외교통일위원회 (통일 분야)

전문위원 **김종수**

1 총평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한반도 정세 악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협력 제로시대로 냉전시대로 회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지 못하고 제재로 일관하는 무능한 정부

- **박근혜 대통령 당선(2012년 12월) 이후 3차례의 핵실험(2013년 2월, 2016년 1월, 9월)이 진행되었으며, 2016년 한 해에만 24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비약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제재에만 몰두
  - 북한은 핵을 경량화, 소형화, 다양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음
  -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다자협의체인 6자회담이 2008년 12월 이후 장기 표류 상태
  - 우리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와 개성공단 폐쇄, 독자적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큰 구멍'이 존재하고 있어 제재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 2016년 7월, 한미당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를 합의. 이에 대한 중국 반발로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 도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
  -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에만 몰두한 채 남북대화,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음

개성공단 폐쇄, 남북관계는 냉전시대 암흑기로 회귀

- 정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의 하나로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언
  - 이명박 정부에서 금강산관광 중단, 5·24조치를 시행하면서도 개성공단만은 유일하게 운영·유지해 왔으나, 박근혜정부 들어 개성공단 마저 완전 폐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완전 차단. 냉전시대로 회귀
  - 통일부장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의 70%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여 향후 남북경협 재개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무리수를 둠
  - 박근혜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제시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본질적 해결 노력을 하지 못해 튼튼한 안보는커녕 국민 우려만 조장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 간의 기초적인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으며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해진 상황이며, 통일대박은커녕 통일을 이야기하기엔 남북 간의 기초적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못한 최악의 상황임

대통령, 구호는 '통일대박' 현실은 '통일쪽박'

-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을 주창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등 통일 분위기 조성에 나섰'통일대박'을 으나 남북관계는 냉전시대 암흑기로 돌아가 '통일쪽박' 상 또한, 우리정부는 외치면서도 개성공단 폐쇄, 남북교류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5·24조치를 유지하는 모순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남북교류·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5·24조치를 유지한 채 남북관계 발전 도모는 모순이며 한계가 명확

-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 제재로 취한 것이 이른바 5·24조치

임. 5·24조치와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북한의 대중국 의존은 날로 심화되어 2007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67.1%에서 현재 거의 90%를 차지. 남북 경협 중단으로 인해 남한의 경제 피해액이 약 90억 달러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음

2 집권 4년 대표적 실정

(1) 한반도·동북아 안보의 핵심 우려 사항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방치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로 한반도 정세 악화

- 북한은 2016년 한 해에 2차례 핵실험, 24차례의 미사일 실험 발사를 감행. 이로 인해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더욱 악화.
  -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제재와 압박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의 근본적,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나 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
  - 북핵문제에 남북관계를 전적으로 종속시켜 북핵문제가 악화되어도 북한에 대한 개입력이 없어 전혀 개선의 동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음.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병행 발전으로 전환이 필요.

(2)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 제로시대, 우리경제의 활로를 차단하는 자해행위

2016년 2월 10일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 결정을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 그러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위반한 위법행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위해서는 헌법 제76조1항에 따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행사하거나 혹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제4항이 보장하는 경협사업

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임.

-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2013년 8월 14일) 위반. 남북은 합의서에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라고 합의한 바 있음.

-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핵심 근거는 임금의 핵·미사일 전용설임. 명확한 전용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강변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심각한 국제문제가 될 수 있음.
  - 개성공단 폐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 우리정부 독자적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성공단 폐쇄 등 대북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임. 즉 북핵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법이 바로 개성공단 폐쇄인 것임.

-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개성공단 폐쇄 비선실세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어, 16.12.15 개성공단 기업협회(회장 정기섭), 개성공단 폐쇄 결정 과정에 최순실 등 비선 개입 의혹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를 요청.
  -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수사요청서에는 △한겨레신문 보도된 바와 같이 최순실이 주도한 비선모임의 논의 주제 중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이성한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할 것, △올 2월 초까지 청와대와 정부는 개성공단은 대북제재 수단이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2월 10일 전격 폐쇄를 결정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입장이 변화된 이유를 낱낱이 조사, △2014년 통일대박론을 갑자기 제기했다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등 대북강경책을 구사.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 배경에 최순실이 관여했는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 △최근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유출한 외교자료 등 180건의 문건 중 대북정책이나 개성공단에 관한 건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미얀마 K타운 건립 조성 사업에 최순실 개입이 드러나면서 개성공단 폐쇄가 미얀마 K타운 건립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의도의 일환이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인데, 국민적 공감대 없이 폐쇄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관계 특수한 경직성 때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복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될 것임.
또한 우리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미사일 발사를 명분으로 폐쇄 조치를 취했기에 '출구'를 찾기가 힘들어 이번에 폐쇄 조치를 취하게 되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영구 폐쇄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개성공단 폐쇄의 경우 북한에 대한 개입 지렛대가 전무한 상황이 되어 오히려 북한이 안보적 위협을 부담 없이 전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임. 즉 개성공단이 우리안보의 마지노선 역할을 해 왔는데 우리정부가 선제적으로 폐쇄할 경우 이런 안보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이상협**

1 총평

말뿐인 안보, 총체적인 안보무능으로 인한 국민적 혼란과 불안감 고조

말뿐인 안보, 국방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

- 지난 참여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8.8%에 달했지만, 박근혜정부에선 3.7%로 참여정부 국방예산 대비 40% 수준에 그침
- 역대 최저 수준의 국방예산 편성으로 북 핵 및 탄도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독자적 미사일 대응 체계(KAMD, Kill Chain)전력화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수년 이상 지체 됨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고도화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에 따라 대응전력 공백 발생 및 국민적 불안감 고조

- 제5차 북 핵 실험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에 따른 안보 공백 현상 초래
  -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시험 성공에 따라 우리 군은 이동식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에 대비한 대응전력이 없어 사실상 안보 공백 상황 발생
- 북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확한 대북정보수집의 한계 노출

말뿐인 소통,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의사결정 강행

- 북 핵 및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안보 공백 대안으로 일방적인 사드 배치 발표
-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 失政

(1) 말뿐인 안보, 국방예산에는 무관심

박근혜정부 4년, 국방예산 증가율 역대 최저 수준

- 참여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8.8%에 달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절반 수준인 5.3%로 감소하였으며, 박근혜정부에선 3.7%로 국방예산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
- 역대 정부 국방비 증가율 분석표('04~현재)

연도	대통령	국방비(억원)	정부재정증가율(%)		국방비증가율(%)	
2004	노무현	18조 9,412	1,7	8,82	8,1	8,76
2005		21조 1,026	12,5		11,4	
2006		22조 5,129	8,7		6,7	
2007		24조 4,972	6,5		8,8	
2008		26조 6,490	14,7		8,8	
2009	이명박	28조 9,803	13,4	6,16	8,7	5,32
2010		29조 5,627	△1,1		2,0	
2011		31조 4,031	4,3		6,2	
2012		32조 9,567	6,3		5,0	
2013		34조 4,970	7,9		4,7	
2014	박근혜	35조 7,056	2,7	3,72	3,5	3,72
2015		37조 4,560	6,2		5,2	
2016		38조 7,995	2,3		3,4	
2017		40조 3,347	3,7		4,0	

(2) 안보무능에 이어 안보공백 초래

제4차 북한 핵실험 사전 징후 포착에 실패

- 북한은 '16. 1. 6. (수) 10:30경 함북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나 군과 정보당국은 사전 징후 포착 실패

지속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 및 정보수집오류

- '16.2. 7. 09:30분경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
- 발사 직후 우리 측 이지스함 레이더를 통해 이동 경로 잠시 중 6분 후인 9시 36분경에 제주도 서남방 해상(고도 380여km)에서 사라져 추적 실패
- 이외에도 △'16.9.5.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 ER 탄도미사일을 군 당국은 노동미사일이라고 분석·발표했다가 번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 전까지는 북한의 개발 수준 능력을 평가 절하 하였다가 발사 성공 이후 공식 인정, △'17.2.12.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군 당국은 노동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무수단급(개량형)으로 재 번복 등으로 국민적 혼란 초래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에 따른 안보 공백 상황 초래

-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독자적 방어체계(KAMD,킬체인)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전력화까지는 향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구축 현황

구분	PAC-2	PAC-3 (미군운용)	M-SAM (천궁)	M-SAM Block-II(철매)	L-SAM
사거리(Km)	30Km		20km	40km	70km
요격고도	15km	22km	15km	15km	35~50km 이상
용도	종말단계 하층방어		종말단계 하층방어	종말단계 하층방어	종말단계 하·중층방어

최대속도	마하 5		마하 4.3	마하8	미정
탐색기	RF		RF	MRF	IIR(1COLOR)
주요 구성요소	교전통제소, 그린파인 레이더, 발사대				
전력화시기	현재운용	18년 이후	20년 이후	23년 이후	25년 이후

- 특히 현재 추진중인 한국형 독자적 방어체계는 북한이 지상에서 발사하는 고정식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전력으로 최근 시험발사 성공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처럼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해선 대응 할 수 있는 전력이 없어 사실상 안보 공백 상황 발생

(3) 말뿐인 소통,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의사결정 강행

북 핵 및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안보 공백 대안으로 일방적인 사드 배치 추진 강행

- 사드 배치 추진경과

2월	2일	▸ 한·미 연합사령관이 국방부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배치 건의
2월	7일	▸ 국방부, 외교부, NSC 내부검토 후 배치 공식화
3월	4일	▸ 부지선정을 위한(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 후 출범)
3월 ~ 7월		▸ 3월~7월 : 관계부처(외교부, NSC)와 한·미 공동실무단과의 가용성 회의
7월	7일	▸ 관계부처 협의/ NSC 최종결정
7월	**13일**	**▸ 사드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 확정**
8월	4일	▸ 대통령 주재 경북지역 의원 간담회(제3부지 검토 요구)
8월	21일	▸ 성주군수 성명서/ 제3부지 검토 공식 요구(까치산, 염속봉산, 달마산)
8월	22일	▸ 국방부 의견 수렴 표명. 제3부지로 지목된 3곳의 부지 평가
9월	**30일**	**▸ 국방부 사드배치 제3부지로 '롯데스카이힐 CC' 확정 발표**
10월	2일	▸ 국방부 사드배치 부지, 대토 방식 공식화(국회 비준 우회 목적)
11월	7일	▸ 국방부-롯데 측과 대토 방식으로 수도권 3곳의 후보지 제안
11월	16일	▸ 국방부-롯데, 사드배치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군용지 교환 합의
12月~ '17. 2月		▸ 감정평가 완료 및 부지 이전 합의 종료 예정, 환경영향평가 등

- 사드 배치에 있어서 군사적 효용성을 비롯한 다양한 외교·안보적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안보논리로 추진 강행에 따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주변국과의 긴장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사드 배치의 찬반논쟁을 떠나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인 북극형 2형의 고각 발사, 이동식발사대 기술력 등으로 인한 사드운영 및 효율성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는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사드관련 참고자료**

THAAD미사일 (theater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적의 중거리미사일을 격추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방어시스템 -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망체제의 구축 요청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1992년부터 개발이 완성되기까지 약40억달러 투입 - 1999년 시험발사 성공까지 거듭된 실패로 개발사인 록히드마틴은 1998년 미 국방부에 1,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도 했음 ◎ **THAAD는 지상 배치이동형**으로, 패트리어트미사일보다 **상층권에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속도와 정확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짐 ◎ **THAAD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며, 발사대 1기당 8발의 미사일 장착** - 즉 1개 포대는 총 48발의 미사일로 구성 - **1개 포대 구매 비용은 약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으며, - 미측 전문가들은 남한 전역에 배치하기 위해선 THAAD 2~4개 포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므로 미사일 비용만 어림잡아 4조~8조원가량이 필요하다는 것임 ◎ THAAD의 핵심 구성품에는 미사일 외 **AN/TPY-2라는 고성능 X밴드 레이더가 필요** - AN/TPY-2는 최대 탐지 거리가 1800㎞ - 하와이에 배치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추적하는 거대한 석유시추선 형태의 해상배치 레이더(SBX)가 X밴드 레이더임 - 그런데 AN/TPY-2는 해상배치 X밴드 레이더보다 훨씬 작아 수송기 등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동성이 뛰어남 - 미국은 중국의 ICBM 등을 겨냥해 일본 내 기지 2곳에 이 레이더를 배치해 놨으며, 일본보다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에도 이 레이더의 배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2년 백령도에 이 AN/TPY-2 레이더 배치를 허용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비공식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짐

- 사드배치의 문제점 ① : 동북아 불확실성 증대
  - 사드가 방어무기라고는 하나, 전략무기체계로서 과거 대륙간 탄도탄 방어유도탄 협정(ABM Treaty)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음. 즉 대륙간

탄도탄(ICBM) 보유 기수 만큼,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방어유도탄을 몇기 보유할 것인가가 냉전기 미소간 군축협상의 주요 의제였던 것처럼 동북아에서 사드 배치는 역내 민감한 변수일 수 밖에 없음

- 특히 사드가 견제할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드러내놓고 반대하고 있으며,
- 이들이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남북관계 진전과 동북아 평화·번영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사드는 중·러 등에 산재한 미국의 잠재적 위협들을 감시·추적할 것이고, 역으로 이들 국가들은 한반도에 있는 위협을 적대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서 역내 긴장을 조장하고 군비경쟁과 군사적 불확실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척될 것임

◎ **사드배치의 문제점 : 군사기술적 유용성 의문**

- 사드 체계가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보다 정밀도 등 성능면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완벽한 방어를 보장해준다고는 할 수 없음. 따라서 이 무기체계의 배치에 대한 군사적 득실 자체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남북한 간 종심이 짧은 전장환경을 고려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중거리 탄도유도탄으로 성층권을 경유하여 남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 값싸고 정확도도 훨씬 높으며 효과도 강력한 장사정포와 단거리 로켓·미사일 등으로 공격할 개연성이 월등할 것임
- 결론적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남한 방어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군사 기술적으로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사드배치의 문제점 : 궁극적인 방위비분담금 상향 우려**

- 초고가 장비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이상 당장 우리나라의 재정적 부담이 즉시·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 기본적으로 해외주둔 미군의 주둔 비용을 해당 주둔국과 분담하고 그 분담률을 높여간다는 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왔으며,

- 사드 1개 포대 배치 금액으로는 1조3천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결국 방위비 분담금의 상향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임
- 나아가 기존 무기체계 도입 사례와 같이 언젠가는 주한미군의 사드체계를 우리에게 이양할 것이고, 비록 초기에는 무상양여 한다고 할지라도운영유지비·성능개량비만도 상당할 것으로 그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음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 2012년 당시 MB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국회 및 국민적 동의 절차를 무시한 채 밀실 추진을 강행하려다 국민적 반발이 심해지자 중단됨
- 이후, 작년 9월 까지도 국방부 내부적으론 한 ·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나, 10월 이후 한 ·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공식 발표한 지 한달 여만에 협정 서명 완료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경과

1989년		▸ 우리 정부 일본 측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제안 (노컷뉴스 보도)
2007년	3월	▸ 한·일 정보교류회의 시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일본 측에 협정 체결의사 타진
2011년	1월	▸ 한·일 국방장관회담 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실무협의 추진 합의
	2월	▸ 외교부 주관 한·일 2+2(외교, 국방) 과장급 협의 진행
2012년	7월	▸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가결 / 일본 각의 의결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직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체결 연기 결정
2014년	4월	▸ 한·미 정상회담 시 한·미·일 정보공유 중요성 인식 확인
	5월	▸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시 정보공유 MOU 논의
	12월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6년	9월	▸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논의
		▸ 한·일 국방장관 전화 통화에서 일본 측,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 주장
		▸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 측,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제안
	10. 28	▸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 재개 발표
	11. 01	▸ 한 ·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1차 실무회의
	11. 09	▸ 한 ·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회의
	11. 14	▸ 한 · 일 양국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11. 22	**▸ 국무회의 의결**
	11. 23	**▸ 한 ·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공식 서명**

-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국민적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는 것임을 깨닫고 협정 유효기간 종료 시에는 결코 재협약이 체결 되지 않도록 해야 함

(4) 국민과의 약속, 전형적인 말바꾸기로 공약 파기 및 조직적 정치개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

- 2014년 10월 한미 국방장관회담(SCM)과 합참의장회담(MCM)을 통해 2015년 12월부로 한국군에게로 이양예정이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다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제가 완성되는 2020년대 초반으로 연기함으로써 사실상 무기 연기함
  - 2007년 한·미는 2012년 4월 17일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측에 이양하기로 합의했으나, MB정부들어 북한의 위협 증대를 이유로 2015년 12월로 1차 연기한데 이어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조차 파기하면서 무기 연기한 것임

* 전작권 전환연기 추진경과

❍ **1950. 7.14 = 이승만 대통령,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 이양** ❍ 1954.11.17 =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작전통제권으로 용어 대체 ❍ 1961. 5.26 = 국가재건최고회의-유엔군사령부 공동성명, 30·33경비단 등 일부 부대 작전통제권 전환 ❍ 1968. 4.17 = 한미 정상 공동성명, 대침투작전 수행권한 한국군 단독 수행 ❍ 1978.11. 7 = 작전통제권 유엔군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이전 ❍ 1994.12. 1 =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 **2006. 9.16 = 한미 정상회담서 전작권 전환 합의** ❍ 2007. 2.23 =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전작권 전환 시기 2012년 4월로 결정** ❍ 2010. 6.26 = **한미 정상회담서 전작권 전환 시기 2015년 12월로 1차 연기** ❍ 2013. 5 =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한측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요구' 언론 공개 ❍ 2013. 6. 1 = 한미 국방장관회담 싱가포르에서 개최, 전작권 논의 추정 ❍ 2013. 7.16 = 미측, 한국의 전작권 전환연기 제안 사실 확인 ❍ 2013. 8.28 =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연기에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 협의키로 ❍ 2013. 9.29 =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전작권 최종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다" ❍ 2013.10. 2 =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지속 협의합의 ❍ 2014. 9.15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방미** 중 수잔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북핵 문제와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등을 조율 ❍ 2014.10.23 =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과 '2+2'(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확정**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 폐기

- 선거 막판(2일전) 박근혜 후보는 광화문 집중유세 등에서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
  - 새누리당은 선거 초중반까지 김장수 당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전 청와대 안보실장, 전 인수위 외교안보통일분야 간사)등의 발언을 통해 18개월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반대 내지는 신중한 접근을 표방한 바 있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국정과제 발표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혀 5년 내 실현이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결국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여 (사실상) 대선공약 폐기

※ 우리당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병력의 효율화·무기의 현대화·군 조직의 선진화를 목표로 병력을 줄여 경제와 안보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18개월로)을 공약하였음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등 조직적 불법정치개입 사건

- 지난 2013년도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 포털에 댓글을 달고 트위터 등에서 국정원 댓글을 퍼나르는 등 불법적인 정치 개입을 한 사건이 민주당에 의해 밝혀짐
- 그러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대선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사이버사령관(소장)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실제로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이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작전의 상황과 결과가 블랙북이라는 형태로 국방부장관은 물론 청와대까지도 다 보고가 돼 왔다는 것
  - 판결문에 보면 상부에 보고하는 보고서를 새벽에 출근해서 직접 점검하고 오탈자까지 수정을 했다는 것이 나타남

- 이런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그 윗선, 보고서를 받아본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음
- 결국 '제식구감싸기', '꼬리자르기' 수사·재판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함

총선·대선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정치에 개입하는 불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前) 심리전 단장에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꼬리자르기 전형

-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부장관의 직속 부대로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인데 당시 김관진 장관의 책임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음
-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축소·은폐 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무죄판결을 받는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사건들에 현 정부가 면죄부를 부여
- 따라서 범정부적 국가기관들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임

3 박근혜정부 공약 미이행, 파기 실태

(박근혜공약) 차질 없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이행) 공약폐기 ⇒ '말 바꾸기'

- 2014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무기 연기하기로 합의

(박근혜공약)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미이행) 공약폐기 ⇒ '말 바꾸기'

- 국방부 장관은 2014년 4월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여 사실상 대선공약 폐기

(박근혜공약) 전역 병사에 대한 희망준비금 제도 신설

- (미이행) 공약폐기 ⇒ '말 바꾸기'
  -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전역 병사에 대한 희망준비금 제도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국가재정여건이 제한되자 일방적으로 공약 폐기, 장병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변경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영재**

1 총평

박근혜정부 4년의 국정운영은 '철학이나 원칙도 없는 고집불통의 폐쇄적 리더십' '최순실에 의한 국정 농단' '제왕적 리더십' '공약 실종과 국민 기만' '국정 무능과 재난으로부터 국민 불안' '박정희 시대로의 회귀 및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으로 인한 허송세월'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 철학이나 원칙도 없는 '고집불통'의 '폐쇄적' 리더십
  - 국회의원 당시에는 항상 원칙을 중요시했다던 박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에 정치철학이나 정책 컨텐츠가 부족하고 원칙도 없어서 자기만의 '고집불통'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음
  - 청와대 중심의 정국운영으로 인해서 인사문제 등에 대해서 정치권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그래서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갈등을 초래하는 '폐쇄적 리더십'이었음
  - 철학이나 원칙이 없어서 측근 최순실에 의한 대리통치 행태가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국정이 농단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음
- 민주적 리더십이 아닌 '제왕적' 리더십
  - 박대통령과 참모나 각료의 관계가 군주와 신하의 관계로 보일 정도로, 참모나 각료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 방향을 논의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사를 받들어 보고하고 지시받아 집행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제왕적 리더십, 대통령 1인 중심 지배체제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 평가됨
  - 박대통령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새누리당 다수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쳐내라고 김무성 지도부를 압박하는 모습은 권위주의적, 제왕적 리더십의 최고 정점이었음

- 공약 실종과 국민 기만
  -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대통합'과 '정치쇄신' '경제 민주화' '복지 확대' 등은 실종되거나 파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국민 사과나 정치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서 국민을 기만하였음
- 국정 무능과 재난으로부터 국민 불안
  - 공약을 이행할 준비도 전혀 없었고, 공약 이행의 역량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수정된 국정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 세월호 사태에서는 단 한명의 국민도 구조하지 못하고, 메르스 사태에서도 컨트롤타워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등 어느 정권보다도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줌
- 박정희 시대로의 회귀 및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으로 인한 허송세월
  -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지지를 동원하는 중요한 시기에, 내용 없는 창조 경제, 재벌에 의존하는 경제부흥, 규제 완화, 법질서 확립 등 과거의 박정희식 경제 사회 정책을 반복함
  - 국정 과제를 확립하고 시행할 중요한 시기에, 주요공약 폐기에 대한 변명,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따른 정권의 정통성 확보 논쟁, 종북 프레임을 통한 보수 결집 등에 모든 국정 동력을 총동원하면서 허송세월하고 말았음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 失政

(1) 인사실패

박근혜정부의 인사는 부실검증, 수첩인사 등으로 총체적으로 실패

- 대통령 당선인 시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산문제 등 도덕성 논란 끝에 스스로 물러난 이후,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에는 5명의 장차관급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함

-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권을 비판하며 미국으로 돌아갔고,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자신의 주식백지신탁 문제로 자진사퇴했으며,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자는 고위층 성접대 의혹에 연루되어 사표를 제출했고,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비리 의혹으로 사퇴했으며,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해외 비자금 계좌를 통한 탈세 의혹이 있어서 사퇴하였음
-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의 낙마와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최대석 위원의 자진사퇴, 청와대 비서관 인선 과정에서의 잡음,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의 자질 논란까지 있었음
- 이는 부실검증, 수첩인사에 따른 인사실패였으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고집인사, 불통인사의 진수를 보여줌
- 박근혜정부의 초기 인사 실패는 인사검증시스템을 무력화한 박대통령의 '수첩인사', 즉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박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인사에서 비롯된 것임
- 청와대 비서실장에 과거 유신 인물의 전형인 김기춘씨를 임명하여, 암울했던 과거로 회귀한 바 있음
-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문창극을 총리로 지명하려다가 친일 논란으로 낙마하고, 안대희 후보자가 고액수임료 전관예우로 낙마하였고, 다시 정홍원 총리가 유임되는 초유의 사례가 발생함
- 이완구 총리가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언론보도통제, 건보료 회피, 국보위 경력 등으로 총리자격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며, 황교안 총리도 병역기피나 공안 총리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
- 최순실 게이트로 사과하면서 탄핵 직전에 놓인 박대통령이 김병준을 총리로 지명하고, 박승주를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내정했는데, 김병준 내정자는 국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지명되었다는 이유로 국회 인사청문회 날짜도 못잡았고, 박승주 내정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밝힌 도심 굿판과 47번 전생체험 등으로 낙마하였음

-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과정에서, “나쁜 사람”이라는 박대통령의 말한마디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직원들이 해임되거나 쫓겨나기도 했음

회전문 인사 관행과 심각한 인사 편중

- 박근혜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전관예우로 대접을 받았던 인사가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는 회전문 인사 관행이 심각했으며, 그로 인한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음
- 4대 권력기관 고위직 인사에 영남 편중이 심각

(2) 불통의 정부조직개편

박근혜정부의 초기 정부조직개편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실에서 만들어진 불통 개편안이었음

-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중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감사원의 중립성 보장 장치 등 반부패정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부 신설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개편방향이 없는 점, 예산기능까지 갖는 공룡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기능 조정이 없는 점도 문제이며, 통상을 외교에서 분리함으로써 이미 정착된 외교와 통상의 시너지 효과를 깨버리는 것이라는 분석
- 정부조직법 개정은 엄연히 국회의 입법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인수위 시절부터 원안고수, 원안통과라는 지나친 개입으로 2013년 3월18일 합의통과까지 지루한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음

세월호 사건 이후 만들어진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민안전처 신설안을 밀어붙였음

-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구조에 실패하였다고 해서 대통령이 담화문으로 이를 즉각 폐지하라고 밀어붙이고, 참여정부에서 어렵게 만든 독립조직인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산하기구로 축소 개편한 것은 졸속의 극치를 보여주는 잘못된 방식으로 평가됨

-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지만,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의 본부 조직으로 약화시켜서 국가 재난관리체계 혁신에 기여할지는 의문

(3) 민주주의 후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박근혜정부

-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원과 검찰, 경찰, 여당이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음
- 대법원은 비폭력 집회라도 해산명령에 불응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경찰은 합법적 집회 보장 요구를 묵살하고 그러한 주장을 한 사람을 체포하였고 검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음. 그리고 여당 일부의원은 야간 집회 및 시위를 원천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인 동시에 약자와 소수자들의 정치사회적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집회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권력 행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사회통합을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의지 부족

- 박정희정부에 의한 고 장준하선생 타살의혹이 있어서 지속적인 진상규명 요구가 있는데도 여당은 '고 장준하선생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 제정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군사독재정권시절의 인권유린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도 외면하고 있음
- 우리당과 여당이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법안'을 제출했지만, 기본적으로 여당은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해 보상만하고 끝내자는 것이고, 우리당은 긴급조

치 판결을 무효로 한 다음에 추후 배상이나 보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의 수사결과 허위발표를 토대로 집권한 박근혜정부가 이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음

-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을 여당 선대위와 박근혜후보가 인지하고 은폐 왜곡하였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여당은 아직도 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고 검찰이나 법원도 이를 규명할 의지가 없음
- 더구나,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해서 박근혜 후보를 18대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는 당시 김용판 서울 경찰청장은, 박근혜와 찍은 사진을 선거홍보물로 내걸 정도로 너무도 당당하게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한 바 있음

(4) 지방자치와 분권 의지 실종

지방재정을 파탄 내는 박근혜정부

- 정부가 인위적인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해서 지방재정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한 바 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항구적인 지방재정 확충대책이 없음
  - 정부가 2013년 두 차례 인위적인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해서 시도 재정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한 바 있음
  - 취득세 감면은 지방에 심각한 재정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에 앞서서, 단기적인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분권교부세 사업의 일부 국고사업으로 환원,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등의 인상 등 항구적인 지방재정 확충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2015년부터는 주택 취득세를 항구인하 하면서 그 인하분 만큼 지방소비세로 보전하기로 함

- 정부가 2010년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때 2014년부터 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음
  - 2014년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주택 취득세 인하분 보전분에 불과함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을 할 때 정부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임

- 정부가 2015년 12월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에 지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 이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 또한 이는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해서 지방의 복지사업 전반을 사실상 중앙정부가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모법인 '지방교부세법' 위반 소지가 있음

(5)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부재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부재로, 세월호 사건이나 경주 지진 등 대형재난에 대한 대처 미흡

- 재난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불안전성
  -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대형 재난에 대해서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임
  - 경주지진으로 인해 인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이나 규제기능이 약하고, 관련전문가가 부재하며,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역주민 간 협력시스템도 약한 편임
  - 세월호 사건에서도 경험하였듯이, 새롭게 출범한 국민안전처 역시 국무총리

에 산하에 소속되어 지방의 대형재난에 대비하기에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3 박근혜정부 공약 미이행, 파기 실태

〈정당공천제 폐지·정치개혁 나 몰라라〉

박근혜 공약		약속위반
▶정치쇄신 - 정당공천폐지 등 선거제도개혁 - 인사혁신 - 국무회의 강화 및 - 정부조직 혁신	⇔	**▶정당공천폐지 등 선거제도 개혁 공약 파기** -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 선거 연령 인하, 투표시간 연장 등 국민의 참정권 확대 등도 처리 되지 못함 **▶불통인사, 수첩인사로 점철** - 권력기관 영남 편중인사 등 말로만 하는 대탕평 인사 -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성행 -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로 고위직 낙마 **▶국무회의 강화 및 정부조직 혁신도 유명무실** - 박대통령의 수첩인사로 수많은 장차관 후보자 낙마 - 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은 유명무실 - 책임장관제는 무력화 - 정부조직개편안은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음

〈사회통합을 위한 과거사 진실 규명 의지부족〉

박근혜 공약		약속위반
▶사회통합분야 - 사회통합을 위한 과거사 진실 규명	⇔	**▶사회통합을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의지부족** - 여당은 긴급조치 판결 원천 무효화 보다는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해 보상만하고 끝내자고 주장함 - 여당은 박정희정부에 의한 타살의혹이 있는 '장준하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 제정에는 미온적으로 대응

〈지방재정 파탄 내는 박근혜정부〉

박근혜 공약		약속위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분야 -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 - 분권교부세 사업과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확충	⇔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언급하고 있으나, 추진실적은 미흡함**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미흡** -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등에 반대하고 있음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확충도 미흡** -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증액 등이 필요하나 아직 추진실적이 미흡함

정무위원회 (비금융 분야)

수석전문위원 **김범모**

1 총평

인사실패, 자격미달과 불통의 국무총리(후보자)

-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최초의 인사인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이 아들 병역면제 및 부동산 투기·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지명 된지 5일 만에 낙마
- 2014년 안대희 전 대법관이 5월 22일 총리후보자로 내정되어, 5월26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전관예우와 관피아 문제로 5월28일 자진사퇴
  - 후임으로 문창극 중앙일보 주필이 6월10일 총리후보자로 내정되었으나, 역사인식 등이 문제가 되어서 인사청문 요청안도 제출되지 못한 채 6월24일 자진사퇴
- 2015년 1월23일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총리후보자로 내정되어,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병역·세금·재산형성 과정 등에서 온갖 의혹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해명 없이 다수당인 새누리당에 의해 총리로 인준
  - 그러나 3개월여만인 4월20일 성완종 전의원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
-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이 커지면서 내각 총사퇴 등이 거론되자 국회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김병준 교수를 국무총리후보자로 내정 발표하였으나, 12월9일 대통령의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국무총리후보자도 되지 못하였음

허울뿐인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당선 이후 재벌과 대기업의 포로가 되어 경제민주화를 중도 포기하였음
  - 이에 경제민주화 공약은 18개 중 5개만 이행되어 완전이행률은 28%로 매우 저조, 본래 공약이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5개, 미이행공약은 8개임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 失政

(1) 인사실패

자격미달과 불통의 국무총리(후보자) 등 인사 실패

-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시절부터 지난해까지 7명을 국무총리후보자로 발표하였으나, 3명만이 가까스로 국회 인준을 통과하였으며, 4명은 내정단계 또는 후보단계에서 사퇴하는 등 총리후보자부터 인사실패로 출발하였음
- 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선이 새정부의 정책 의지와 방향을 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었음에도, 2013년 1월 박근혜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이 아들 병역면제 및 부동산 투기·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지명 된지 5일 만에 낙마하였음
- 또한, 박근혜 대통령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한만수 후보자가 지명(2013년3월14일)된지 12일 만에 탈세, 해외비자금계좌 운영 의혹 등으로 낙마함
-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 발생이후 정부의 총체적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홍원 총리가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후임으로 지명된 안대희·문창극 두 후보자가 개인적 자질 미달로 낙마하고, 정홍원 총리가 재신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 안대희 후보자는 5월22일 총리후보자로 내정되어, 5월26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전관예우와 관피아 문제로 5월28일 낙마(자진사퇴)하였음
- 문창극 후보자는 6월10일 총리후보자로 내정되었으나, 역사인식 등이 문제가 되어서 인사청문 요청안도 제출되지 못한 채 6월24일 낙마(자진사퇴)하였음

◎ 2015년 1월에는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명되어,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병역, 세금,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해명되지 않은 채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임명동의가 되었음

- 그러나 취임 2개월여만(2월17일 취임, 4월27일 퇴임)에 성완종 전의원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과 거짓해명 등이 문제되면서 결국 사퇴하였음

◎ 2016년 하반기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커지면서 내각 총사퇴와 거국내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김병준 교수를 국무총리후보자로 내정 발표(11월2일)하였으나,

- 12월9일 대통령의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국무총리후보자도 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낙마하였음

◎ 집권 4년간 동안 3명의 총리후보자가 병역·세금 등 여러 의혹으로 국회 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고 낙마하였으며, 온갖 의혹에도 어렵게 총리에 오른 인사도 결국 비리의혹으로 임명 된지 3개월여 만에 낙마하고, 국회와 소통없이 일방적인 총리내정자 발표 등 실패한 인사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절망만 안겨준 정부가 되어버렸음

(2) 버려진 국민과의 약속, “경제민주화”

허울뿐인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주요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으나, 인수위의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제외한 바 있으며,

- 이에 “경제민주화”포기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심해지자, 공약사항이 내용에는

들어있다며 말장난을 하다가, 우리당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저항이 거세지자 대통령 취임사와 새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다시 언급하였음

- 그 동안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최소한의 공약이행에 그친 바 있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선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지만,

- 지난 4년간 경제민주화 공약은 18개 중 5개만 이행되어 완전이행률은 28%로 매우 저조하고, 본래 공약이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5개이며, 미이행공약은 8개임

특히, 재벌총수일가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엄단하고 사면권도 제한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19대 국회에 관련법률 개정안이 여야의원들 발의로 여러 건이 제출되었음에도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며,

- 오히려 공약과는 반대로 경제활성화 등을 이유로 2015년에는 최태원 SK회장, 2016년에는 이재현 CJ회장 등 재벌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에 대하여 사면을 단행한 바 있음
- 또한, 2015년 광복절 사면시 기업들의 입찰담합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해제를 단행하는 등 기업비리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었음

최근 특검 등의 수사를 통해 재벌들로부터 사적이익을 위해 비영리민간법인을 통해 기부금품을 받고,

- 재벌들의 민원인 "사면, 합병에의 국민연금의 찬성, 공정위 조사과정에서의 재벌대기업 봐주기 등"이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음
- 국민들에게는 '경제민주화'하겠다며 표를 얻고서, 대통령 취임이후에는 경제민주화는 버리고 사적이익을 위해 재벌총수들의 민원만 해결하였음

3 박근혜정부 공약 미이행, 파기 실태

경제민주화 공약 미이행 현황

- 미이행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
  -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 부분 또는 미흡 이행 공약
  -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 보호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전문위원 **차가진**

1 총평

막무가내 정책에 가계부채 폭증… 대통령 없으니 정상화 움직임

-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로 '가계부채 해결'을 목표로 했지만,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16년말 현재 1344.3조원으로 2002년 통계 시작 이래 최대치를 기록
  -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3년 내에 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2013년말 131.9%였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 3분기 현재 151.1%로 오히려 19.2%포인트 증가
  -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성과' 자료를 매년 내놓으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14년부터 3년간 총 9번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아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있음
- 국토부는 고소득자에게 1%대 변동금리로 돈 빌려 집사라면서(은행 공유형 모기지론) 금융위는 서민들에게 3%대 고정금리로 집 사라는 엇박자 정책에, 한쪽에선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기면서 다른 한쪽에선 가계부채가 문제니 해결해야 한다는 3인칭 화법을 태연하게 구사하는가 하면 정작 진짜 힘든 계층은 외면하는 대책만 남발하고, 경기 때문에 LTV·DTI 규제 정상화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심사는 강화하겠다고 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난무했던 것은 결국 소통을 가로막은 비선실세 통치 때문이었음

-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대통령과 그 비선의 입김이 멈춘 12월부터 정상궤도를 찾아가기 시작해 1월까지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관치·정치·방치에 오락가락 정책… 위기 부추기는 정권

- 새누리당 이명박정부부터 시작된 '정치금융'이 박근혜정부에 이어서 대한민국 금융의 신뢰추락 넘버원 사유가 됐고, 관치·정치 논란에 이어 '방치'는 경영공백과 금융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음
  - 관치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여러 기관에 관피아·정피아가 주요 요직을 거의 차지하고 있고, 잠잠해질 때까지 아예 관리자 자리를 장기간 비워놓는 '방치'도 부지기수
  - 금융당국의 고위직 인사도 청와대의 늦장 '재가'로 수개월씩 대기하는 건 기본이고, 금융위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면하는 공공기관장의 경우엔 거의 1년간 공석으로 방치된 사례도 있음
  - 금융기관에서 리스크관리는 목숨과도 같은데, 심지어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을 수개월간 공석으로 두는 등 방치로 인한 경영공백이 심각했던 것은 결국 누구 한사람의 재가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
  - 이 결과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국가경쟁력은 의사결정 편파성 면에서 96위, 정책투명성 측면에서 115위를 기록하는 등 낙제점 수준임
- 금융에 무지한 청와대, 이를 틈탄 모피아의 세력 확장 정책은 금융위기를 부추기는 박근혜 금융의 특징임
  - 동양사태·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 등 정권초 발생한 초대형 금융사고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에 그 원초적 원인이 있으나, 결국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모든 피해와 책임은 투자자와 정보유출 당사자에게 돌아갔음
  - 심지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정비된 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또다시 규제를 완화하려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음

재벌 수호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동조자로 전락한 금융당국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의 주가조작 의혹과 삼성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으나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방관적 자세를 지속함
  - 최근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이후 청와대가 삼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해 금융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
  - 특히 금융위 소속 자본시장조사단이 삼성물산 합병과정 관련 삼성그룹 고위임원 9명의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이 짙었음에도 불구, 여타 사건과 달리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자체 조사만으로 사안을 종결하는 등 무혐의 처리 과정에서의 특혜 가능성도 불거짐
-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비선실세인 최순실 개입 의혹이 불거지는 등 시장의 공정한 관리자여야 할 금융위가 특정 재벌의 수호자, 국정농단의 동조자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름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 失政

(1) 가계부채 관리 실패

가계부채, 해결은커녕 문제 극대화

-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초이노믹스로 대변되는 부동산 띄우기식 경기부양책으로, 이를 위해 2014년 금융시장 건전성 장치인 LTV·DTI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폭증세를 이끔
  - 현 추세가 지속되면 주택공급 과잉에 따라 집값이 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가계부채 건전성이 나빠지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것임을 정부도 자인
  - 초이노믹스는 무리한 규제 완화로 부동산 띄우기도 실패, 경기 살리기도 실패하고 오히려 가계부채만 폭증시켜 사회적 문제를 확대시킨 주범이 됐음

※ 주택재고량 증가에도 불구, 자가보유율은 매년 0.65%씩 악화됐고, 매년 11만7천가구가 자가에서 전월세로 전락해 주거여건이 오히려 나빠짐

-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소득확대에 있는데, 지난 9년간 새누리당 정부의 경제정책은 가계 소득은 줄이고 경기부양은 실패
  -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3년 이후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데, 지난해 3분기에는 1%대의 증가율을 기록

(2) 인사 실패

관치, 정치, 방치, 줄세우기 금융… 한국 금융시장 신뢰 하락 주범

-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정치금융'이 대한민국 금융의 신뢰를 갉아먹는 와중에 이제는 '방치'로 인한 경영공백과 시스템 붕괴가 심각한 수준
- 금융당국과 금융공공기관, 민간 금융기관으로 이어지는 관치와 인사 실패는 신용정보 대량 유출 사건, 동양사태, KB금융 사태, KT 사기대출, 모뉴엘 파산 사태 등 각종 금융사고를 야기했고 줄세우기 금융을 양산

(3) 사라진 경제민주화 · 구호뿐인 금융소비자보호

기업 로비 천국, 소비자 보호 지옥

-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집권 초기까지 '원칙'을 강조하며,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조했음
  - 후보 공약의 첫 일성이었던 경제민주화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권 초 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어느 순간 경제활성화 등을 핑계로 후순위로 밀려남

3 박근혜정부 공약 미이행, 파기 실태

경제민주화 : 금산분리 강화

- 이행
  -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9% → 4%)
- 일부 이행
  - 전 금융권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 확대(금융지배구조개선법, 적용 대상 축소)
- 미이행
  -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공정거래법)
- 역행
  - 인터넷 전문은행·핀테크를 명분으로 금산분리(은산분리) 완화 추진

가계부채 :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서민 과다채무 해소

- 이행
  - 국민행복기금 설립(단 18조원 규모공약이 7000억원 규모 감소)
  - 금리 20%이상 고금리 대출 다중채무자에 대한 저금리대출 전환(바꿔드림론)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 적용대상 확대
  -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민간 자산관리회사 매각시, 채무자 동의 의무화
- 미이행
  - 국민행복기금 법정기구화
- 역행
  - 빚 권하는 정책 지속으로 가계부채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며 급증

가계부채 :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 이행
  -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 국민행복기금 일괄 매입·일정기간 추심 중단

가계부채 :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 제고

- 이행
  -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 의무화, 이의경로 제공

가계부채 :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해 소비자 보호 강화

- 미이행
  - 금감원 공적 감독대상에 대부업 편입, 일정 자본금 및 인적 요건 부과
  - 대부업 자율규제기구 지정

가계부채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규 및 관행 개선

- 이행
  - 금융위원회 내 한시기구 설치로 금융관행 개선 추진
- 미이행
  -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금융소비자보호법 처리 지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 분야)

전문위원 **이현진**

1 총평

무능력

- 공약을 통해 내세운 정책이나 경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마련한 대책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행능력이 없음
  - 경제 운영 전반에 걸쳐 어느 것 하나 유능하게 처리했거나 그 결과가 좋은 것이 없어 보임

무책임

- 공약이 공상에 불과하다는 점은 차치해두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책을 맡은 정부가 정책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반성과 교정을 해야 함에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임
  - 국민의 귀중한 시간·재산·행복을 담보로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 失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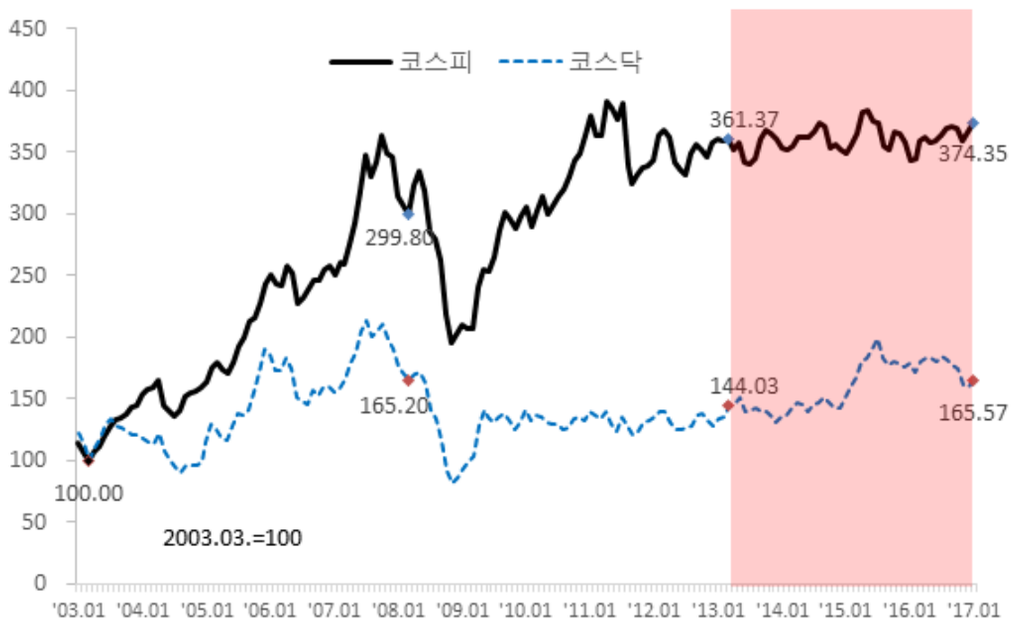
(1) 무능한 경제 운영의 결과

4년 동안 성과 없는 현상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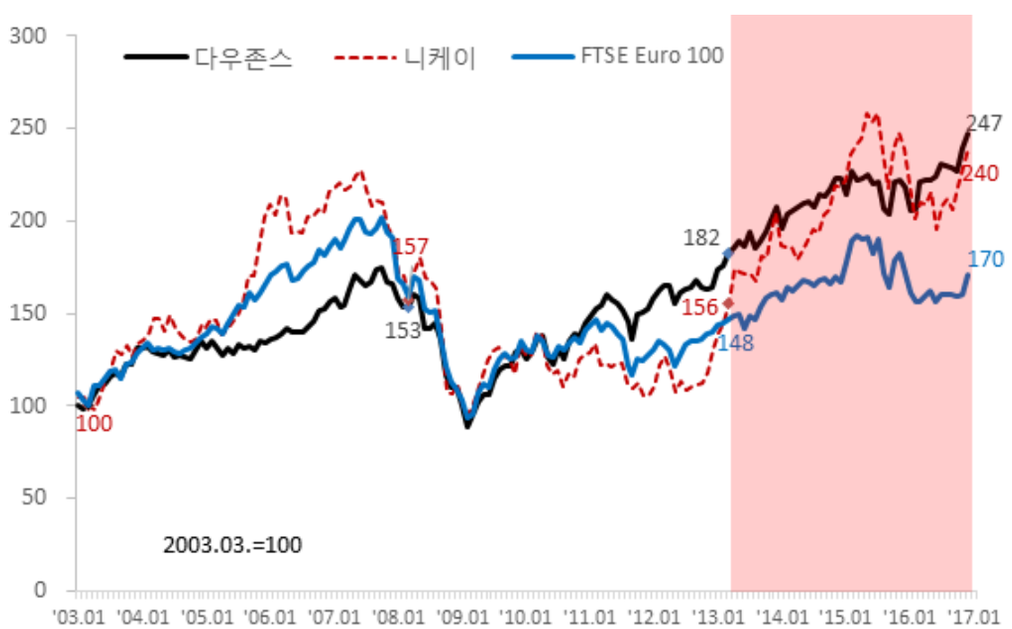
- 한국의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지수
  - 참여정부(2003년 3월~2008년 2월)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3배가량 상승한

반면 박근혜정부(2013년 3월~2017년 1월)에서는 지루한 횡보를 나타냄(이하 자료는 한국은행, 통계청, World Bank 자료로, 작성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최근 자료임)

-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의 결과, 기업들의 성과는 진전 없이 간신히 현상만을 유지했다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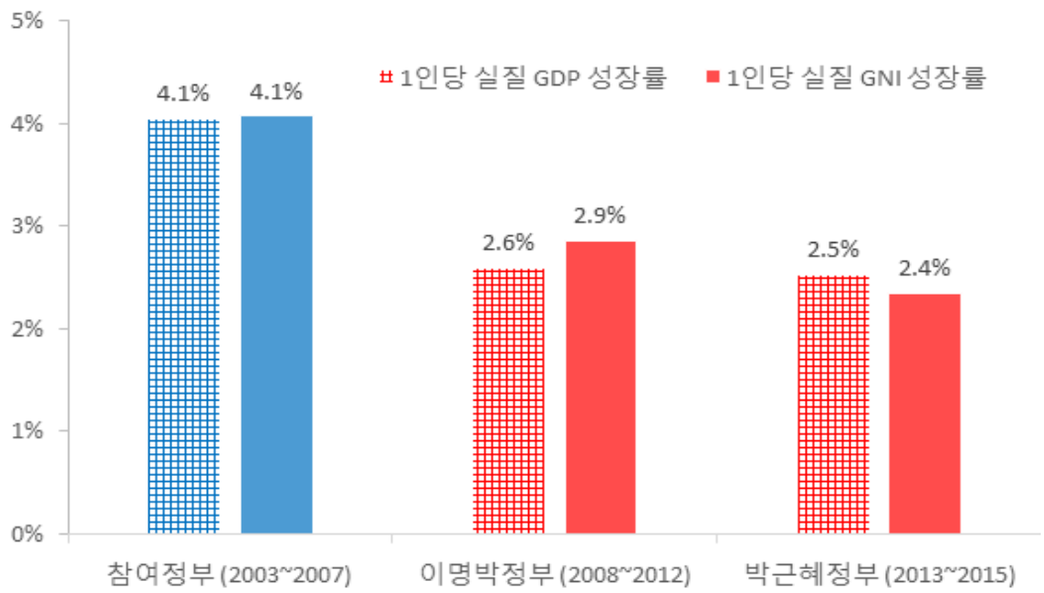


◎ 미국, 일본, 유럽의 주가



-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일본, 유럽의 상황은 우리와 차이가 남. 세 경제 지역이 주가 변동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경제도 한국과 동일한 세계경제 환경에 처해 있었고 유럽의 경우 EU 내 갈등과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가결 등을 포함하여 각 지역의 경제가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상승하는 양상을 보임

◎ 1인당 실질 GDP 및 GNI 연평균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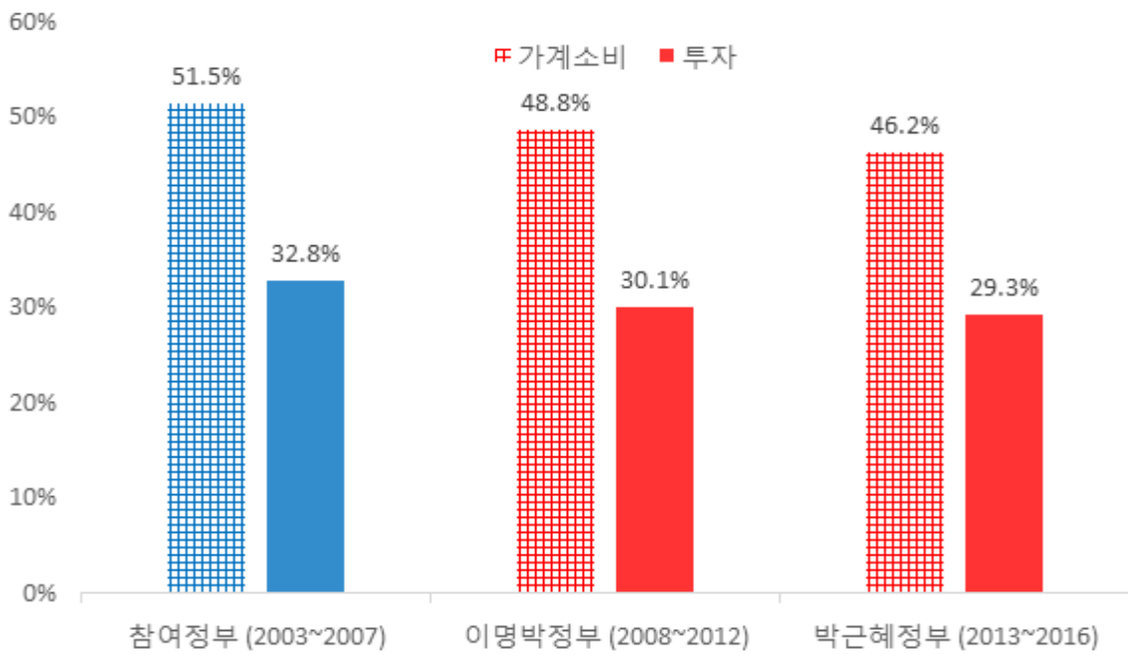
- 이러한 결과는 성장 지표인 1인당 실질 GDP(국내총생산)와 GNI(국민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보수정부(새누리당 정부) 하에서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임.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낮음

(2)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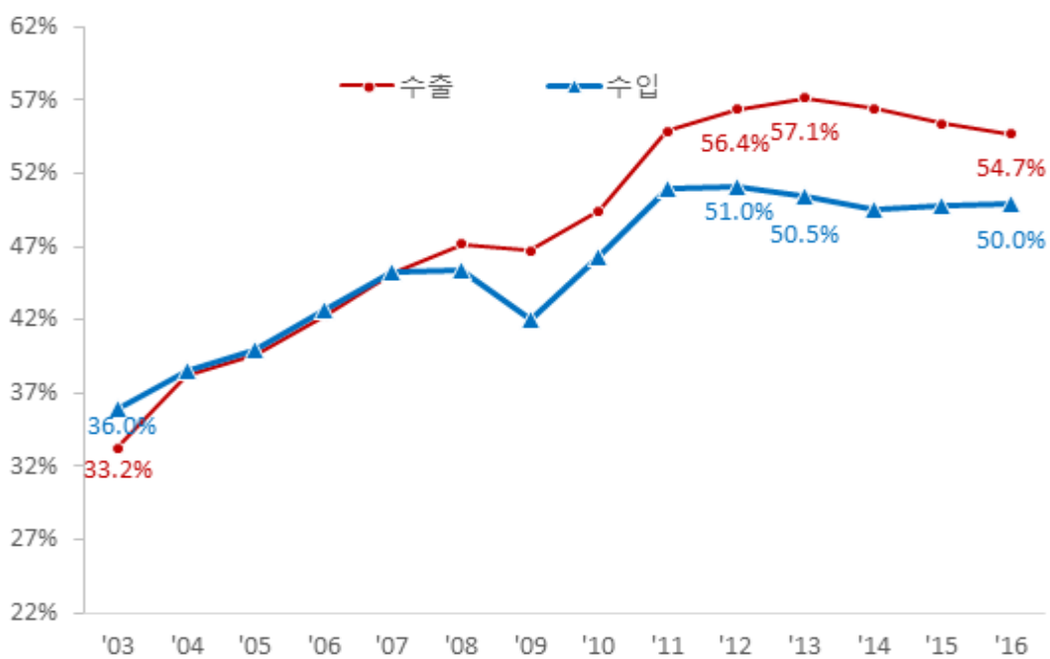
국내 수요의 급감과 황폐화

◎ GDP 대비 가계소비와 투자 비중

- 박근혜정부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주로 내수 부진, 즉 소비와 투자의 부진에 기인함
-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외경제 의존 심화에 따라 국내 총수요 기반은 현저하고 지속적으로 약화됨



- GDP 대비 수출과 수입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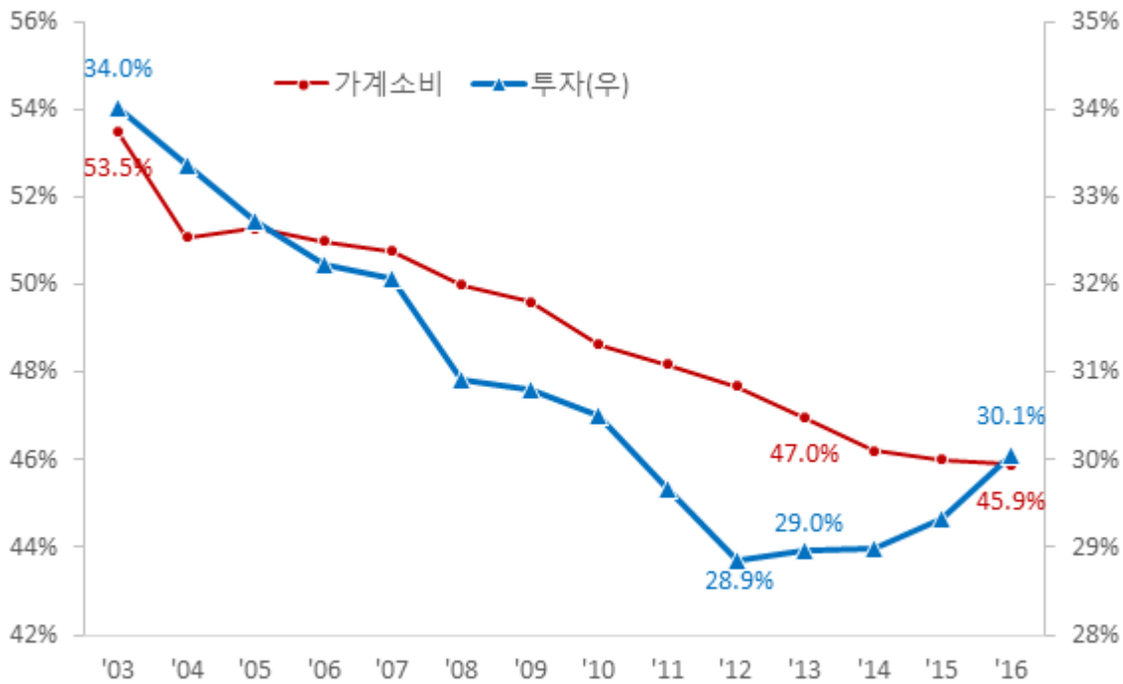


- 한편 이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GDP 대비 수출의 비중도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 이에 따라 2013년~14년 7%에 육박하던 GDP 대비 순수출(수출-수입) 비중도 2016년에 5%를 하회하게 됨

(3) 주거용 건물 건축으로 연명한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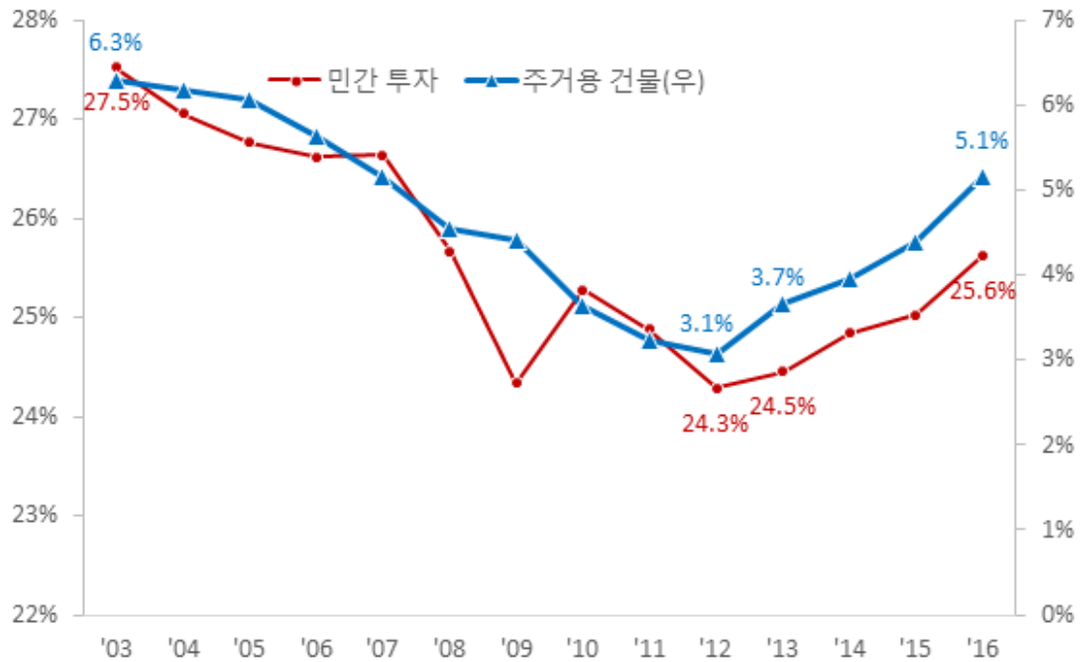
생산적 설비투자는 무대책으로 방치하고 부동산경기 부양에 열중

- GDP 대비 가계소비와 투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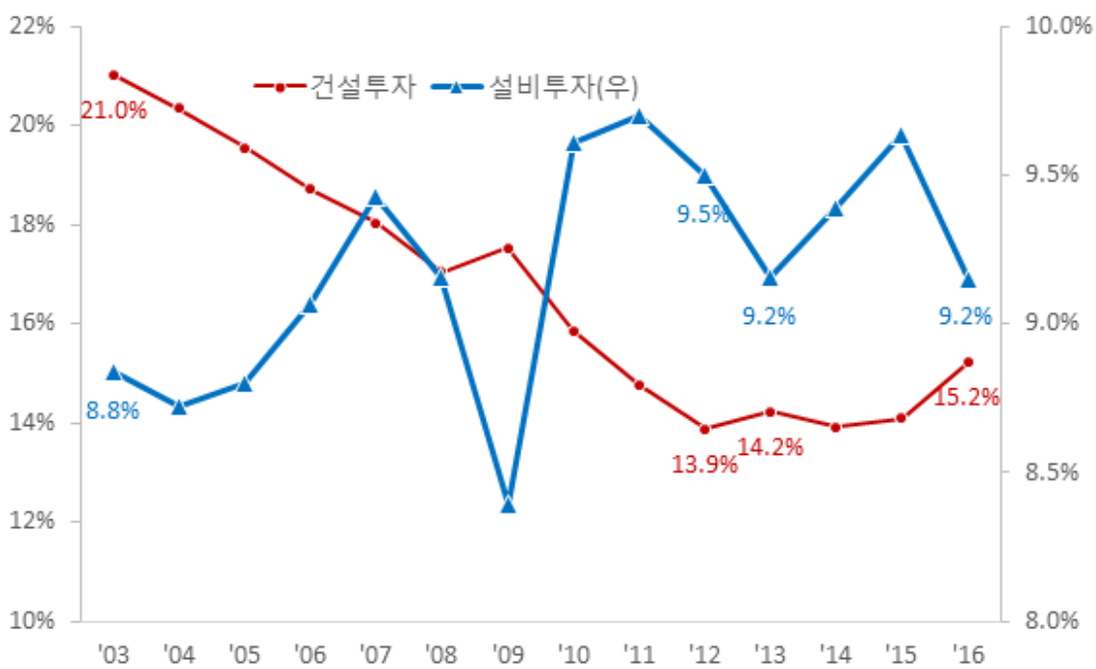


  - 박근혜정부 들어 GDP에서 차지하는 투자가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그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 GDP 대비 민간투자와 주거용건물 투자 비중 추이
  - 박근혜정부에서 미미하나마 민간투자의 반등을 보인 주된 요인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 증가에 따른 것임



- GDP 대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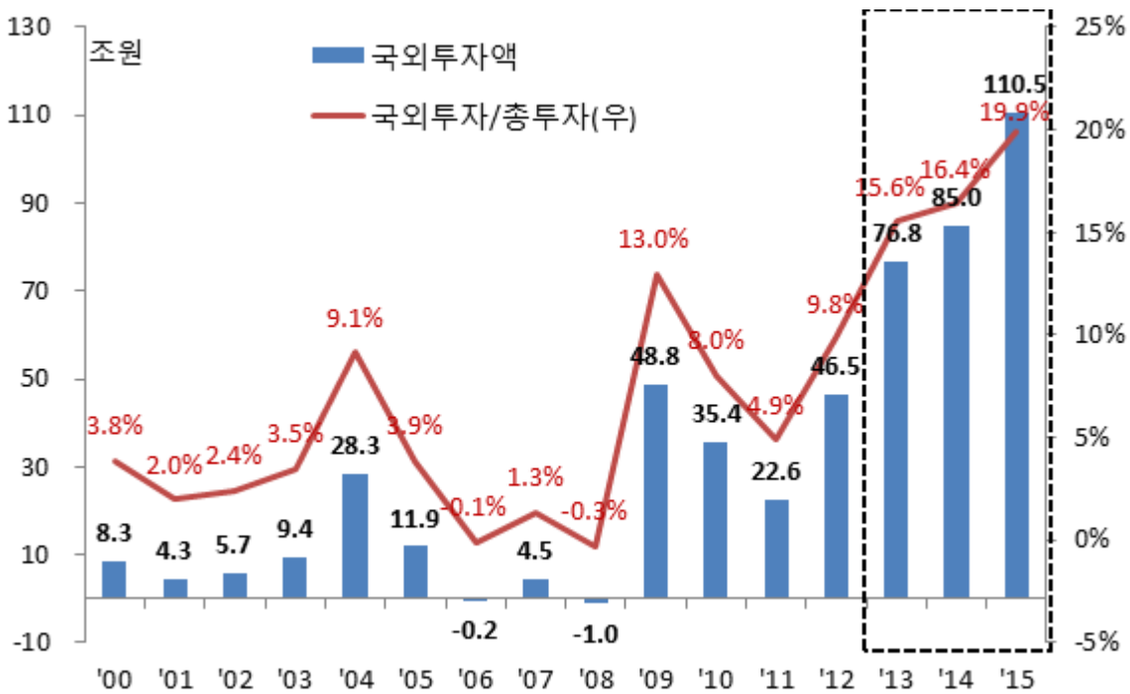


-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는 자본을 형성하는 설비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대에 머물고 있음
- 창조경제가 아닌 건설경제라고 할 수 있겠음

(4) 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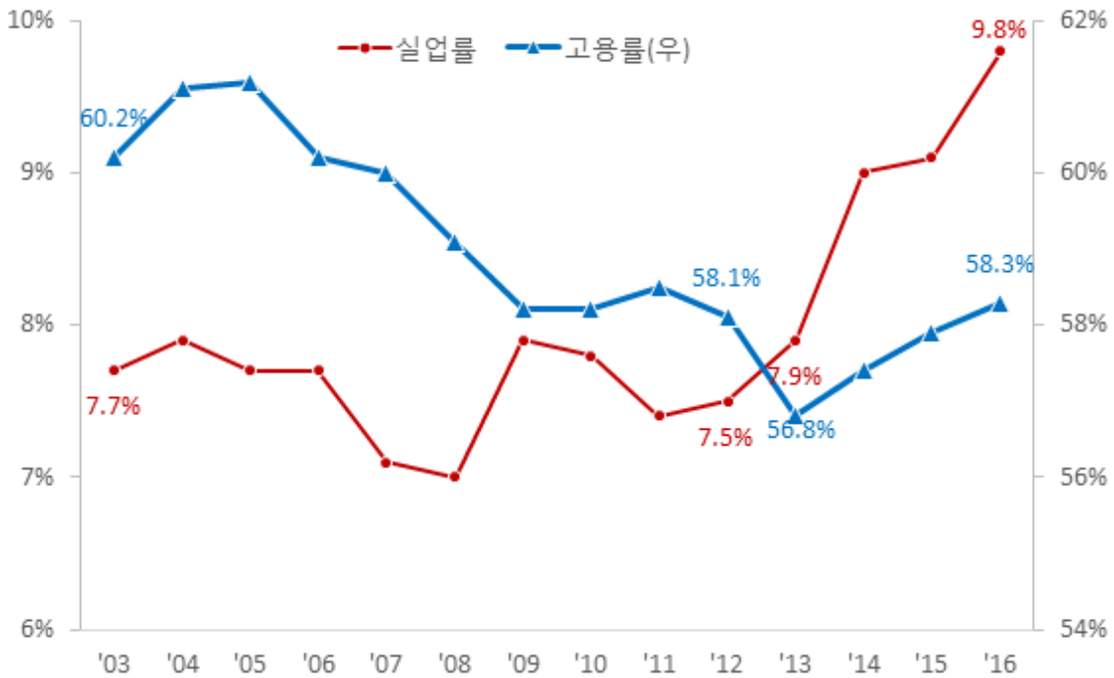
기업들이 국내에서의 투자는 부진한 가운데 국외투자는 급증

- 해외투자의 규모와 총투자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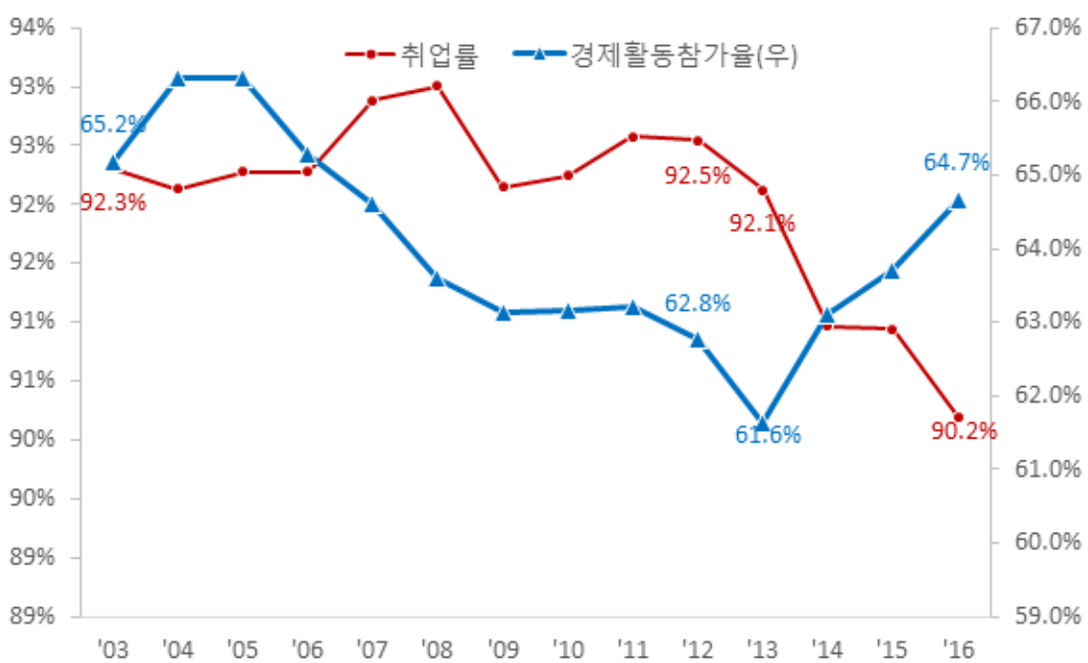
- 국내 기업들의 국외투자 규모와 비중은 박근혜정부에서 급격하게 증가 추세임. 2015년 현재 총투자의 20%에 달함
- 법인세 인하와 유지는 기업의 해외투자 자금을 확보해주기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철칙으로 보임
-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공약은 망상이고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냄

- 20대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
  - 박근혜정부에서의 이러한 기업의 설비투자 둔화와 국내투자 둔화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난은 가중되는 양상임
  - 박근혜정부는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공약으로 선정하여 발표하였음. 그러나 그 결과는 암울함



- 20대 청년 실업은 박근혜정부에서 급격하게 증가함. 고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허무함

◎ 20대 청년 취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취업자/인구=취업률×경제활동참가율=(취업자/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인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오히려 취업률은 하락하

고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여 생긴 결과임. 즉 취업을 원하는 20대는 증가하였으나 취업은 그에 비해 이전보다 못하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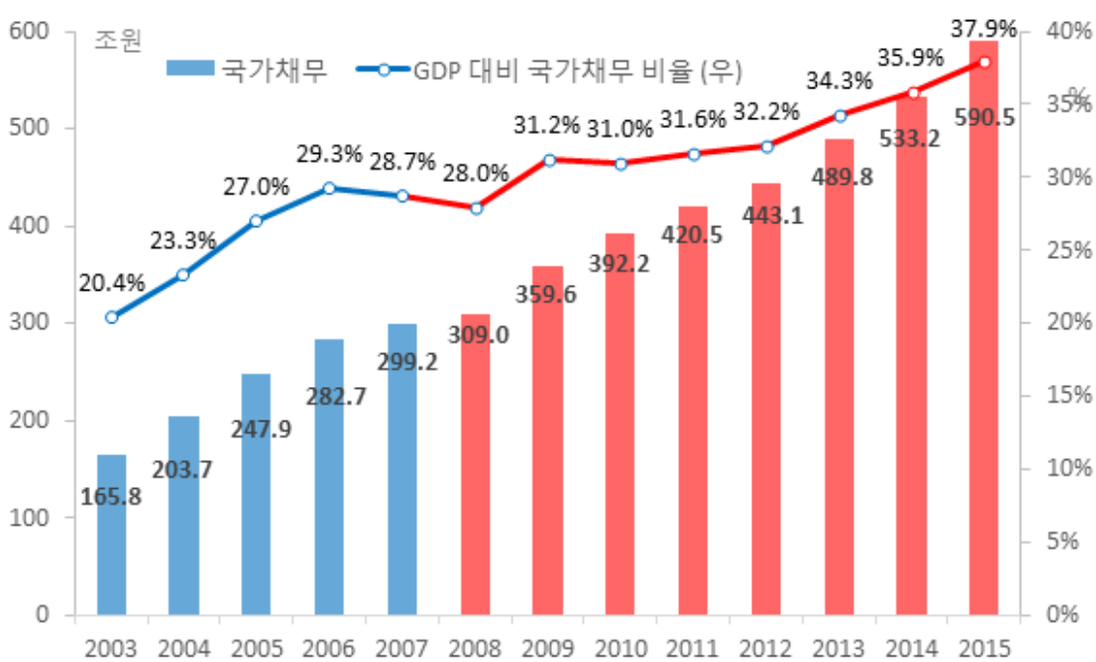
- 20대 청년 고용은 박근혜정부에서 두드러지게 악화됨. 박근혜정부가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약이기에 그 결과로 받아들이기에는 허무하기 그지없음

3 박근혜정부 공약 미이행, 파기 실태

증세 없는 복지

- 무책임으로 일관하여 복지도 잃고 재정건전성도 잃음
  -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10대 공약 어디에서도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 빚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자체 및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음"이라고 국민들에게 당당히 공표한 것에 대해 책임감은 차치해두고서라도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내색 없는 박근혜정부의 당당함에 오히려 국민이 더 민망해지는 상황임

국가채무 증가 추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분야)

전문위원 **박지웅**

1 총평

친재벌 대기업 경제정책과 「신정경유착」 - 정권의 종식으로 치달아

- 정부의 친재벌 대기업 경제정책은 극단까지 치달았음. 집권 초기에 약속한 「경제민주화」는 총체적 사기극임이 드러났고, 「경제활성화」라는 거짓 명분하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대표되는 「신(新)정경유착」만 강화되었음.
- 「정경유착」기조하에 재벌 대기업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하여 편법적 특허 사업 확장(롯데, 한화 면세점 특허승인), 2세 승계를 위한 국민연기금 의결권의 편법적 동원(삼성물산 합병 승인), 오너 특혜 사면(SK등)을 얻어냈고, 그 대가로 박근혜·최순실은 뇌물로 K스포츠·미르 재단 설립 자금 774억원(각 486·288억)원을 받아냈음
- 그 결과, 정권의 경제 사령탑의 핵심인 안종범 경제수석은 직권남용등 혐의로 구속, 전 경제수석인 조원동 역시 직권남용 피의자(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사퇴압박등)로 기소되기에 이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수석등을 통하여 청와대라는 최고 권력을 동원한 삥뜯기, 조직폭력행위를 자행하였던 것. 또한, 초이노믹스의 핵심인 최경환 부총리 역시 인턴 불법 취업의혹등을 비롯한 각종 의혹으로 향후 검찰 수사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임
- 박근혜정부는 친 재벌 대기업 정책과, 이를 비호하고, 비호를 위해 권력을 남용한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정부인 것임.

경제정책, Quo Vadis?

- 정부의 친재벌 대기업 경제정책하에 성장동력은 점점 상실되어가고 있음. 대내외 경제 상황 여건 역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①청년실업률의 급증(2016년 연간 10.7%로 역대 최고), ②소득여건을 악화시키는 가계부채 문제, ③조선·해운업 구조조정등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중후장대(重厚長大)형 산업의 위기, ④ 보호무역주의등을 표방한 극우 트럼프 정권의 집권, 영국의 브렉시트 위기, ⑤ 4차산업등 대체 미흡등 우리의 경제여건을 새롭게 개혁해야 함에도 박근혜정부의 탄핵심리로 인한 「장기적 경제 방치」가 지속되고 있음.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정국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
-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위주의 낙수효과 경제(Trickle-down effect)를 종식하고, 소득중심의 경제성장, 더불어성장론을 지속적으로 새누리당·정부에 촉구하였으나, 새누리당·정부는 낡은 낙수효과의 관행하에 경제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은 여전함. 정권교체를 통한 경제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음. 지금은 닭 잡는 칼이 아니라(미세조정), 소 잡는 칼이 필요한 때임(거시조정).
- MB 때 실시된 법인세 부자감세 기조는 여전함. 지난 2016년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새누리당은 전면 거부. 2016년 소폭의 10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효과(예산대비)가 있었으나, 이를 장기적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중·장기적 재정환경에 대응한 조세체계 개편이 논의되어야 할 때임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 失政

(1) 경제정책, 총체적 실패

- 성장동력의 상실
  - 시대착오적인 '낙수효과의존'으로 경제성장률 정체, 게다가 경제 컨트롤 타워가 마비된 탄핵정국하에서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어 최악의 경제 한파 체험

연도	김대중정부 '98~'02	노무현정부 '03~'07	이명박정부 '08~'12	박근혜정부 '13~'16
실질GDP 성장률(%)	5.3	4.5	3.2	2.9

- 올 2017년의 경우 정부는 3.0% 성장을 예측하고 있으나,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은 2.8%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민간 연구기관의 예측치는 2.0~2.4%에 그칠 것으로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음

◎ **청년실업 문제 악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패로 참여정부 말 7.2%였던 청년실업률은 '16년 9.8%까지 치솟았음. 현대경제연구원등 자료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비자발적 비정규직, 쉬는 청년등 비자발적 실업까지 고려하면 체감실업률 지표는 34.2%에 달한다는 것임

연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청년실업률(%)	7.2	7.2	8.1	8.0	7.6	7.5	8.0	9.0	9.2	**9.8**

- 청년실업률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노동시장구조개혁'을 밀어붙여 노동측의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음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등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 세제정책과 고용증대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통계자료도 구축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가 허술하게 운영, 기업들을 위한 세금 퍼주기로 전락

◎ **가계부채 급증**

-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위해 DTI, LTV가 완화되었음과 함께 가계소득 여건 악화 등 원인으로('16년 기준으로 5분위 소득계층을 제외한 1, 2분위 소득계층의 경우 전체소득, 근로소득 모두 감소하였으며, 3·4분위의 경우도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가계동향조사) 가계부채 1,300조원시대가 열렸음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가계신용(조원)	963.8	1,019.0	1,085.3	1,203.1	**1,295.8**

* 2016년 값은 9월 통계, 그 외에는 각연도 말

(2)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른 세제 개편안 미흡, 법인세 감세기조 여전

국가채무 급증

- 재정적자가 누적으로 2012년말 443조였던 국가부채가 올해 말637.7조로 194.7조나 급증하였음. 2017년 중 GDP대비 국가부채는 40%를 돌파할 전망. 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도 '12년 220조(49.6%)이던 것이 '16년 367.9조(57.7%)로 채무의 질적 악화 역시 우려되는 상황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가부채(조원)	443.1	489.8	533.2	590.5	637.7	682.7
GDP대비 국가부채 (%)	32.2	34.3	35.9	37.9	39.3	40.4

* 2016년 값은 추경기준, 2017년 값은 전망치

땜질식 세제 개편 - 무책임의 극치와 중장기적 세제 전망 미흡

- 소득세는 2012년 이래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1조원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2012년 이래 2014년까지 △3.2조원 감소폭을 보이다 지난 해 6.2조원 증가하였음(하지만, 올 2017년 역시 동일한 세수치를 예상하기는 현 경제여건상 어렵다는 예측전망)
- 담배세를 포함한 개별소비세는 모두 세수가 증가하는 추세. 박근혜정부 들어 단행된 2014년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이 영향
  부가가치세도 2012년 대비 2016년 6.1조원 가량 증가하였으나 모두 소득세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함
- 박근혜정부 들어 단행된 소득세제 개편안(소득공제→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난 해 기업의 불황형 실적 내지 사전 성실 신고 유도제등의 영향이 반짝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복지재정 확대등으로 중·장기적 재정수요가 확대되는 것에 비해 전면적인 세제개편은 미약함. 단적인 사례로 '14년 도입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배분 문제등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대립양상을 낳았고, '16년 당초 편성되지 않은 8,60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봉합. 하지만,

여전히 복지예산의 확대에 따른 각종 갈등은 추가로 빚어질 전망

-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증세없는 복지」라는 양두구육(羊頭狗肉)속에 「세금 폭탄 논란」만 국민에게 안기고 정작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은 모두 차기 정부에 떠넘긴 상황

세목	연도별 세수 (단위: 조원)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부가가치세	55.7	+0.3	56.0	+1.1	57.1	△2.9	54.2	+7.6	61.8
소득세	46.4	+2.0	48.4	+5.7	54.1	+6.6	60.7	+7.8	68.5
개별소비세 (담배세분)	5.3	+0.3	5.6	+0.2	5.8	+2.2	8.0 (1.67)	+0.9	8.9 (2.25)
법인세	45.9	△2.0	43.9	△1.2	42.7	+2.3	45.0	+7.1	52.1

- **정부의 친재벌 대기업 비과세 감면 여전**
  - 2015년의 경우 전체 대상기업 192,982개 중 0.1%에 불과한 과표 1,000억 초과하는 209개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 9.6조원 중 6.1조원을 차지하여 총 63.4%를 독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음

과표	대상기업수 (개)				공제감면액 (백만원)			
	14년	15년	14년	15년	14년	15년	14년	15년
1억원 이하	97,477	103,772	56.2%	53.7%	86,991	95,320	0.9%	0.9%
10억원 이하	65,856	77,708	38.0%	40.2%	800,182	924,410	8.6%	9.6%
100억원 이하	8,764	10,180	5.1%	5.2%	1,219,662	1,281,967	13.1%	13.3%
1,000억원 이하	1,208	1,307	0.7%	0.6%	1,235,526	1,212,531	13.3%	12.6%
1,000억원 초과	209	211	0.1%	0.1%	5,977,378	6,107,657	64.1%	63.4%
계	173,514	192,982	100.0%	100.0%	9,319,739	9,621,885	100.0%	100.0%

3 박근혜정부 공약 미이행, 파기 실태

증세없는 복지를 외치며 담배세 인상

- 국민 기만, 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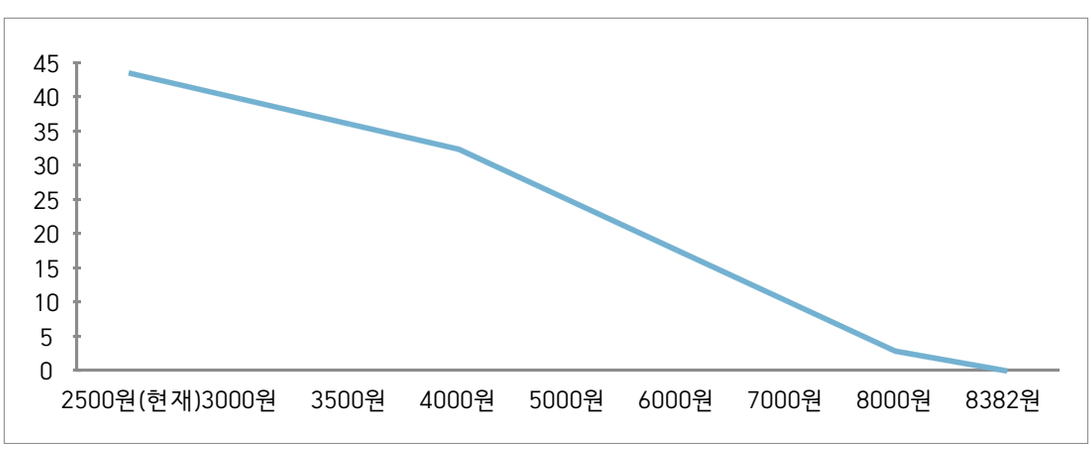
- **'2016년 연간 담배반출량은 36.6억갑(추정)**
  - 담배 반출량은 지난 해 총 31억갑으로 2014년(44.3억갑)대비 13.3억갑이

줄었으나, 2016년은 36.6억갑으로 다시 반출량이 증가, 추정담배세수는 12.3조원

- **정부의 담배세 인상 목적인 금연효과는 과대포장된 반면, 서민증세는 뚜렷한 것으로 보임**
  - '14. 6. 30. 조세연구원 발간자료(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에서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을 -0.425로 잡고, 담뱃값 2,000원 인상시 담배소비는 35%감소하며 세수는 2.8조원 증가할 것으로 **비현실적 추계**(8,000원이 되면 담배판매량이 2억갑으로 줄고, 8,382원이 되면 판매량이 0이 된다고 추계)
  - 하지만, **'15년 총 세수효과는 3.6조원**으로 정부의 예측보다 +0.8조원 더 거두어(국세분은 2.2조원 증가)
  - 담배세 인상 전 **성인남성의 흡연률**은 '11년 48.3%→'14년 43.1%로 하향하였으나, **담배세 인상 후인 '15년 39.3%로 추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예측치(28.1%)에는 미치지도 못하는 수치**
  - 오히려, 기재부는 '14년말 '15년 담배소비량을 28.6억갑으로 책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판매량은 31억갑으로 2.4억갑 많았고, **'16년 예산안은 34.6억갑이 소비될 것으로 추계하여 0.6조원 늘려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음 (개별소비세 +5,031억, 부가가치세 +1,058억, 건강증진부담금 +5,046억)

기재부가 인용한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의 담배가격대별 소비량 전망

(단위: 억갑)



※ 출처: 기재부가 인용한 조세연구원 보고서

담배세의 구성

담배 1갑 소비자가	2,500원	⇒	4,500원
제조원가 및 유통마진	950원		1,182원
담배소비세	641원		1,007원
지방교육세	321원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2원		43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841원

담배소비량에 따른 세입 증가분 추계

구 분	담배소비량추계 (억 갑)	개별소비세 세입예산(억 원)	부가가치세 (1)증가분추계(억 원)	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억 원)
2015년 세입예산안	28.6	(2)15,704	1,407	24,052
2016년 세입예산안	34.6	20,735	1,058	29,098
증가분	-	5,031	1,058	5,046
		국세 계	6,089	-
			총 계	11,135

(1) 제도개선(담배세 인상)에 따른 부가세 '순증가분' 추계
(2) 2월부터 인상된 세율적용. 11개월분(12개월분 추계=17,132억 원)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 **정부가 밝힌 담배세 인상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수증대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
  - 담배세 인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생각할 목적이었으면, 연구위탁을 조세재정연구원이 아니라 보건사회연구원에 하는 것이 타당함
  - '14년 당시 연구용역을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긴 것 자체가 세수증대 목적이었음을 재차 확인하는 것임
  - 오히려,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국민건강증진부담금(1.6조→2.4조원)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에 +5,000억 추가 사용하고, 기금조성의 본래취지인 건강증진사업에는 7,700억원을 투입한데 그치고, 순수하게 국가금연지원사업 예산은 1,475('14년 113억원)억원을 사용할 뿐임. 게다가 국민건강증진기금 총수입 2.7조원 중 담배부담금 수입은 2.4조원으로 91.6%까지 높아져.('14

년 1.8조(총수입)/1.6조(담배부담금) 대비) 담배부담금 부과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재원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부의 의도대로 담배세 인상이 흡연자 수를 줄이는 데 실패한 반면, 서민증세로 연결되었다면, 담배세를 재조정하여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정부가 담배세에 대한 입장을 솔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함,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당초 공약을 했는데, 증세 없이는 세입 확보가 어려우니 국민 건강 담보로 담배세 인상을 통한 세입을 증대한 꼴**

농해수위원회 (농림 분야)

수석전문위원 **윤태진**

1 총평

공약불이행 및 반 농민정책으로 농가는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음

- 박근혜정부는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대선에서 공약했지만, 무관심·무책임·무대책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영세한 경작면적 △영세한 판매금액 △농업 총생산액 하향 정체, △월 15만원 수준의 보조금 지원 △늘어나는 생산원가 등의 지표를 볼 때, 우리 농어촌은 여전히 어려워져 가고 있고,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음
- 당초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라는 어정쩡한 공약으로 농어민들을 현혹시킨 것이지만, 그 중에서 몇 개 되지 않은 구체적인 공약마저 지켜지지 않았음
  - 박근혜 대선후보 공약 중 △한중FTA 신중 추진 △농업인 산재보험 도입 △농가통신비 지원 등을 전혀 이행되지 않았으며,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꼼수적용 △농업소득세 부활과 같은 반 농민 정책을 추진하여 농민들을 실망시킴

박근혜정부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지 않고, 국정운영의 '희생양'으로 삼음

-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무역중심 경제체제 유지를 위해 농어민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음
  - FTA 발효로 농어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박근혜정부의 FTA 농업 피해대책은 매우 미흡함

- 실질적 피해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대책에 따른 예산지원이 따라야 하나, 농어업예산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줄여온 것으로 볼 때, “아랫돌 빼서 웃돌 쌓기 식” 대책이라 할 수 있음

-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제시된 일명 ‘새 정부 공약가계부’에 농어업예산 5조 2천억원을 삭감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볼 때, 박근혜정부는 애당초 농어업·농어민은이 안중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을 농가책임으로 전가하여 왔음. 더욱이 구제역 백신이 ‘물 백신’으로 들통 나, 정부의 무능대응·늦장대처·은폐시도 등 정부의 책임이 드러남**

- **농업의 미래를 단순히 ‘6차산업 활성화’로 포장해 국민을 현혹하였음**
  -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농업정책은 ‘농업6차산업화’라고 할 수 있으나, 275만 농가인구 중 6차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고작 약 7,300개 경영체(농민, 법인 포함)로 전체 농가구의 0.3%에 불과하고, 평균 매출액도 2억 원 이하로 부가가치가 매우 낮고, 영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만약 모든 농가가 6차산업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한집건너 영업점이 있다면 특화 서비스도 어렵고 영업수익도 낼 수 없으므로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애당초 “6차 산업은 농업의 미래가 될 수 없었음
  - 산업연구원 조차 「6차 산업화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발전과제」를 통해 ①낮은 정책만족도(10점 만점 중 5.8점) ②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장치 미흡 ③부처 간 연계·협력 미흡 ④지원대상 확대 필요(어업, 유통분야 중소기업 등 제외) ⑤글로벌 사업화 관련 정책 방안 부재 ⑥성과·통계 집계 미흡 등을 지적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함
  - 박근혜정부는 농업정책을 효율적인 식량안보 유지나 농가소득안정에서 찾지 않고 ‘6차산업 활성화’나 ‘할랄식품 수출확대’ 등 엉뚱한 곳에서 농업의 해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기 보다는 단발성 이벤트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농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으며 우리 농업의 미래

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음

- 이는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기 보다는 단발성 이벤트 정책으로 농민과 국민을 현혹하고 있음

박근혜정부와 MB정부는 농업에 소홀, 대기업에 특혜

-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에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농어가 소득증대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등을 140대 과제로 선정하는 등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사탕발림"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음
- 그러나 출범초기 곧바로 제시된 공약가계부를 통해 농업예산을 4년간 5조2천억 원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농업계의 반발을 샀고, 농업의 거시지표는 전혀 세우지 못한 채, 6차 산업활성화와 할랄식품 수출확대와 같은 이벤트 정책을 농업의 미래인양 지나치게 편중하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MB정부에 이어 우리나라 농업의 목표와 방향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도 잃어버렸음
- MB정부부터 대기업 자본 투자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등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이 용이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농업선진화라는 미명아래 대기업에게 농업특혜의 물고를 터줬던 것임

불통정책 추진으로 국민여론에 역행하고 있으며, 결국 농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음

- 한중FTA 피해분석 축소 또는 분석방법 오류가 의심되는데다, 정부가 피해대책을 졸속으로 마련하였는데, 이는 결국 FTA 피해부담을 농민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음
- 쌀시장개방으로 '밥쌀용 쌀' 수입의무가 사라졌는데도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여 쌀값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음
- 쌀 목표가격 인상을 1년여 동안 반대하다가 야당의 관철 압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10.5%(17,917원)가 인상된 188,000원/kg으로 결정함

- 주민들 뿐 만 아니라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용산구청장·시의원 모두가 개장을 반대하고 국민권익위가 이전 철회를 권고한 '마사회 용산장외발매소'의 재개장을 강행하여 국민정서에 역행하고 주민과의 갈등을 고조시킴

이런 식으로 농업을 방치할 경우 농업의 미래는 없음

- 박근혜정부의 농업 방치로 국가전체부가가치대비 농업부가가치는 고작 1.9%에 불과하고 그 비중도 매년 감소하여, 우리나라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축소될 것임. 이에 따라 국정우선순위에서 밀려남으로써 더더욱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농업은 비록 국가비중이 낮더라도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그 중요성을 비중만으로 따질 문제가 아님
- 박근혜정부가 농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당초 약속한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어 갔다면 농업발전에 초석이 되어, 다음 정권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이 되었을 것이지만, 결국 농어민의 희망을 꺾은 정부가 되었음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 失政

(1) 공약 역행으로 "불행한 농촌"

도농소득격차 확대

- 박근혜정부는 '행복한 농어촌'을 내세우며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고 공약함
- 그러나 2015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64.4%에 불과, 도농 간 소득격차는 매년 더 커지는데, 2015년 쌀직불금이 증가하면서 농업소득 증가가 편차를 일시 줄임
  - 더군다나,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30.2%에 불과해, 농민들은 부업이나 자식들의 용돈에 의지해 과외 소득을 올리고 있음

(표) 도농 간 소득격차 현황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률 (%)
□ 농가경제								
• 도시근로자평균소득	천원	48,092	50,983	53,908	55,275	56,815	57,800	1.7
• 농가소득		32,121	30,148	31,031	34,524	34,950	37,215	6.5
– 농업소득		10,098	8,753	9,127	10,035	10,303	11,257	9.3
– 농외소득		12,946	12,949	13,585	15,705	14,799	14,939	1.0
– 이전소득		5,610	5,453	5,614	5,844	6,819	7,906	15.9
* 농외소득 비중	%	40.3	43.0	45.5	45.5	42.3	40.1	–
도농 소득격차	%	66.8	59.1	57.6	62.5	61.5	64.4	

※ 2013년부터 도농 소득격차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실제 농가 소득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통계청의 표본 농가의 개편에 따른 시계열 단층이 발생한 것임[1)]

농업경영비 증가로 수익률은 하락

- 농가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입 증가는 더디고, 농업경영비는 매년 증가하여 농업소득률이 계속 낮아져, 농가 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 참여정부 말(2007년) 농업총수입은 2,610만원이었으나, mb정부 말(2012년) 2,759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가 2014년 3,218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실질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2013년 박근혜정부 들어 통계청의 표본농가 개편으로 농가수입과 소득이 일제히 올랐던 것으로 실질 수입이 오른 것이 아님
- 반면, 농업경영비는 2007년 1,570만원에서 2012년 1,846만원, 2014년 2,188만원으로 매년 총 농업수입보다 큰 폭으로 증가

  * 농업소득율 : ('07) 39.87% → ('12) 33.08% → ('14) 32.02%
- 2015년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총수입은 3,365만 4천원으로 2006년 2,732만 2천원 보다 23.2% 늘었지만, 농업경영비는 같은 기간 1,523만 1천원에서 2,239만 8천원으로 무려 47%가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2015년 농업소득은 2006년 1,209만 2천원에 비해 7.4% 낮은 1,125만 7천원으로 하락하여 같은 기간 동안 농업소득률은 44.3%에서 33.4%로 11%나 낮아짐

1) 입법조사처,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 농업경영비 상승 요인으로는 동물관리비, 사료비, 재료비, 조세 및 부담금 등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그 외 비료·종묘·광열·농약비 등도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결국 농업총수입이 늘었다 하더라도 높은 농자재 가격 등 농업경영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월 100만 원 수입도 어려운 실정임(2015년 기준 월 94만원 수입)
- 이런 영향으로 2014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평균소득 대비 61.5%에 불과했고, 쌀직불금이 크게 늘어난 2015년에도 64.4%에 불과했음
- 농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농업소득은 2015년기준 1,126만원에 불과하고 농가소득의 30%에 불과하여 농업으로 얻은 소득이 얼마나 취약하고 부가가치가 낮은지를 보여줌
- 더군다나 지금까지 체결된 각종 FTA는 수입관세가 연차적으로 더 떨어질 예정이여서 농가는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임

최근 10년간 농가의 전체농업소득 및 경영비 추이

(단위: 천원)

구분	농가 소득	소득 세부 내역				농업 총수입 (A)	농업 경영비 (B)	농업 소득율
		농업소득 (A)-(B)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2005	30,503	**11,815**	9,884	4,078	4,725	**26,496**	**14,681**	**44.59**
2006	32,303	**12,092**	10,037	4,886	5,289	**27,323**	**15,231**	**44.26**
2007	31,967	**10,406**	11,097	4,959	5,506	**26,102**	**15,696**	**39.87**
2008	30,523	**9,654**	11,353	5,289	4,227	**25,843**	**16,189**	**37.36**
2009	30,814	**9,698**	12,128	5,481	3,507	**26,622**	**16,924**	**36.43**
2010	32,121	**10,098**	12,946	5,610	3,467	**27,221**	**17,123**	**37.10**
2011	30,148	**8,753**	12,949	5,453	2,993	**26,457**	**17,704**	**33.08**
2012	31,031	**9,127**	13,585	5,614	2,705	**27,588**	**18,461**	**33.08**
2013	34,524	**10,035**	15,705	5,844	2,940	**30,648**	**20,613**	**32.74**
2014	34,950	**10,303**	14,799	6,819	3,029	**32,178**	**21,875**	**32.02**
2015	37,215	**11,257**	14,939	7,906	3,113	**33,654**	**22,398**	**33.40**

*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농업소득률 = {(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농업총수입} × 100
※ 2013년부터 실제 농가 소득 증가한 것은 통계청의 표본 농가의 개편에 따른 시계열 단층이 발생한 것임[2)]

각종 농업 보조금은 고작 월 15만원에 불과

- 박근혜정부는 쌀고정직불금을 70만원에서 100만원/ha으로 인상하는 등 농어민에게 과도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선전하여 왔으나, 농민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간접 지원되는 보조금(직불금+복지혜택)은 1가구당 연간 178만원, 월 15만원 지원에 불과했음
  - 농어업 연간 지출액(농어업 결산·예산액)대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15%대 수준이고 나머지 85%는 주로 농어업기반조성, 구조조정 등 비용으로 '농어업예산을 모두 농어민에게 퍼준다'는 인식은 잘못

(표) 농가구당 보조금 수령 현황(총괄)

(단위 : 억원, 천가구)

구분	2007 결산	2008 결산	2009 결산	2010 결산	2011 결산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예산	10년 평균
보조금 합계 (농어업 지출액 대비 비중, %)	21,263 (19.1%)	20,785 (15.0)	15,947 (11.5)	21,269 (14.5)	24,418 (16.4)	15,720 (10.6)	16,964 (12.5)	18,040 (13.2)	22,527 (16.0)	28,569 (19.9)	20,550
농가구 수(천호)	1,231	1,212	1,195	1,177	1,163	1,151	1,142	1,121	1,089	1,089	1,157
가구당 보조금 총 수령액	173만원	172만원	133만원	181만원	210만원	137만원	167만원	176만원	207만원	263만원	178만원

자료 : 농식품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속

- 도농 간 문화·의료·교육·소득 격차로 농가구와 농가인구는 매년 감소
  - 농가구는 2010년 117.7만호에서 2014년 112.1만호로 5.6만 가구감소
  - 농가인구는 2010년 306.3만명에서 2014년 275.2만명으로 31.1만명 감소, 총인구 대비 비중도 6.2%에서 5.5%로 0.7% 감소
- 귀농귀촌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농 간 격차로 인하여 고령화 가속화
  - 우리나라 전체 65세이상 고령화율은 12.7%인데, 농가는 39.1%(전년대비 1.8%↑), 어가 32.2%(2.3%↑), 임가 40.1%(3.2%↑)
  - 연도별 65세이상 비율은 2010년 31.8%에서 2014년 39.1%로 5년 만에 7.3%가 증가

2) 입법조사처,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표) 농가구 및 농가인구 추이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률 (%)
□ 가구 및 인구								
• 총 가 구	천호	17,359(100)	17,687(100)	17,951(100)	18,206(100)	18,457(100)	18,705(100)	1.3
- 농 가 구		1,177(6.8)	1,163(6.6)	1,151(6.4)	1,142(6.3)	1,121(6.1)	1,089(5.8)	-2.9
- 어 가 구		66(0.4)	63(0.4)	62(0.3)	60(0.3)	59(0.3)	55(0.3)	-6.8
• 총 인 구	천명	49,410(100)	49,779(100)	50,004(100)	50,220(100)	50,424(100)	50,617(100)	0.4
- 농가인구		3,063(6.2)	2,962(6.0)	2,912(5.8)	2,847(5.7)	2,752(5.5)	2,569(5.1)	-6.6
· 65세이상 비율	%	31.8	33.7	35.6	37.3	39.1	38.4	-
- 어가인구		171(0.3)	159(0.3)	153(0.3)	147(0.3)	141(0.3)	129(0.3)	-8.5
· 65세이상 비율	%	23.1	25.4	27.8	29.9	32.2		-

- 2014년 기준 연령별 농가인구를 보더라도 65세 이상은 39.1%, 60세 이상은 49.8%, 50세 이상은 69.4%를 차지하고 있고, 50세 이하는 30.6%에 불과함

연령별 농가인구 분표(2014년 기준)

연령	단위	계	20세이하	20세~39	40세~49	50세~59	60세~64	65세이상
인구수	천명	2,752	287	304	253	539	294	1,075
비중	%	100	10.4	11.0	9.2	19.6	10.7	39.1

1ha 미만 영세농가가 전체농가의 66.2%

- 2015년 기준 1ah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는 73만 농가이고 경지가 없는 농가도 9,637가구가 있는 등 영세농가는 전체농가의 66.2%에 달함
- 2ha미만도 95만가구로 전체농가의 84.7%에 달함
- 또한 10ha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10,725가구로 전체농가의 0.96%로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농축산물 판매금액 1천만 원 미만은 무려 64.0%, 1억 원 이상농가는 고작 2.7%에 불과함

경지규모별 농가 현황

	전체 농가수	경지 없는 농가	1ha 미만	1~2 미만	2~3	3~5	5~7	7~10	10ha 이상
2012년	1,151,116	11,514	750,253	216,754	73,795	56,280	20,207	12,166	10,148
2013년	1,142,029	9,984	744,062	214,625	74,459	55,387	20,693	12,115	10,704
2014년	1,120,776	9,637	732,392	207,630	73,580	54,255	20,160	12,395	10,725

* 출처: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농업 총생산액 하향 정체

- 총부가가치 대비 농업의 부가가치는 2006년 22조6670억원(2.8%)에서 2015년 26조8130억원(1.9%)로 9년 동안 4조1460억원이 늘었지만 국가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2006년 보다 0.9%가 감소했음

(표) 총부가가치 대비 농업 부가가치 증감 추이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률 (%)
• 국내총생산 (GDP)	10억원	1,265,308	1,332,681	1,377,457	1,429,445	1,485,078	1,558,592	4.9
• 총부가가치 (GVA)	10억원	1,145,124(100)	1,209,956(100)	1,251,455(100)	1,303,238(100)	1,354,286(100)	1,417,609(100)	4.6
- 농림어업		28,297(2.5)	30,454(2.5)	30,775(2.5)	30,437(2.3)	31,710(2.1)	32,741(2.3)	3.7
- 농 업		22,433(2.0)	24,265(2.0)	24,716(2.0)	24,669(1.9)	26,113(1.9)	26,823(1.9)	4.5
- 어 업		3,426(0.3)	3,733(0.3)	3,416(0.3)	3,061(0.2)	2,970(0.2)	3,116(0.2)	3.9

(2) 농민을 '희생양' 삼아 국정운영

동시다발 FTA에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음

-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FTA, 한중FTA 등 15 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음

  ※ 체결된 15건의 FTA중 박근혜정부 들어 6건의 FTA를 체결하였음

- FTA발효로 수출산업은 이득을 얻겠지만, 농어업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박근혜정부의 FTA 농업 피해대책은 미흡함
  - 그동안 마련된 FTA 국내대책 사례만 보더라도 정부는 10년간 몇 십조 원(한미FTA 24.1조원, 한EU FTA 2.1조원, 한영연방 FTA 2.1조원)을 지원하겠다

고 약속해 왔으나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농어업예산 비중이 줄여왔던 것으로 볼 때, 이는 "아랫돌 빼서 웃돌 쌓기 식" 정책임

- 결국 무역중심 경제체제 국가 유지를 위해 농어민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임

(표) 국가전체예산 대비 농어업예산 비중

(단위 : 억원)

연도	국가전체예산		농림수산식품분야			농림수산식품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06	2,241,000	6.9	147,703	7.2	6.6	132,789	6.8	5.9
'07	2,384,000	6.4	155,815	5.5	6.5	135,539	2.1	5.7
'08	2,572,000	7.9	159,821	2.6	6.2	139,549	3.0	5.4
'09	2,845,000	10.6	168,745	5.6	5.9	146,363	4.9	5.1
'10	2,928,000	2.9	172,730	2.4	5.9	146,738	0.3	5.0
'11	3,091,000	5.6	176,514	2.2	5.7	148,644	1.3	4.8
'12	3,254,000	5.3	181,322	2.7	5.6	154,083	3.7	4.7
'13	3,420,000	5.3	183,862	1.2	5.4	154,118 수산·식약 제외 135,268	0.0 △12.2	4.5 4.0
'14	3,558,000	4.0	187,000	1.7	5.6	136,371	0.8	3.8
'15	3,755,000	5.5	193,065	3.1	5.1	140,431	3.0	3.7
'16	3,864,000	2.9	193,946	0.5	5.0	143,681	2.3	3.7
'17	4,005,000	3.6	196,000	1.1	4.9	144,887	0.8	3.6

(표) 분석
-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대비 0.8% 인상에 그쳤고, 국가전체예산대비 예산비중도 3.6%로 매년 더 낮아지고 있음
- 그동안 한미FTA 대책, 한EU FTA 대책을 하고 있으니, 매년 예산이 증가하여야 하나 오히려 국가전체예산대비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FTA 피해대책들은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식" 정책에 불과함

박근혜정부 들어 제시한 공약가계부에는 농어업예산 5조 2천억원 삭감

-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고 공약하였으나,
  - 새 정부 들자마자 제시한 공약가계부를 통해 "농어업예산을 4년간 5조 2천억원 감축하겠다."고 밝힘

- 박근혜정부가 '국민복지 구현'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농어업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농어민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의도임

농어업관련 대선공약 무시 등 반 농민정책

-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인 △농업인 산재보험 도입, △농가 통신비 지원, △한중 FTA 신중 추진 등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등, 농어업 무시정책으로 일관
- 법인세 개혁은 손도대지 않아 대기업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없는 「농업소득세」만 부활시켜 반 서민, 반 농어민 정책 강행
- FTA피해보전직불제에 「수입기여도」라는 꼼수를 적용하여 지급액 축소, FTA 피해농민 우롱
- 이명박정부가 임의로 개악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당초대로 복원시키지 않아 농가손실 방치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의 방역 실패를 농가책임으로 전가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1년여가 지났으나 "농가 탓" "철새 탓"으로 돌리며 농가에 책임전가
  - AI로 국내에는 아직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없으나, 세계적으로는 AI로 648명이 감염되어 384명이 사망하였는데도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백신개발 등 대비책 마련 전무, 안전불감증 여전
- 3년 만에 또 발생한 구제역도 "농가 탓"으로 돌리다가, 구제역 백신이 '물 백신'으로 밝혀졌으며, 늦장대처, 은폐시도 등으로 정부책임이 밝혀짐
  - 또한 살처분 보상금 축소 조치 등을 강행, 농가에 책임전가
- 2016년 12월에 또다시 AI가 발생하였으나 늦장대응, 안이한 대응으로 가금류 3,314만마리를 살처분하고, 3천여억원의 비용이 발생함

- AI에 이어 2017년 2월에는 구제역이 O형과 A형이 동시에 발생하였으나,물백신 등 백신관리 미흡으로 낮은 항체율과 차단방역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부는 '농가 탓'이라 하여 농가의 공분을 사고 있음

(3) 불통정책 추진으로 국민여론에 역행, 농민부담 가중

불통인사·불통정책으로 국민 불안

- 출범초기 '수첩인사' '불통인사' '부적격인사'로 떠오른 윤진숙 해수부장관과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을 무리하게 임명하였고, 농식품부 장차관 인사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탕평책 인사는 없고, 지역편중 인사만 있었음
  -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 △병역회피 의혹 △겸직 등 도덕성·준법성 의심 △행정경험 미흡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강행
- 박근혜정부 2번째 장관으로 임명된 김재수는 인사청문회에서 △1%이자 황제대출 △부동산투기 의혹 △모친 차상위계층 혜택 △차관 재임 시 구제역 창궐로 예산 3조원 낭비 △at사장 재임 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실패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박근혜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김재수를 농식품부 장관에 임명
  - 더군다나 김재수장관은 SNS를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모함·음해·정치적 공격을 받았고,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하여 국회를 부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등 인격적 자질조차 의심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차관급 임명 현황〉

소속	직책	성명	나이	출신	학력·경력
농식품부	장관(전)	이동필	60	경북의성	영남대, 농촌경제연구원장
	장관(현)	김재수	60	대구	경북대, 농식품부 차관
	차관(전)	여인홍	59	부산	서울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차관(현)	이준원	55	충남당진	서울대, 농식품부 차관보
농진청	청장(전)	이양호	55	경북구미	영남대, 농식품부 기획관리실장
	청장(현)	정황근	61	충남천안	서울대, 청와대 비서관
산림청	청장(현)	신원섭	58	충북진천	충북대, 토론토대, 충북대교수

쌀 목표가격 야당에 밀려 억지 인상

- 쌀소득변동직불금 목표가격 170,083원/kg에서 195,901원으로 올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1년여 동안을 모르쇠로 일관하다,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188,000원으로 여야 합의에 동참, 결정

밥쌀용 쌀 수입으로 쌀값하락 부채질

- 야당과 농민들의 반대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밥쌀용 쌀 수입 강행, 쌀값 하락을 부채질

한중FTA 피해분석 축소 또는 분석방법 오류 의혹과 대책마련 미흡

- 정부, 한중FTA로 연간 77억 원, 20년간 1,540억 원 피해 예측, 축소 또는 분석방법 오류 의혹
- 정부는 "한중FTA 관세감축이 없어도, 중국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농업생산액 누적 피해액이 10조 3,825억원(연평균 5,191억원)으로 예측하였으나, 간접피해도 피해인데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 농민에게 부담전가
- 다만, 우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내에 '한중FTA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어촌상생기금 1조원 조성, FTA피해보전직불제 지급기준 상향, 밭직불금 인상, 농업 시설자금 대출금리 인하. 농사용 전기요금 부분 인하, 어업 소득세 비과세 한도 인상, 농신보 보증한도 인상 등 피해대책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음

마사회 용산장외발매소 재개장 강행, 주민 무시

- 용산장외발매소는 학교인근 사행성 도박장 설치 반대라는 학교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였고,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용산구청장·시의회 모두 개장을 반대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전 철회를 권고
-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권력실세였던 현명관 마사회장은 재개장을 강행, 주민과 갈등 초래, 주민과 대치 장기화

(4) 박근혜-최순실 비리 게이트, 농림식품 업계까지 파급

2016년 국정감사에서 최순실-박근혜 비리 게이트 실체 부각

- 2016년 교문위·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 비리를 파헤치면서 최순실-박근혜게이트 실체를 처음 발견됐고, 파헤치다보니 본체가 드러나기 시작함
- 대기업으로부터 며칠 만에 486억원을 걷은 미르재단이 아프리카 쌀가공식품 지원을 목적으로 이화여대와 제품개발 등 K-Meal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동 사업에 3억4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농식품부와 at의 묵인 하에 진행됐을 것으로 예상
- at가 2년 이상 프랑스 요리학교인 '에꼴-페랑디'와 MOU 체결에 공을 들여왔는데, 설립된 지 한 달 밖에 안 된 미르재단이 에꼴-페랑디와 MOU를 체결한 것은, at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세였던 최순실의 입김과 당시 at 사장이었던 김재수 현 농식품부 장관의 청와대 눈치 보기가 한 몫 했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평창 최순실 땅을 위한 산지 규제완화 의혹

- 최순실과 정유라는 평창군 일대에 약 69,827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대를 규제프리존법과 산악관광진흥법, 백두대간보호법 등을 제·개정하여 최순실일가 땅의 규제완화와 지가상승을 계획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있음

3 박근혜정부 공약 미이행, 파기 실태

각종 FTA와 TPP 추진 강행으로 농어촌위기

박근혜 공약		약속위반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 농어촌을 만들겠음 ▶한중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하여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	⇔	▶각종 FTA와 TPP 추진 강행으로 농어촌 위기 – 서둘러 한중FTA 협상타결 등 총 6개 FTA 협상타결, TPP 협상참여 발표 및 각종 FTA 협상 강행으로 우리 농어업 몰락위기 – 농가소득, 도시근로자소득의 64.4%에 불과, 생산비 증가로 실질소득 감소

농어업인 생활향상 지원은 모두 거짓

박근혜 공약		약속위반
▶농가 통신비 부담 경감 ▶경로당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 ▶산업기능요원, 영세·고령농 일손 돕기 ▶농산어촌 고교출신자 공공기관 채용확대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설립	⇔	▶농가 통신비 부담경감 공약은 이유 없이 추진하지 않고 있고, 경로당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은 기존 시범사업 에 그치고 있으며 ▶그외 이행하지 않고 있음

농해수위원회 (해양수산 분야)

전문위원 **이호경**

1 총평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강제 해산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는 허명

- 지난해 정부(안행부, 기재부, 해수부)는 국회의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의 해석 논란으로 개정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강제 종료함 ('16.6.30). 해수부의 자의적 법해석으로 특조위의 강제 해산 명령은 진상규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의혹이 야기됨
-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에게 굳건히 약속했던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결국 대통령에 의해 철저하게 방해되고 회피되어 무능력의 진상을 감추려 했던 의도가 들어난 것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은 위기대응 무능력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 행태

- 세월호 특조위가 고유 권한인 진상규명 활동에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 대해 조사 의사를 피력하자마자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여당 추천위원과 여당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세월호 참사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으로 행동지침을 내려 특조위를 협박하고 비난하는 기자회견까지 자행되어, 결과적으로 세월호참사 특조위 조사활동을 강제 종료시킴
-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의 석명 요구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의혹과 의구심만 높이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시 제출하라

는 보완 요구로 퇴짜를 맞음

-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해야하는 대통령이 초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사고 중계도 보지 않고, 관저에서 7시간이 지나서야 중대본을 방문하여 첫 대면 상황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을 적실히 보여준 것으로 그로 인한 여러 의혹이 결국 세월호 특조위의 강제종료와 연계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야기함

박근혜정부는 한진해운 사태를 초래하여 한국해운산업의 하락과 글로벌경쟁구도의 도태로 한국해운강국의 대외경제 국제신인도 등 해운산업의 미래를 후퇴시킴

- '16년 해운분야 원양선대의 기업 구조조정은 박근혜정부의 무책임한 정책방향으로 인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에 따른 한국發 물류운송, 해운·항만산업 종사들의 고용, 관련 협력업체의 도산 문제 등 혼란을 발생하는 해운산업 초유의 사태를 종용
- 이로 인해 세계 5위의 해운산업의 위상은 사라지고 국내 1위, 세계 7위의 위상을 자랑했던 한진해운은 40년 만에 파산절차라는 참혹한 결과로 해운업계에서 영원히 사라져 한국해운강국의 명예는 실추됨.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해 한진해운이라는 기업 하나의 파산이 아닌 물류쇼크 혼란으로 한국해운산업의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뒷수습에만 허우적거리는 정부의 무능한 위기 대응을 면밀히 보여준 사태였음
-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대외경제 국제신인도는 떨어지고 수출입 관련 업체의 무수한 피해와 부산지역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기업의 자구책만 탓하고 기업은 무책임만으로 일관하는 상황으로 난국의 해안은 찾아볼 수 없는 무능한 처사였음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 失政

(1) 4·16세월호참사에 따른 정부의 감독소홀 및 안전체계 시스템 붕괴로 연발적 참사 속출에도 불구, 안전 불감증은 증폭

안전관리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 노출로 세월호참사 등 연이은 해양사고

- 박근혜정부의 각종 안전사고는 선박개조·검사, 운항관리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등 형식적 관행에서 오는 예정된 사고로 4·16 세월호참사 이후 개정된 안전 법령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의 잦은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위험성이 심각함
-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온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도입·선박검사·출항 전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 실패와 사고발생 전후 해상관제 및 초동대응·구조활동 등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미흡으로 국가재난위기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준 사례
- 또한, 해운업계와 감독기관 간 유착과 관행이 세월호참사 원인을 제공하는 등 참혹한 결과에 따른 해상안전 불안 고조
- 세월호참사 이외에도 2014년 들어와 우이산호 유류유출사고(14.1), 캡틴반젤리스 L호 유류유출사고(14.2), 501오룡호 침몰사고(14.12), 돌고래호 전복사고(15.9) 등 한 해 크고 작은 대형 해양사고가 연이어져 인명피해 등 정부의 안전의식 상실에 대한 지적 및 안전관리체계가 촉구됨

(2)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 의혹은 무능과 무책임의 직무유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에 대한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 의혹

-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석명 요구에 따라 2017.1.10.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답변서를 제출
  - 재판부가 추가 소명을 요구한 내용은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인지

한 시점 △침몰 보도 TV로 확인했는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 제출 등

-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오전 8시50분) 이후 세월호 사고 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 검토 및 오전 10시15분 이후 김장수 실장과의 통화 기록 누락 등 구체적인 지시내용을 제출하지 못함

- **각 언론들은 박대통령의 행적 답변서가 답변 회피한, 의혹 더 키운 '세월호 7시간' 답변서라고 질타함**

- **청와대가 제출한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지시·조치 사항**

시간	세월호 사고당일 대통령 보고 및 지시·조치 사항(14.4.16)	보고 형태
08:48	세월호 사고 발생	
09:35	해경, 사고 현장 도착	
09:4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10:00	중대본 1차 공식 브리핑, 안보실로부터 대통령 첫 번째 보고 받음	서면
10:15	대통령, 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두 번째 보고 받음, **첫 번째 지시**	유선
10:22	대통령, 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세 번째 보고 받음, **두 번째 지시**	유선
10:30	대통령,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하여 **세 번째 지시**	유선
10:36	정무수석실로부터 네 번째 보고 받음	서면
10:40	안보실로부터 다섯 번째 보고 받음	서면
10:57	정무수석실로부터 여섯 번째 보고 받음	서면
11:20	안보실로부터 일곱 번째 보고 받음	서면
11:23	안보실로부터 여덟 번째 보고 받음	유선
11:28	정무수석실로부터 아홉 번째 보고 받음	서면
12:05	정무수석실로부터 열 번째 보고 받음	서면
12:33	정무수석실로부터 열한 번째 보고 받음	서면
13:07	정무수석실로부터 열두 번째 보고 받음	서면
13:13	안보실장으로부터 열세 번째 보고 받음	유선
14:11	대통령, 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열네 번째 보고 받음	유선
14:50	안보실장으로부터 열다섯 번째 보고 받음	유선
14:57	대통령, 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열여섯 번째 보고 받음, **네 번째 지시**	유선
15:00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준비, **다섯 번째 지시**	
15:30	정무수석실로부터 열일곱 번째 보고 받음	서면
16: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조숫자 오류 정정 브리핑	
17:11	정무수석실로부터 열여덟 번째 보고 받음	서면
17:15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및 **여섯 번째 지시**	

- 4.16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무수석실과 안보실로부터 18차례 보고 받고 세월호 관련 6차례 지시
  - 세월호 참사 당일 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두 7차례 구두보고, 11차례 서면보고를 함
  - 세월호 지시 관련 오전 10시 30분 이전에 3차례, 오후 2시 11분 이후 3차례로 대면 지시가 아닌 전화 지시로 돼 있음
- 2014년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소재를 모른다고 발언('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 경호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 고수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첫 서면보고 오전 10시부터 중대본 방문 오후 5시 10분까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

-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
-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취침했다는 의혹
-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전 비서관을 만났다는 의혹
- 청와대에서 굿(최태민 천도재)을 했다는 의혹

-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
  - "이것이 팩트입니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집무실 및 경내에서 당일 30차례의 보고와 지시를 내렸다고 게시하여 의혹은 악의적인 괴담과 언론 오보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반박함
  - 또한, 원칙적으로 청와대는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안보시설이므로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힘

검토의견

-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하여 청와대가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의혹을 일축하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 역시 담화를 통하여 청와대에서 굿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시간동안의 위치 및 행적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어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청와대는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기록 공개 및 사실 검증을 통해 의혹규명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청와대의 주장처럼 관저집무실에 있었다면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임
-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7시간동안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는지? 의혹 해소 소명 필요
-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답변서는 그 동안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운 조잡한 해명이라고 판단됨
- 정작 중요한 통화기록 내용 등 증명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의 심각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과연 관저에서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임
- 당일 그 수많은 보고를 받으면서도 구체적인 지시사항이라던지, 박 대통령이 나열한 의혹투성이인 보고 시점 및 검토 내역에 대해 어떤 이도 수긍하지 못할 것임
- 먼저, 언론 및 4·16연대 등 주변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반박을 살펴보면

시간	세월호 사고당일 대통령 소명 내역	의혹 및 반박
10:00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서면보고 검토	- 세월호 사고 발생(8시48분경) 이후 오전 9시19분 TV 첫 보도(YTN)에도 불구하고 10시까지 사고 발생 인지 못한 점
10:15	김장수 실장에게 전화 걸어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	- 헌재에 김장수 실장과의 통화 기록 미제출
10:30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전화하여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 지시	- 세월호특조위 1차 청문회에서 김석균 해경청장은 박 대통령과의 직접 전화 통화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한 점 - 헌재에 통화 기록 미제출 - 감사원보고 등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출동한 해경특공대는 11시35분, 출동지시를 받은 목포해양경찰구조대(특공대)는 12시15분에 도착
11:20	침몰 선체 사진 첨부된 국가안보실 보고	- 313명이 선체 안에 있는 채 뱃머리만 남기고

	검토	물속에 잠긴 세월호의 위급 상황을 인지 못하고 관저에 머물어 TV 중계를 보지도 않았다는 점
13:07	사회안전비서관으로부터 370명 구조 보고 받음	
13:45	해경, 190명 추가 구조 사실 아님을 청와대에 보고	- 참사 상황 보고 인지에도 관저 머물러
14:50	김장수 실장으로부터 370명 구조 인원 사실 아님을 정정 보고 받음	- 오후 2시11분 김장수 실장에게 정확한 상황 파악 지시에도 관저 머물러
15:30	사회안전비서관으로부터 탑승자 459명 중 166명 구조 보고 받음	- 심각한 상황 인지에도 불구 3시45분에 미용 담당자 머리손질(상황 인식 결여)
17:1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하여 구조상황 보고 받음	- 세월호 참사 첫 대면보고, 세월호 참사 첫 서면보고 받은 시점으로부터 7시간15분 소요

-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해야하는 대통령이 초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사고 중계도 보지 않고, 관저에서 7시간이 지나서야 중대본을 방문하여 첫 대면 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것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음
- 최순실 관련된 사항은 다 안했다고 하시는 대통령이 유독 '세월호 7시간의 행적' 의혹에 대해서는 관저에서 두문분출하면서 보고 받고 지시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다했다는 것은 의혹만 더 키우는 것임
- 의혹을 해소하기엔 너무 부족한 박 대통령의 이번 헌재 답변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헌재를 농락하는 위선된 소명으로 향후 7시간의 행적을 솔직히 밝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

(3) 4·16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직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근절 강화에도 불구, 고질적 해피아 관행은 지속

해수부 고위퇴직공직자의 산하기관·관련기업 낙하산 재취업으로 전관독식 관행 인사 논란

- 해수부는 지난해 인사를 단행하여 1급 고위공무원직의 남봉현 기획조정실장(16.12.1), 연영진 해양정책실장(16.11.7), 정영훈 수산정책실장(16.11.7)이 퇴직함

  - 최근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을 맡았던 前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이 해수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에 지원하여 논란(경향신문 12.06)

-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이 일자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제한 강화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 그러나, 해수부는 여전히 해피아 행태가 만연, 고위 공직자들의 산하기관 기관장 등으로의 재취업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및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인원은 29명으로 세월호 참사 이전의 19명보다 늘어난 상황**
  - 국감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세월호 참사 당시 주요 책임자급이었던 손재학 前 차관 및 우예종 前 기획조정실장은 각각 국립해양박물관 관장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에도 큰 제재 없이 해수부 퇴직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은 당연스럽게 행하여지고 있음

검토의견

- **해수부는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제 식구 챙기기 식의 산하기관장 임명 특혜를 중단해야 할 것임**
  - 탄핵으로 어지러운 시국에 해피아 낙하산 인사 강행은 아주 부적절한 처사로 해수부장관은 요식행위의 공모절차를 통해 제 식구 자리 만들기를 중단해야함
- **특히, 이번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에 지원하고 있는 연영진 前 해양정책실장은 세월호 인양 지연의 책임이 큰 자로 퇴직 후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직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던바, 이미 자리를 낙점하고 퇴직 후 자리를 옮기는 식의 해수부의 부적절한 관행은 단절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이번 논란의 연영진 前 세월호인양추진단장(해양정책실장)은 '세월호 참사 특조위 조사활동 강제종료'를 주도했던 인물이며, 해수부의 행동지침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문서 파동에도 연류 의혹이 제기되었던 인물
  - 특조위의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신청 접수된 진상조사를 이 문건에 의해 대응방안 지침

이 내려져 세월호 참사 특조위 여당추천위원들과 새누리당 농해수위원들이 특조위를 협박하고 비난하는 기자회견까지 자행된바 있음

- 해수부가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자리까지 마련하고 있는 이 실태에 대해 해피아 인사행태 개선을 촉구하며, 해수부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산하기관직의 임명을 통해 고질적 인사 관행을 멈추고 한층 강화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한국해운산업의 해운물류대란을 야기한 한진해운 사태, 사상초유 위기를 초래

박근혜정부의 무책임한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한국해운산업의 위기를 초래한 한진해운 사태는 현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비롯

- 한진해운은 지난 2016년 9월 1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5개월여 만에 곧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파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 해운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한진해운이 사실상 재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파산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임
  - 조사위원인 상일회계법인의 조사결과 청산가치가 1조7,900억으로 계속가치(판단불가)보다 높게 평가됨
- 한진해운은 해운업계에서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해운사였으나, 해운업황 악화 및 경영진의 부실경영 등으로 정부와 채권단의 자율협약 불수용 결정(16.8.30)에 따라 법정관리 수순을 진행중이었음
- 한진해운 사태는 결국 한국해운산업의 하락과 글로벌경쟁구도의 도태로 한국해운강국의 대외경제 국제신인도 후퇴 등 부산지역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끼침
- 박근혜정부의 '16년 해운분야 원양선대의 기업 구조조정은 무책임한 정부 정책 방향으로 인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하게 하여 이에 따른 한국發 물류운송, 해운·항만산업 종사들의 고용, 관련 협력업체의 도산 문제 등 혼란을 발생하는 해운산업 초유의 사태를 종용

- 이로 인해 세계 5위의 해운산업 위상은 사라지고 대한민국 해운산업을 견인했던 한진해운은 40년 만에 파산절차라는 참혹한 결과로 해운업계에서 영원히 사라져 글로벌한국해운강국의 명예는 실추됨.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해 한진해운이라는 글로벌해운기업이 파산되고 물류쇼크 혼란으로 한국해운산업의 최대 위기를 초래한 한진사태는 박근혜정부의 무능한 위기 대응을 면밀해 보여준 것임
-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대외경제 국제신인도는 떨어지고 수출입 관련 업체의 무수한 피해와 부산지역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기업의 자구책만 탓하고 기업은 무책임만으로 일관하는 상황으로 난국의 혜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음
- 한진해운의 자산 매각 및 고용 동향

□ **한진해운 자산 매각 현황**

❍ **(SM상선)** 한진해운 **태평양 노선 인수***(1.5) 후, '17.3 **서비스개시**를 목표로 선박(사선 6척, 용선 5척, 대선 1척) 및 컨테이너 장비 인수 중

* 인수가격 총 275.5억원, 한진해운 홍콩 법인 및 전산시스템, 영업관련 내용 일체

- 한진해운 국내 자산 중 **광양터미널, 경인항터미널**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1.5)하고, 인수 진행 중(2월初 종료 예정)

❍ **(현대상선)** TTI **롱비치터미널*** 및 **알헤시라스터미널**** 인수 추진 중

* 미국 법원은 한진해운의 지분매각 승인(1.18), 현대상선은 TIL(스위스 MSC 자회사)과 현대상선 20%, TIL 80% 비율로 지분 보유하기로 주주간 계약 체결(1.31)

** '16.11.24, 알헤시라스 터미널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상선 선정 후, 인수자금 및 인수 방법 등에 대해 협의 중('17.3 종료 예정)

- 그 외, 한진해운의 **일본, 대만 터미널** 인수를 검토 중이나, 현대상선의 운항 노선, 기존 보유 터미널 등을 감안 시 **현실성은 낮은 상황**

□ **고용동향**

❍ **(육상직)** 당초('16.8末) 711명을 고용 중이었으나, 405명이 퇴직하여, '17.1.23일 현재 **306명**을 **고용**(존속법인 72명 + 무급휴직 234명) 중

* 퇴직자 405명 중 SM상선 216명 고용, 현대상선 67명 고용

❍ **(해상직)** 당초('16.8末) 758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363명이 퇴직하여 '17.1.23일 현재 395명을 고용(승선 중 32명 + 무급휴직 363명) 중

* 퇴직자 363명중 유수SM(118명), 현대상선(33명) 등 선사 재취업은 255명

검토의견

- 지난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부산신항에서는 관계업체 작업중지 및 국내외 곳곳에서 선박압류, 입항 거부, 해운동맹 퇴출 등 물류쇼크 혼란으로 한국해운산업은 최대 위기에 봉착해 왔었음
- 한진해운 자산 매각은 결국 파산 선고를 예고한 수순이었고, 한진해운은 출범 40년 만에 해운업계에서 사라지게 되었음
- 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6.5조원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나, 해운산업의 정책방향이 민간선박펀드 활성화, 한국선박회사(가칭)설립, 글로벌 해양펀드 개편 등 금융 개선으로만 접근한다면 시장에서의 지배구조 문제 등 제2의 한진해운사태는 재발될 것임
- 더 이상 제2의 한진해운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해운산업의 미래를 위해 어려울수록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화를 꾀해야 할 것임. 정부의 선박 신조 지원으로 선박확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하여 상생할 수 있는 부실경영 및 재무구조에 대한 일원화된 정보수집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에 반영할 수 있게 건전한 해운산업체계를 재편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작금의 한진해운 사태처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의 안일한 인식 제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뒷수습에만 허우적거리는 정부기능은 위기대응에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변화되어야 할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자원 분야)

수석전문위원 **윤종석**

1 총평

-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시종일관 비협조, 결국 국정조사 파행으로 이어져, 진실규명에 실패한 정부여당 책임져야
- 사회적 소통 부족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완화)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침해 우려
- 중국과의 무역 갈등 등 우려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사드 배치, 중국의 맞대응식 단계별 비군사적 비우호적 조치 가능성 높고, 비관세적 조치 증가 우려
- 대기업 특혜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고용의 질적 측면을 무시한 대기업 민원 해결, 생색내기식 보여주기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 사례라는 오명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 失政

(1)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진실규명에 시종일관 비협조, 진실규명 방해

현황 및 문제점

1)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시종일관 비협조, 결국 국정조사 파행으로 이어져, 정부여당 책임져야

-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의도적인 비협조와 당사자인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의 자료 조작과 국조 방해가 있었음

- 천문학적인 국부유출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5인방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그 책임은 에너지공기업에게 전가. 감사원은 면죄부 감사로 검찰은 꼬리자르기 형식적인 수사로 마무리됨

2) 감사원의 두 차례 해외자원개발사업 감사 결과(15.7.14, 15.11.29)에서 MB 정부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천문학적 규모의 국부유출이 사실임을 확인함

- 지난 7년간(2008-2014), 자원개발 3개 공사는 부실한 투자계획 수립 등으로 당초 예상(3.1조원)보다 9.7조원 증가한 12.8조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5~2019년까지의 현금 수입도 기대보다 14.5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
- 향후 5년간(2015~2019)의 투자비는 24.5조원으로 늘어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이 당초 계획(3.4조원)보다 4.5조원 늘어난 7.9조원에 달한 것으로 전망함
- 더욱이 위 투자계획은 향후 5년간 유가가 93달러까지 지속상승한다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하고 있고, 주요 사업의 중단·유동성 위기 등 잠재 위협요인까지 현실화 될 경우, 재무적 위험은 더욱 커져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사업의 본래 목적인 자원확보는 미미한 채, 그간 투자한 사업의 부실 등으로 투자비 회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미달하고, 공사의 주력 사업들이 유동성 위기, 대규모 손실 위험, 사업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 근간이 흔들릴 위험에 있다고 지적함. 앞으로도 추가 투자비 상당액을 부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자원공기업의 재무위험으로 종국에는 국민부담 가중 우려된다고 발표함

검토의견

1) 이명박 前대통령 등 5인방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에 책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 천문학적인 국부가 유출되었고, 이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이라는 사업 실패로 결론이 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시종일관 5인방(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특사,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전 부총리, 윤상직 전 장관 등)에 대한 울타리 역할만 해 온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도 책임지고 반성해야
-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 규명에 면죄부를 준 감사원과 꼬리자르기 형식적인 수사로 진실을 묻어버린 검찰 역시 비판 받아야 함
- 비록 국정조사는 무산되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해외자원자원 개발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상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중단하지 않을 것임

2)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른 에너지공기업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에너지공기업 2015년 결산 결과, 2015년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수년간에 걸친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대규모 국부유출에 대한 적자 규모가 2015결산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이후에도 적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5결산) 석유공사 4.5조 적자, 광물공사 2.0조 적자

-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성이 부실한 자원개발 사업에 국민혈세를 퍼 붓는 과오를 범하지 않고, 더 이상의 국부유출이 없도록 해외자원개발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에너지공기업의 경영합리화(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2) 사회적 소통 부족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완화)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등 골목상권 침해 우려

현황

- 공정위는 2016년 6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

-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호지급보증금지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음.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에 속한 민간기업 53개가 28개로 대폭 줄어듬
-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적용하는 38개 법령도 모두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게 됨. 이에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원용 법령은 별도 개정 없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본질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에 불구하고, 이번 기준 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제력집중 심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됨
- 중소기업중앙회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해야 하며,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진출, 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규제완화는 인정하지만, 산업, 업종, 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카카오, 하림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 대리운전, 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 위주로 진출함에 따라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스타트업 생태계 파괴 논란이 지속적으로 예상됨

검토의견

- 중소기업계와의 소통 없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일괄상향 조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이를 철회하고 현행 5조원을 유지해야 함
- 국민의 대다수가 대기업 위주로 경제구조가 편향됐다고 인식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와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은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소통을 전제로 재논의해야 함

- 자산규모 상향조정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 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침범으로 또 다른 갈등의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인 만큼 자산총액 상향조정 보다는 신사업진출이나 연구개발 등 경제활성화를 발목 잡는 규제정비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

(3) 중국과의 무역 갈등 등 우려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사드 배치, 중국의 비관세적 조치 증가 우려, 모니터링 지속 필요.

현황

- 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후('16.7.8) 중국 정부는 사드관련 제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복 조치 등 관련 지침 등 공식 문건도 확인된 바는 없음
- 하지만, 한류 콘텐츠 제한, 특정기업 대상 세무 조사, 여행제한(저가여행단속, 전세기 운항 미승인), 통관 관리강화, 정부간 교류 제한, 한국산 제품 탑재제품에 대한 보조금 제외 등과 같이 비군사적 비우호적 조치와 사드 연관성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한류 제한령 강화, 방한관광객 20% 감축 지시(2016.10), 롯데그룹 세무조사 및 소방점검(2016.11), 우리 전세기 운항 불허(2016.12), 중국내 우리 기업차량 배터리 보조금 대상 제외(2016.12),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2017.1) 등

검토의견

-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에 따른 우리기업의 영향 정도와 조치에 대한 논리 등을 면밀히 분석, 사드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조치가 전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복 조치로 한국기업만을 타깃으로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하며, 중국 자국 산업육성 정책(전기차배터리), 자체 제도 운영 관리 강화(통관강화, 여행업 규제 등) 등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함

- 최근 한국산 배터리(삼성SDI, LG화학) 탑재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대상 제외(2016.12)는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드배치와 무관하게 사드배치 결정 이전부터 중국내 자동차 배터리산업 보호와 보조금 불법 수령 문제 심각, 전기차 업계의 재고 누적 가중 등과도 관련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해야 함
- 한중일 FTA 11차 공식 협상이 추진되는 등 공식적 경제교류는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비관세장벽 강화, 자국 산업 보호 등 이유로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고, 국내 내수와 직결되어 있는 여행,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함
- 사드 결정 발표 이후 중국의 반응 추세로 봤을 때 향후 우리측의 배치관련 추가적 조치에 따라 상응하는 맞대응식 단계별 비군사적 비우호적 조치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바, 그에 따른 면밀한 분석과 대응 마련이 요구됨

  * 사드배치 결정→정부교류 제한, 부지결정→한류제한 가시화(한한령), 부지확정→롯데 제재
- 사드 배치에 따른 양국간 상황 악화 시 중국내 제도와 규정 등을 활용한 비관세적 조치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측 관련 정책 및 제도 운용 행태 변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통관·검역·인증·회계 등 사드영향 우려 분야)을 마련하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임

(4) 대기업 특혜 논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흡

- 고용의 질적 측면을 무시한 대기업 민원 해결, 생색내기식 보여주기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 사례

현황

- 2013년 5월 1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가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하면서 외국인 합작법인에 대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 100% 제한을 완화 추진하겠다고 발표

- 2013년 5월 23일, 새누리당 여상규의원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제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개정안"발의
  - 외국인투자자 합작 법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제한 예외 규정 신설
  -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을 100% → 50%로 변경
- 2014년 1월 1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개정안"(대안) 국회 통과

주요 발언

-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발언을 통해 외촉법 개정에 대해 세 번 씩이나 직접 언급하며, 2조 3천억원 규모의 합작 공장 착공으로 총1만4천여명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문제를 야당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당시 민주당을 압박했었음
  -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 명의일자리가 창출되고..."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2013.11.18.)
- 정홍원 총리 역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적어도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 공장 착공으로 총1만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당장 외국인투자촉진법안만 통과되어도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 공장 착공으로 총 1만4천여 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 대국민담화(2013.10.28.)

법 개정 후 SK와 GS의 투자 및 일자리 효과 미흡

- 박근혜정부는 지금이라도 외촉법 개정을 위해 일자리 효과와 외자유치를 과대포장하여 국민 여론을 호도한 잘못된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특정 대기업의 민원해소를 염두에 두고 우회입법의 꼼수를 통해 대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함
- 첫 적용사례로 SK종합화학과 일본 JX에너지가 투자한 울산아로마틱스는 출자승인(2014.4.24.)이 되어, 법 통과 당시에 약속했던 9600억 원 보다는 237억 줄어든 9363억원을 투자했음. 이 중 JX에너지는 4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670억원이 줄어든 4130억원만 투자되었으며, 고용은 111명에 불과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SK루브리컨츠와 일본 JX에너지와의 합작투자회사인 울산 유베이스매뉴팩처링은 당초 약속보다 100억원이 줄어든 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임. 현재 일본 JX에너지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완료했으며(2014.12), 주식소유 승인 관련 공정위 심사를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을 완료함(2015.4).
- GS칼텍스 역시 2013년 11월 산업위 공청회에 연말까지 법안이 꼭 통과 되어야 총 1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여수 파라자일렌(PX) 공장 설립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증언했는데, 법이 통과 된지 1년이 다 지나가지만, PX시황이 악화되면서 일본측 파트너(다이요오일과 쇼와셀)는 시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사업이 일단 보류되어 있는 상황임
  - GS칼텍스는 당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중국의 PX수요가 600만에서 800만톤 정도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급하게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본측과의 논의가 멈춰지고 때문에 1조원의 투자가 날아간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민주당을 압박했었음
  - GS칼텍스는 일본측과 합작계약 성사 시 바로 공장건설이 가능하도록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부지조성(2015. 6월 기준, 약 80% 진행) 및 상세설계가 추진중임

검토의견

- 박근혜 대통령과 총리의 대국민담화와는 다르게 업계 주장에 근거한 계산에 따르면, 안정적인 일자리인 직접고용은 194명에 불과하고, 불안정하고 저임금 일자리는 14000명으로 고용의 질적 측면을 무시한 생색내기식 보여주기 일자리 창출에 불과했음
- 당시 산업부는 간접고용효과(14,000명)를 업계 제출자료와 2010년 산업연관표상의 화학제품 취업유발계수(한국은행, 12.5.31)를 단순 적용하여 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만4천 일자리 모두가 직접고용과 같은 좋은 일자리인 것처럼 호도하였음
  - 2조2,700억×6.0명/10억원(화학제품취업유발계수)=13,620명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우철**

1 총평

주거빈곤 심화

-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당시에는 보편적 주거복지와 550만가구 주거지원을 약속하였고, '목돈안드는전세', '행복주택20만호'를 공약하였지만
  - 자가보유(점유)율, 전세가율, 최저주거수준미달가구, 전세→월세전환 등 각종 주거지표에서 주거빈곤이 심화되고 주거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이는 주거정책을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주거빈곤 해소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경기부양수단으로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정책을 소홀히 한 데 주원인
  - 2013년 이후 일관되게 〈4.1부동산대책〉 47개 세부과제(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LTV/DTI 완화, 개발이익환수폐지, 소형의무공급폐지, 1가구1주택원칙 유보 등) 대부분이 실행되었음에도 전국민 주거실태는 악화중이고 렌트/하우스푸어는 증가하고 있음

산하기관 부채규모, 모럴해저드 심각

구분		'12	'13	'14	'15
23개 산하기관	자산(A)	2,984,072	3,109,307	3,126,220	3,051,979
	자본(B)	853,641	885,263	934,542	917,784
	부채(A-B)	2,130,431	2,224,044	2,191,678	2,134,195
	부채비율	249.57%	251.23%	234.52%	232.54%
	당기순이익	-2,716	-22,241	21,774	-31,825

- **부채규모 다소 감소, 당기순익 크게 감소**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개 산하기관 부채규모는 2013년 222조4,044억(251%)에서 2015년 213조4195억(232%)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 인천공항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악화되었고 코레일자회사 대부분의 부채비율이 급증
  - 반면 당기순익은 2012년 -2,716억에서 2013년 -2조2,241억, 2015년 -3조1825억으로 크게 악화중
  - 특히 수자원공사의 경우 120%→211%로 부채비율 급증하여 현재의 수익구조로는 해외사업 진출 내지 공사 차원의 전략사업 추진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23개 산하기관 임원 182명중 100명 낙하산인사**
  - 세월호사건 이후 박근혜대통령 스스로 "세월호사건의 원인이 낙하산인사, 관피아인사임"를 규정하고 척결을 약속하였지만 거의 대부분 산하기관에서 광범한 낙하산인사가 계속
  - 23개 산하기관중 낙하산인사가 없는 기관은 〈한국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워터에이플러스〉, 〈항공안전기술원〉 3곳 뿐이고, 총 임원 182명 중 100명이 정치권출신이거나 대선보은인사(정피아), 유관 상급관청(관피아) 인사
  - 특히 대통령이 "낙하산인사 척결"을 약속한 세월호사건 직후에도 낙하산/관피아인사가 진행된 데 대해 경악
- **청와대가 LH에 K사업 참여 종용**
  - LH의 경우 총부채 135.4조원으로 하루이자 92억원을 부담하고 있어 수익성 사업에서조차 철수하는 마당에 청와대(정만기비서관)가 적극 나서서 수익성이 저조한 〈이란 K타워프로젝트〉에 참여를 종용하고(연풍문회의), 미얀마 〈K타운프로젝트〉에도 개입시키는 등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 향후 제도적 보완대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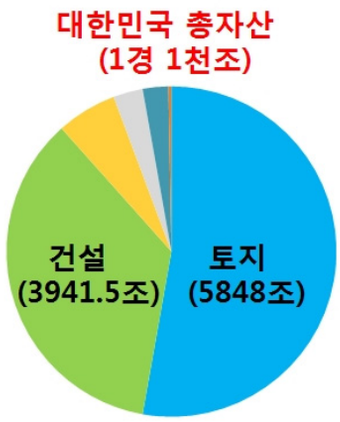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 失政

(1) 주거빈곤 심화

주거지표 악화

❖ 대한민국 총자산에서 토지자산(52.8%)과 건설자산(35.6%)을 합치면 전체의 88.4%를 점유

❖ 이밖에 설비자산 648.7조(5.9%), 재고자산 321.6조(2.9%), 지식재산생산물 273.2조(2.5%), 기타 32.8조(0.3%)로 나머지 자산을 합쳐도 전체의 11.6%에 불과



- 집값의 30%-50% 토지비중
  - 집값에서 30%~50% 차지하는 토지를 10가구중 4가구는 단1평도 갖고 있지 않지만 상위1%가 55.2%를, 상위10%가 97.6%를 독점하는 실태. 높은 분양가, 전월세난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
  - 반면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액은 1.4조로 국세(217.9조)의 0.64%, 소득세(60.7조)의 2.3%, 담배세의 13.3%이며 인지세(1조)와 비슷한 수준. 박근혜정부는 그나마 있던 다주택자양도세중과를 폐지하여 부자감세 추진. 불공정한 조세체계가 소득양극화와 주거빈곤의 주원인
- 경기부양수단이 된 주거대책
  - 박근혜정부는 「목돈안드는전세」공약을 폐기했고, 「행복주택20만호」는 입주실적 3,500호에 불과. 13차례 부동산/주거대책은 무주택서민 주거안정대책이라기 보다는 경기부양수단 정도로 인식됨
  - 총주택량이 (2008년) 1,673만호→(2014년) 1,916만호로 증가하였고, 자가보유의식이 83.7%~79.1%로 여전히 높음에도 자가점유율은 56.4%에서 53.6%로 악화되어 매년 8만7천가구가 자가→전월세로 전환됨

- 자가보유율 역시 60.9%에서 58%로 악화돼 자가(自家)가 54만5천가구 감소함

◎ 부동산지니계수 0.79로 임금(0.59)보다 심각

- 전체 가구의 44%가 무주택인 반면 상위 20%가 주택가격 대비 51.7% 소유. 부동산소득지니계수(15년) 0.79로 임금소득지니계수 0.59보다 크게 심각한 수준
- 최초주택구입 소요연수는 7년(14년). 임차가구비중은 43.4%(2008년)→46.2%(14년)로 증가하였고 전세→월세 급속 전환중인 가운데 월소득 대비 임대료율(RIR)은 17.5%→20.3%로 악화

월소득대비 임대료율(RIR)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전체(%)	18.7	17.5	19.2	19.8	20.3
RIR은 중위수 기준					

(2) BH가 부실 K사업참여 강요

청와대연풍문회의, LH 〈K타워프로젝트〉 참여 강요

◎ 하루이자만 92억원 부담하는 LH

- LH는 2016년 6월 기준 총부채 135.4조원(금융부채 87.4조원) 이며, 하루이자는 92억원
- 수익성사업조차 축소, 민간이양하는 등 기능조정 강화 상태

◎ BH 연풍문회의

■ 이란출장 업무성과 보고(현도관, 5/9일)

- "VIP 관심사로서 한-이란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어 있어 적극적인 추진이 불가피하고, 적정 부지를 저가로 제공받을시 사업성 확보가 가능"

■ 연풍문회의 익일 MOU에 〈미르〉=주요주체 포함

- 선병수처장 혼자 연풍문회의(정만기비서관 주재) 다녀와서 갑자기 추진하게 됐다. (미르관련) "2차 연풍문회의 때 선병수처장 입장에서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골치가 아팠을거다."

■ 이란국내법상 MOU체결 불가(유성덕부장)

- 이란은 국내 실정법상 공공기관이 외국기관과 MOU를 체결하려면 3개월전에 외교부 승인을 득해야하는 바, 이점을 잘아는 LH는 이란 NTDC(개발공사)와만 MOU체결을 준비했지 〈교원연기금〉과의 K타워프로젝트 MOU체결은 준비한 바가 없음

■ LH, 이란 〈K타워사업〉 부정적 검토(2016.5, LH)

- LH는 동 사업에 대해 "본 사업은 한국문화원, 한국어학당 등 공익성 업종이 40%이상 차지하므로 기본적으로 수지확보가 취약한 사업임. 따라서 정부예산, 경협기금, 공공펀드 지원이 필요함" 검토의견

◎ 〈K타워프로젝트〉 MOU 체결

- 박근혜대통령 이란 방문기간(5.1~3) 중 5.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란교원연기금, 포스코E&C간 '한국의 문화상업시설의 개발(가칭 K타워)에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K-Tower 사업컨셉≫

•부지규모 : 4,000㎡(1,200평)~8,000㎡(2,400평)내외(용적률 100~150%적용)
•유치시설 : 한국문화원, 한국어학당, 태권도장, 한식당, 한국 전자제품 전시·판매장, KOTRA무역관, 업무시설, 이란문화원 등
•건물형태 : 철골구조(컨테이너 이미지 고려)
•추정공사비 : 약 48억~96억원(약 400만원/3.3㎡) *부지매입비별도

- MOU 내용은, "가) K타워 기능, - 문화기능(한류센터, 한국어학당, 태권도장 등), - 상업기능(화장품샵, 한식당, 전자제품대리점 등), - 업무기능(한국계은행, 보험회사 등)임. 나) 한류교류증진의 추진주체의 일원으로 한국내 16개 대기업이 공동 설립한 〈미르재단〉이 포함될 것"이라는 내용임(5/2일, 양해각서)

◎ MOU변조 의혹

One of the organizations to promote Korean cultural exchange will be MI-R Foundation which was established by Korean big 16 companies.

- 이란측과 POSCO가 서명한 영문MOU상 〈미르〉는 "한류교류증진의 추진주체의 일원으로 … 미르재단이 포함될 것임"(2016.4.27)
- 정상외교포털에 게시된 파일에는 "한류교류증진의 주요주체는 한국내 16개 대기업이 공동설립한 미르재단이 될 것임"으로 변조됨
- 한글MOU 변조는 양해각서 제6조2항 "본 각서는 양 측의 서면동의가 있어야만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도 위반됨

(LH) 영/한 MOU	(정상외교포털) 한글MOU
- One of the organizations to promote Korean cultural exchange will be MI-R Foundation which was established by Korean big 16 companies - "한류교류증진의 추진 주체의 일원으로 한국내 16개 대기업이 공동 설립한 미르재단이 포함될 것임" (추진주체의 일원=미르)	- 한류교류증진의 주요 주체는 한국내 16개 대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미르〉재단이 될 것 (미르=주요주체)
※ 조직들 중 하나 → 주요주체로 변조한 의도가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	

- LH사장은국감에서 "직원의 단순 오역이다"고 변조의혹을 부인한 바, 두 한글본 MOU는 〈미르〉관련 내용 외에도 서명주체(3인↔2인), 서명주체명(LH↔대한민국 토지주택공사), 사용 글씨체(MS바탕체↔한컴바탕체), 문단모양(내어쓰기 등) 등에서 상이함
- "단순 실수"(사장) 답변과 "자료제출 당일 수정했다"(선병수처장)는 해명이 틀린 것도 문제이고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청와대가 독촉

- K타워사업에 있어서 〈미르〉의 위상이 변조된 영/한 MOU가 정상외교성과포털에 게시되었는 바,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국토부를 거쳐 LH에 하달한 공문에서 "박근혜대통령의 직접개입"을 입증할 주목할 만한 단서가 포착됨
- 공문에는 "(금주 VIP께서 직접 시스템 점검예정)이니 국토부 및 산하기관소관 MOU의 현재 추진현황 및 이행실적을 정상외교경제활용포털 관리자 사이트 (http://president.globalwindow.org/loginForm.do)에 16.7.7(목)까지 게재해 주시고, 향후 이행실적이 발생할 때마다 포털에 즉시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료된 MOU의 경우도 포털에 '완료'처리 필요"라고 기재

- 박근혜대통령이 K타워사업과 관련 직접 포털을 체크할 것이니 추진현황, 이행실적을 개시하라는 내용임
- 이 공문이 하달된 뒤 게시과정에서 추진주체의 일원인 〈미르〉를 주요 주체로 둔갑시킨 것은 박근혜대통령이 "〈미르〉를 이란 K타워사업의 주요주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박대통령의) 포털 점검과정에서 (LH가) 문제될 것을 염려해서 '〈미르〉=주요주체'로 변조한 의혹임

미얀마 K타운프로젝트

미얀마 K타운사업 최순실 개입의혹

- 미얀마 K타운은 760억원 규모 컨벤션센터를 무상원조로 지어주고 한류 관련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사업. 201. 8월 박대통령의 순방계획에 맞춰 본격적으로 추진. 미르재단이 선행사업인 이란 K타운사업의 운영자로 MOU를 맺은 상황이어서 추진 배경을 두고 의혹이 제기됨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상외교 경제활용 MOU 이행실적 게재 독촉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정상외교 경제분야 MOU를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을 통하여 MOU 이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우리부 및 산하기관 소관 MOU의 현재 추진현황 및 이행실적**을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관리자 사이트(http://president.globalwindow.org/loginForm.do)에 **'16.7.7(목)까지 게재**해 주시고(**금주 VIP께서 직접 시스템 점검예정**), **향후 이행실적**이 발생할 때마다 포털에 **즉시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료된 MOU의 경우도 포털에 '완료'처리 필요

3. 산자부에서는 향후 정상외교 경제분야 MOU 이행실적은 기존 이행카드가 아닌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을 통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인 바, 각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MOU 이행실적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붙임 : 1. 우리부 미게재 MOU 현황('16.7.5 기준)
2. MOU 이행실적 등록매뉴얼.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국토정책과장,도시정책과장,건축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토지정책과장,부동산개발정책과장,국토정보정책과장,공간정보제도과장,공간정보진흥과장,국가공간정보센터장,건설경제과장,해외건설정책과장,해외건설지원과장,수자원정책과장,수자원산업팀장,교통정책조정과장,물류정책과장,자동차정책과장,항공정책과장,항공안전정책과장,공항정책과장,도로정책과장,철도정책과장,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한국도로공사사장,한국국토정보공사장,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해외건설협회 회장

2016.07.06.

주무관 윤현식 담당관 박대순

협조자

시행 국제협력통상담당관-2188 (2016.07.06.) 접수 해외사업처-2397 (2016.07.07.)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4739 전송 044-201-5524 / yununsigi@molit.go.kr / 비공개(2)

- 최씨가 미얀마 K타운사업 현지법인 지분을 차명으로 취득해 이권을 노린 것으로 의심. 청와대 경제수석실(안종범) 산하 산업통장자원비서관실(현정만 기차관)이 이란·미얀마 K타운사업을 총괄
- 삼성전기 유럽판매법인장(상무), 글로벌마케팅실장(전무)를 역임한 유재경대사는 2016. 5월부터 미얀마 대사직을 수행. 민간기업인 출신으로 이례적으로 대사에 발탁돼 최씨가 K타운사업 등을 염두에 두고 인선과정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

◎ **더민주당, 〈이게 나라냐〉에서 문제점 지적**

≪K-Town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미얀마 양곤시 8mile 인근
- 부지규모 : 66,000~100,000㎡
- 도입시설 : 한류시설(한국문화원, 어학당, 컨벤션센터, 전시·공연장, 극장), 복합쇼핑몰, 식당, 식음료점, 호텔, 마트, 업무시설 등

- 〈이게 나라냐〉 189-92p에서 미안마 K타운사업 경과, 문제점, 유재경 글로벌 마케팅실장을 미안마대사로 임명한 문제점, 정만기비서관 역할, K타운대책회의 민간인 참석 문제점 등 상술

◎ **유재경대사 임명 경위 조사해야**

- 유재경대사는 〈삼성전기〉 유럽본부장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했고, 삼성이 〈승마협회〉 등을 통해 최순실씨를 지원하기 시작한 시점에는 〈글로벌

마케팅실장〉을 맡고 있었음

- 유대사는 최순실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면서 자신의 대사 임명 배경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그러나 K타운사업 추진을 앞두고 삼성그룹 임원출신이 파격적으로 미얀마대사에 임명된 것은 의문

박근혜대통령 역할 조사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K프로젝트사업 이행을 몇 차례 강조하기도. 한국기업이 밀집해서 상품도 팔고 한류도 전파하면서 붐을 일으키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구상이어서 비현실성

정만기산자차관 역할 규명해야

- K타운 추진 관련 산업부 주최, 코트라 LH가 참석하여 제1차회의(2016. 7. 8)가 산업부에서 진행됨. 정부회의에 민간인도 참여시킴
- 당초 민간 투자로 구상했다가 여의치 않자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을 동원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 ODA 규모는 6500만 달러(약 760억원)
- 코이카 검토후 "타당성이 부족" 반발. 미얀마측이 제공하기로 했다는 용지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외진 곳이었다고.
- 정만기차관은 "K타운사업은 미얀마정부의 요청으로 시작됐다"라고 밝혔지만 '미얀마정부의 요청'이라는 외형과 달리 한국인이 관여한 정황

H인터내셔널 민간인 정부회의 참석

- 정만기차관이 주관했던 K타운대책회의에 미얀마 대표 자격으로 민간인 인씨가 참여. 한국인 인씨는 〈H인터내셔널〉을 운영하면서 미얀마를 오가며 무역, 부동산 투자 등 종사
- 2014년부터 M사도 설립해 미얀마 수출 화물의 '선적 전 검사(PSI·화물에 대한 유해성 사전검사)' 대행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홍보
- 2016년 7월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얀마 무역진흥국 서울사무소' 개소식을 열기도. 이 자리에 주형환 산업부장관도 참석

- M사와 H인터내셔널, '미얀마 무역진흥국 서울사무소'는 주소가 같은 한 사무실에 위치. I씨의 개인사업과 미얀마정부 업무가 뒤섞여 있다는 것. K타운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관여했던 I씨는 "그런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나는 아는 바 없다"라고 부인
- 정만기 당시 비서관 주재회의에 참석했던 I씨는 '정차관과 어떤 사이냐'고 묻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반면 정차관은 "추진과정에서 대화를 몇 번 했고 그때 I씨가 나왔다(만났다)"라고 말해 정반대의 설명

K타운프로젝트 & K타워프로젝트

구 분	K타운사업(미얀마)	K타워프로젝트(이란)
시 기	2016.5(미얀마 사업발굴회의)	2016.5.2.(MOU체결)
목 적	- 미얀마내 한류 확산 및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확보	- 이란에서 한류와 비즈니스가 융합된 거점을 확보하여 한류의 전파와 함께 한-이란 비즈니스 증대 도모
시 설	- 한류시설(한국문화원, 어학당, 컨벤션센터, 전시·공연장, 극장), 복합쇼핑몰, 식당, 식음료점, 호텔, 마트, 업무시설 등	- 한국문화원, 한국어학당, 태권도장, 한식당, 한국전자제품 전시·판매장, KOTRA무역관, 업무시설, 이란문화원 등
추 진	- 박근혜대통령 순방에 맞춰 추진 -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 주관	- 박근혜대통령 순방 기간에 MOU체결 -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 주관
민간인 참석	- 민간인 인씨(H인터내셔널)	- 이한선이사(미르) 참석
특이 사항	- 〈삼성전기〉 유재경 유럽본부장을 미얀마 대사로 임명 - 〈삼성〉이 승마협회 등을 통해 최순실씨를 지원하기 시작한 시점에는 〈글로벌마케팅실장〉을 맡았었음	- (국내용인) 한글MOU 변조 - "미르=추진주체의 일원"을 주요 추진주체로 둔갑시킴 - 국내 〈I타워사업〉에도 무명의 브로커들이 움직인 정황

(3) 예산뒷받침 없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미세먼지 국민건강 위협

미세먼지

- PM-2.5의 크기는 보통 머리카락 직경에 비해 20분의 1보다 더 작은 매우 미세한 입자로 호흡을 통해 인체로 들어가는 경우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도달·침착하여 폐의 기능을 약화 시킬 수 있음

- 모세혈관을 타고 혈액에 침투하여 심혈관계(心血管系)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관련 질환자의 사망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간주

◎ 관련 질환(심혈관·호흡기계통(PM-2.5기준))

- OECD 2016년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연 900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

2014년			2015년		
환자수	내원일수	총진료비	환자수	내원일수	총진료비
20,538,534	68,966,994	1,021,717,388	19,850,221	64,806,978	994,165,073
2,124,985	8,175,734	657,158,978	2,187,330	8,886,501	787,846,806
16,142,968	59,483,127	874,559,558	16,010,375	58,149,346	891,583,040
10,938,515	31,983,044	631,846,611	10,675,529	30,790,562	630,677,106
4,831,409	14,845,110	406,964,619	4,704,078	14,255,950	418,548,437
20,553	247,861	55,382,838	18,871	252,511	59,147,468
34,717	240,598	46,337,632	32,012	251,840	51,224,039
8,242	85,134	18,179,465	6,500	76,260	17,458,106
54,957	325,369	69,507,423	45,905	316,194	72,833,883
106,552	275,538	48,334,143	97,031	288,364	55,541,832

- 한국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2060년에는 회원국 중 미세먼지 사망률 1위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

◎ 싱가폴정부 미세먼지질환 의료비지원

- 비교적 청정국가로 알려진 싱가폴정부의 경우 2014년 이후 미세먼지에 의한 결막염이나 기관지질환으로 고통받는 영유아~18세미만, 65세이상 노인들, 그밖의 의료혜택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중

예산 뒷받침 없는 미세먼지대책

◎ 국토부는 2016. 6월초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표와 같이 발표

주 요 과 제 명	세부사항(조치사항)	소요예산/법령규칙개정(상술)
□ 경유버스 CNG化		
▪ CNG 연료보조금 지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개정(지원근거 신설) - 추진일정 : '16.8월말 입법발의(예정), '18년부터 CNG 연료보조금 지급
▪ M버스는 CNG 버스만 신규허가	· M-버스 신규면허 시 CNG 버스 의무화 · 버스제도개선위원회를 거쳐 면허기준 및 사업자 평가기준 수정	- '16.7월 : 버스제도개선위원회 상정·확정(완료) - '16.8월 : M-버스 신규면허부터 적용 * M-버스 5개 노선 8.1~17 공모 진행 중
▪ 농어촌·시외버스 CNG 면허기준 완화	· 농어촌·시외버스 사업자가 CNG 버스 도입시 면허기준 완화 추진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 여자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 - 추진일정 : '16.10월 입법예고, '16.12월 공포
▪ 사업용 전기버스	· 사업용 전기버스의 경우 기존 16인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16.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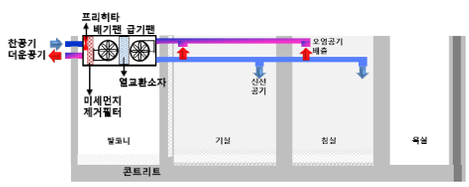
등록규제 등 완화	13인승으로 등록규제를 완화하고, 차령도 2년연장 추진 · 여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완료하였고, 지자체 요청 시 국토부장관 고시 要	및 시행규칙(별표 2, '16.4월) 개정완료 - 지자체에서 요청 시 수시로 지역 고시
■ CNG 충전소 확충 - 휴게소 부지 제공	· 고속도로 휴게소에 CNG 충전소 부지제공 추진	- 16년 : CNG 충전소 부지제공계획 수립 - '17~'19년 : 부지 제공 * 충전소 설치비는 환경부 소관사항
- GB 입지규제 완화	· 개발제한구역 내 CNG 충전소 입지제한 완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개정 - 추진일정 : '16.7.21~8.22 입법예고, '16.9.23 공포·시행(예정)
□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서울 도심~수도권 서북부 신도시 20분대 연결)서비스 조기 제공방안 마련 ·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신안산선) 조기 착공방안 마련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A노선) 〉 - '16.3분기 : 민자사업 기본계획안 마련 착수 - '17.3분기 :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 * '17년 예산은 기재부 협의 중 〈 신안산선 〉 - '16.3분기 : 민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17.1분기 : 우선협상자 협상 및 설계 * '17년 예산은 기재부 협의 중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확대 및 광역환승센터 확충	· 친환경·광역운송수단인 광역BRT 단계적 확대(노선 3→5개, 연장 62→134km, '20년까지) · 수도권 주요 교통결절점에 광역환승센터 설치(수원역·오산역·지제역, '20년 까지)	- '16.6.29 : 수원~구로 광역BRT 설계용역 착수 - '16.12월 : 수원역 환승센터 준공, 지제역 광역환승센터 착공 * '17년 예산은 기재부 협의 중
□ 건설기계 수소연료전지 엔진 도입		
■ 안전기준 마련	· 산업부에서 연구개발 중인 수소연료전지의 건설기계(지게차) 적용을 위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산업부 R&D 세부내용 검토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의2 신설(수소연료전지) - 추진일정 : '17.6월 입법예고, '17.12월 공포
□ 비산먼지 주요 배출원 집중관리		
■ 녹지형 중앙분리대 구간에 오목형 화단 설치 등 저감방안 반영	· 지방청·지자체에 오목형 중앙분리대를 적용토록권고	- '16.下 : 오목형 화단설치 권고(지자체, 지방청) - '17.下 : 도로관련규정 개정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주요 점검항목에 포함하여 관리	- 환경부·국토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16.11월, '17년: 2회)
□ 주차장·도로변 충전인프라 구축		
■ 신축공동주택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 주차장 일부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근거 마련 ·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 내 차량인식 장치가 부착된 콘센트 설치 의무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2항 신설 - 추진일정 : '17.9월 입법예고, '17.12월 공포
■ 기존 공동주택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절차 간소화	· 관리주체 동의만으로 기존 콘센트 주변에 차량인식 장치 부착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개정 - 추진일정 : '16.9월 입법예고, '16.12월 공포
■ 충전시설 설치공간 건폐율 면적제외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간을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건폐율 완화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개정 - 추진일정 : '16.7.1~8.10 입법예고(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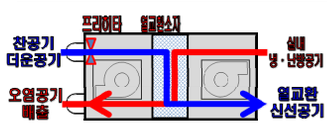
		'16.10월 공포·시행(예정)
■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 설치	·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4개소)에 충전기를 1개 이상 설치	-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부지제공(도로공사) *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설치는 환경부 소관 사항 * ('20년까지 설치규모) 전기차 충전소 : 130기, 수소차 충전소 : 20기
□ 전기·수소차 인센티브 적극 확대		
■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감면	·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한시적 시행	- '16.9월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종합 개편안 마련 - '16.10월 이후 : 관계법령 개정안 마련·협의
■ 식별을 위한 전용 번호판 도입	· 경찰청 단속카메라의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번호판 모델 도입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제1조부터 제7조까지) - 추진일정 : '16.12월 개정
■ 노후화물차 친환경차 교체시 톤급 상향제한 철폐 및 신규허가 허용	· 친환경 화물차의 경우 톤급상향 대폐차 제한기간(16개월) 및 한도(50%) 예외 인정 · 친환경 화물차의 경우 수급조절 제도와 별개로 신규허가 인정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9조 개정 - 추진일정 : '16. 8월 행정예고, '16.10월 공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개정 - 추진일정 : '16.8월말 입법발의(예정), '16.12월 국회제출
■ 전기차 대여 사업자 세제 혜택	· 전기차 보유 대여사업자의 법인세 감면(기재부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기재부 소관) 개정 - 추진일정 : '16.7.29~8.18 입법예고, '16.9월 국회제출 예정
□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차단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		
■ 환기필터의 미세먼지 측정 표준 마련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 필요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4조 개정 - 추진일정 : '16.6~12월 연구용역(미세먼지 측정기준), '17.3월 기준 개정
■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의 여과성능 기준 개선	· 미세먼지 여과를 통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성능기준 강화 추진 - 연구용역('16.6~)을 통해 적정여과성능 기준을 도출하여 제도개선 추진('1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5 개정 - 추진일정 : '16년말 연구용역 완료, '17.3월 입법예고, '17.6월 공포
■ 지하철 터널·차량 내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 지하철 터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19.2) · 지하철 차량 부착형 미세먼지 제거 및 객실 내 유입차단 장치 개발(~'19.2) · 미세먼지 제거 전용차량 개발(~'19.2)	- 지하철 터널 내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14.9월~'19.2월 - 지하철 차량 부착형 미세먼지 제거 및 객실 내 유입 차단장치 개발 : '14.9월~'19.2월 - 미세먼지 제거 전용차량 개발 : '14.9월~'19.2월 * 예산 : '16년 35억, '17년 30억, '18년 45억 (R&D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나, 변동 가능)
□ 스마트 도시 및 제로에너지 빌딩 확산		
■ 스마트 교통시스템 확산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 스마트도시 확산	· 신호주기 자동조정 시스템 등 4세대 지능형 신호시스템 R&D 추진('15~'20)	- 신호주기 자동조정 시스템 개발('16~) - 도시부 도로에 테스트베드를 구축, 개발된 기술 실증('19~) * 예산 : '16년 20억, 17년 예산은 협의 중
	·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중심 스마트도시 사업 확대('16~'25)	- 전국 13개 지역별 스마트그리드 관련 요소기기 실증 진행('16~'25)
	·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에너지 저장장치 등 스마트 요소기술의 표준·인증 지원 ('15~'20)	- BEMS KS적용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등 기반구축('17~) - 에너지 수요관리 및 분석·진단 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19~) * 17년 예산은 협의 중
■ 제로에너지빌딩	·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시행 및 공공부문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제로에너지빌딩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6.6월~'17.2월) - 녹색건축법령 및 공동부령 개정('16.12월)

		*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 예정
	· 민간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확대 추진	- '16년 : 6천여 건 → '17년 8천여 건
	· 친환경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해 건물 신축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점수에 난방설비 사용연료에 따른 차등점수 반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선 관련 연구용역 실시('16.6월~'17.2월)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7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지만 정작 대부분 제도개선 사항이고 예산 뒷받침이 없어서 실효성에 의문. 예산안은 5월말에 기재부로 넘어간 반면 대책발표는 6월에 이뤄진 탓. 국민건강은 안중에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강화해야





- 「주택법」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이 마련됨
- 동 규정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미세먼지종합대책(로드맵)이 마련되고
- 환기방식에 있어서 에너지절약형 환기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바, 자연환기방식은 미세먼지필터링수준이 낮고 에너지손실도 높으므로 기계환기 내지 하이브리드환기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또한 기계식 환기방식에 있어서 "고성능외기청정필터를 갖춘 설비일 것"(별표 3)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고성능외기청정필터는 한국산업표준(KS B6141)에 의거 입자포집율이 90%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규정이 LH 등 공공임대에서 엄격히 준수될 필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개정 2013.12.4.〉

1.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을 포함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깥의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12.4.〉

(별표 3)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

전체 단위세대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환기설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4 "신축 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한 자연환기설비로 일정 수준의 단열성능주1)과 표면결로방지성능주2)을 확보할 것
   주1) KS F 2278에 따른 열관류율값이 2.632W/(㎡·K)이하{열관류저항 0.380㎡·K/W 이상}인 것(환기구 밀폐조건으로 측정)
   주2) KS F 2295에 따라 항온항습실 공기온도 20℃, 상대습도 50% 및 저온실 온도 -10℃인 조건(환기구 밀폐조건으로 측정)
2. 기계환기설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신축 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한 기계환기설비로 국가나 공인인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통하여 환기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로 고성능 외기청정필터를 갖춘 설비일 것
3.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 : 제1호와 제2호의 환기설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된 환기설비로, 필요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가동되어야 할 것

※ 적용방법

1) 환기설비 사양을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환기용량이 다른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각 설비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할 것
2)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고효율기자재인증(산업통상자원부), 건설신기술(국토교통부), 신기술인증(NET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신기술(환경부) 등과 같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에서 인정한 인증서 또는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료를 첨부할 것
3) 열회수환기장치의 경우, 바이패스 기능(급기 또는 배기 중 하나 이상 적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프리히터(프리히터와 같이 혹한기에서 작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단, 혼합형 환기설비에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4) 환기설비는 필터교환, 청소 등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5) 고성능 외기청정필터는 한국산업표준(KS B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이 비색법 또는 광산란적산법으로 측정하여 90퍼센트 이상인 것을 의미함. 수명연장을 위하여 여과기 전단부에 사전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장치 등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함

3.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

가. 별표 3의 적합여부
나. 기본설계도서상 환기설비 적용방법 확인
다. 자연환기설비의 경우 환기량, 단열성능 및 표면결로방지성능 확보여부
라. 기계환기설비 또는 혼합형 환기설비의 경우 설계도서, 국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나 시험성적서 및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등 첨부

마. 열회수형환기장치의 경우 바이패스 기능 및 프리히터(프리히터와 같이 혹한기에서 작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포함한다)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서 첨부. 혼합형 환기설비에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바. 적용된 환기설비의 사양이 명시된 사용설명서 첨부

-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에 우선 적용 필요**
  - 2015년 현재 공공임대는 116만호수준인 바,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에 우선적으로 고성능 미세먼지환기시스템을 개량하고, 방음, 방진, 상수도노후관교체, 에너지절감(녹색건축-패시브/엑티브하우스)을 적용하여 주거환경/만족도를 크게 개선할 필요

3 박근혜정부 공약 미이행, 파기 실태

보편적 주거복지? 550만가구 주거지원?

- **박대통령 주거공약은 거의 대부분 파기상태**
  - 주거공약 중 이행한 것이 거의 없는 관계로 공약별 파기 현황을 표로 대신함

박근혜후보 대선공약(주거)	공약집	이행현황
• 보편적주거복지 구현, 550만가구 주거지원	216p	전세가율 고공행진, 전세대란 주거빈곤 심화, 렌트/하우스푸어 급증 550만가구가 아닌 81만가구 주거 지원
• 집주인도 세입자도 집걱정, 대출상환 걱정 없는 세상이 옵니다.	210p	집주인도 세입자도 집걱정 집주인 : 가계부채걱정 세입자 : 전세걱정, 전세→월세가속화
• 하우스푸어대책 -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212p 213p	악성 7만가구 위험군 150만 수준
• 렌트푸어대책 - 행복주택20만호 건설(실제 : 14만호 축소, 15.12월까지 847호 입주예정) - 시세대비 1/2-1/3수준의 임대주택공급(실제: 60%-80%)) - 2013년 하반기 1만가구 착공	214p	- 행복주택 20만호공약. (2017.2월현재) 3,500호 입주실적. 1.75% 수준 - 시세대비 1/2가격이 아니라 80% 수준 - 2013년 야당의 관련법 개정 협조에도 불구하고 찰공실적 제로
- 목돈안드는전세 : 연간5만가구 지원	215p	-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폐기
-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무주택자 전체를 대상으	216p	보편적 주거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고

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 매년 45만가구 주거지원, 2022년까지 무주택자 550만가구 전부 지원		사하고 주거빈곤층(53만명), 최저주거수준미달가구(99만가구), 차상위가구(197만가구)의 주거수준 더욱 악화 원인 : 초이노믹스. 주거복지대책이 아닌 부동산경기부양수단으로 주택정책 일관(13차례)
- 영구임대 관리의 공공성 강화→민영화 추진, 갈등증폭	217p	영구임대 공공성 약화. 뉴스테이중심 주택관리공단 위상 약화. 1인시위
• 행복기숙사 - 기존사립대 기숙사의 1/3가격으로 기숙사 제공(실제: 60-80%)	37p	주변의 1/3가격은 고사하고 80% 수준 육박
• 공공임대 - 2013-18년 공공임대주택사업계획변경	92p	〈12.23여야합의〉에서 10%수준 공급확대를 약속했지만 이를 위해 실행해야할 매년 15만호 공급량에 크게 미달하는 10만-12만호수준 공급 중
• 부동산3법 : 공약에 없음 - 분양가상한제 폐지 → 탄력적용 -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 → 3년 유예 - 과밀억제권역재건축조합원 1가구1주택원칙 폐지→3주택허용	공약 없음	공약에도 없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LTV/DTI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 과밀억제권역재건축 1가구1주택원칙 폐지 등을 추진 무주택 주거실태 더욱 악화

기억도 못하는 '보편적주거복지' 공약

- 박근혜대통령은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무주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하겠다. 2022년까지 무주택자 550만가구 전부 지원하겠다.(216p) 집주인도 세입자도 집걱정, 대출상환 걱정 없는 세상이 온다."(210p) 약속
- 대선 후에는 자신의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사실을 망각한채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을 공격하는 자세. 급식과 주거는 천양지차

세월호사건 이후에도 낙하산/관피아인사 심각

박근혜대통령 "낙하산/관피아인사 근절" 발언

-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2013년 1월 박근혜대통령)

- 세월호사건 이후에는 사건의 원인을 비정상 관행 탓으로 규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창하며 관피아인사 근절을 약속
- "이번 (세월호) 사고(14.4.16)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 ...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국민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발언
- 국토부 산하 24개 기관의 대표, 감사, 이사 등 임원의 경우 MB정부 못지않게 대선캠프 관계자, 지방선거, 총선 출마자, 당직자 등을 집중 배치하였고, 박대통령 스스로 세월호사건의 원인으로 규정하며 척결을 약속했던 관피아/정피아 인사가 세월호사건(14년4.16일) 이후에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 특히 세월호사건 이틀 후인 2014.4.18일 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에 임명된 이성민, 오영찬은 각각 (재)동화경모공원 대표, (재)동화경모공원 이사장인 바, 철도시설공단은 부채 3위로 경영혁신이 절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인 바, 공동묘지 대표와 이사장이 철도시설공단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동일 재단의 임원 2명을 같은 날 같은 기관에 이사로 임명한 것은 비정상인사의 대표사례로 간주되는 바, 경위를 규명할 필요

- **각 기관별 부채 및 낙하산/관피아인사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인천국제공항공사**

구 분(단위 : 억원)		'12	'13	'14	'15
인천국제 공항공사	자산(A)	78,545	77,401	81,246	93,563
	자본(B)	51,722	55,221	60,037	65,748
	부채(A-B)	26,823	22,180	21,209	27,815
	부채비율	51.9%	40.2%	35.3%	42.3%
	당기순이익	4,994	4,721	6,184	7,716

구분	성명	임기(연임)	주요경력	비고(8)
기관장	정일영	2016.02.02.~ 2019.02.01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상임 감사	박용석	2015.02.25~ 2017.02.24	• 대통령경호실 안전본부장 •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 경호부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상임 이사	이광수	2016.07.04.~ 2018.07.03	• 공사 마케팅본부장 • 공사 기획조정실장	
	김영웅	2015.02.16.~ 2017.02.15	• 공사 운영본부장 • 공사 시설본부장	
	김영규	2016.07.04.~ 2018.07.03	• 공사 건축1처장 • 공사 터미널계획팀장	
비상임 이사	이준희	2014.09.11 ~ 2017.10.13.(연)	• 선문대 국제관계학 객원교수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정부대표	낙하산 (세월호이후)
	엄대호	2014.12.16 ~ 2018.01.09.(연)	•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 유엘이엔씨 대표이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신동천	2014.12.16 ~ 2016.12.15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한국무역보험학회 회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유재윤	2015.02.17 ~ 2017.02.16	• ㈜삼영상사 사장 • ㈜동성 감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신종익	2016.01.12.~ 2018.01.11	• 국회 입법지원위원 • 신승회계법인 고문	낙하산 (세월호이후)
	김영과	2016.01.12.~ 2018.01.11	• 자본시장연구원 고문 • KB금융지주 사외이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최태희	2016.01.12.~ 2018.01.11	•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육자료 연구실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 부채비율이 40%에서 42%대로 악화되었음에도 낙하산인사 심각수준.
☞ 비상임이사 대부분이 세월호사건 이후 낙하산 인사

한국공항공사

구 분(단위 : 억원)		'12	'13	'14	'15
한국 공항공사	자산(A)	36,769	40,544	41,968	43,367
	자본(B)	33,106	36,642	38,005	39,295
	부채(A-B)	3,663	3,902	3,963	4,072
	부채비율	11.1%	10.7%	10.4%	10.4%
	당기순이익	1,382	1,286	1,735	1,874

구분	성명	임기(연임)	주요경력	비고
기관장	성일환	2016.3.25.~ 2019.3.24	• 공군교육사령부 사령관 • 공군 참모총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상임 감사	정오규	2015.1.27~ 2017.1.26	• 새누리당 부산선대위 사회통합본부장 • 생활정치 닷컴 대표	낙하산 (세월호이후)
부사장	윤왕로	2015.6.24 ~ 2017.6.23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행복청 기반시설국장	관피아 (세월호이후)
상임 이사	임귀섭	2016.7.25.~ 2018.7.24	• 운영보안실장 • 항공기술훈련원장	
	정세영	2016.05.28.~ 2018.05.27	• 서울지역본부장 • 항공기술훈련원장	
	박순천	2016.05.28.~ 2018.05.27	• 울산지사장 • 부산지역본부장	
비상임 이사	조국행	2015.4.13.~ 2017.4.12	• 선진회계법인 이사 • 한국수출입은행 기금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이연호	2014.11.14~ 2016.11.13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원장	
	최범서	2014.11.14~ 2017.11.28	• 민주평통자문위 상임위원 • 여수엑스포조직위 상임감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함영태	2016.1.15.~ 2018.1.14	• (주) 대우조선해양 상임고문 •(주) 국민관광개발 대표이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장 훈	2016.1.15.~ 2018.1.14	• (현) 중앙대 정치국제학 교수 • (현) 헌법재판소 발전자문위원	
	이운우	2016.5.26.~ 2016.5.25	•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장 • 경남지방경찰청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강석훈	2016.5.26.~ 2018.5.25	• (현) 법무법인 율촌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 낙하산인사 대부분이 세월호사건 이후 이뤄짐

한국토지주택공사

구 분(단위 : 억원)		'12	'13	'14	'15
한국토지 주택공사	자산(A)	1,677,616	1,733,475	1,716,197	1,698,895
	자본(B)	296,396	310,873	337,389	357,010
	부채(A-B)	1,381,220	1,422,602	1,378,808	1,341,885
	부채비율	466%	458%	409%	376%
	당기순이익	12,047	7,108	8,479	9,801

구분	이름	임기	경력	비고
사장	박상우 (‘61년)	3년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상임 감사위원	허종덕 (‘43년)	2년	■ 중국비즈컨설팅 프리랜서 ■ 중국덕룡강철그룹 한국총경리 ■ 포스코 상무이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부사장 기획재무 본부장	송태호 (‘61년)	2년	■ 경영혁신본부장 ■ 국책사업본부장 ■ 동탄사업본부장	
주거복지 본부장	신동철 (‘60년)	2년	■ 비서실장 ■ 강원지역본부장 ■ 감사실장	
도시환경 본부장	박수홍 (‘61년)	2년	■ 대구경북지역본부장 ■ 위례사업본부장 ■ 산업경제본부장	
공공주택 본부장	조성학 (‘60년)	2년	■ 공공주택사업처장 ■ 주택사업2처장 ■ 주택디자인처장	
경영혁신 본부장	방성민 (‘61년)	2년	■ 경기지역본부장 ■ 사업계획실장	
비상임 이사	김선남 (‘49년)	3년	■ (현)광남일보 사장 ■ 무등일보상무 이사 ■ 광주매일 이사 ■ 전남일보 국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김선용 (‘48년)	3년	■ (현)하이젠모터(주) 부사장 ■ 충정회계법인 전무 ■ 서울신용평가정보 상무 ■ 포스코건설 이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박원규 (‘48년)	2년	■ 서울동작구의회 의장 ■ 평통동작구협의회 부회장 ■ 국방부장관 비서관	낙하산 (세월호이후)
	김근영 (‘61년)	2년	■ (현)강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이사 ■ 경기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낙하산 (세월호이후)
	김현일 (‘53년)	2년	■ (현)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 ■ (현)시사저널 대기자 ■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 ■ 중앙일보정치 부장, 뉴욕편집 국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조진형	2년	■ (현)금오공대 산업공학부 교수	

	('53년)		■ (현)조달청 조달행정위원회 위원 ■ (현)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감사 ■ (현)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고문	
	허재완 ('53년)	2년	■ (현)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 ■ (현)국토부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원호영 ('65년)	2년	■ (현)민주평통진주시협의회 회장 ■ 한나라당 부대변인 ■ 원한의원 원장 ■ 진주시 한의사회회 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 낙하산인사 대부분이 세월호사건 이후 이뤄짐

한국수자원공사

구 분(단위 : 억원)		'12	'13	'14	'15
한국 수자원공사	자산(A)	250,164	256,039	254,391	195,506
	자본(B)	112,385	116,054	119,777	62,774
	부채(A-B)	137,779	139,985	134,614	132,732
	부채비율	122.6%	120.6%	112.4%	211.4%
	당기순이익	3,083	3,481	2,993	△57,956

구분	이름	임기	경력	비고
사 장	이학수 ('59년)	3년	■ K-water 부사장 ■ K-water 도시환경사업본부장	
상임감사 위원1)	최호상 ('57년)	2년	■ 충남기업인연합회 회장 ■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	
부사장	김선영 ('63년)	2년	■ K-water 경영관리실장 ■ K-water 경영관리팀장	
경영부문 이사	곽수동 ('63년)	2년	■ K-water 기획조정실장 ■ K-water 비서실장	
사업관리 부문이사	김봉재 ('63년)	2년	■ K-water 댐 · 유역관리처장 ■ K-water 친수사업처장	
사업개발 부문이사	박병돈 ('61년)	2년	■ K-water 포항권관리단장 ■ K-water 보령댐도수로건설단장	
한강권역 본부이사	임성호 ('60년)	2년	■ K-water 아라뱃길본부장 ■ K-water 송산건설단장	
비상임 이사	박승기 ('48년)	2년	■ 현대스틸앤씨(주) 회장 ■ 길사랑 장학사업단 이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김원태 ('51년)	2년	■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낙하산 (세월호이후)
	이원석 ('55년)	2년	■ 행복한스마트운동실천연합회 운영위원 ■ 한국장애인문화복지협회 사무국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김근식 ('61년)	2년	■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CBS보도국/마케팅본부장 및 경인센터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최윤호 ('47년)	2년	■ ROTC 정무포럼 사무총장 ■ 한전산업개발(주) 감사실장, 지점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조영재 ('48년)	2년	■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전국시도 연합회장 ■ ㈜대진환경개발 대표이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박우호 ('64년)	2년	■ 세영회계법인 대표이사 ■ 가립회계법인 이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조홍식 ('63년)	2년	■ 서울대 법과대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장 ■ 부산지방법원 판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 부채비율이 120%에서 211%로 크게 악화되었음
☞ 낙하산인사 대부분이 세월호사건 이후 이뤄짐

한국도로공사

구 분(단위 : 억원)		'12	'13	'14	'15
한국 도로공사	자산(A)	514,600	533,898	553,373	576,057
	자본(B)	261,118	275,281	288,751	306,486
	부채(A-B)	253,482	258,617	264,622	269,571
	부채비율	97.1%	93.9%	91.6%	88.0%
	당기순이익	832	804	1,165	1,316

구분	이름	임기	경력	구분
사장	김학송 (52년)	4년	■ 국회 국방위원장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 제16, 17,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낙하산 (세월호이후)
상임감사 위원	박부용 (59년)	2년	■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 헌법재판소 행정관리국장 ■ 헌법재판소 심판사무국장	
기획 본부장	최광호 (61년)	2년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장 ■ 한국도로공사 미래전략처장	
경영본부장 직대	박승갑 (62년)	-	■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 ■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장	
도로교통 본부장직대	김광수 (61년)	-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장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부장	
건설본부장 부사장직대	신재상 (60년)	2년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 ■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장	
사업 본부장	박상욱 (61년)	2년	■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장 ■ 한국도로공사 도로사업처장	
비상임 이사	박재식 (56년)	2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실장 ■ 노무법인 우일 법률자문위원	
	유병곤	2년	■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낙하산

	(54년)		■ 국회 건설교통위 수석전문위원	(세월호이후)
	정군기 (60년)	2년	■ 홍익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 한국방송광고공사 상임이사(패널리스트)	낙하산 (세월호이후)
	오문성 (60년)	2년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 공인회계사/세무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박찬우 (63년)	2년	■ 기재부 복권위원회 심의위원 ■ 행자부 지방재정공개국민자문단	낙하산 (세월호이후)
	김항술 (54년)	2년	■ 학교법인 충열학원 재단이사 ■ ㈜ 전일테크랜드 대표이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유영준 (58년)	2년	■ 경호안전연구센터 연구위원 ■ 대통령 경호실 경리부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오창근 (48년)	2년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예천군 협의회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조화순 (66년)	2년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 위원	낙하산 (세월호이후)

☞ 낙하산인사 대부분이 세월호사건 이후 이뤄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구 분(단위 : 억원)		'12	'13	'14	'15
한국 철도공사	자산(A)	201,852	220,647	222,081	181,987
	자본(B)	58,643	47,265	43,472	47,485
	부채(A-B)	143,209	173,382	178,609	134,502
	부채비율	244.2%	366.8%	410.9%	283.3%
	당기순이익	△28,202	△43,310	△3,383	864
코레일 유통(주)	자산(A)	1,699	1,727	1,799	2,293
	자본(B)	899	1,018	1,021	1,122
	부채(A-B)	800	710	778	1,171
	부채비율	89.0%	69.7%	76.2%	104.4%
	당기순이익	286	179	63	161
코레일 로지스(주)	자산(A)	265	203	189	151
	자본(B)	47	25	9	5
	부채(A-B)	218	178	180	146
	부채비율	464%	712%	2,000%	2,920%
	당기순이익	△11	△22	-15	△4
코레일 관광개발(주)	자산(A)	171	218	205	199
	자본(B)	78	119	128	131
	부채(A-B)	93	99	77	68
	부채비율	119.2	83.0%	60.1%	52.2%
	당기순이익	5	22	13	5
코레일 네트웍스(주)	자산(A)	376	360	319	358
	자본(B)	179	182	194	230

구 분(단위 : 억원)		'12	'13	'14	'15
	부채(A-B)	197	178	125	128
	부채비율	110.1%	97.8%	64.4%	55.7%
	당기순이익	37	15	23	48
코레일 테크(주)	자산(A)	164	173	188	201
	자본(B)	138	142	155	162
	부채(A-B)	26	31	33	39
	부채비율	18.9%	21.6%	21.6%	24.4%
	당기순이익	11	10	17	12

직위	이름	임기	경력	비고
사장	홍순만 ('56년)	3년	■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 ■ KAIST 녹색교통시스템연구센터장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상임 감사위원	박종준 ('64년)	2년	■ 청와대경호실 차장 ■ 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 충남지방경찰청장 ■ 새누리당 세종시당위원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부사장	유재영 ('62년)	2년	■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장 ■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장, 여객본부장 ■ 한국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장	
안전혁신 본부장	나민찬 ('59년)	2년	■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장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 안전실장	
광역철도 본부장	권태명 ('61년)	2년	■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장, 경영혁신실장 ■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장, 대구본부장	
기술 본부장	정인수 ('60년)	2년	■ 한국철도공사 연구원장, 강원본부장 ■ 한국철도공사 차량기술단장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장	
비상임 이사	조석홍 ('52년)	2년	■ 울산대 교수 ■ 국무총리실 국책사업기획단 ■ 미래창조과학부 선임연구원	낙하산 (세월호이후)
	손봉균 ('53년)	2년	■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 제일항업㈜ 대표이사 ■ 국토지리정보원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김영자 ('42년)	2년	■ 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 ■ 새누리당 광주·전남공동본부장 ■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주영은 ('41년)	2년	■ 연세대 정경대학 법학과 교수 ■ 연세대 정경대학장, 정경대학원장 ■ 해군 법무관	낙하산 (세월호이후)
	이영근 ('53년)	2년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국가청렴위원회 정책기획실장 ■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총괄국장	관피아 (세월호이후)
	안진홍	2년	■ 대성회계법인 회계사	낙하산

	('56년)		■ 영화회계법인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세월호이후)
	황영일 ('71년)	2년	■ 법률사무소 연우 ■ 법무법인 진심	낙하산 (세월호이후)
	김무환 ('48년)	2년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장 ■ 부여군수 ■ 국회 정책연구위원실	낙하산 (세월호이후)

☞ 낙하산인사 대부분이 세월호사건 이후 이뤄짐

☞ 박종준상임감사는 새누리당 세종시당위원장을 역임했고, 세월호사건 당시 청와대 경호실차장으로 경호실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자. 최순실이 검색도 없이 청와대를 드나들 때 책임을 맡고 있던 인사. 또한 지난 1월 7일 방영된 SBS'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도한 청와대 노트에 경찰인사 청탁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

한국철도시설공단

구 분(단위 : 억원)		'12	'13	'14	'15
한국철도 시설공단	자산(A)	142,772	163,533	170,814	180,730
	자본(B)	△17,635	△18,450	△18,978	△19,652
	부채(A-B)	160,407	181,983	189,792	200,382
	부채비율	112.4%	111.3%	111.1%	110.9%
	당기순이익	△73	△958	△290	△730

구분	성명	임기(연임)	주요경력	비고
기관장	강영일	2014.02.18.~ 2018.02.17	• 건설교통부 물류혁신 본부장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 실장	
상임 감사	김형원	2014.12.17~ 재직기간	•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2과장 •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	
상임 이사	김영우	2014.03.17.~ 2017.03.16	• 철도시설공단 경영혁신단장 • 수도권본부장, 기획혁신본부장	
	이수형	2015.03.05~ 2017.03.04	• 건설본부 고속철도건설처장 • 수도권본부장	
	김상태	2014.04.15.~ 2017.04.14.	• 호남지역본부 신호통신팀장 • 기획조정실 사업관리처장	
	김계웅	2014.04.15.~ 2017.04.14.	• 건설본부 건설계획처장 • 충청본부장	
비상임 이사	임응순	2014.12.17~ 2017.12.16	• 경기도의회 의원(한나라당) • 제19대 예비후보자(새누리당, 시흥을)	낙하산 (세월호이후)
	김일도	2015.05.11~ 2017.05.10	• 보병 제503여단장 • 나라사랑후원회 공동대표	낙하산 (세월호이후)
	국경복	2016.03.04 ~2018.03.03	•국회 예산정책처장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낙하산 (세월호이후)
	심혁윤	2016.09.07	•공항철도(주)사장	

		~2018.09.06	•한국교통대학교 철도대 교수	
	이용상	2016.09.07 ~2018.09.06	•한국철도학회 회장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	
	김국현	2017.02.07 ~2019.02.06	•세명대학교 교수 •NH농협은행 사외이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이종갑	2017.02.07 ~2019.02.06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주)삼화왕관 대표이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 낙하산인사 대부분이 세월호사건 이후 이뤄짐

주택도시보증공사

구 분(단위 : 억원)		'12	'13	'14	'15
주택도시 보증공사	자산(A)	57,080	57,686	61,343	55,798
	자본(B)	47,269	48,852	52,188	43,140
	부채(A-B)	9,811	8,834	9,155	12,658
	부채비율	20.8%	18.1%	17.5%	29.3%
	당기순이익	2,205	1,992	3,901	3,523

구분	이름	임용일	만료일	경력	비고
사장	김선덕 ('58년)	'15.1.9	'18.01.08	■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	
상임 감사	조재훈 ('60년)	'16.2.22	'18.02.21	■ 서울라이트타워 자산관리㈜ 고문 ■ 국방부 국방홍보원 자문위원	낙하산 (세월호이후)
상임 이사	강병권 ('60년)	'14.1.20	'17.03.30	■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실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략기획부장	
	손종철 ('57년)	'15.11.25	'17.11.24	■ 국토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장 ■ 국토부 교통정책실 간선도로과장	관피아 (세월호이후)
비상임 이사	이문세 ('57년)	'14.12.2	'16.12.1	■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삼정회계법인부 대표 ■ 산동회계법인 전무	낙하산 (세월호이후)
	조윤숙 ('57년)	'14.12.2	'16.12.1	■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부회장 ■ 김포시 의회의원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대표	낙하산 (세월호이후)
	심광일 ('53년)	'15.4.1	'17.3.31	■ 석미건설㈜ 대표이사 ■ 세경건설㈜ 공무이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박재갑 ('70년)	'15.4.1	'17.3.31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낙하산 (세월호이후)
	김지한 ('63년)	'14.12.3	'17.12.2	■ KCB㈜ 감사 ■ 금융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장학재단 비상임이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윤기상	'16.9.29	'18.9.28	■ 울산대 경제학 초빙교수(현)	낙하산

	('55년)			■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 ■ 총리실 제주지원위 총괄기획관	(세월호이후)
	서정희 ('62년)	'16.9.29	'18.9.28	■ 매일경제TV 대표(현) ■ 매일방송 보도국 부국장 ■ 매일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 부채비율이 18%에서 29%로 크게 악화됨
☞ 낙하산인사 대부분이 세월호사건 이후 이뤄짐

한국감정원

구 분(단위 : 억원)		'12	'13	'14	'15
한국 감정원	자산(A)	2,453	3,017	2,219	2,334
	자본(B)	499	2,225	1,912	1,969
	부채(A-B)	1,954	792	307	365
	부채비율	391.2%	35.6%	16.1%	18.5%
	당기순이익	14	1,734	96	124

구분	성명	임기(연임)	주요경력	비고
원장	서종대	2014.03.03.~ 2017.03.02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KAIST 건설환경공학과 초빙교수	
감사	김한수	2015.01.30~ 2017.01.29	• 계명대 대외협력처장 • 계명대 사무처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상임 이사	변성렬	2015.04.17~ 2017.04.16	• 한국감정원 홍보실장 • 한국감정원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박상열	2016.01.01~ 2017.12.31	• 경기도 교통국장 • 국토부 철도안전기획단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정건용	2016.12.01~ 2018.11.30	• 기재부 재정정보원 설립추진단장 • 기재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장	관피아 (세월호이후)
비상임 이사	오종순	2014.11.27~ 2017.12.05.	• 해태제과 비상계획관 • (주)금성건설 대표이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주휘남	2015.04.20.~ 2017.04.19	•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부회장 • ㈜대한컨설턴트 전무이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신현자	2016.06.08.~ 2018.06.07	•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상임전국위원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낙하산 (세월호이후)
	윤대식	2016.06.08.~ 2018.06.07	•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대한교통학회 부회장 · 고문	낙하산 (세월호이후)
	송기홍	2016.06.08.~ 2018.06.07	• IBM GBS 대표 • 딜로이트코리아 대표	낙하산 (세월호이후)

☞ 낙하산인사 대부분이 세월호사건 이후 이뤄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구 분(단위 : 억원)		'12	'13	'14	'15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자산(A)	10,504	10,965	10,448	10,418
	자본(B)	3,800	4,208	4,903	5,946
	부채(A-B)	6,704	6,757	5,545	4,472
	부채비율	176.4%	160.6%	113.1%	75.2%
	당기순이익	283	408	699	1,053

구분	성명	임기(연임)	주요경력	비고
기관장	이광희	2016.11.08~ 2019.11.07	•(재)경기문화재단 사무처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이사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상임 감사	김치영	2015.3.11~ 2017.3.10	• 한나라당 최병렬당대표 특별보좌역 • 〈선진국민연대〉 위원장 • 박근혜 경선후보 특별보좌역(총무, 행정)	새누리당 (세월호이후)
상임 이사	임춘봉	2013.09.16.~ 2015.09.15	• JDC 경영혁신실장, 감사실장 등 •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관피아 (세월호이후)
	박현철	2016.01.21.~ 2018.01.20	• 제주지방항공청장 • 제주항공관리사무소장	
비상임 이사	한석지	2014.9.2~ 2016.9.1	• 제주대 사범대 사회교육과 교수 • 제주대 교수회 회장	
	김진국	2014.12.31~ 2016.12.30	• 배재대학교 교수 •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 공동위원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김윤정	2014.12.31.~ 2016.12.30	• 탐라대 경영학과 조교수 • 제주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선임연구원	
	최순애	2015.2.6~ 2018.2.5	• 이명박후보 특별보좌역 • 제18대 비례대표후보(한나라당 39번) • 제19대 예비후보자(새누리당, 안산단원을)	새누리당 (세월호이후)
	강태혁	2013.12.02.~ 2017.12.06	•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부교수 • 한국은행 감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해울 대표	정욱수	2015.4.1~ 2018.03.31	• JDC 기획조정실장 • 한국산업은행 등	
비상임 감사	이성호	2014.3.18. ~ 2017.3.17	• JDC 인사관리실장	
비상임 이사	김진영	2013.3.28~ 2016.3.27	• 제주대학교 교수	
	유춘기	2014.3.18~ 2017.3.17	• 동원교육학원 이사장 • ㈜교원나라제주호텔 대표이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손봉수	2014.3.18~ 2017.3.17	• JDC 교육도시처장	

☞ 낙하산인사 대부분이 세월호사건 이후 이뤄짐

교통안전공단

구 분(단위 : 억원)		'12	'13	'14	'15
교통 안전공단	자산(A)	3,068	3,278	3,482	3,598
	자본(B)	2,229	2,351	2,265	2,304
	부채(A-B)	839	927	1,217	1,294
	부채비율	37.6%	39.4%	53.7%	56.2%
	당기순이익	33	73	△37	81

구분	성명	임기(연임)	주요경력	비고
기관장	오영태	2014.10.29.~ 2017.10.28.	• 대한교통학회장 •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실장	
상임 이사	장상순	2016.04.04.~ 2018.04.03.	• 교통안전공단 감사실장 • 교통안전공단 운영지원처장	
	김재영	2014.02.28.~ 2017.02.27.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운항정책과장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관제과장	관피아 (세월호이후)
	백흥기	2016.04.04.~ 2018.04.03.	• 대통령경호실 감사관실 감사관 • 대통령경호실 경호안전교육원 교육부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권해붕	2016.03.03~ 2018.03.02	• 교통안전공단 결함조사실장 • 교통안전공단 신교통연구실장	
비상임 이사	이철환	2016.10.25. ~ 2018.10.24.	• 한국무역협회 초빙연구위원 •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낙하산 (세월호이후)
	남희용	2014.4.1.~ 2017.4.28.	•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원 •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윤철	2014.4.1.~ 2017.4.28.	• (주)와이제이앤네트웍스 부사장 •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 • 민주평통 자문위원	낙하산 (세월호이후)
	양지수	2014.4.1.~ 2017.4.28.	•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립한밭대 건축공학부 겸임교수	
	손봉수	2015.2.10.~ 2017.2.9.	• 연세대 공과대학 학장 • 연세대 도시공학 교수	
	허만섭	2013.11.04.~ 2017.12.06.	• 영등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 제1선거구)	낙하산 (세월호이후)
비상임 감사	조용기	2014.9.15.~ 2016.9.14	• 대전지법(홍성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 부채비율이 39%에서 56%로 악화됨
☞ 낙하산인사 대부분이 세월호사건 이후 이뤄짐

한국시설안전공단

구 분(단위 : 억원)		'12	'13	'14	'15
한국시설 안전공단	자산(A)	288	407	382	405
	자본(B)	209	239	243	242
	부채(A-B)	79	168	139	163
	부채비율	38%	70%	57%	67%
	당기순이익	20	26	12	2

구분	이름	임용일	만료일	경력	비고
이사장	강영종 ('60년)	'16.01.08	'19.01.07	■ 고려대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 고려대초대형구조기술연구소장 ■ 고려대 공과대학 교학 부학장 ■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낙하산 (세월호이후)
경영 본부장	문동주 ('61년)	'15.04.01	'17.03.31	■ 대통령경호실경호안전교육원장 ■ 대통령실 경호부장, 인사부장 ■ 대통령경호실 경호과장 ■ 대통령경호실 사무관	낙하산 (세월호이후)
기술 본부장	박구병 ('57년)	'16.05.16	'18.05.15	■ 한국시설안전공단 본부장 ■ 한국산업안전공단 차장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리 ■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리	

☞ 3명중 2명이 낙하산인사이며 세월호사건 이후 이뤄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구 분(단위 : 억원)		'12	'13	'14	'15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자산(A)	209	75	71	66
	자본(B)	57	45	36	26
	부채(A-B)	152	30	35	40
	부채비율	266.7%	67.3%	97.0%	153.8%
	당기순이익	5	5	△7	△11

구분	이름	임용일	만료일	경력	비고
기관장	김병수 ('59년)	15.7.16	18.7.15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 낙하산인사는 없으나 부채비율이 67%에서 153%로 크게 악화됨

한국국토정보공사

구 분(단위 : 억원)		'12	'13	'14	'15
한국국토 정보공사	자산(A)	3,642	3,751	3,850	4,277
	자본(B)	1,973	2,262	2,359	2,684
	부채(A-B)	1,669	1,489	1,491	1,593
	부채비율	84.6%	65.8%	63.2%	59.4%
	당기순이익	331	153	109	314

구분	이름	임기	경력	비고
기관장	박명식	2017.01.02.~ 2020.01.0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상임 감사	이문수	2016.02.03.~ 2018.02.02	• 자유수호구국국민연합 공동대표 • 세종사회통합포럼 사무총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상임 이사	안종호	2015.09.01.~ 2017.08.14.	•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사업본부장 • 한국국토정보공사 미래사업본부장	
	최종만	2015.12.21.~ 2017.01.29.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영지원본부장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권기중	2015.12.21~ 2017.12.20.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장 •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장	
비상임 이사	김영미	2013.11.15.~ 2016.11.14.	•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안행부정부3.0 컨설팅자문위원	
	이희연	2014.10.15.~ 2016.10.14.	•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도희윤	2014.10.15.~ 2016.10.14.	• (사)행복한통일로 대표 • 한국다문화센터 운영위원	낙하산 (세월호직후)
	박희상	2015.11.09.~ 2017.11.08.	• 무영씨엠 건축사무소 토목상무 • 한국마사회 건설단장	낙하산 (세월호이후)
	송영남	2015.11.09.~ 2017.11.08.	•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 • 미네소타대학 아우그스대 경제학강사	
	임재익	2015.11.09.~ 2017.11.08.	• 아주대 국제대학원장 • 아주대 경영대 교수	

☞ 낙하산인사 대부분이 세월호사건 이후 이뤄짐

주택관리공단

구 분(단위 : 억원)		'12	'13	'14	'15
주택 관리공단(주)	자산(A)	1,321	1,175	1,018	1,084
	자본(B)	108	121	136	135
	부채(A-B)	1,213	1,054	882	949
	부채비율	1,119%	866%	648%	703%
	당기순이익	20.9	15.1	4.2	0.1

구분	이름	임기	경력	비고
사장	안옥희 ('61년)	3년	■ 한국주거학회 부회장 ■ 대구광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 ■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휴)	낙하산 (세월호이후)
상임 감사	이종완 ('62년)	3년	■ 대구미래대학교 교수 ■ 경일건설(주) 감사 ■ (사)바른사회하나로 연구원 이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기획 이사	백성현 ('60년)	2년	■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낙하산 (세월호이후)
주거복지 이사	김륜호 ('59년)	2년	■ 주택관리공단 인력관리실장 ■ 주택관리공단 감사실장 ■ 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장	
비상임 이사	홍현식 ('63년)	2년	■ LH주거복지사업처장(현) ■ LH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 낙하산인사 대부분이 세월호사건 이후 이뤄짐

한국건설관리공사

구 분(단위 : 억원)		'12	'13	'14	'15
㈜한국건설 관리공사	자산(A)	477	479	408	415
	자본(B)	396	403	350	351
	부채(A-B)	81	76	58	64
	부채비율	20.5%	18.9%	16.6%	18.2%
	당기순이익	△19	7	8	8

구분	이름	임기	경력	비고
사장	김원덕 (59년)	3년	■ 국회정책 연구위원 ■ 한나라당 강원도당 대변인 ■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낙하산 (세월호이후)
감사	김규춘 (54년)	3년	■ 국토해양부 - 도로시설 국장 ■ 2012여수엑스포 건설본부장	
토목CM 본부장	차흥윤 (56년)	3년	■ 한국수자원공사 - 건설사업지원위원 (송산건설단)	

			- 시화조력건설단 조력공사팀장 - 평화의댐 팀장	
건축CM 본부장	유쌍철 (56년)	3년	■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리총괄팀장, 건설지원총괄팀장 ■ 인천도시공사 기술자문위원	
비상임 이사	정동섭 (70년)	3년	■ 한국도로공사 자금부장	
	곽종수 (67년)	3년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팀장	
	이상노 (64년)	3년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관리부장	
	박용석 (65년)	3년	■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획자금팀장	
	변정국 (67년)	3년	■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팀장	

워터에이플러스

구 분(단위 : 억원)		'12	'13	'14	'15
㈜워터웨이 플러스	자산(A)	37	37	38	67
	자본(B)	25	27	28	54
	부채(A-B)	12	10	10	13
	부채비율	48.0%	37.0%	35.7%	24.1%
	당기순이익	0.4	1.5	1.0	0.4

직위	이름	임용일	만료일	경력	비고
사장	이진호 ('60년)	'16.12.17	'18.12.16	■ K-water 수도사업본부장 ■ K-water 수자원개발처장 ■ K-water 송산건설단장	
본부장	신송운 ('56년)	'14.07.03	'16.07.02	■ K-water 광주전남 본부장 ■ K-water 수도사업처장 ■ K-water 논산 수도서비스센터 단장	
비상임 이사	변정국 ('67년)	'16.12.28	'18.12.27	■ K-water 경영관리실 경영혁신부장	
	김동진 ('65년)	'14.02.28	'17.03.25	■ K-water 수자원경영처사업경영부장	
	심과학 ('71년)	'15.12.22	'17.12.21	■ K-water 기획조정실 전략기획부장	
	장덕순 ('70년)	'16.12.28	'18.12.27	■ K-water 아라뱃길관리단부장	
	정용광 ('68년)	'14.12.22	'17.12.21	■ K-water 재무관리처 회계세무부장	

☞ 낙하산인사 없는 기관

항공안전기술원

구 분(단위 : 억원)		'12	'13	'14	'15
항공안전 기술원	자산(A)	-	219	191	210
	자본(B)	-	158	162	137
	부채(A-B)	-	60	29	73
	부채비율	-	38.17%	17.85%	53.62%
	당기순이익	-	8	4	△26

구분	이름	임용일	만료일	경력	비고
원장	정연석 ('59년)	'16.03.15	'19.03.14	■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KAI-EC(주)대표이사 ■ 한국항공우주산업 상무	

☞ 낙하산인사 없는 기관이나 부채비율이 38%→18%→54%로 악화중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현황

대선공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예산 '14	'15	'16	'17	비고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p.37, 239) - 행복기숙사(철도 부지위 기숙사 건설, 기존의 1/3 가격으로 제공) - 국립대학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국토부(LH)의 임대주택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현재 18.3%에서 30.0%로 확대 - 사립대 기숙사비 20~30% 인하 유도	□ **추진실적**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 '14년 3.7천호 공급 ○ '15년 4.9천호 공급 ○ '16년 8.1천호 공급 〈기숙사〉 ○사립대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35개 사업) - 16개 준공·운영 중, 19개 사업 지원 중 ○연합기숙사 건립 지원(4개 사업) - 1개 준공·운영 중, 3개 사업 지원 중 □ **향후계획**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 ○ 기존 사립대 공공기숙사 지원 사업 지속 지원 ○ 사립대 공공기숙사 신규사업 지속 발굴 지원 ○ 연합기숙사 사업 등 지원 지속	(대학생 전세임대) 193,300 (기숙사) 74,822	(대학생 전세임대) 258,850 (기숙사) 63,817	(청년 전세임대) 553,180 (기숙사) 73,868	(청년 전세임대) 408,000 (기숙사) 50,284	이행중
○**집 걱정 없는 세상**(p.52) - 행복주택 프로젝트(철도위	□ **추진실적** ○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제도: 22.1만건, 19.8조원(13.6~14.말) ○ 하우스푸어	180,000	-	-	-	이행중

임대주택),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주택매입(희망임대리츠): 1(508호)·2차(389호)·3차(172호) 사업을 통해 총 1,069호 매입완료(주택담보대출1,854억 상환)					
○**하우스푸어 대책 ① :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p.212) - 소유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 이에 대해 임대료 지불	○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598건('13.6월~'14.5월) □ **향후계획** ○ 하우스푸어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우스푸어 대책 ② :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p.213) -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50세 이상으로 확대, 사전 가입시 60세에 활용 가능한 주택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여 부채상환에 사용	□ **추진실적** ○ 목돈 안드는 전세II 3,538건/2,357억원('13.8~'16.7) 지원 ○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1.5만가구/2.0조원('14.1~'16.7) 지원, 취급기관 확대(우리은행→ 신한 등 6개 은행) - 버팀목대출(전세)에 전세금 반환보증을 도입하여 '깡통 전세' 보호('16.3월) ○ 금리 인하, 대출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저리의 전세자금 11.1만가구, 4.5조원 지원(기금 버팀목 전세대출, '15년) □ **향후계획** ○ 렌트푸어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전세자금) 4,644,300	(전세자금) 5,070,000	(전세자금) 4,730,000	(전세자금) 4,431,400	완료
○**렌트푸어 대책 ① : 행복주택 프로젝트**(p.214) - 철도 부지위 아파트·기숙사·상업시설 건설, 기존 시세 1/2~1/3 수준, 5년간 약 20만호 공급 ○**렌트푸어 대책 ②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p.215) -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 ○**렌트푸어 대책 ③ : 보편적 주거복지**(p.216) - 무주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 가구 전부 지원) - 매년 45만 가구 주거지원(건설임대	□ **추진실적** ○ ('13.12.3 활성화방안) 공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상부지도 확대하여 행복주택 건설의 지속가능성 제고 * 행복주택을 '17년까지 15만호를 공급하고, 6만호는 국민임대 등 건설 ○ 행복주택 주민편의시설 지원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14.7월) ○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14.12월) ○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마련('15.5월) ○ 행복주택 첫입주(4곳) 입주자 모집('15.7월, 경쟁률 80:1) ○ 행복주택 공급목표 조정(14만호→15만호, '16.4.28) ○ 행복주택 12.3만호 사업자구(232곳) 확정('16.8월) - '16년 현재 7만호 사업승인 및 3.3만호 착공 완료 * 연도별 사업승인 현황 : '14년 2.6만호, '15년 3.8만호 - (입주자모집) '15년 6월 서울4곳의 847호 첫 입주자모집, '16년 1차(1,638호), 2차(1,901호) 입주자 모집시 높은	(주거급여) 29,604 (공공임대) 4,956,449 (공공분양) 984,574 (매입임대) 813,885 (전세임대) 1,650,433 (전세자금) 4,644,300	(주거급여) 1,123,073 (공공임대) 4,143,131 (공공분양) 590,902 (매입임대) 1,059,190 (전세임대) 2,378,231 (전세자금) 5,070,000	(주거급여) 1,028,936 (공공임대) 3,835,052 (공공분양) 521,110 (매입임대) 963,386 (전세임대) 2,600,850 (전세자금) 4,730,000	(주거급여) 939,889 (공공임대) 4,892,453 (공공분양) 382,778 (매입임대) 1,097,750 (전세임대) 1,836,000 (전세자금) 4,431,400	이행 중

7만호, 매입전세임대 4만호, 전세자금융자 18만호, 공공분양주택 2만호, 구입자금융자 14만호) - 신규 임대주택 공급 및 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 공급정책과 전월세자금 융자 및 주택바우처 등 수요지원 정책의 효율적 결합	경쟁률 달성 * 송파삼전(40호) 80:1, 서울가좌역(362호) 47:1 등 ○ 행복주택 '17년까지 14만호에서 15만호로 공급목표 확대('16.4), 공급계획*에 따라 사업승인 10.2만호 완료('16.12) * '14년 2.6만호 → '15년 3.8만호 → '16년 3.8만호 → '17년 4.8만호 ○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대하여 13~16년까지 43.1만호 공급('16.12) - 전산망 구축('15.5), 기존 수급자 임대차 관계조사('14.3~'15.2), 홈페이지 오픈('15.5), 개편 주거급여 실시('15.7월) - 주거급여 수급자 지속 증가중('15.6월 68.6만→'16.12월 최대81.1만 가구) ○ '14년 대학생 전세임대 3.7천호 공급 - '15년 4.9천호 공급 - '16년 1만호 공급 추진 중(7월말 기준 4,333호 공급) ○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임대주택(영구·국민) 의무건설비율 확대('13.5.28, 3~5 → 5~8%) ○ (구입자금 융자) 디딤돌 대출 8.1조원/8.4만가구('15년) - 금리 0.3%p 인하(2.6~3.4→2.3~3.1%, '15.4월) - 주택가격 하락 시에도, 해당 주택만으로 상환의무가 한정되는 '유한책임 디딤돌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모기지신용보증(MCG)' 시행('15.12월) - 신혼부부 금리 0.2%p 우대 신설 등 지원강화('16.1월) - 생초자 우대금리를 0.3%p 상향(0.2%p → 0.5%p) ·생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저 1.6% 금리 적용 (2.0~2.7%→1.6~2.4%, '16.5월) ○ (전세자금 융자) 버팀목 대출 4.5조원/11.1만가구 ('15년) - 신혼부부는 버팀목대출 한도(수도권 1억→1.2억, 지방 0.8억→0.9억)를 상향하고, 신규대출시 금리 0.2%p 우대 ('16.1월)					
○**렌트푸어 대책 ④ :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p.55, 217) - 영구임대주택단지 난방용 유류(가스료) 부가세 면제 및 사회복지사·공익근무요원 배치 적극 검토, 공공의 임대주택 효율적 관리						

	- 버팀목대출(전세)에 전세금 반환보증을 도입하여 '깡통 전세' 보호('16.3월) - 금리를 0.2%p 일괄 인하(2.5~3.1→2.3~2.9%)하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0.3%p 추가 확대 (0.2%p→0.5%p)하여, 전체적으로 0.5%p 추가 인하 (2.3~2.9%→1.8~2.4%, '16.5월) ○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14.1.1, 조특법 개정) ○「주거복지사」 제도도입을 위한 「주거기본법」 통과('15.5월) ○ (공공임대리츠) 수원호매실, 하남미사, 시흥목감, 김해진영2, 인천서창2에 4,534호를 공급할 리츠 4호 사업승인 및 착공('15.6월) ○ (전세자금 융자) '16년 전세자금 12.1만호 지원 - 월세대출 일반형을 신설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연2.5% 저리 지원하고, 이용기간도 최대 10년(당초 6년)으로 연장('16.8) - 독립된 주거가 아닌 일부 공간만 임차하는 '부분임차' 가구에 대하여 전세자금 융자지원('16.9) - LH 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허용('16.8) □ **향후계획** ○ 행복주택 사업승인 및 착공 지속 추진 - '17년중 6.1만호 사업지 확보, 2.2만호 입주자 모집 실시 ○ (공공임대주택) '17년 12.0만호 공급하여 '13~'17년 총 55.1만호 공급 ○ (주거급여) '17년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을 '16년보다 1.7%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도 2.54% 인상 ○ (전세·구입자금 지원) 기금을 통해 전세·구입자금을 **18만 가구에 지원**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주거비 경감 및 차질 없는 지원 실시 ○ (임대리츠) '17년까지 공공임대 리츠로 총 5만호, 민간 제안 임대리츠로 총 2만호를 공급할 계획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p.92) - 공공임대비율 확대,	□ **추진실적** ○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비용 지원('13.4.8 시행) ○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2,600				'15년부터 융자 지원 대신 자가가구

장애인 특별분양 등 장애인 대상 공공주택 보급 활성화, 관련 부처 간 공조체계 마련	임대주택(영구·국민) 의무건설비율 확대('13.5.30, 3~5 → 5~8%) ○ 장애물없는 주택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15.2) □ **향후계획** ○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 무장애주택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을 주거약자용 주택기준에 반영					주거급여 사업에 포함
○**토지이용관련 통합 인·허가제 도입**(p.318) - 토지이용 인허가 방식을 일괄 통합형으로 전환, 대규모 토지이용 인허가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각종 평가·협의 제도 통합	□ **추진실적** ○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13.5~) ○ 지자체, 기업 등과 20여 차례 이상 면담, 현장 간담회 실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배포('13.7, '14.9 개정) ○ 국가정책조정회의('13.10)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발의('14.5) ○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4.8) 이후 경제활성화법안 집중 홍보 ○ 법안 관련 상임위원에 세부 설명('14.8, 장·차관) ○ 법안 조기 통과 필요성 상임위원 설명('14.10, 실국장)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본회의통과('14.12), 공포('15.1)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15.9~10) ○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16.1)	-	-	-	-	완료 ('16.1.12 시행)
○**100%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p.122) -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역발전전략, 지방거점도시(10+@)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지방도시재생사업 등	□ **추진실적** ○ 도시재생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13.6)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13.12)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13.12) ○ 주민·지자체 중심의 지역특화 도시재생모델을 만들기 위해 선도지역 지정 -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14.5) ○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모니터링·평가계획 확정·배포('14.6) ○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한 부처 사업리스트 확정·배포('14.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30,570	43,060	48,000	51,800	이행 중

	관한 조례」 표준안 확정·배포('14.9) ○ 선도지역 12곳 활성화계획 수립(1차 '14.11.11, 2차 '14.12) ○ 선도지역 12곳 사업착수(1차 '14.11, 2차 '14.12) ○ 도시재생활성화 관련 문체부중기청 MOU 체결('14.12) ○ 민간·지자체 도시재생사업 설명회 개최('15.2) ○ 2차 도시재생지원 지역 공모('15.3~4) ○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신설('15.7) ○ 청주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수립('15.12) ○ 도시재생활성화 관련 법무부 MOU 체결('16.2) ○ 2차 도시재생지원 지역 33곳 선정('16.4) ○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시행 지원('14.5~) ○ 2차 도시재생지원 지역(17곳) 국가지원사항 확정('16.12) □ **향후계획** ○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완료 지원 ○ 2차 도시재생지원 지역(16곳) 국가지원사항 확정					
	□ **추진실적** ○ 중추도시권 구성기준 등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 확정(지역위, '13.10.30) ○ 중추도시권 육성전략(도시활력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조성) 등 추진방안 보고(국토정책위, '13.12.30.) ○ 지자체 주도로 20개 중추도시권 구성·확정('14.3.12, 제5차 무투회의) ○ '15년 중추도시권 지원사업 확정('14.7) ○ 중추도시권별 발전계획 수립('14.12) ○ 중추도시권 사업 지원('14년 31건, '15년 59건, '16년 15건) □ **향후계획** ○ 중추도시권 사업 지원(~'17)	-	-	-	-	이행 중
○**홍수, 산사태 등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p.315) - 자연재해 취약지역 근원적 방지책 수립, 재해예방형으로 국토·도시계획 재정비, 방재인프라 전면 구축	□ **추진실적** ○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국토계획법 시행, '14.1) ○ '14년 재해취약성 분석 및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수립 컨설팅 사업 완료('15.2, 10개 지자체) ○ 부처별 방재 DB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연계	(도시방재) 300 (종합치수) 3,900 (홍수위험) 1,350 (강우레이더) 15,501	(도시방재) 300 (종합치수) 3,900 (홍수위험) 1,850 (강우레이더) 20,020	(도시방재) 사업완료 (종합치수) 2,500 (홍수위험) 1,750 (강우레이더) 4,906	- (종합치수) 3,163 (홍수위험) 1,159 (강우레이더) 9,726	이행 중

	완료('13.12) ㅇ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분석 의무화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시행('15.7) ㅇ 재해취약성 분석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5.7) ㅇ '15년 재해취약성 분석 및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수립 컨설팅 사업 완료('16.1, 10개지자체) ㅇ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정('16.5) ㅇ 계양천 종합치수계획 시범용역완료('13.11), 신천 등 3개소 종합치수계획 착수('14.12), 전주천 등 4개소 종합치수계획 착수('15.9), 창릉천 등 3개소 종합치수계획 착수('16.7) ㅇ 섬진강·탐진강권역 홍수위험지도 215km제작 완료('16.12) ㅇ 화순(모후산) 강우레이더 운용개시('14.12), 금산(서대산) 강우레이더 운용개시('15.1), 홍천(가리산) 강우레이더 설치('15.9) 및 본격 운영 개시('16.6), 예봉산레이더 착수('17~) ㅇ 도로연접 산사태 공동예방·대응 추진계획(안) 마련('13.12) ㅇ 도로연접 산사태 공동예방·대응 업무협약 체결('14.3) ㅇ 고속도로변 산사태 우선정비구간(31개소) 정비완료(14.12) ㅇ 국도변 산사태 우선정비구간(59개소) 정비방안 수립('14.12) ㅇ 국토부-산림청 협업으로 산사태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15.1) ㅇ '14년 비탈면 붕괴지역 민관합동 점검('15.3) ㅇ 고속도로변 산사태 우선정비구간(32개소) 정비완료(15.12) ㅇ 국토부-산림청 협업으로 산사태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16.1) ㅇ 해빙기 대비 낙석위험지구 점검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16.2~3) ㅇ 국도변 산사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벤토리 구축('16.04.) ㅇ 대형산사태 예방을 위한 2종시설물 181개소 정밀점검 관리('16.02.) ㅇ 국도변 산사태	(낙석 산사태) 120,000	(낙석 산사태) 150,000	(낙석 산사태) 150,000	(낙석 산사태) 150,000	

	위험비탈면(313개소) 정비완료('16.12.) ○ 안전진단센서를 활용한 비탈면 상시계측시스템 147개소 운영('16.12.) ○ 과학적 관리를 위한 위험비탈면 전문가 정밀조사(누적 : 6,865개소)('17.3.) □ **향후계획** ○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속) ○ 강우레이더 구축, 홍수위험지도 제작 등(~17) ○ 고속도로변 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계속) ○ 국도변 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계속)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조성(p.316) - 도시공원 조성에 국비 지원, 품격있는 도시·생태마을 만들기 등	□ **추진실적** ○ 도시공원에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 개정('13.5) ○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 수립('13.12) 및 71개소 선정('14.12) ○ 생활공원 공모사업 시·도별 추진실적 점검('15.6) ○ '17년 생활공원 추가 조성을 위한 방침 결정('16.2) ○ '17년 생활공원 공모사업 추가 대상지 선정 13개소('16.9) ○ '17년 시·도별 생활공원 공모사업 예산배정('17.2) ○ 자연형 하천조성을 위한 국가·지방 하천 정비('13년 70건 준공, '14년 110건 준공, '15년 98건 준공, '16년 86건 준공) ○ 자연마당 14개소 조성 추진, 생태놀이터 45개소 추진, 도시 훼손지 42개소 복원(155만㎡) ○ 마을숲(57개소) 복원, 숲길(7,149㎞) 조성·정비, 핵심생태축 등 훼손산림(213.9ha) 복원('13~'16) ○ 백두대간(4개소, 육십령·벌재·비조령·정령치) 생태축 연결·복원('13~'16) □ **향후계획** ○ GB환경문화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생활공원 정비사업 지속 추진(60개소) ○ 자연형 하천조성을 위한 국가·지방 하천 정비 74건 준공('17년) ○ 마을숲(27개소) 복원, 숲길(1,320㎞) 조성·정비, 핵심생태축 등 훼손산림(47.3ha) 복원('17)	(생활공원) - (하천정비) 1,193,472 (마을숲) 30 (숲길) 35,035 (생태축 연결 등) 6,714 (자연마당) 8,600 (생태놀이터) 1,500 도시훼손지복원 (7,000) (생태축복원) 5,200	(생활공원) - (하천정비) 1,109,200 (마을숲) 415 (숲길) 27,522 (생태축 연결 등) 11,054 (자연마당) 8,170 (생태놀이터) 3,090 도시훼손지복원 (7,000) (생태축복원) 8,554	(생활공원) - (하천정비) 1,028,350 (마을숲) 1,610 (숲길) 32,822 (생태축 연결 등) 9,402 (자연마당) 10,700 (생태놀이터) 2,780 도시훼손지복원 (7,100) (생태축복원) 8,600	(생활공원) - (하천정비) 970,700 (마을숲) 2,270 (숲길) 33,285 (생태축 연결 등) 9,408 (자연마당) 7,010 (생태놀이터) 2,660 도시훼손지복원 (9,400) (생태축복원) 6,650	이행 중

	ㅇ 자연마당 6개소 추진, 생태놀이터 19개소 신규 추진, 도시 훼손지 15개소 복원('17) ㅇ 백두대간·정맥(4개소, 말티재·밤재·작점고개·배티고개)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17) ㅇ 백두대간(미시령 등 9개소) 연결복원('17~)					
	□ **추진실적** ㅇ 개발제한구역의 여가체육시설(자전거 도로 등) 허용 범위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13.10)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13.8) ㅇ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문화사업 지원 확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14.2) * 환경·문화사업비 지원을 주민지원사업비의 50%까지 확대(당초 30%) ㅇ '14년환경·문화사업 39개소 선정·지원(221억원, 14.1) ㅇ 개발제한구역 누리길홍보UCC 제작·배포 및 국정홍보전광판 동영상 홍보('14.2) ㅇ 환경·문화사업 지원체계 개선('14.8) * 시·도지사의 사업시행 허용 및 환경·문화사업 단위사업별 지원한도액 상향(시·군·구 7억→10억, 시·도 15억)조정 등 ㅇ「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공포·시행(14.1.17) ㅇ 생활인프라 평가 시행공고('14.4) 및 지자체 설명회('14.5), 평가결과 진단보고서 배포('14.12) ㅇ「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일부개정 (15.6.1) 및 지자체 설명회('15.6) ㅇ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우수지자체 시상 및 유공자 표창(제9회 도시의 날, '15.10.14) ㅇ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근거마련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15.12), 시행령 개정('16.5) ㅇ 경관심의 제도,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관법 개정('13.8) 및 하위 시행령 개정('14.2) ㅇ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4.6~9, 2회), 부문별 TF('14.7~11, 7회), 부내 간담회('14.8, 1회), 기본계획 초안 마련('14.12) ㅇ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GB) 22,000 (경관) 5,300	(GB) 31,833 (경관) 4,114	(GB) 27,581 (경관) 사업종료	(GB) 26,800 (경관) -	이행 중

	위한 관계기관 협의('15.3.20~4.3) 및 공청회 개최(4.10), 중도위 심의(6.25),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7.30) ○ '15년 환경·문화사업 52개소 318억원 지원 ('15.2) ○ '16년 환경·문화사업 공모('15.1~4) 및 평가('15.5~8), 43개소 276억원 규모의 사업선정('15.9) 및 지원('16.2) ○ '17년 환경·문화사업 공모('16.2~3) - 누리길, 여가녹지 등 74건 478억원 공모 ○ 서면평가 및 외부전문가 현장평가('16.6~7) □ **향후계획** ○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공간조성을 위한 지자체 지원('17.2)					
○**국토의 과잉개발, 난개발 차단장치 제도화**(p.317) -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제도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 **추진실적** ○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제도화 - NGO 정책자문회의('13.9.27) - CEO 과제점검회의('13.10.17) - 국토정책위원회 보고('13.12.4) 및 방안 확정 -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13.12.30) -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홈페이지 개편 중('17.2, 4월 개편완료) ○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 연동제 추진 협업TF 구성 운영('13.5~11) - 선진사례 연구를 위한 부처간 공동과제학습 단기연수('13.8.27~8.30) - 연동제 도입방안 연구용역('13.6.14~12.10) - 국토계획평가 업무처리지침 개정('13.9.9) - 연동제 추진방안 국토정책위원회 보고('13.12.4) 및 방침결정('13.12.30) - 연동제 도입 국토기본법 개정안 방침 결정('14.10.12) - 국토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14.10.16~11.27) -「국토기본법」개정안 국회제출('14.12.24) - 국토기본법 개정안 국토위 상정('15.4.28) - 국토기본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심사('15.12.2) - 국토기본법 개정안 재입법 국회제출('16.6.22) - 국토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6.11.17) - 국토기본법 개정안 공포('16.12.2)	-	-	-	-	이행 완료

○**화물차 운송업자 지원**(p.103, 171) - 모든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현재의 심야할인에 추가하여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간 시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25% 할인,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합하여 검사수수료 절감	□ **추진실적** ○ 자동차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통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3.12.12) ○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회 연장('13, '14, '15) - 통행료 감면 확대를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화물차 통행료 할인 관련 연구용역 착수('14.1), 화물업계 간담회 추진('14.6, '14.8, '14.9, '14.10) ○ 모든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16.7)/「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시행) ○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236억원 지원('13년~) - '13년 장학 및 의료 등 복지지원 추진(7천명, 42.6억원) - '14년 장학 및 의료 등 복지지원 추진(9천명, 52억원) - '15년 장학 및 의료 등 복지지원 추진(8천명, 48.6억원) - '16년 장학, 의료, 안전 등 복지지원 추진(15천명, 92.8억원) ○ 화물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및 영세사업자 차고지난 완화를 위한 화물차 휴게시설(휴게소·공영차고지) 확충('13년~) - ('13) 공영차고지 2개소(인천, 춘천) 준공 - ('14) 휴게소 1개소(여수) 및 공영차고지 1개소(광주) 준공 - ('15) 공영차고지 1개소(부산) 준공 - ('16) 공영차고지 4개소(광양, 부산, 거창, 정읍) 준공 - 화물차 휴게시설 중장기 확충 종합계획 수립('14.12.29) - 화물차 휴게시설 건설예산 지자체 지원 ·휴게소 3개소 50억원('13년~) ·공영차고지 17개소 1,600억원('13년~) ○ 화물차 휴게시설 추진상황 점검 -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 건설 관계자 회의 개최('16.4) - 화물차 휴게시설 운영상황 점검('16.4. 인천, 물류정책관) - 화물차 휴게시설 운영 및 건설 및 운영상황 점검('16. 16개소) □ **향후계획** ○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및 화물차 휴게소·공영차고지 확대	56,188	31,863	33,428	15,654	이행 중

○**개인택시업 대책**(p.104, 172) - 단계적 택시 감차 보상 실시, 경유·CNG 연료 사용 허용, 차량구입비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 **추진실적** **〈택시 감차보상사업〉** ○ (일반감차) '13~'14년 756대 감차 완료(국비 29.48억원) * 대당 1,300만원 = 국비 390만원 + 지방비 910만원 이상 ○ (제3차 총량조사 완료) 전국 156개 사업구역 (~'15.2) * (총량고시) 156개 사업구역 중 150개 사업구역 고시 완료 ○ (자율감차) 대전 시범사업 통해 최종 49대 감차 * 대전 자율감차 시범사업기간 : '14.12~'15.3 ○ (전국시행) '15.7월부터 전국 확대, 자율감차계획 수립중 ○ (시행독려) 택시자율감차 지자체 및 택시업계 설명회 * 전국지자체 회의('15.3.27), 전국 순회설명회 ('15.5.1~5.19), 전국 택시업계 설명회('15.7.16~9.1), 지자체 감차 독려 설명회('16.2.24~3.10, 9.29~10.27) ○ (자율감차계획) 48개 시·군 수립·고시('16.12월말) * 감차실적 : 1008대(16년 819, 15년 189) **〈경유·CNG 등 택시연료 다양화〉** ○ 경유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제도 시행('15.9월~) * 유로-6 일반형 승용자동차 경유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제도개선 완료('14.12) ○ CNG 택시개조 지원 : 117대 개조('14·'15,'16), 62대 추진 중('17) * 대당 480만원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개인택시 차량구입비 부가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5.12.15)에 따른 개인택시 차량 구입비 부가세 면제 시행 중 □ **향후계획** ○ 택시부가세 인센티브(연 80억원)를 활용하여 택시감차 시행 독려 ○ LPG가격 추이 등을 감안, 탄력적 연료 다양화 정책기조 유지 * LPG가격이 급등 시, 수요 증가에 맞게 확대 시행	6,221	16,720	9,739	6,167	이행 중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 **추진실적** ○ 한-러 철도협력 MOU	-	-	-	-	이행 중

촉진(p.361) - TSR·TCR과 TKR 연결하여 복합 물류네트워크 구축(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로 발전)	체결('13.11월, 서울) * TKR-TSR 연결 협의 및 철도협력회의 정기적인 개최 등 포함 ㅇ 한-중 철도협력회의 3회 실시('14.1월, '15.12월, '16.5월) ㅇ 한-러 철도협력회의 3회 실시('14..7월, '15.9월, '16.7월) ㅇ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추진 * 철도공사 OSJD 제휴회원 가입완료('14.11월) * 우리정부 OSJD 정회원 가입 추진('15년, '16년) □ **향후계획** ㅇ 한-중, 한-러 철도협력회의 지속 추진('17년) ㅇ OSJD 정회원 가입 지속 추진('17년) ㅇ ITRT 총회를 통한 OSJD 정관개정 추진('17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 분야)

전문위원 **조원준**

1 총평

무능과 부실로 메르스 확산 사태 야기

- 보건당국의 미흡한 초동대처와 부실한 방역역량,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정부의 비밀주의,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국민의 생명은 물론 사회·경제적 손실과 함께 외교적 비난을 야기하는 총체적 무능을 야기함

공공의료 파괴, 의료 영리화로 親재벌 反서민정책 추진

-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조치를 방관하고 묵인하면서 공공의료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도입, 영리자회사 도입 등 의료비를 폭등시킬 우려가 높은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강행
- 공공성이 강조되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상업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은 국민부담을 희생양 삼아 대기업 자본과 대형병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야기할 우려가 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료분야 국정농단

- 최순실과 정유라 모녀의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 성형외과에 대해 정권 차원의 각종 특혜를 제공하여 의료분야 국정농단 야기
- 세월호 사고발생 당일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김영재 원장의 시술가능성에 대한 의혹과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의혹 등이 제기됨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단골병원이 차움의원 김상만 원장과 관련하여 청와대에 다량의 주사제가 반입되고, 사용처 불명의 부적절한 의약품이 반입된 것과 관련된 논란이 전혀 해명되지 않았음
- 특히 차병원 그룹과 관련해서는 ①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통한 차병원 특혜, ②황우석 사태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줄기세포 연구 특혜, ③분당 차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선정으로 정부예산 지원 등 각종 혜택, ④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헬스케어 펀드' 운용사 선정 특혜, ⑤유전자 검사제도 규제완화 및 기증 제대혈은행 지정 등 특혜 조치, ⑥임상시험 육성정책 및 규제완화로 인한 특혜, ⑦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분당 차병원 수혜, ⑧화장품 R&D 사업 차바이오 F&C 지원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스스로 백지화함으로써 부자들 눈치 보느라 서민들 고통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자초했고,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이 번복과 재번복을 거듭하는 등 극심한 정책혼선과 국정난맥을 드러냄
-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건보료 부과의 불형평성이 개선되지 않고, 국민적 불만은 물론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야기

담뱃값 인상은 전형적인 서민증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책임 방기

- 부자감세는 철회하지 않는 박근혜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한 것은 '간접세를 통한 서민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며, 금연정책을 핑계로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재정적자를 메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임
- 더구나 늘어난 세입분을 건강증진과 흡연치료에 사용하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관련 사업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까지 축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 失政

(1) 메르스 확산 사태는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정판

방역체계 붕괴,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 불안과 국가적 피해 야기

-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메르스 사태는 총 186명의 환자와 36명의 사망자, 누계기준 1만 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면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음
- 특히, 보건당국의 미흡한 초동대처와 부실한 방역역량,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정부의 비밀주의,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의 취약성 등으로 인하여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의 결정판을 보여주었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음
-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환자, 격리자, 의료기관 등 개별적 손실 뿐 아니라 자영업과 관광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도 엄청난 타격을 줘 국가경제도 침체되는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사회적 불안감, 국가의 대외 신인도 하락 등 사회적 손실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임
- 결국 “메르스에 국가가 뚫렸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초기대응 문제나 메르스 사태를 키운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은 바가 없으며, 오히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국회가 요구하는 제도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민간의료기관인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 사과를 받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과할 대상이 사과를 받는 촌극’을 보여주었고, 스스로 정부의 책임이 아님을 강변하는 행태를 보여주었음

-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여전히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멍 난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대책마저 마련하지 않은 채 그저 '셀프 면죄부'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은 박근혜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2) 공공의료 파괴, 의료 영리화로 親재벌 反서민정책 추진

진주의료원 폐쇄, 의료영리화 강행 등으로 공공의료 파괴

- 메르스 확산 사태가 우리에게 준 뼈아픈 교훈 중의 하나는 취약한 공공의료 체계로는 신종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제대로 된 국가방역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취임하자마자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조치를 사실상 방관하고 묵인하면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였음
- 뿐만 아니라 '투자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하여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도입, 영리자회사 도입 등 의료비를 폭등시킬 우려가 높은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음
-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부족한 공공의료 기반으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국가방역체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여전한데다가 의료영리화의 상징인 삼성서울병원이 감염병 대응에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가를 여실히 확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또다시 원격의료 허용과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재벌을 위한 의료영리화를 달성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임
- 박근혜정부의 연이은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들은 국민들의 반대가 심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특정 병원과 재벌에 대한 노골적 특혜를 통해서라도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공공성이 강조되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상업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은 국민부담을 희생양 삼아 대기업 자본과 대형병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 박근혜정부의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영리화 강행은 결국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또 다시 야기할 우려가 높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며 즉각 중단되어야할 대표적 실정이라 할 수 있음

(3)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료분야 국정농단

대통령의 불법시술 논란과 김영재 의원 특혜

- 최순실과 정유라 모녀의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 성형외과에 대해 정권 차원의 각종 특혜를 제공하여 국정농단 야기
  - 김영재 원장은 2015. 4월 대통령 남미 순방, 5월 아프리카 프랑스 순방, 9월 중국 순방 등에 동행하는 등 파격적 특혜조치를 받았으며, 중국 경제사절단에는 인원만 5명으로 가장 큰 규모였음
  - 2016년 병원이 생산·판매하는 화장품 '존 제이콥스'가 청와대 설 선물세트로 선정된 이후 청와대 납품실적 등을 이유로 신라면세점 등 면세점 입점의 특혜
  - 2016. 7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 불과한 김영재 원장을 현재 서울대 병원장인 서창석 원장(박근혜 대통령 주치의 출신)의 지시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하는 특혜 제공
  - 2016. 10 병원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의료기기업체가 서울대 병원 납품 시작
- 김영재 원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와이 제이콥스'에 산업부가 절차규정을 어기고 R&D 예산 15억원을 지원한 것은 명백한 특혜
- 세월호 사고발생 당일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김영재 원장의 시술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집중 제기된 상황에서, 당일 휴원이었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한 기록이 확인되는 등 거짓 진술과 은폐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주사제 및 의약품의 청와대 반입과 차움병원 논란

- 차움병원에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주치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김상만 원장이 녹집자가 운영하는 녹십자 아이메드 병원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청와대에 다량의 주사제와 의약품이 반입되었으나 사용처가 명확치 않음
- 청와대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녹십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2,000만원어치 이상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청와대가 녹십자의 영양주사 등을 대량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상만 원장이 과연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무슨 진료를 하고 어떤 치료를 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
- 한편, 청와대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의약품 총 764건을 구매했는데,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까지 구입한 내역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단골병원인 차병원 그룹의 전방위 특혜

- 차병원그룹은 비영리법인 성광의료재단과 학교법인 성광학원을 중심으로 각종 영리기업을 두고 있는 사실상 의·산복합체 성격을 띠고 있으며, 박근혜정부의 급격한 의료영리화 정책이 차병원그룹 이해관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음
- 차병원 그룹과 관련해서는 박근혜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영리자법인 허용 및 병원부대사업 허용 확대'와 '의료법인간의 인수합병 허용' 등은 우회적인 영리병원 허용방안으로서 차병원 그룹의 불법적 운영형태를 합법화 해주기 위한 특혜이자 전형적인 의료영리화 정책들임
- 결국 박근혜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과 병원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차병원 그룹이 사실상 자법인을 통한 영리병원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특혜를 제공한 셈이 되는 것임
  - 특히 1500억 규모의 펀드운용의 특혜, 줄기세포 관련 규제완화의 특혜, 병원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영리화로 지적된 대부분의 사안들이 차 병원그룹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큼

- **차병원 그룹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특혜와 관련된 주요 논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통한 차병원 특혜 2) 황우석 사태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줄기세포 연구 특혜 3) 분당 차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선정으로 정부예산 지원 등 각종 혜택 4)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헬스케어 펀드' 운용사 선정 특혜 5) 유전자 검사제도 규제완화 및 기증제대혈은행 지정 등 특혜 조치 6) 임상시험 육성정책 및 규제완화로 인한 특혜 7)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분당 차병원 수혜 8) 화장품 R&D 사업 차바이오 F&C 지원 특혜

(4)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로 불공평한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부자 편들기'로 서민 고통 외면

-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된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고자 기획단을 구성하여 2년 가까이 논의해 왔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백지화를 선언함에 따라 부자들 눈치 보느라 서민들 고통을 외면했다는 비난 여론이 큼**
  - 더구나 백지화 선언 이후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나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이를 다시 번복했다가 또다시 번복하는 등 극심한 정책혼선과 국정난맥을 드러내면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까지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
- **정부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재 기준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 하기 위해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해 왔음**
  - 지난해 9월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의 소득에 건보료 부과를 확대하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성·연령과 자동차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편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고, 당초 1월 29일 기획단 최종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기획단 논의는 사실상 백지화된 것임

-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에 대한 비판은 직장과 지역의 재정이 통합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실제로 직장 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면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치솟는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산이 없는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의 문제로 국민적 불만이 끊이지 않았음
-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은 결국 자신들이 고소득자와 부자들을 위한 정권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임
- 특히 복지부가 기본적인 개편방안 초안을 이미 만들어 놓고도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결국 발표를 취소했다는 것은 결국 서민증세 논란과 조세의 불형평성 문제가 더욱 거세질 것이 두려워 국정과제마저 포기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 할 것임
- 그러나 현재의 불공평한 부과체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건보료 부과의 불형평성으로 인해 국민적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고,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마저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행태는 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임
-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사회보험의 대원칙이며, 이 원칙에 맞도록 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5) 부자감세 철회 없이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증세 강행

복지는 없고 서민증세만 있는 정부, 건강보험 재정지원까지 축소

- 정부가 금연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였음. 겉으로는 국민건강증진과 금연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자감세는 철회하지 않는 박근혜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한 것은 '간접세를 통한 서민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며, 금연정책을 핑계로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재정적자를 메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임

- 특히 지방세가 아닌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했다는 것은 담뱃값 인상분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활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서민증세를 통해 세수부족분을 충당하려는 정부가 과연 서민과 민생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며, 박근혜의 '증세 없는 복지'가 결국은 '부자증세는 없고 서민증세만 있는 복지'임이 드러난 것임

- 특히 박근혜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확대를 이유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할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과소추계하는 방식으로 지원액 중 3,700억원을 삭감시킨 바 있음

-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자,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흡연자들이 대신 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

- 결국 담뱃값 올려서 금연 유도하고 흡연치료와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것은 거짓임이 드러났고, 담뱃값 인상이 금연과는 무관하게 부자감세로 구멍 난 정부의 세입을 메우기 위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임

3 박근혜정부 공약 미이행, 파기 실태

'4대 중증질환 보장', 대표적인 공약후퇴 사례이자 국민기만의 전형

-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은 인수위 시절부터 재정확보 논란과 더불어 환자들의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당초 공약과 달리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냄에 따라 "선거를 위한 말뿐인 공약"이자 "국민 기만"이라는 거센 비난과 반발을 야기한 바 있음

- 이러한 논란을 거친 후 정부가 지난 작년 6월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방안"에서도 핵심적인 3대 비급여 문제는 당초 약속과 달리 선택진료비

폐지 대신 축소로 결론을 내고 간병비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공약후퇴와 졸속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 또한 비급여 의료비 경감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국고로 지원하던 난임치료 재원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등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방안들이 대거 포함되었음

이처럼 3대 비급여 대책이 부족하고 별도의 재원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들이 납입한 보험금으로 충당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들 돈으로 생색내기'하는 것에 불과함

- 이처럼 자신들이 내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핵심적 내용들은 모두 후퇴하고 그마저도 정부 재정이 아닌 국민들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공약 폐기이자 국민기망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음
-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줄였다고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상황임

보건복지위원회 (복지 분야)

전문위원 홍성대

1 총평

복지로 집권한 박근혜정부, 반(反)복지 수구세력 진면목 드러내

- ‘모든 어르신께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국가책임보육 실시’ 등 갖가지 복지공약으로 환심을 사 집권한 박근혜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반복지 세력의 본색을 드러냈음.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제시된 기초연금안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약이 줄줄이 파기되었음. 제대로 이행된 공약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
-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핵심 기조였음.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채 2년도 안 돼 새누리당 수뇌부가 잇따라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이며 거짓이라는 점을 실토하였음. 증세 없는 복지가 거짓이므로, 이에 토대한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모두가 거짓으로 귀결되는 것이 필연이었음
- 점입가경으로, 박근혜정부는 복지공약 파기에 더해 복지축소까지 획책하였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을 중단하도록 종용하고 있음. 정부는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노인수당이나 장애인복지서비스, 출산 및 양육지원 서비스 등을 불허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통폐합까지 추진하고 있음
- 박근혜정부는 뿌리 깊은 친재벌, 친부자 정권임. 친재벌, 친부자 정권으로서 재벌감세,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구멍이 발생하고 있고, 서민중산층 복지를 희생양으로 삼아 이를 메우려 하는 것임. 복지공약 파기, 복지축소 획책은 재벌과 부자를 위해 서민중산층을 희생시키는 박근혜정부의 반(反)복지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임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 失政

(1) 국민연금 허물어 재벌의 이해관계에 봉사

삼성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승계에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연금의 커다란 손실 초래

-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됨.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음에도 박근혜정부의 외압에 의해 합병에 찬성함. 이로 인해 삼성재벌 총수일가는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반면 국민연금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입음
  - 재벌의 이해관계를 위해 정부는 ①합병 찬성여부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였으며, ②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SK C&C-SK 합병 건이 유사한 사안임에도 두 건에 대해 정반대의 결정(SK건은 합병 반대)을 하였고, ③투자자문회사가 합병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으며, ④의결권 행사 직전 이재용 부회장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당시 홍완선본부장)이 부적절하게 만났고, ⑤합병 계획 발표 이후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대량(약 130만주) 매수하는 등 너무나도 많은 무리수를 두었음
  -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잇달아 전화를 걸어 합병에 찬성해 달라고 종용했다는 당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의 증언도 제기됨
- 박근혜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것은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큰 문제임. 연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서 법규정과 공식 절차에 따라 각종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독립성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할 청와대와 정부가 독립성 저해에 앞장섰다는 것이 이 정권이 국정 담당자로서의 책임성은 물론, 기본적인 도덕성마저 상실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줌

(2) 지방정부 복지사업 중단 종용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자 추진하는 복지사업을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복지퇴행(退行) 시도

- 박근혜정부 들어 성남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중단하도록 종용하는가 하면, 서울시 강남구가 추진하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중단하도록 종용하였음
- 이 외에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장애인에게 추가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을 중단하도록 한 사례, 기초연금 이외에 경로수당 또는 효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 수 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을 중단하도록 한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음
- 지난 2015년에는 지방정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5천 여 개의 복지사업 중 1,496개를 통폐합한다고 발표하였음
  - 정부의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중단 압력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임.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은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이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
  -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중단 압력은 반복지적인 퇴행적 행태라 할 수 있음. 오늘날 중앙정부가 기본 토대가 되는 복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자체 형편과 상황에 따라 복지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즉, 지자체가 자체 형편과 상황에 따라 특화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지 결코 제동을 걸 일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동을 거는 것은 획일적 사고의 산물이자, 결국 복지확충을 최소화 내지 역행시키겠다는 것임
  - 더욱이, 정부는 지자체 사업 조정을 종용함에 있어 일관성을 상실함. 즉, 정부는 지자체 사업 조정에 있어 야당 지자체장의 사업은 중단을 종용하고 여당 지자체장의 사업은 승인하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임

통폐합대상 지자체 복지사업 현황

수혜 대상	사업 수 (개)	사업 예산 (억원)	대표 사업
저소득층	466	2,623	저소득층 긴급구호, 난방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
장애인	230	1,813	장애인수당, 장애인활동보조, 장애인 출산·육아 지원 등
노인	230	1,172	경로(효도)수당, 노인일자리, 조손가족 지원 등
지역주민	268	1,649	주거환경 개선, 의사상자 지원, 다자녀·다문화가족 지원 등
복지시설	160	2,536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수화통역센터, 자활센터 지원 등
여성·아동·청소년	142	195	소년소녀가정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 여성일자리 지원 등
총 계	1,496	9,988	-

3 박근혜정부 공약 미이행, 파기 실태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

- (박근혜공약) 65세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현황)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제도 2014년 7월부터 시행. 소득하위 70% 노인만 수급 대상. 연금액은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20만원을 온전히 지급받는 기초연금 수령자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채 안됨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 이상일 경우,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평균 약 1만원씩 감액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절반인 10만원만 수령
  -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각각 20%씩 삭감된 16만원만 지급

국가책임보육 시행

- (박근혜공약) 국가 책임보육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어

린이집 수준으로 인상,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인상

- (현황) 0~5세 보육료 지원 비용을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전가함으로써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매년 보육중단 위기가 반복되었음. 급기야2016년에는 3~5세 보육료 지원(누리과정) 비용을 전액 지방교육청에게 전가함으로써 보육대란이 현실화되었음. 보육대란이 실제 발생했음에도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탓(지방교육청)만 하며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음.
  - 한편, 2016년 7월부터 가정주부 0~2세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종전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절반이나 축소함. 박근혜정부는 가정양육을 촉진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린이집 이용시간만 줄일 뿐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어떤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제공되는 가정양육 수당도 2012년 확대 도입된 이래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음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박근혜공약) 취약지역에 국공립 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매년 100개씩의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
- (현황) 150개의 어린이집은 약 4만4천개 전체 어린이집의 0.34%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박근혜정부 내내 공약을 온전히 이행하여도 새로 확충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의 1.7%에 불과함. 사실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을 거의 기대하기 어려움. 집권 기간 동안 1.7%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한 공약은, 확충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아닌 확충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현임
  - 이처럼 터무니없는 목표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박근혜정부는 2014년에는 15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신축, 매입전환)하였지만, 이후 확충 수가 줄어 매년 100개 내외에 그치고 있음
  -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은 전체의 약 6% 수준으로서 최소 전체의 30%가 돼야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음. 따라서 박근혜정부 들어 보육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를 통한 빈곤사각지대 해소

- (박근혜공약)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통한 수혜 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개별급여화를 통한 수혜자 대폭 확대
- (현황) 기초생활보장급여가 개별급여체계로 개편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 대상자 확대 효과가 거의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수 2010년 158만 명 → 2016년 167만 명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 지나치게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임.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박근혜공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 (현황) 2015년부터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기존 장애2등급에서 3등급으로 확대됨. 그러나 시급한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 공약은 지켜지지 않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 정도 및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최대 지원 시간이 1일 최대 7.7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음. 이로 인해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에 돌봄 사각지대에 놓였다가 화재 등의 참변으로 목숨을 잃는 장애인이 끊이지 않고 있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분야)

전문위원 **김영선**

1 총평

국민 환경권과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규제완화 몰두

-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5,000명이 넘는 국민이 피해를 접수했고 이중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신고했으나, 정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금조성을 거부한 박근혜정부
- 폭스바겐사가 배출가스 장치를 임의조작하고, 시험성적표를 위조하는 불법 행위로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법체계(징벌적손배제도)미비로 과징금만 일부 부과하고, 리콜 처리도 제때 못하는 박근혜정부
- 다국적기업 3M사가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유독물질 OIT를 항균필터라며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부착, 판매하면서 한국 소비자를 우롱했음에도 제도부실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박근혜정부
-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처한 현실과 달리 규제를 단두대에 매달아야 하고, 물에 빠뜨려서 살려야 될 것만 살린다는 국민들 환경권과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임

진상규명의 의지 없는 4대강사업 검증

- 박근혜정부는 국민혈세 22조원을 날려버린 MB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을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조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떠넘겼으며, 조사평가 결과 '4대강 사업은 하지 말아야 했던 사업'이라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조성을 배후조정하고 받은 세력들과 혈세낭비에 대한 성역없는 특별수사를 외면함

- 4대강 공사 불법담합으로 막대한 국민혈세(1조원 이상)을 부당하게 빼돌린 불법담합 대형건설사들로부터 부당이득을 환수하지도 않은 채 8.15 특별사면으로 행정제재를 면해줌

꼼수 온실가스 감축 정책추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축소하고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유보)

- 정부는 '포스트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7%로 발표했으나 산업부문 감축률은 12%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서 온실가스 발생의 35%이상책임을 담당하는 산업부문 외에 나머지 부문에서 37% 감축량을 맞추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마련해야할 기업의 책임은 방기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음
-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2015년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유보해서 사상초유의 입법부작위 사태를 초래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며, 에너지의 과도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민생정책 시행을 포기했음

※ 저탄소차협력금제도: CO_2배출량이 많은 차량구매자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구매자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

그린벨트 해제,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시범사업 허가 등 국토의 난개발 조장

-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환경영형평가의 실효적 제도개선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산지관광활성화와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시범사업 허가 등 국토 난개발 불러올 무리한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과 친수구역 후속사업인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을 빗더미에 올라앉은 수공을 앞세워 추진

물, 공기 등 환경서비스 품질 저하

- 대통령 공약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해놓고 2015. 9월부터 하루 종일 1급 발암물질인 디젤 배기가스를 내뿜는 경유택시 도입 강행 (제작체 업체가 차량 생산하지 않고 있는 상태)
- 군단위에 설치된 30년 이상 노후상수시설로 인한 물 복지의 불균형 해소는지자체의 고유사무라며 국고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우리당의 강력한 주장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노후 정수장과 상수도시설 개선 예산을 반영

안전우선 대신 원전 확대

- 입으로는 국민안전이 우선이라며 현재 25기인 원전을 최대 42기로 확대하려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원자력 발전비중 목표를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 가운데 29%로 설정 국민안전이 아닌 원전 확대정책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는 신규원전 2기 추가건설을 포함시켰음

※ 현재 원전 25기 운영가동, 11기 건설 중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 失政

(1)국민혈세 빼돌린 4대강 불법담합 건설사 특별사면

4대강사업의 심각한 부실 문제를 알면서도 불법담합 대형건설사들 특별 사면

- 박근혜정부 국조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평가의 주요결과는'MB 4대강 사업은 하지 않아도 돼는 사업이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음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주요 평가 결과〉

- 4대강에 가두어둔 물 11억 톤은 거의 사용할 수 없음
- 16개 보 중에서 6개보의 물받이공에서 물새고 있음
-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와 준설로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되고 있음
- 생태하천과 생태공원은 생태계복원과는 관계없음

- 국민들은 MB 4대강사업의 실체를 확인한 박근혜정부가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와 성역없는 비리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문을 풀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으나 박근혜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음
- 뿐만아니라 박근혜정부는 지난 8.15 특별사면을 통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었던 건설업체 2,200개사에 대한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을 단행하면서 4대강 불법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도 포함시킴
- 결국 대통령후보 시절 약속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은 하려는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담합으로 국민혈세를 빼돌린 토건기업으로부터 부당이익은 환수도 하지 않고 면죄부부터 주는 국민배신행위를 한 것임
- 특히 일부 대형건설사들은 4차례의 공정위 담합발표에서 계속해서 과징금부과 조치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사면을 해준 것은 현 정부가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뜻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박근혜정부는 4대강사업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없으므로 향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혀야함

4대강 공사 담합가담 기업체 현황 및 공정위 제재 조치 현황표

발표/공사명	가담기업	제재조치
1차 발표(2012.6.5.) /금강 1공구 등 14공구	**과징금: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8개 **시정명령:**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8개사 **경고조치:**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3개사 등 총19개사	▶ 과징금: 1,115억4,100만원 ▶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
2차 발표(2014.11.10.) /낙동강 17공구 등 3개 공구	**과징금:**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한라건설, **계룡건설산업**,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등 총 7개사	▶ 과징금: 152억 1,100만원 ▶ 7개법인 및 고위임원 7명 개인 고발
3차 발표(2015.3.9.) /보현산 다목적댐	**과징금: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등 총 3개사	▶ 과징금: 101억 9,400만원
4차 발표(2015.4.21.) /농업용 저수지 뚝높이기 건설공사 4개 공구	과징금: 삼성중공업, 풍림산업, **한화건설**, 태영건설, **두산건설**, 글로웨이, KCC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 8개사	▶ 과징금: 98억 5,600만원 ▶ 검찰고발: 한화, 태영

(공정거래위원회)

(2) 온실가스 배출 많은 대형차에서 부담금 거둬 소형차에 보조금주려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시행 2020년 이후로 연기

여당이 발의하고 정부는 시행령 안 만들고 입법부작위 사태 초래

-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대형차 구매자에게 온실가스 과다배출에 대한 부담감을 거두어 소형차 구매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민생지원을 실천하면서 국내 수송부분에 있어서 CO_2 배출량의 감축을 실현할 수 있는 서민지원 정책임
-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2014.9.2일(화)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20년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음
- 박근혜정부는 대안으로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15년:1,485억 원, 16년:2,129억 원)과 하이브리드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15년:563억 원, 16년:463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예산으로 예정대로 2015년부터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됐다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차량으로부터 거둔 부담금을 소형차량에 보조금으로 지급 할 수 있어 국민세금으로 하이브리드 차량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특히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시행 유보의 대안으로 제시한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특정 자동차업체가 생산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를 지원하게 돼 특정 기업에 국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박근혜정부가 재벌편향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

※ 2015.12월 박근혜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유보만이 아니라, 경차구입 시 면제해주던 7%의 취득세를 2016부터 부과하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하고 있음

※ 2016.12월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신청 부결로 사업 중단 상태

(3) 수도권 2,000만 시민이 숨 쉬는 대기질 악화시킬 경유택시 보급 강행

맑은공기 약속하더니 1급 발암물질 24시간 내뿜는 경유택시 도입

- 박근혜정부 국토부는 2015년 9월부터 '경유 택시에도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함
-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 1,000만 시민의 호흡기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수도권 지역에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디젤 배기가스를 방출하는 경유택시가 24시간 돌아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임
- 더욱 가관인 것은 환경부의 행태로 박근혜정부 기재부, 국토부의 반 환경적인 정책이 2014.11.5일 관련부처 국장급회의, 11.6일 실장급회의, 그리고 16일 당·정·청에서 진행되었으나, 쉬쉬하더니 결국 경유택시가 허용된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음
- '경유택시 도입'은 환경부가 2004년부터 수도권의 악화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추진해 온 '제1, 2차 수도권대기개선특별대책'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노무현정부에서부터 추진한 제1기 수도권대기개선대책('05~'14년)으로 정부는 4조 2천억원을 투입하여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전환하고, 경유차를 대상으로 DPF 부착, LPG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의 대기오염저감사업 추진한 바 있으며, 제2차 수도권대기개선대책('15~'24)을 수립하고 앞으로 약 4조 7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정부가 수도권에서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 것은 수도권 대기환경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폐암 및 조기사망을 유발하는 미세먼지(PM10)는 런던의 2배, 호흡기질환 유발 및 오존의 원인물질인 이산화질소(NO2)는 파리의 1.5배 수준임

※ 현재 제작차 회사들이 경유택시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경유택시를 제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2005년 경유승용차 시판 이후 관련부처 논의에서 환경유해성을 고려해서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있음(2006.7월)
- 국회에서도 오염물질 배출증가, 경제성부족, 불법유통의 문제가 우려돼 택시용 경유는 면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바 있음(2012,12월)

(4) 국토난개발 조장하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 허용

시행령 위반, 허위 경제성 분석보고서 제출, 사회편익 분석 생략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막무가내식 케이블카 시범사업

- 케이블카 시범사업 통과 시 표결을 했으나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 3항의 5에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처·청의 위원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시행령을 위반한 불법심의로 무효임
- 양양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경제성 분석 보고서'는 KEI 보고서에 양양군이 일부 자신들이 유리한 자료를 포함시켜서'KEI보고서'로 허위·조작 제출한 것임
- 가이드라인에는 '사회적편익 분석'을 실시하고 외부기관에 검증을 받으라고 했으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민간위원회활동도 문제가 있는데 서류검토에서는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고서 최종결론에는 대체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5) 끝없이 추락하는 환경성과지수(EPI)

우리나라 환경성과지수 세계 80위로 보츠와나 수준으로 하락

-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학 환경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80개 국가 중에서 세계 80위(70.61)를 차지해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 수준으로 하락했음
- 한국은 노무현정부인 2008년 79.4점으로 149개국 중 51위, 이명박정부인 2010년 57.0점으로 233개국 중 94위, 2012년 57.2점으로 132개국 중 43위, 박근혜정부인 2014년 63.79로 178개국 중 43위를 기록한바 있음

※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 세계경제포럼(WEF)이 각국의 환경과 관련된 경제, 사회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로 환경보건, 대기질, 수자원,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에너지의 6개 분야 16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음
- 2001년부터 세계경제포럼이 미국 예일대학 및 컬럼비아 대학 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수를 1~3년 간격으로 발표했는데, 최근에는 짝수 해 1월에 발표하고 있음
- EPI 지수는 **환경건강성 분야, 생태계활력성 분야로 크게 구분해서 평가하는데** 환경건강성 분야(Environmental Health)는 세부항목으로 환경질병에 대한 부담, 사람들이 먹는물, 대기오염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고
- 생태계활력성 분야(Ecosystem Vitality)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물,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임업, 농업, 어업 등과 같은 자원의 생산성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항목에 대한 평가로 구분됨

- **2016년 환경성과지수의 순위를 보면 78위가 나미비아, 79위가 보츠와나, 81위가 남아프리카, 82위가 파라과이로 우리나라의 환경수준이 국제적으로 평가할 때 아프리카와 남미의 저개발 국가 수준으로 하락한 것임**
  - 환경성과지수를 구성하는 분야별 순위와 지표값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가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환경분야와 정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
  - **(Health Impacts(건강영향))**정책의 지표인 Environmental risk exposure (환경위험 노출)의 경우 새로 포함된 지표인데 우리나라는 103위를 차지해, 2014년 지표였던 Child mortality(유아사망) 지표의 순위가 29위를 기록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음
  - **(Air Quality (대기질))**정책의 지표 중 PM2.5와 같은 초미세먼지 노출(Average exposure to PM2.5)과 관련된 지표의 순위는 174위로 2014년에 이어 계속 세계 꼴지 수준임에도 정부의 대책은 매우 부족한 상태임
  - **(Climate and Energy(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지표 순위 역시 매우 심각한 상태로 KWH당 이산화탄소 배출 지표 순위의 경우 170위로 세계 꼴지 수준이나, 박근혜정부는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시 산업계의 입장을 우선 반영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 **(Biodiversity and Habitat(생물다양성과 서식지))**정책의 지표 순위도 126위(Terrestrial Protected Areas), 120위(Species Protection (National))를 기록하고 있어 보완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결국 MB정부의 4대강 사업에 뒤이은 박근혜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환경성적표가 이처럼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정확한 숫자로 보여주는 것임

(6) 미세먼지 책임을 고등어에게 떠넘기는 정부

실현가능성 낮고, 구태의연하며, 피해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정부의'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 지난 2016.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은 ▲실현가능성은 낮고 ▲피해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구태의연하게 기존 정책을 반복하고 있으며 ▲'탈핵 에너지 전환'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을 미세먼지 대책에 끼워넣는 한마디로 부실한 '미세먼지 대책'임
- 실현가능성 낮은 친환경차 보급 대책

정부 발표	검토의견
〈친환경차'그린카' 보급확대〉 - 2020년까지 신차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총 150만대)하고 인센티브 강화(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 요금 등) - 2020년까지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 확충(총 3,100기)	• 정부가 현재 신차판매 중 2.6%수준(17.4만대)의 낮은 보급률을 보이는 친환경차의 보급률을 2020년까지 30% 수준으로 늘린다는 것은 친환경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사료됨 - 현재 일반차보다 비싼 친환경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 1,200만원,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수소차 2,7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 실제로 전기차의 경우 가격이 두배 이상 비싸 지자체보조금(800만원)을 받아도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실로, 올해 1-4월 동안 357대의 전기차가 판매된 실정임 • 충전 인프라 역시 기존 주유소와는 달리 정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정부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임

피해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대책

정부 발표	검토의견
〈미세먼지 예·경보 체계 혁신〉 - 취약계층시설 대응메뉴얼 정비 '고농도시 행동요령' 교육	• 정부 스스로 발표자료 서두에 "우리나라는 주변국 영향(황사 등)과 기상여건, 인구·산업구조 등이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하여 단기간내 선진국 수준 개선 곤란" 하다고 언급하고서도 피해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달랑 한줄임 •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미세먼진가 심한 경우에도 외부활동을 해야 하므로고가의 전용마스크(1만원)가 필요한 실정임 • 또한 미세먼지 과다발생이 우려되는 교통량이 집중된 곳에 학교, 유치원, 요양시설들이 들어선 경우 방음벽설치, 공기청정기 보급 등의 조치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대책은 전무

구태의연한 기존 정책 반복

정부 발표	검토의견
〈미세먼지 다량배출 경유차 (차량대수 41%, 오염 90%)관리〉 -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기준의 전환 · 실험실 인증 → 실도로 인증기준*, '16.1월~ 3.5톤 이상, '17.9월~ 3.5톤 미만 - 운행 경유차의 배기가스 저감조치 강화 ·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 대상 경유차 소유주의 이행의무 강화 및 보증기간 경과차량 배기가스 기준 강화(매연: 15%→10% 내외) ·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확대(PM·NOx 동시저감, 조기폐차 등)	•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기준 전환은 작년 폭스바겐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부터 국회 등의 요구로 '실도로 인증'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것을 그대로 발표함 • 운행 경유차의 배기가스 저감조치 강화 대책은 2차 수도권대기개선 특별대책(2015-2024)정책과 동일한 내용 - 경유차의 경우 2017부터 NOx를 배출가스 검사 기준에 포함하고 2006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38만대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유도 - 버스나 대형화물차 10만대의 경우 먼지와 NOx를 동시에 각각 80%, 60% 저감하는 '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다

- ‘탈핵 에너지 전환’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을 미세먼지 대책에 끼워넣고 있음

정부 발표	검토의견
〈미세먼지와 CO_2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 - 저에너지 도시 구축 산업 육성 -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 신산업육성 - 국내 신산업의 해와 환경시장 진출 지원	• 발전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에너지 도시 구축 산업 육성’ ,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 과 같은 대책은 미세먼지 대책이라기보다는 국가차원에서 별도로 ‘탈핵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사료됨

환경노동위원회 (노동 분야)

전문위원 정길채

1 총평

2016년 실업자 101만명, 사상 최악의 실업난 불러온 정권

-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로 2017년 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 2016년 실업자가 101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악의 실업난을 만들어냄
- 특히, 2013년 집권 이후 3개월에 한번 꼴로 청년대책을 9차례나 발표한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2016년 청년실업률은 9.8%로 사상 최악을 기록하였고, 청년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43%에 달하는 등 청년고용절벽 더 심화됨
- 또한, 전체 취업자의 고용증가폭 둔화를 완화시켜 왔던 고령층(55~79세)은, 노후빈곤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 하고 여타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ECD의 두배가 넘는 비정규직 규모, 감소가 아닌 확대시킨 정권

- 박근혜정권 집권 4년 동안 비정규직은 32%대에 정체되어 있었고 2016년에는 오히려 0.3% 증가(32.8%)하여, 비정규직의 증가속도가 2015년에 이어 정규직을 앞지르고 있음
- 사회보험 및 근로복지의 필요성이 정규직 보다 큰 비정규직이 그 적용에 있어 오히려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정규직과의 월평균 상대임금 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벌어짐

-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06년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2015년 21.4%로 저점을 찍은 후 2016년 소폭 증가한 22.6%, 비정규직 중 저임금근로비중도 2016년 소폭 증가

불법 모금 대가로 재벌·대기업 민원처리용 노동개악 추진한 정권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 失政

(1) 실업자 101만명, 사상 최악의 실업난 불러온 정권

'고용률 70%' 공약이 무색한 사상 최악의 실업난

-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로 2017년 까지 15~64세 고용율을 70%제시하고, 매년 목표치를 제시하였으나 4년 연속 목표 달성 실패

박근혜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목표 및 실적

	2013	2014	2015	2016
목표	64.6%	65.6%	66.9%	68.4%
실적	64.4%	65.3%	65.7%	66.1%

-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취업자수 연평균 476천명 증가를 목표로 하였으나, 2014년을 제외하고는 목표치 미달.

박근혜정부 집권 4년간 취업자수 증가 목표와 현황

	2013	2014	2015	2016
목표(천명)	연평균 476			
실적(천명)	386	533	337	299

- 2016년 실업자가 101만2천명으로, 2000년 통계기준이 바뀐 이후 사상 최악을 기록. 실업률도 3.7%로 2010년 이후 최고치

박근혜정부 집권 4년간 실업자 및 실업률 증가 현황

	2013	2014	2015	2016
실업률	3.1%	3.5%	3.6%	3.7%
실업자수(천명)	807	937	976	1,012

청년의 명목실업률 2016년 9.8%, 사상 최악

- 박근혜정부는 2013년 집권 이후 3개월에 한 번 꼴로 9차례의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고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집중 투여했음에도, 청년실업율은 2016년 9.8%로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청년실업자는 전체실업자의 43%(2016년 기준)에 달해 청년고용절벽 심각

박근혜정부 청년고용대책 현황 및 발표 당시 청년실업률(%)

발표시기	대책명	청년실업율(%)
2013.10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7.8
2013.12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	8.5
2014.4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10.0
2014.11	청년해외취업촉진방안	7.9
2014.12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	9.0
2015.6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	10.2
2015.7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	9.4
2015.11	청년해외취업촉진대책	8.1
2016.4	청년·여성 취업연계 방안	10.9

박근혜정부 집권 4년간 청년실업률(%) 및 청년실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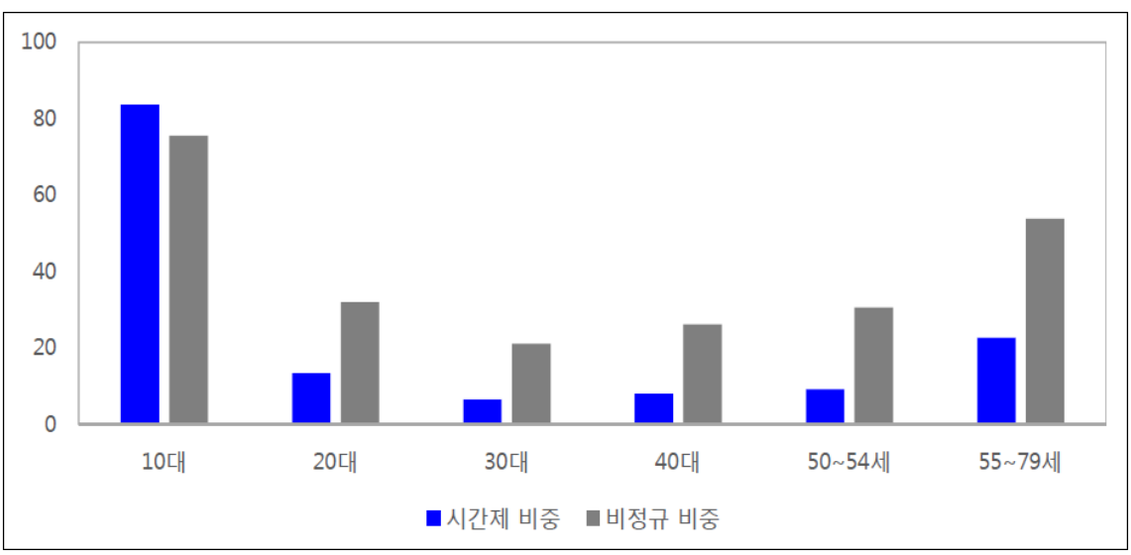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실업률	8.0%	9.0%	9.2%	9.8%
실업자수(천명)	331	385	397	435

노후빈곤의 고령층, 취업자 증가하나 열악한 근로조건 전전

- 고령층(55~79세)의 고용증가가 전체 취업자의 고용증가폭 둔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여타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증가

- 고령층 인구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1.2%(758만 2천명), 근로 희망 사유로는「생활비에 보탬」(58.0%)이 압도적. 노후빈곤이 취약한 일자리로의 진입을 유인
- 고령층(55~79세)의 근로형태별 비중을 보면, 비정규직 비중은 2016년 8월 현재 53.8%로 1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고, 특히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2015년에 이어 40%를 넘어섰으며 전년동월대비 7만5천명 증가

연령별 시간제 근로비중 및 비정규직 비중 비교(2016.8월 기준)



자료 : 김복순, 2016년 고령층(55~79세)노동시장 특징, 월간 노동리뷰 20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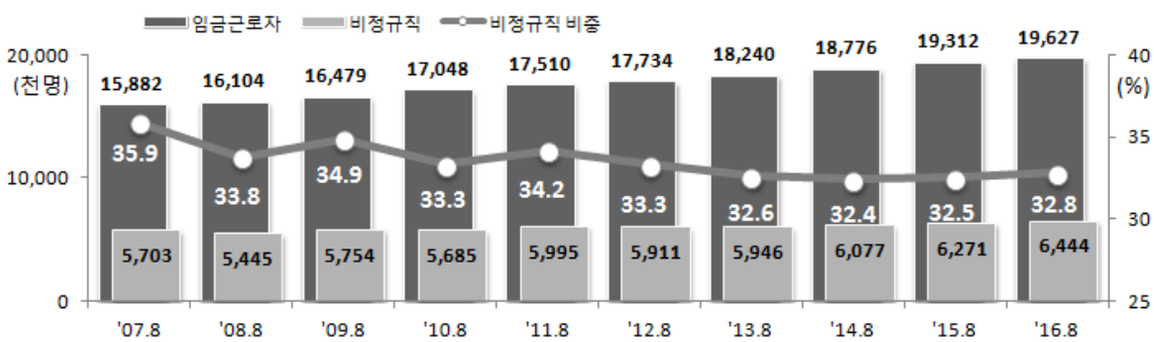
- 전체 임금노동자(2016년 8월 시간당 임금 기준) 대비 고령층(55~79세)의 상대임금은 83.8% 수준(60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임금 수준은 66.1%)이고, 최근 고령층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시간제 근로자의 상대임금 수준은 63.6%이며, 여성 고령층 시간제 근로자의 상대임금 수준은 51.8%로 더욱 낮음
- 고령층의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2016년 현재 42.2%이며, 최저임금 이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고령층 노동자는 28.9%

(2) OECD의 배가 넘는 비정규직 규모, 오히려 확대시킨 정권

박근혜정부 집권 4년 비정규직 32%대에 정체, 2016년 소폭 증가

-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 36.6%에서 2013년 32.8%로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13년 이후 4년 동안 32%대에 정체.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0.3% 증가한 32.8%. 비정규직의 증가속도가 2015년에 이어 정규직을 앞지르고 있음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2016.8. 통계청)



- 2016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19,62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5천 명 증가. 이 중 상용-정규직은 전년동월대비 23만4천명 증가하여 2015년 449천명에 비해 상당히 둔화되었으나, 상용-비정규직은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증가폭을 보임

- 지난 10년 동안 다른 연령층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15~24세 청년층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
  - 2016.8월 15~24세 비정규직은 80만6천명으로, 이들 연령층 임금근로자의 49.3%규모. 졸업여부별로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 재학자(재학과 휴학 포함)의 비정규직 비중은 74.3%로 재학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으로,이들의 대부분이 학업과 병행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등의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
  - 15~24세 청년층 중 졸업자(졸업과 중퇴 포함)의 비정규직 비율은 34.6%로 전년동월대비 3.0%p 상승하여 조사 이래 가장 높음

- 최근 비정규직의 증가는 시간제 근로가 주도. 시간제 근로의 증가는 여성 특히 55세 이상 중고령층에서 주도. 이들 연령층 근로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시간제 근로자

취약한 사회안전망, 정규직과의 월평균 상대임금격차 최악

- 비정규직이 사회보험 및 근로복지의 사회적 보호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취약한 사회안전망 상태에 놓여 있음
  - 정규직의 국민연금가입률 82.9%, 고용보험가입률 75.1%, 건강보험가입률 86.2%인 반면, 비정규직은 각각 36.3%, 42.3%, 44.8%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음
  - 2016년 고용보험 사각지대(고용보험 적용제외)는 임금근로자(19,627천 명)의 15.6%에 달하는 3,062천 명.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22.1%로 비정규직 644만4천명 중 142만2천 명에 달함
  - 정규직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급여 85.5%, 상여금 85.4%, 시간외수당 58.4%, 유급휴일(휴가) 74.3%인 반면, 비정규직은 각각 40.9%, 38.2%, 24.4%, 31.4%로 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미흡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 및 근로복지수혜 비교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2013	39.0%	45.4%	43.3%	39.6%	36.4%	23.2%	32.1%
2014	39.2%	46.2%	43.6%	39.9%	40.2%	24.9%	33.0%
2015	38.4%	44.7%	43.8%	39.5%	39.7%	24.7%	32.0%
2016	36.3%	42.3%	44.8%	40.9%	38.2%	24.4%	31.4%

자료 : 2016.8. 통계청

  -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016년 8월 69.0개월로 전년동월대비 1개월 늘어나, 비정규직 또한 평균 근속기간이 29.0개월로 늘어나긴 했으나 정규직의 88.6개월에 비해 상당히 짧고, 6개월 미만 단기근속자의 비중이 43.5%나 됨
  - 최근 비정규직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시간제의 평균 근속기간은 길어지고

있지만 6개월 미만 단기근속자의 비중이 52.9%로 나타나 고용이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근로형태가 늘고 있음

- **정규직과의 월평균 상대임금 격차 조사 이래 사상 최악**
  - 비정규직의 월평균 상대임금 수준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정규직의 50%대 중반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특히, 박근혜정부 집권 4년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는 2003년 신용카드사태(61.3%) 및 2009년 국제금융위기(60.9%) 때 보다 더 낮은 53.5%로, 조사 이래 정규직과의 상대임금격차가 가장 확대

박근혜정부 집권 4년간 근로형태별 월평균 상대임금(정규직=100)

	2013	2014	2015	2016
정규직	100			
비정규직	56.1	55.8	54.4	53.5

  - 2016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실질)은 13,356천 원이며, 정규직은 15,069천 원, 비정규직은 9,851천 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수준은 65.4%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2010년 이후 64~65%대에 정체

- **비정규직에서의 저임금 근로비중 2016년 다시 소폭 증가**
  -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06년 29.3%에서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5년 21.4%로 저점을 찍은 후 2016년 8월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한 22.6%
  - 저임금근로자는 시간당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로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이 10%대 중반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
  -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서 저임금 근로 비중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40%대 초반에서 횡보하다가 2015년에는 38.6%로 가장 낮은 기록을 보여주었으나, 2016년에는 다시 40%대를 회복하면서 소폭 증가

(3) 재벌·대기업 위한 노동개악 추진 등으로 불안정한 노사관계 지속

박근혜정부, 불법 모금 대가로 재벌·대기업 민원 위한 노동개악 추진

-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쉬운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의 노동개혁(악)을 추진
  - 노동개악은 크게 새누리당의 노동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법」「파견법」개정안)과 2대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으로 추진되고 있음
  - 새누리당의 노동4법, ①「파견법」개정안은 이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불안정한 근로조건아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②「근로기준법」개정안은 통상임금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연장시켜 청년실업과 구조조정의 대책과는 정반대인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를 조장하며, ③「고용보험법」개정안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제한과 하한액 하향으로 더욱 보장받아야 할 단기계약 및 일용직 등 저임금노동자들을 실업급여 적용에 배제시키게 되는 법안임
  -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6.1.22.에 발표한 2대 행정지침, ①'공정인사지침'은 "저성과만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도입"을 주목적으로 작성되어 산업현장에 "쉬운 해고"를 양산시키고, ②'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근로기준법」제94조에서 명시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형해화 시켜 "임금삭감"을 전면화시킴
  - 박근혜정부가 2016년 강행한 성과연봉제 추진 역시 박근혜정부 노동개악의 일환임. 특히, 2016.2.25. 2016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인센티브 방안"이 발표된 이후 공공·금융권에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법리 위반을 정부가 나서 자행하고 있음
-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 추진을 위해, "단체협약 시정지도"등 행정처분을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를 시도
  -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지난 2016.3.28. 위범·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도계획을 발표. 개선지도의 대상을 △위법사항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사항으로 나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 개선 권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장 방문, 간담회 등 현장지도'를 하겠다고 밝힘

고용노동부가 자율개선 권고한 단체협약 조항별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위법하다고 한 사항	교섭단체	유일교섭단체
	채용	우선채용 (퇴직자, 산재, 질병 등 사유 무관)
	운영비원조	교섭위원, 조합간부 활동 등
	시설편의제공	장소 및 시설, 비품과 차량 등 제공
	최저기준미달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사산 휴가, 퇴직급여, 최저임금 등
위법은 아니나 불합리하다고 한 사항	인사·경영권	징계 시 노조 합의
		적정인력 확보, 정리해고, 인사 등 노조 합의

- 그러나, 행정관청에 의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는 입법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행정처분으로, 노사자치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노사간의 자율적인 양보와 타협의 과정 및 결과를 무시한 채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것 노동개악 추진을 위한 노조 무력화 시도

-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추진은,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전경련 등 대기업들이 미르 및 K-스포츠재단에 입금을 하고, 박근혜정권이 이에 대한 대가로 노동개혁(노동개악5법+2대지침) 종합선물세트를 거래 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7월 24일 기업총수 17명을 만나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설립을 요구하였고, 이로부터 2주 뒤인 8월 6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 이후, 8월 17일 박근혜정부는 국무회의에서는 예비비로 노동개혁 관련 홍보비 30억 원 배정하고 홍보 시작
  - 2015년 9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부처보고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 후 이틀 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터키 앙카라 B20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도 현재 논의 중인 노동개혁을 조속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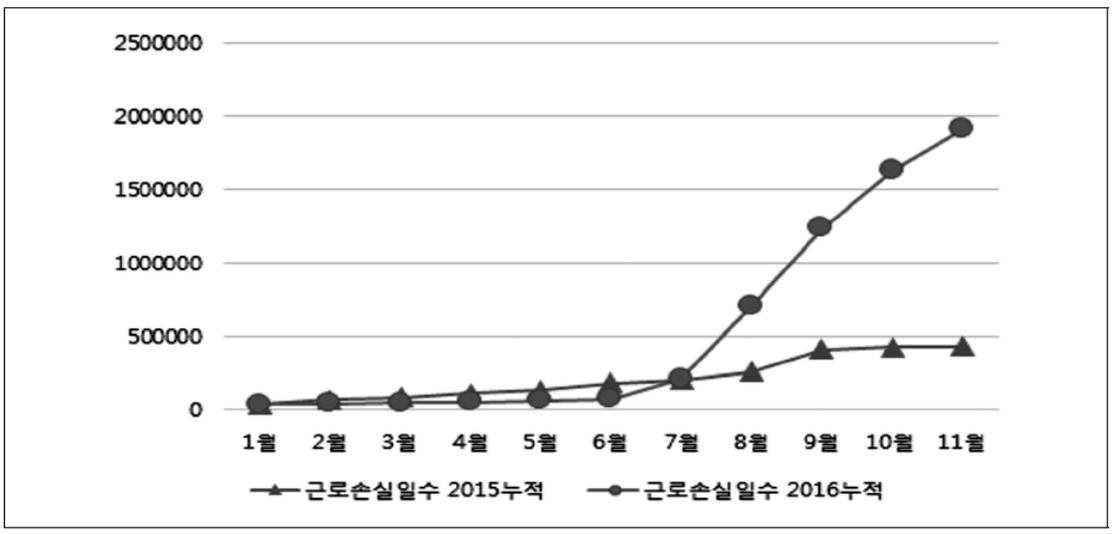
추진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파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한 노동시장 구조로 바뀌어야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의 노동개혁안과 동일한 발언. 뒤이어 9월 11일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현대차 노조를 직접 거론하며 '노동개혁' 논의에 동참할 것을 주장하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

- 2015년 9월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합의 도출. 동시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 비공개 보고를 진행 후, 이틀 뒤인 17일 노사정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5법을 발의. 이어 미르재단에 기업출연금 486억원 임금 완료
- 2016년 1월 12일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입금 완료 이후, 1월 13일 박근혜대통령 대국민담화를 통해「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처리를 국회에 촉구. 열흘 뒤인 2016년 1월 22일 노사정합의 당시 노동계와 합의수준의 협의를 하겠다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지침(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공정인사지침(저성과자 해고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2대 지침을 전격 발표함

사용자 편향적 정부가 불러일으킨 쟁의행위 증가

- **2016년 노사간의 임금교섭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인상율 수준도 전년 대비 낮았음. 반면 쟁의행위는 증가하였는데,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 집중되어 파업에 들어간 노조의 파업 횟수나 기간이 길어졌고 조합원 규모가 큰 노조들의 파업이 많았음**

2015~16년 근로손실일수 월별 누적 추이



자료 :이정희, 2016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7년 전망, 월간 노동리뷰 2017.1, 인용

3 박근혜정부 공약 미이행, 파기 실태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박근혜 공약		약속위반
•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운영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 한도 지키기, 휴일 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 추진 -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	•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 박근혜정부(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은, 휴일 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시 추가 연장근로8시간 영속화와 단계적 시행을 노동개악법 안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공약 파기 - 또한, 정부주장 관철을 위해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도 연계시켜 입법저지중임 - 현행 「근로기준법」을 정부가 잘못 해석해 관행화된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공약을 사실상 파기함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강화 공약 미이행

박근혜 공약		약속위반
•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의무 강화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	⇔	• 고용안전 및 정리해고 요건강화 공약 미이행 - 박근혜정부가 '14년 말부터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검토', '정규직 보호론'등을 언론에 유포하고,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 등을 통해 해고요건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 완화를 시도하고 있어, 사실상 대선공약인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공약을 파기함 -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소관 법안심사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토대로 작성된 여당의 개정안(김성태안)을 반대함으로써 공약 파기함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공약 미이행

박근혜 공약		약속위반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	⇔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미이행 - 박근혜정부는 최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연장' '파견근로 대상범위 확대' 등을 주장 등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요건 완화를 노동개악법 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상시 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 공약을 파기함 - 특히, 공공부문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에서 지적하듯,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의 74%를 처음부터 전환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전환대상이 되는 상시 지속적 근로 기준도 지나치게 엄격하여, 생색내기에 그쳐 공약파기에 준함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박근혜 공약		약속위반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 사내하도급 계약 만료시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의 고용보호 -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 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 우리당의 강한 공약이행요구에도 불구,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수용을 거부해 공약을 파기함 - 또한, 지난 9.18.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법원(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졌음에도 불구, 박근혜정부는 공약처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았고,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에도 불구 직접 고용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음 공약 파기임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박근혜 공약		약속위반
•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만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100% 정부 지원	⇔	•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 대통령 공약에도 불구, 2013~4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우리당이 대선공약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사업대상 확대 및 지원범위 상향등을 거부하여, 사실상 공약을 파기함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박근혜 공약		약속위반
•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 사회안전망 확대 -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	•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법안이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공약 파기임 -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이 특종 대표사의 입장을 수용해 법통과를 지난 4월 임시회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막고 있어, 사실상 공약파기임 -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2014년 정기국회 환

		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소관 법안심사과정에서, 특수고용근로자 적용 관련된 「고용보험법」등의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의가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의 반대로 무산됨 -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는 공약만 있을 뿐 아무런 추후 이행방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어, 공약 미이행 사안임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 생활보장은 미이행

박근혜 공약		약속위반
•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 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 최저임금 근로감독 강화, 반복 최저임금 위반사업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미이행 - 국정과제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합리적 기준' 및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 수준달성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바뀌었고, 위반사업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약속 역시 포기하였으며 최저임금법의 개정 약속 사람짐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되 '고의반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 공약 후퇴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박근혜 공약		약속위반
•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 노사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 역할 강화 -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 -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노사대표와 만나 노동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대책 논의	⇔	•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 파탄 - 15년 9.15노사정합의 이후 전경련 등 재계의 요구에 의한 노동악법 및 행정지침의 일방추진으로 노사정대타협 파탄(한국노총 파기 선언, 16.1.19) - 청년일자리를 볼모로 한 비정규직 양산 및 확대, 노동기본권 훼손 등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 노사정위원회 무용론 제기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합리적 보완

박근혜 공약		약속위반
•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합리적 보완 -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보완 방안 도출 -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자유로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법제도 정착	⇔	• 노사정위원회에서 중장기 과제로 돌리며 논의 회피 -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제도 시행과정 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한국노총의 문제제기에도 불구, 정부와 재계는 중장기과제로 돌리며 사실상 논의 거부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 김성민

1 총평

최초 여성대통령 박근혜의 국정농단사태로 우리 사회의 여성리더십 붕괴, 여성 혐오 현상 확산, 오히려 여성에 대한 차별 심화

- ‘준비된 여성대통령’ 슬로건 내세우며 최초의 여성대통령직에 오른 박근혜,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여성대표성 상징하며 우리 사회의 성별불평등 해소되는 듯 착시효과 만들어왔고,
- 최초의 피의자 대통령이자 향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인용할 경우 역시 최초로 탄핵으로 인해 임기 채우지 못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최초의 여성대통령인 여성정치인 박근혜의 실패로 여성리더십에 대한 부정적 평가 크게 증가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여성 혐오 현상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오랜 동안 힘겹게 쌓아올린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무참히 훼손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 失政

성별 불평등 심화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6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양성평등 지수는 0.649로(1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것으로 간주) 144개 조사대상국 중 116위에 불과함

- 분야별로는 ▲경제 활동 참여·기회 부문 123위 ▲교육 권한 부문 102위 ▲정치 권한 부문 92위▲건강 평등 수준 76위

- **우리나라 성 격차 지수 순위는 2010년 104위, 2011년 107위, 2012년 108위, 2013년 111위, 2014년 117위, 2015년 115위로 지속적 하락, 올해도 144개국 중 116위로 최하위권을 못 벗어나고 있음**

- **경제 활동 참여·기회 점수는 2006년(96위)보다 27계단 하락, 보고서는 특히 남녀 임금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014년 기준 36.7%로 10년 넘게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 (OECD 평균 15.5%)
  - 여성의 고위직 진출 가로막는 '유리천장'도 여전히 견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고등교육과 남녀 임금격차, 기업 임원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 종합해 낸 수치인 '유리천장 지수', 2016년 한국은 100점 만점에 25점으로 OECD 29개국 중 꼴찌, 2013년 발표된 이래 연속 최하위
  - 박근혜정부는 여성일자리 문제에 있어 시간제일자리 확충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 등 성과내기에만 급급, 여성들을 저임금 직종에 집중시키는 '나쁜 일자리' 확산해 여성고용의 질 더 악화
  - 또한 가사와 육아 등 인한 경력단절은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 야기, 30대 여성들 노동시장에서 탈락해 고용률 급격히 감소, 후일 재취업해도 임금 및 경력의 큰 손실 경험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과 일·가정 병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간제일자리'만 강조, 남성과 여성 간 가사노동과 양육의 평등한 분담보다 여성 혼자서 어떻게 유급노동과 무급노동(가사)을 '양립'할 수 있는가에 초점, 여성의 시간제 노동 주목받고, 결과적으로 여성 고용의 질 더 악화
  - 한국노동연구원 '2016년 여성 노동시장 평가' 보고에 따르면 55세 이상 중고령자, 보건사회업종을 중심으로 여성고용률이 증가했고 임시직 비율 높아져 일자리 질 악화 우려, 아울러 30~40대 출산육아기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정체 상태로 평가됨

- **정치 권한 부문 점수는 여성대통령 집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과 장관 비율이 현저히 낮아 낙제점, 각료 중 남녀 비율 부문 128위에 불과**
  - 박근혜정부 초대 내각 여성장관은 2명(11.8%)뿐이었고 역대 정부보다 오히려 후퇴(이명박 정부 13%, 노무현 정부 21%)

일본군 위안부 문제

- **'15년 12월 한일장관회담 협의는 '위안부 문제 최종타결'이라는 성과내기에 급급한 박근혜정부의 굴욕적인 외교적 담합**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해 그동안 요구했던 사항은 첫째, 위안부를 일본군이 개입하여 강제동원했으며 이는 중대한 불법적 인권침해라는 것을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것, 둘째,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 셋째, 배상 등 법적 책임 이행, 넷째, 재발방지를 위한 역사교육 등임
  - 한일장관회담에서 '불가역적', '최종적' 해결이라며 합의한 것은 이런 요구와는 거리가 먼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내용
  - 이번 협의문에 '도의적 책임'이라는 글자를 뺐지만 '법적 책임' 명시하지 않았고, 총리의 '직접적이고도 공식적인 사죄' 아닌 외무상을 통한 '간접적 사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역사교육 의무에 대한 언급도 없었음
  - 공식적인 '배상'등 법적책임을 이행하는 것 아니라 단순히 '지원' 하겠다는 얄팍한 꼼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러한 협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못 박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데 합의
  - 협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 지원단체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음
- **정부 '합의' 이후 '화해치유재단' 통해 회유·종용 등으로 무리하게 합의금 지급 강행해 논란**
  - 정부는 국민적 반발에도 출연금 조기 지급 통해 한일정부간 합의를 불가역·최종적으로 마무리하려 하고, 일본군위안부 생존피해자들은 가해국인 일본보다

우리정부에 의해 더 큰 갈등과 상처 겪고 있는 상황

- '17년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전시 성폭력 근절'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역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사업 뿐 아니라 국외자료 조사, 학술 심포지움 등 기념사업 관련 예산 삭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문제는 여성의 인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라는 역사적 사실의 인정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여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 교육 등 주요 해결 과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재협상 추진 필요

여성을 도구화하는 잘못된 '저출산 정책'

- 최근 행자부 '대한민국 출산지도' 관련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만 여긴다는 비판 심화,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심각함에도 정부의 대책은 본질 벗어나 있고 실효성 부족, 무엇보다 저출산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평등문제에 대한 인식 희박
- 우리나라 초저출산현상 장기화,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따르면 자녀 출산 및 양육 자체가 부담으로 인식되는 경향 강하며, 실제 생활에서도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일가정양립 곤란 등으로 자녀 출산 억제 경향 뚜렷
-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직장인의 '빚내서 사는 인생'에 대한 불안감 해소해줘야 저출산 문제 해결, 아이들이 미래에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생각 들도록 양극화 해소, 성평등 실현, 경제민주화 등 통해 보다 좋은 사회 만드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

교문위원회 (교육 분야)

수석전문위원 **심연미**

1 총평

박근혜 정권 4년 국정농단, 역사농단으로 점철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밝혀진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임기 4년 내내 역사농단을 자행됨
- 정권 내내 친일독재미화를 위한 역사왜곡 시도
  - 박근혜정부는 2013년 친일독재미화역사왜곡을 담은 교학사교과서를 검정합격시킴
  - 박근혜정부는 교학사교과서의 검정합격 취소 사유가 수없이 발생해도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교학사 교과서를 밀어붙였으나, 교학사 교과서는 일선학교에서 채택률이 0%로 퇴출당함
-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 박근혜 정권 임기내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기 위해 헌법,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국무총리 훈령 등 위법을 자행하며 변칙적, 졸속, 깜깜이, 꼼수, 누더기 교과서를 만듬
-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가 심판받았으나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을 위해 온갖 꼼수 자행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정유라 이대 특혜 제공 등 교육의 공정성 저해

- 최순실은 정유라 특혜 입학과 학사관리를 위해 비선실세 권력을 행사
- 이대 일부 교수들이 개입된 정유라 학사관리 특혜 제공

- 2015년 1학기~2016년 여름학기까지 8개 과목의 수업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출석대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학점 인정
- 이대는 정유라를 위해 학칙을 개정하고 소급적용까지 하면서 특별 관리

- 이대는 정유라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8개 사업에 선정됨

대선공약 줄줄이 공수표, 공약 이행 의지 실종

- 대선 공약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고 교육개혁 실종
- '만0~5세 누리과정 예산 국가책임'을 공약했지만 정권 4년 내내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국회가 주도하여「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설치,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예산 8,600억원을 국고로 편성하면서 갈등과 혼란 해결
- 고교 방과후학교 무상화,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 경감 등 공약은 이행하지 않았고, 초등온종일돌봄교실,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자료 활용 대입 상담 제공, 기숙사비 인하 및 기숙사 수용률의 공약은 대거 후퇴

공약했던 행복교육은커녕 "교육고통"만 안겨준 4년

- 정권 4년 내내 대선공약 대부분 실종되고 교육개혁은 추진된 게 없어 교육개혁을 평가할 수 없는 낙제점
-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으나 아직도 세월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 학생 대형 참사가 줄을 이은 4년

* 2013년 7월 태안 안면도 해병대 캠프 사고로 학생 5명 사망
*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10명의 대학생 사망
* 2014. 4. 16.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의 학생, 교사, 일반인 사망

- 불행한 교육
  - 박근혜 정권 내내 학생1인당 사교육비 증가
  - 어린이·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지수는 6년째 OECD 국가중 최하위,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중 1위 등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함

초중등교육정책은 엇박자, 오락가락

- 중학교 1학기 동안 진로탐색을 하는 자유학기제를 추진했지만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떠 넘겼고, 특목고, 자사고 등 선발권을 갖고 있는 특권 학교들은 유지해 자유학기제의 지속성과 효과 미지수
- MB의 과도한 경쟁교육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지속
  - MB정권의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의 '고교서열화' 정책 그대로 유지, 2016년 과고, 외고, 자율고의 학생수는 2007년의 5배 증가
- 대학 수능은 2년 연속 출제 오류라는 사상 초유의 사고 발생, 정부의 무능 탓으로 국회에서 수능피해자구제법까지 통과시킴
- 대입제도도 현재 고교 1, 2, 3학년생 모두 다른 수능을 치를 정도로 오락가락

고등교육정책은 시장화와 관료적 지배 심각, 비리 사학은 방치

- 대학구조개혁을 내세우면서 정원감축에만 초점을 두어 기초학문 등이 축소되고 대학의 시장화 가속
- 대학평가를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면서 대학 자율 침해
- 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 임용 제청을 명백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거부하면서 대학 행정 장기간 공백 상태
- 상지대 등 비리사학 문제 여전히 심각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 失政

(1) OECD 국가 중 한 곳도 안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임

- 교육부는 2013년 친일독재미화역사왜곡을 담은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합격시켰고 검정합격 취소 사유가 수차례 발생해도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교학사 교과서를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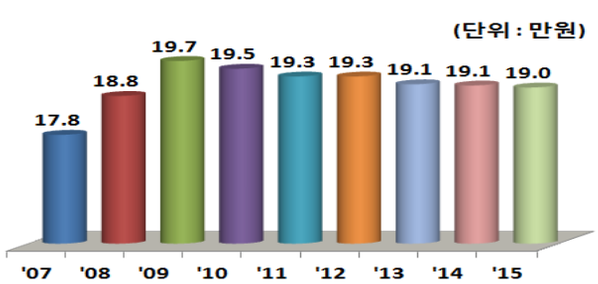
- 정부 여당은 일선 고교에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로 나오자 한국사 교과서 국정교과서 전환 검토, 교육부는 편수국까지 부활
- 친일독재역사왜곡의 교학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서 외면당하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이에 대해 전국의 역사학자, 교사, 시민단체, 학부모, 학생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국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 박근혜 정권 임기내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기 위해 헌법,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국무총리 훈령 등 온갖 위법을 자행하며 변칙적, 졸속, 깜깜이, 꼼수, 누더기 교과서 제작
- 박근혜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해 임시정부 법통 부정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혁명 공약 등 미화 ▲박정희 정권 독재 정당화 ▲위안부 학살 은폐·축소 등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로 드러남
-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 역사교과서가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검정 혼용이라는 꼼수를 쓰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까지 강행했으나 학교현장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외면당함

(2) 박근혜 사교육비 부담 낮추기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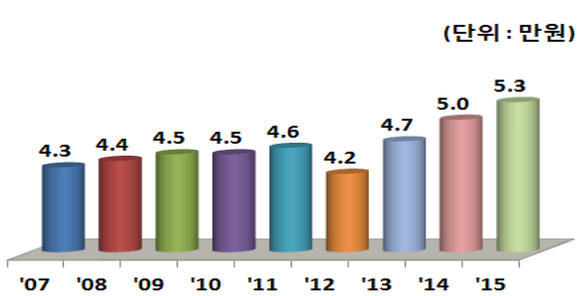
- 박근혜정부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공약했지만 박근혜정부 내내 학생 1안당 사교육비 증가

*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22.2만원('07) → 24.2만원('09) → 24.4('15)
* 박근혜정부 3년 연속 초·중·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

일반교과 사교육비 추이



예체능 교과 사교육비 추이



(3) 대학입시 간소화 대신 죽음의 헥사곤(육각형) 전형 초래

- 공약 내용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반열비율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학교공부만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
- 대학입시 간소화 대신 죽음의 헥사곤 전형
  - 내신(학생부 교과 성적), 수능,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6마리 토끼를 잡아야 함(한겨레. 2016.317)
  -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비교과 활동으로 교내상 수상경력,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교과영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해야 하므로 최악의 스펙쌓기 초래

(4) 대학구조개혁으로 대학 자율성 침해

-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고 대학정원 축소에만 집중해 대학교육의 질과 상관없이 추진됨
- 대학구조개혁의 평가지표가 대학의 유형, 지역적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아 기초학문 위축, 지방대학 축소 등으로 이어짐
- 대학구조개혁을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면서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고 고등교육의 황폐화 초래

(5) 대학구조조정의 수단, 졸속 추진의 대학재정지원사업

-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안은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거의 해마다 변경되면서 사업의 일관성 상실
  -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을 보더라도 CK, 프라임, 코어사업 등의 예산은 축소되고 ACE사업과 개인기초연구지원 예산 등이 확대
- 프라임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등을 신설하면서 사업공고부터 대학별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이 3개월에 불과하는 등 졸속 추진

- 2016년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은 졸속추진으로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아 이대 사업 선정이 취소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가 정부의 정책유도성 평가에 치우치고 대학구조개혁 수단으로 연결시켜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고 대학이 정부의 성과주의의 희생양이 됨.

3 박근혜정부 공약 미이행, 파기 실태

(1) 0~5세 무상보육·교육 국가 책임제

미이행, 파기 실태

-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전가시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토록 하면서 법률은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만 개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 위반

- 중앙정부가 정권 4년 내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국고로 편성하지 않아 국회에서 예비비로 편성해 보육현장의 갈등과 혼란 해결
  - 2017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국회가 주도하여「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예산 8,600억원을 국고로 편성

(2)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미이행, 파기 실태

- 공약 :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도입,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연차적 시행,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 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학교 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을 공약했지만 예산은 2014년 국고 일부를 반영한 것 외에는 시도교육청에 전가
- 학교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은 정권 출범후 국정과제에서 삭제
- 박근혜 정권 3년간 방과후학교비 총 수입액은 9천 4백억원으로 2012년에 비하면 2015년 무려 34% 부담 증가

(3) 고교무상교육

미이행, 파기 실태

- 공약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 100% 무상, 「교육기본법」개정 및 관련 예산 반영
-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음.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2013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재정계획은 담기지 않아 선언적 내용에 불과

(4) 기숙사비 인하 및 기숙사 수용율

미이행, 파기 실태

- 공약 : 기숙사수용률을 현재 18.3%에서 30.0%로 확대, 사립대 기숙사비 20~30% 인하 유도
- 공약과는 달리 국정과제에는 “사립대 공공기숙사 건립지원, 행복기숙사 및 학생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확보 및 건립지원”과 같이 기존에 정부와 사학진흥재단 등에서 추진해오던 정책만을 나열, 구체적인 목표치는 사라짐
- 223개 대학의 기숙사를 집계하여 분석한 결과 2인실 기준 월 평균 기숙사비는 2013년 179천원에서 2015년 187천원을 훌쩍 넘었고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기숙사비가 오른 대학은 161곳으로 대다수를 차지, 내린 곳은 10곳에 불과 (오영훈의원 국감자료. 2016)

(5)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미이행, 파기 실태

- 공약 :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 공약 폐기에 대한 사과 한 마디없이 공약 실종
-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공약도 미이행

교문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분야)

수석전문위원 **김영훈**

1 총평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원천 문화체육관광 행정

- 헌정 이래 대한민국 최대의 게이트 사건인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사건은 정부와 민간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역사적 범죄 행위임이 자명할 것임
  - 더욱이 금번 국정농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조직을 활용, 권력의 최상위층인 청와대부터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의 공무원들까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더하고 있음
  -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자신의 비선실세 몇 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이들이 없으면 국정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던 점은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적 자괴감마저 들게 하고 있음
- 그동안 박근혜정부의 문화체육관광 정책추진은 야당과의 대화를 단절한 채, 그들만의 리그를 추진하였으며 겉으로는 야당의 의견을 듣기는 하였으나, 종국에는 마이동풍(馬耳東風)식 정책추진을 했던 경향이 있었음
  - 이러한 문체부의 정책추진은 결국 최순실의 개인 사욕을 위해 이용당했거나, 솔선수범 했다는 반증의 결과임
  -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의 원천인 문체부는 김종덕 장관, 김종 차관,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범죄적 전횡을 하부 공무원들이 여과 없이 실행한 데 대한 산물일 것임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묵살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정관주 제1차관 등 박근혜정권의 막강 실세와 문체부 최고위층들이 주도한 것으로 특검에 의해 밝혀지고 있음. 이는 박근혜정권의 봉건시대의 전제주의적 사고 발상으로 자신들의 영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비판적 문화예술인들은 정부 지원이라는 '자금'을 매개로 졸렬하게 압박한 결과물 일 것임
  - 또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창작자의 작품 활동을 지원해야 할 문체부가 정치 검열과 문화계 통제 및 도구로 악용돼, 어떠한 여과 장치도 없이 그대로 자행된 점은 조직의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임

박근혜정권 내내 문화행정기관의 잡음

- 유진룡 전 장관의 불명예 퇴직과 대통령이 일선 국·과장 사퇴 종용
  - 집권시작과 함께 문체부 인사 지연, 전직 장관의 청와대 문체부 인사 청와대 개입설 주장 등 문화행정 분야의 인사 파행이 지속되었음
  - 야권·문화계와 소통의지를 보이며 문화행정을 총괄했던 유진룡 전 장관은 세월호 사태 이후 박근혜대통령에 의해 사퇴 종용을 받았으며
  - 승마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는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게 유리하게 조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일선 체육국·과장을 '나쁜사람'으로 매도 사퇴를 종용하였음
  - 이는 최순실이 문체부를 장악하려고 김종차관을 필두로 김종덕 전 장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인사를 단행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
  - 더욱이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할 문화예술, 영화 분야 등에 있어 정권 비판적인 작품에 대한 속가내기 작업 등 문화예술의 이념적 잣대 적용으로 인한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급기야 문체부 국장급 실무자가 국회 상임위 도중 회의를 여야 정쟁으로 몰고 가야 된다는 메모를 차관에게 전달하다 발각돼, 여야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사안은 문체부 전체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할 수 있음

- 창작과 표현 등에 있어 이념적 독립성을 추구해야 할 문체부가, 스스로 이념적 잣대를 내세워 문화행정을 혼란케 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은 필요할 것임

국회의 임무를 망각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헌법적 사명이 있음에도 교문위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순실 사건을 지적·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박근혜대통령을 옹호하는 해바라기식 발언을 서슴지 않았음
  -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던 초기, 새누리당의 야당의 충고를 듣고 국정 견제에 힘을 실었다면 지금과 같은 국정농단은 막았을 수 있었을 것임
  - ㄱ의원 : 정유라의 승마협회 특혜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에게 그 선수는 유망주라며, 정유라를 찾아가 사과해야 한다고 호통
  - ㄴ의원 : 악성루머로 장래가 촉망되는 1급 승마선수가 인격 모독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 ㄷ의원 : 역대 대통령마다 재단을 만들어 후원금을 받았으며 누구보다 깨끗한 정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대통령한테 미르 재단 가지고 이렇게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등등

문화재정 2%달성, 공약 파기 및 뻥튀기 문화예산

-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논의된 '문화재정 2% 달성 연차계획'을 보면 박근혜정부 임기말인 2017년까지 미래부, 방송통위원회 일부 분야를 포함 1.95%로, 당초 공약 2%에서 후퇴하였음(정부재정 400조)
  - 미래부, 방송통신 분야를 제외한 '문화부+문화재청'으로 본다면 더 낮아져 1.86%에 그치고 말 것임. 금액으로 보면 1.95%⇒2,000억 / 1.86%⇒5,600억이 문화재정으로 덜 채워질 것임
- 2015년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분야 예산 현황을 보면
  - 방송통신기금 관리비, 사업운영비, 해외IT지원센터 운영, 개발은행 협력사업, 디지털방송수신환경개선, 시청점유율 조사, 방송분야시상 등 대부분 세부사

업이 문화예산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 성과 뻥튀기에 해당함

- 문화재정 2%는 복지예산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선진문화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최저수준으로 보고 있음. 이에 양당은 문화재정 2%를 각각 문화공약에 포함시켰으나 현 정부는 문화재정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부풀렸을 뿐더러, 재정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대책을 내놓았음

개선되지 않는 낙하산 인사 및 실효성이 의문인 문화산업 정책

-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일부 기관장을 대선캠프 인사 및 정치인들로 임명, 지난 정권 때부터 문제가 되어온 낙하산인사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박근혜정부는 게임산업을 5대 핵심콘텐츠로 성장시키겠다고 대선 공약 등에서 수차례 언급했으나 실상은 업계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각종 규제 대책을 여과 없이 내놓음으로 인해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내수시장의 뒷받침을 저하시키고 있음. 특히 국회에선 여당 대표까지 나서 게임을 마약 등과 함께 4대악으로 규정하는 등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에 어폐가 있음

국민의 문화향유권은 제자리 걸음

- 문화 공급자인 문화인의 권리향상을 위한 정책은 일정부분 진전이 있다고 하겠으나, 문화 수요자인 국민의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정책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음
- 오히려 국민들의 실질적 문화혜택 정책인 바우처사업은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등 3개 바우처가 통합되어 시행됨에도 획기적인 예산 확대가 진전이 없어 사실상 사업 후퇴로 볼 수 있음. 스포츠강사사업 또한 부실한 사업 수립 및 수요예측 실패로 스포츠강사가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무시를 하고 있음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 失政

(1) 최순실 국정농단의 시발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특혜

현황

- 대기업 강제 모금
  - ■ 미르재단 486억원, K스포츠재단 288억원 등 총774억원의 기부금을 불과 몇 일만에 대기업에서 모금(약정서 상 / 실제 모금은 2개월 소요)
  - ■ 모금과정에서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경련에 지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주도로 회원사 대기업에 할당
  - ■ 대기업 간부 등은 언론 인터뷰에서 강제 모금이었음을 증언
  - ■ 문화예술위원회 이사이자 경총회장인 박병원(포스코 사외이사)는 포스코가 미르에 30억원을 낸다고 했는데 이사회에 부결 못 시켰다고 문예위 회의시 발언
  - ■ 두 재단 출연 대기업 기업 회장 사면 등 권력형 민원 있어
  - ■ 박근혜 대통령 기업인들에게 문화·체육 투자 확대 권고
  - ■ 안종범 전 경제수석, 재단 설립·모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자신의 변호인에게 진술(최순실 → 박근혜 대통령 → 안종범 수석 →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 대기업 할당)
  - ■ 이후 안종범 수석은 박근혜대통령이 재단설립, 기업 모금을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
- 허위문서, 초고속 설립허가 및 등기 특혜
  - ■ 문화체육관광부
    -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창립총회 회의록 허위 작성 묵인
      - • 문서 양식, 9개항의 회의 안건, 사회자 및 참석자 발언 등이 똑같음.
      - • 발언자 및 회의에 참석한 대기업 임원 등 “참석한 사실 없다, 모르는 일이다” 라는 증언. 결국 창립총회 회의록에 대기업 임원 이름이 도용.
      - • 창립총회 회의록은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의 필수 문서로 도장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인 점을 감안하면 문체부의 직무유기 부분이 있음.

• 두 재단의 보통재산 목록 상 집기 및 비품 항목 수량 금액까지 모두 동일 허위 근거자료 농후

- 초고속 설립허가 및 등기 완료 특혜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평균 20일 정도가 소요되나 두 재단은 하루 만에 일사철리로 허가 진행.
  • 신청결재와 함께 법인설립 허가 검토 및 보고서까지 마침.
  이 과정에서 재단법인 설립의 필수 항목인 장관 직인이 찍히지 않은 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

■ 기획재정부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부금단체추천서에 장관 날인 없는 서류 인정 특혜
  • 2015년11월27일 문체부가 미르재단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을 받기 위해 기재부에 기부금단체추천서를 제출하면서 장관 날인이 없는 추천서를 인정. 12월24일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

■ 법원

- 비영리법인 평균 등기처리는 평균 2일인데 반해, 미르재단은 단 6시간만에 완료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비선실세 주도**
(실질적 소유 미르재단 ⇒ 차은택/K스포츠재단 ⇒ 최순실)

■ 미르재단 : 실질적으로 차은택이 주도. 대학원 사제간인 김형수 전 이사장, 지인인 이성한 전 사무총장, 최순실 지인인 김영석 전 이사 등 핵심 인물의 인선에 개입

■ K스포츠재단 : 실질적으로 최순실 주도. 최순실 단골 스포츠마사지센터원장인 정동춘 전 이사장 취임
  •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 최씨 모녀 수행비서 역할.

■ 두 재단 박근혜 대통령 사저와 1㎞ 이내 위치. 퇴임 이후 활동 의혹.
(미르재단 ⇒ 차은택 / K스포츠재단 ⇒ 최순실)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국가사업 특혜**

■ 대통령 순방시 해외문화행사인 태권도 시연 행사가 국기원에서 K스포츠재단의

태권도 시범단으로 변경. 전례 없이 설립 3개월도 안 돼 국가 중요행사에 선정

-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재단, 설립한지 1년도 안되고 실적도 없는 미르재단과 한식문화 세계화 업무협약 체결. 이 과정에서 미르재단은 임대료 특혜 요구
- 외교부 ODA사업의 일환인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미르재단 참여. 당초 계획보다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농림부의 K-meal(개발도상국 쌀가공 식품) 사업에 미르재단 선정
- 한-이란 간 문화상업시설건설(K-tower)프로젝트 양해각서에 미르재단이 주요 사업자로 선정
- 프랑스 상공회의소 미르재단은 한국정부가 주도하고 대기업이 후원하고 있다고 소개

미르·K재단 출연금 종용 내사 중 청와대 이석수 특별감찰감 사표

-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은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두 재단의 재원마련 대기업 출연 종용 비위 첩보 입수, 내사 중 수사기밀 누설 논란으로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감 사표 제출. 내사는 중단
-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수석 등 특감 활동에 대한 불만표출 의혹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개요

2015, 2016년 교문위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에 의해 밝혀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 결국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였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정의 :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시국선언, 문재인·박원순 야당 공직후보자 지지선언 등을 한 문화예술인 9,473명의 명단을 작성해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조직적으로 배제한 사건

-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명
- 2012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예술인 6,517명
- 2014 박원순 시장 후보 지지선언 1,608명
- 2015.5.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인 594명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 사건일지**
  - 2015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 및 작품 지원 사업에 정권 비판적 작품을 낸 작가 등에 대해 조직적 지원 배제 지적. 이 과정에서 문예위 직원이 심사위원에게 윗선을 언급하며 블랙리스트를 언급
  - 2016년 국정감사에서 2015년5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당시 권영빈 위원장은 우리가 심의, 선정하면 리스트에 따라 된다, 안된다'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등의 발언.
    - 당시 조윤선 장관, 블랙리스트 존재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
    - 새누리당 염동열, 전희경 의원 등 블랙리스트 관련 적극 정부 옹호. 리스트 중 지원 받는 사람 있다. 이것은 화이트리스트다. 라고 발언
  - 2016.10.12. 한국일보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9,473명 명단 공개
  - 2016.11.7. 한겨레 보도. 복수의 전·현직 문체부,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 증언.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2014년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 정관주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작성을 주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통해 문체부로 전달. 문체부 오진숙사무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달
  - 2016.11.8. 조윤선장관, 정관주차관 부인. 해당 언론사 법적 대응
  - 2016.11.9. 동아일보 보도. 2015.2월 임명된 당시 박민권 제1차관, 하달 명단 대응에 소극적, 전격 경질.
  - 2016.11.9. 경향신문 보도. 문체부 예술경영지원센터에도 블랙리스트 하달
  - 2016.11.10. 교문위 민주당 국회의원, 조윤선 장관·정관주차관 사퇴 및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발언과 특검 수사 착수**
  - 27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언론사 인터뷰에서 '퇴임 직전 2014.6월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고, 김기춘 비서실장 지시라면서, 당시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전 문체부1차관)이나 김소영 비서관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되었으며,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과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전 문체부1차관)을 구체적 작성자로 지목'하였음.
  - 특검, 조윤선 문체부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자택 압수수색(직권남용 권리행

사방해). 정관주 전 차관 조사

- 고 김영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문화예술계 좌파에 대응하라는 등 지시 사항 직시

검토의견

- 문체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실체가 결국 특검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음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우리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지적, 문체부 등 전현직 관련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사화 되었으며, 언론에서도 그러한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돼 의혹이 진실이 될 수 있는 제2의 최순실 사태로 비하될 수 있음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창작자의 작품 활동을 지원해야 할 문체부가 정치검열과 문화계 통제 및 도구로 사용된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떠한 여과 장치도 없이 그대로 자행된 점은 문체부 존재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임이 자명할 것임
  -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재정 지원이라는 졸렬한 방식으로 탄압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며, 국민들의 누려야할 문화향유를 동반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임이 자명할 것임

(3) 영화진흥위원회, 불법시위참가단체 보조금 지원 제한

개요

- 영화산업의 지원과 진흥 정책을 맡은 문체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불법시위 참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을 버젓이 내부규정에 두어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짐
- 전재수 의원실이 입수한 영진위의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보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보조금을 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한 것임

- 보조금 지급의 독소조항은 2015.10.29.일자로 개정된 규정에 반영되었으며 개정 전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검토의견

- 보조금 지급 수단의 악용한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제재는 이명박정권 때부터 자행되었던 사안임.
  -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부터 '기금운용계획 지침'을 시행하면서 불법시위를 주최·주도·적극 참가 또는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보조금을 집회 등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였음
  - 더욱이 당시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는 기재부의 관련조항 준용은 물론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에게 '불법폭력시위 불참확인서'까지 강요한 사실이 있었음
  - 문화재청 또한, '문화유산 방문교육 사업' 지원서에 '시위불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은 물론 '불법시위 참여단체는 신청불가'라는 지침을 세우기도 하였음
- 이후 이명박정권 때의 무개념 문화정책은 국회의 지적과 문화예술단체들의 저항으로 시정되었음
-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이보다 한술 더 떠, 소위 '블랙리스트'란 것을 만들어 놓고, 문화예술·영화 전 분야에 걸쳐 지원금 배제를 암암리에 자행해 왔음
- 금번에 밝혀낸 영화진흥위원회의 '불법시위단체 보조금 제한'은 문화융성을 표방한 박근혜정권의 어두운 문화정책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또 다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 더욱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문화예술·독립영화 등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보조금 지원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치졸한 행태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며, 청와대 해바라기로 전락한 해당기관장과 일부 간부는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임

- 영진위의 경우 이미 '예술영화 지원사업' 방식의 변경을 통해 영진위가 선정한 예술영화에 한해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정부 비판적인 영화검열에 들어갔음

(4)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상 언론중재대상 확대 개정 추진 문제

개요 및 검토의견

- 언론중재위원회가 디지털 미디어의 피해구제 확대 등을 포함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의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정안 내용이 언론악법에 준하는 광범위한 언론 위축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됨
- 개정안 배경
  - 인터넷언론사 및 기사 배포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네이버, 다음 등) 등이 메르스사태, 국정교과서 사태 등 정권 비판적 기사를 생산, 배포하는 것에 대한 현 정부의 우려 및 댓글 등을 통한 확산의 미연 방지
  - 지면지는 대부분 통제 가능한 보수신문이 주도적인 반면, 인터넷언론 등은 진보적 언론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 및 기사가 유통되는 포털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의도. 일명 포털 길들이기 작업의 일환
  - 최근 국민들이 접하는 언론 매체가 지면지, 방송 보다는 인터넷이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조사가 나타난 것도 언론 통제 움직임의 한 사유일 것임
- 언론중재위원회 문제
  - 현 언론중재위는 예산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액 편성되고 있으며 관리·감독은 문체부에서 관할. 이로 인한 국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 언론중재위 위원은 문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언론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준사법적 독립기관의 독립성에 문제 발생. 현 언중위가 법조인, 언론인, 교수로만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음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제점

- 제2조 “언론보도”의 정의 개정 : 제2조 언론보도 정의를 수단여하를 불구하고 공공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내용뿐만 아닌 정보 제공이나 논평, 사설까지 중재 대상으로 확대 됨. 이는 언론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논평에 대한 다양성까지 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어,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며 언론보도 피해자 보다는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할 소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제5조제2항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삭제 : 현행 제5조는 언론보도가 공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뤄진 경우 사회상규가 반하지 않은 한도에서 보도에 대한 면책을 주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이를 삭제하면 다양한 언론보도의 주제를 위축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세월호사건과 같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심층보도 및 다양한 취재의 경로 등이 차단될 수 있음
- 언론중재위 설치와 관련 전파, 검색의 분쟁조정을 추가하여 게시글, 댓글에 대한 침해사항도 중재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사안일 것임. (개정 제7조1항)
- 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개정 제17조3)과 관련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사댓금, 복제(펌글), 기사검색까지 확대하는 것은 삭제청구권의 범람으로 언론사의 보도활동이 위축될 수 있음. 또한 댓글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다분함
- 또한, 제17조3의제1항은 인격권 침해를 받은 자는 침해를 야기하거나(기사생산자, 댓글자 등) 침상상태를 관리하는 자(포털등)에게 침해 배제나 피해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2호의 허위사실에 대한 방지요구의 경우 신문법에서는 포털 등이 언론사의 동의 없이 뉴스기사를 수정, 삭제할 수 없어 양 법이 충돌될 것임.

  3호는 인격권 등이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고 방치하면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있으나, 내용이 추상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어떤 행위인

지 명확하지 않음

- 이미 민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보도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의 보호가 가능한 상황에서 해외 입법례도 없는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기사 삭제권까지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 함

미방위원회 (과학기술 분야)

전문위원 김길돈

1 총평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달성 불가능 예견된 일

- 국가 R&D 전략 수립 및 예산 배분·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기능이 역대정부 중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선수 심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미래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추가로 신설하였지만 옥상옥 구조만 초래하고 성과 없었음
- 게다가 과학발전을 위한 인사가 아닌 보은차원의 비과학적인 낙하산 인사가 만연했던 박근혜정부
- 과학기술 우대 정책을 기대했지만 정작 우수 연구자에 대한 대우에서는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소홀하고 홀대. 정상급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젊은과학자상'과 '한국과학자상'의 상금은 줄고, 격도 낮추었음
- 결국 이런 구조에서 성공이 예견된 연구개발 위주로 R&D가 진행되어 양적성과는 과학선진국에 뒤지지 않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진한 상황임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 失政

(1) 과학기술경쟁력 국가경쟁력과 같이 하락추세

- 2008년 6월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IMD 세계경쟁력2008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가경쟁력은 31위(총 55개국중에서)였으며 그

중 과학경쟁력은 5위, 기술경쟁력은 14위에 기록

- 2016년 5월 발표된 2016 IMD 세계경쟁력 연감 결과 우리나라 전체 국가경쟁력은 29위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과학경쟁력은 오히려 하락한 8위에 랭크되었음. 기술경쟁력은 15위였음. 특히 16년 평가항목으로 신설된 GDP 대비 지식 및 기술집약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30위에 그쳐 세계 최대의 연구개발 투자비중에 걸맞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음
- 15년 연구개발 활동조사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4.23%로서 14년에 이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이 하락추세인 것은 그간 제기되어 왔던 과학기술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박근혜정부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2) 박근혜정부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는 역대 정부 중에서 최악

- 국민의 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에서 참여정부 및 MB정부의 국과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국가 R&D 기획·조정을 위한 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었으며, MB정부 후반의 국과위는 독립 행정위원회로서 개별 부처와 독립된 형태의 위상을 갖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박근혜정부의 국과심은 국가 R&D 전략 수립 및 조정 기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게다가 국과심과 미래부의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한계도 여전히 존재. 미래부 제1차관 하에 국과심 지원 조직인 과학기술전략본부와 사업집행 조직이 함께 존속하여 선수심판론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
- 또한 R&D 예산의 배분 조정체계도 기재부와 미래부로 이원화되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체계적 중장기 포트폴리오 및 전략적 로드맵에 따른 배분 · 조정보다는 주요 부처 간 힘겨루기와 나눠먹기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잡을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
- 부처 간 R&D 사업의 구조적 중복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R&D 거버넌스의 한계로 인해 정부 R&D 예산 중복 조정은 극히 미미하게 진행되었

음(2015년 예산의 2.6%인 3,264억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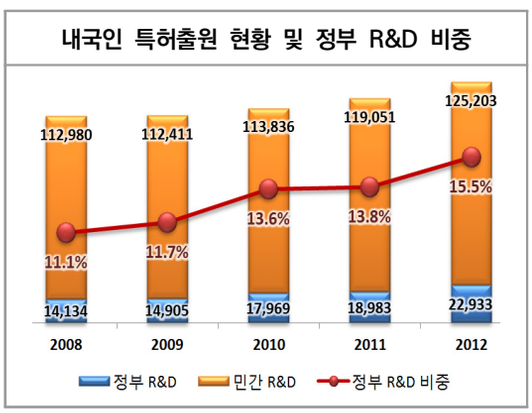
- 현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R&D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부처로 평가되지만, 실제 과학기술분야의 집행기능은 과거 과학기술전담부처에 비해 미약하여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능이 분산되어 있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부처 간 이해충돌에 따라 국가 R&D 정책의 전주기적인 집행기능은 창조경제 성과 달성에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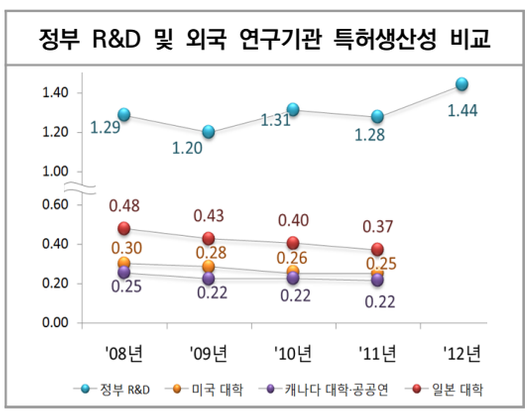
(3) 과학기술 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낙하산인사만 보낸 정부

- 박근혜정부의 과학계인사는 다른 어느 정권보다 과학 자체를 위하기 보다는 정권 창출에 연관되어서 충성을 다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음
- 창조경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미래부의 초대 장관이었던 최문기 전 장관은 국가미래연구원의 초대 발기인으로서 대선 당시 1,500명의 과학기술인으로부터 지지선언을 만들어 낸 바 있음. 초대 장관으로서 창조경제의 모호함을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 인사로 중도교체되었음. 이외에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한성화원장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종국원장도 국가미래연구원의 회원이었음.
- 게다가 25개 정부 출연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초대이사장에 임명된 이상천 이사장은 영남대 총장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고 할 수 있음. 더욱이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시절에 비자금 조성사태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한 바 있는 결격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에 임명되었던 것임.
-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에 기초분야과학이 아닌 전자공학을 전공한 인사가 발탁되어 부적합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바로 김두철 원장으로 당시 최양희장관이 장관 취임 다음 날 공모를 마감했으나 재공모를 결정해서 선발된 인사임. 서울대 전자공학과 선후배 사이로 재공모를 결정하자 과학계 내부에서 김두철 후보의 내정설이 돌았었음.

(4) 국가연구개발의 질적 성과물 관련 지표는 여전히 부진

- 특허청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성과의 양적·질적 수준과 활용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양적수준은 세계적이지만 질적 수준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절실함





- 14년 정부 R&D예산으로 창출된 내국인 특허출원은 27,005건이며 전체 국내 특허출원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8%임. 또한 특허생산성은 1.53으로 12년 1.44에 비해서 증가하였음. 이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하지만 특허의 질적 수준과 활용도 면에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 등록된 정부 R&D 특허성과를 ① 특허품질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우수특허(특허품질지표, PQI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등록특허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특허)비율은 외국인의 약 1/7 수준에 불과하고 ② 온라인 특허분석평가 시스템(SMART)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약 16.4%만이 우수한 것으로 파악. 특히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성과 활용실적을 나타내는 연구생산성 비율(기술료÷연구비)이 미국의 약 5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음.

3 박근혜정부 공약 미이행, 파기 실태

GDP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비비율을 2011년 4.03%에서 2017년 5%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2015년 4.23%(2014년 4.29%)
  - 5%로 확대 공약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지금은 국가연구개발 비율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에 더 중점을 두고 혁신을 해야 할 시기임

정부출연연구소의 예산제도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각종 불합리한 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연구 자율성 제고

- 출연연의 자율성을 가장 침해하는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 반대로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지 못함
- 연구개발 관련 규정이 부처별 상이하고 복잡한 연구관리 규정·절차로 인한 행정 부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전혀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음

미방위원회 (방송정보통신 분야)

수석전문위원 **안정상**

1 총평

실패한 창조경제

- 박근혜정부는 전 세계가 추구하고 시대보편적인 정보통신 및 IT융합기술에 의한 융합형 산업 활성화를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모양으로 창조경제라는 포장지를 덧씌워 국민을 호도해 왔음
  - 결국 창조경제는 국민과 기업활동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박근혜대통령과 몇몇 추종 세력들만의 대국민 전시성·선전성 용어에 불과하였음
- 이는 지난 해 9월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44쪽에 달하는 대표연설문 속에서 단 한차례도 '창조경제'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23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시정연설에서도 창조경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허구였음을 확인시켜 주었음
-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한답시고 2016년까지 국민의 혈세를 무려 22조 1,084억 원을 썼음. 이는 이명박정부하의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예산임
  - 이 창조경제 예산은 현재 파악이 가능한 것만 산정한 것으로, 미래부의 창조경제 전담 부서인 창조경제기획국 예산 1,676억4,400만 원, 창조혁신센터 연계사업 3,793억2,300만 원, 창조경제 실현계획 사업 21조5,614억 원에 달함
  - 실제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창조경제예산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아까운 국민의 혈세가 4대강 사업과 다름없는 뜬구름 잡는 창조경제사업에 탕진한 결과를 초래

과거 역대정부와 비교되는 성장 후퇴

- **(김대중 정부) 정보(통신산업)화 - 초고속인터넷망 개통 → IMF 극복**
  -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1997년에 터진 외환위기의 충격과 여파가 한창이던(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시절 슬로건
  - 외환위기로 실직하거나 조기 퇴직자의 다수가 PC방을 열어 생계를 이어감 →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은 일종의 사회안전망 구실 역할 수행
  - IT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정책, 세계가 놀라는 IT 신화 창출
- **(노무현 정부) 자유화된 사회정치적 분위기 → 한류 등 대중문화 콘텐츠 및 온라인 게임 산업 발전**
  - 'IT-839 전략'을 통한 IT산업 집중 육성 →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2.6년(2003년)에서 1.6년(2006년)으로 단축되는 성과
  - 2005~2007년 디지털기회지수(DOI : Digital Opportunity Index) 3년 연속 1위, 2005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기술인프라 부문'에서 2위, 2006~2007년 미국 브라운 대학(공공정책센터)의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성과

※ 프랑스 르몽드지('06. 7), 한국은 IT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세계챔피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IT 신화의 숨은 원동력을 한국 정부'라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IT 지원정책을 높이 평가

-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 – 4대강 사업 - 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로 통합**
  - 4대강 정비사업 등 토건 분야 집중, 17대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정하였으나, 과학기술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통합하여, 독자적인 과학기술 정책의 추진 및 관리 동력 위축

※ 신재생에너지, IT융합, 로봇, 나노, 바이오 제약 등 17대 신성장동력 산업 지정

  -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도입('11.11월)으로 게임 산업 경쟁력 저하
  - 우리나라의 IT산업 경쟁력은 2007년 세계 3위에서 2009년 8위, 2009년 16위, 그리고 2011년 19위 등으로 매년 하락(연구·개발(R&D)과 비즈니스 환경, IT 인프라, 인적자원, 발전지원도 등을 감안한,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발표)

-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 미래부로 ICT 정책 통합(방통위 축소)**
  - 미래부로 규제와 진흥의 역할을 통합하였으며, 19대 미래성장동력 등 다양한 신산업 육성 방안 발표 하였지만, 산만한 열거 수준이라는 평가

※ 추진 Items : 창조경제 - 창조경제혁신센터 - 창조비타민 - K-ICT 전략 - SW중심사회
※ AI, 웨어러블, 스마트자동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발표

  - ICT 기반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전통 산업과의 '갈등' 최소화 측면으로만 접근하여 그 실효성은 낮음

※ 규제개혁 미진 사례 : 임산부(환자), 전기자전거(원동기), 택배차량 증차(허가제 → 신고제) 불허 등

-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 세계적 차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신호라 할 수 있는 큼직한 '혁신'이 잇따라 일어났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퇴보함**
- **또한, 이 시기에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 R&D 경쟁력 순위는 '09년 11위에서 '15년 19위로 곤두박질**
  -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연구개발(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4.29%, 2015년 4,23으로 세계 1위(OECD, 2016.12)이고, 절대 금액도 미국·일본·중국·독일·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 수준이며, 2016년 정부R&D 투자액은 19조원이 넘는 수준
  - 그러나 인공지능 투자액은 미국/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함

※ 미국은 2013년 세운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 전략하에 매년 30억 달러(약 3조 5000억 원)를 투자 / 일본은 인공지능 기반 로봇혁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5년부터 1000억엔(약 1조500억 원)을 인공지능 분야에 투입 / 한국은 '알파고 충격' 직후인 지난 3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분야를 포함하는 지능정보 산업에 5년간 1조 원 가량을 투자 계획 발표

- **우리나라 정부 R&D 성과의 사업화(기술료 수입을 결정) 성공률은 영국 70.7%, 미국 69.3%. 일본 54.1%이나 한국은 20%에 불과함**
  (현대경제연구원. '공공R&D, 창조적 혁신의 주최인가? 대상인가?' 2015. 2)
-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지적**
  - 스위스 연방은행(UBS) 발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이 스위스(1위), 미국(5위), 일본(12위), 독일(13위) 등이 상위권에 올랐고, 한국은 세계 25위, 중국은 28위

- 4차 산업과 연관된 상장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2006~2010년 연평균 9.7%에서 2011~2015년 1.8%로 하락하였으며, 하드웨어 및 장비가 19.8%로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집중도도 높은 수준 (현대경제연구원. '16. 8월)

- ICBM(IoT, Cloud, Big Date, Mobile)이 '10년 이후 매년 ICT 주요 트렌드로 언급되고 있는 것 또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방송, 신문 등 언론의 공공·공익성 침탈의 시대

- 지난 9년은 언론정책의 최악의 시대. 언론 잔혹사(殘酷史) 9년
  -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권이 저지른 언론탄압의 역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전히 언론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일삼고 있고,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야할 공영방송은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언론의 정권 눈치 보기와 권력의 대변자 역할이 극에 달하고 있음
  - 현재의 언론환경은 과거 박정희 군부정권, 전두환 신군부정권에 버금가는 언론통제, 언론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임
- 아직도 정부 여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정권 연장의 수단, 방패로 삼기 위해 현 방송사 사장과 합작하여 치밀한 공작을 획책하고 있음
- 방송법과 신문법이 선언하고 있는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만 준수하였다면 언론이 국민으로부터 비난받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임

미디어산업의 후퇴

- 2013년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으나, 말 그대로 발표에만 그쳤을 뿐 실행은 흘러간 옛 노래에 불과
- 지난 해 12월 기껏 내놓은 '유료방송활성화 대책'은 침체된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의 활성화 대책으로는 그 실효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음
-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 매출 감소, 반면에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광고 등은 증가

- 통신사업자들의 결합상품 공세에 따른 유료방송시장의 불균형적 구조 악화, 지상파방송이 돈벌이 수단화 및 일선 기자들의 광고영업사원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2 박근혜정부 집권 4년, 失政

(1) 소리없이 종언(終焉)을 고하는 '창조경제'

고개숙인 한국경제의 미래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일련의 정책 수행을 통해 잠재 성장률 향상을 목표 하였으나, 잠재 성장률은 도리어 하락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13년 잠재 성장률 3.7%를 '17년 4%까지 끌어올리려 하였으나, '17년 잠재 성장률은 2%대로 진입

※ "잠재성장률이 하향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2.8% 성장 전망은 잠재성장률 수준"('16. 10.1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ICT분야 경쟁력 지속 약화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평가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도와 경쟁력은 '14년 10위 → '15년 12위 → '16년 13위로 지속 하락

※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16년 정치·규제 환경분야의 순위는 34위, 우리나라 ICT 수출액은 '13년 1,694억불에서 '16년 1,625억불로 69억불 감소

-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도 역시 낮은 상황
  -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적응도는 대만(16위), 말레이시아(22위), 체코(24위)보다 낮은 25위(스위스 투자은행 (USB)-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국가순위, 2016 다보스 포럼)
- IoT(Internet of Thing)를 산업 제반 요인에 반영시킨 정도를 측정한 55가지 지표를 통해 국가별 준비상황도(네트워크 수준, 금융 및 정부정책, 연구개발, 테크놀로지 업체 및 기술 수준 등 포함)를 측정한 결과, 한국의 IoT 경쟁력은 100점 만점에 52.2점으로 전세계 12위에 머물렀음(2015. Accenture 분석보고서)

중구난방식 창조경제정책 열거

- 박근혜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창조경제를 위한 '~ 방안', '~계획', '~전략', '~대책'을 끊임없이 발표해 왔음
  -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국민이 체감할 수 없고, 성과를 내세울 수 없는, 대통령만 아는 '유령경제정책'만 열거하는데 그쳤음

• 2013년 2월25일 출범 후 창조경제실현계획 발표(6.5) • 창조경제타운 개설(9.30) •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11.12) •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출범('14. 1.13) • 미래성장동력 발국·육성계획 발표(3.7) • 출연(연)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 발표(4.23) •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15. 4.17) •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강화방안, 지능정보산업 발전 전략('16. 3.17)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계획 추진(6월 1차 발표, 10월 종합대책 수립·발표) •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 발표('16. 7.29)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16. 12.27) • 그 외에도 ICT R&D 산업 전략 / ICT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SW 혁신 전략 / SW 중심사회 추진 / 빅데이터산업 발전 전략 / 인터넷 신산업 발전 전략 등 등

(2) 창조경제의 상징,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빈손 추수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법적 근거 부실

- 당초 미래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34호)'[3]을 들고 있음
  - 그러나 이 규정이 위임명령이라면 상위법이 없는 것이고, 집행명령이라면 법률의 집행을 위한 행정입법(시행령)이므로 이 또한 집행할 상위법이 없는 것임
  - 즉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법적 근거는 없는 것임으로 이 규정에 의해 설치되

3) 제20조(창조경제혁신센터)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역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기관, 경제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2. 지역 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고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함

-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19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2015년 12월22일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를 신설[4]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근거라고 내세우게 되었음**
  -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는 2016년 6월2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5년도 예산안 및 2015년 12월에 통과되고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된 2016회계연도 예산안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34호)'에 의해 집행되는 편법이 그대로 적용됨
-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부합하지 않음[5]**
  -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법문화할 마땅한 법을 찾지 못해 고민한 끝에 결국 「과학기술기본법」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를 규정
  -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상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
  - 이 규정이 들어감으로 인해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 목적이나 기본이념이 퇴색되는 결과 초래
  - 그러나 제26조의4에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명칭은 찾아 볼 수 없고, 인위적으로 하위법인 시행령 제24조의3에서 지역별 전담기관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명명하고 있음
  - 이는 모법에서 명시한 바가 없고, 정의 규정에서도 명시하지 않은 '창조경제혁

---

4)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2015.12.22 〉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2015.12.22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신설2015.12.22 〉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2015.12.22 >

5)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신센터'를 하위법인 시행령에다 명시한 것은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가지 중에 하나를 지정할 수 있음[6]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기업들을 회유·압박하여 만든 전국 17개 센터만 지정하고 있는 것도 모순임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통령 치적 홍보용

- **박근혜정부는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마치 창조경제의 핵심 틀이 완성되고, 모든 경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처럼 과시하고 있음**
- **현재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은 대기업들이 각각 나누어 전담하고 있음**
  - 당초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은 지역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등 지역 내 유사·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운영비는 센터 설립과 일반 운영, 프로그램, 정책지원 등에 관한 예산은 지자체와 경제단체, 중앙정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함
  - 그러나 실제로는 대기업이 관리 운영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 대다수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각 센터의 법인 설립 자본금은 평균 100만 원)
- **처음부터 대통령 치적을 만들기 위해 개소식 행사나 내용 구성을 청와대가 주도함. 이는 각 센터별 주요 역점 사업계획 등을 담고 있는 개소식 보도자료가 총 17곳 중 14곳에 대해 창조경제정책의 주무기관인 미래부가 아닌 청와대에서 직접 준비하여 발표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음**
  - 결국 박근혜정부의 경제 슬로건인 '창조경제'의 랜드마크가 될 창조경제혁신

6)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2. 제1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본조신설 2016.6.21)

센터를 통한 대통령의 치적을 보여주기 위해 대기업을 끌어 들여 전국에 17개 센터를 만든 것에 불과함

新관치경제의 모델, 유신개발독재 모델의 부활

- 2014년 1월10일, 미래부는 4월부터 2015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17개 시·도에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막상 시작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련한 시설, 기술, 인력 부족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자 결국 대기업들을 강제동원하여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토록 하게 되었음
-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업들에게 예산 부담을 하도록 강제 할당('14. 09.02 국무회의, 「한국형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 제시)하자 정부의 감독하에 있는 대기업은 정권의 눈에 나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임
  - 이는 전형적인 관치경제요, 기업 목죄기 정책, 기업 줄세우기가 아닐 수 없음
  - 2014년 3월부터 시작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1전담식으로 대기업을 동원한 관치경제의 전형을 보여 주었음
  -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대기업의 자금을 동원하여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하는 新관치경제, 개발독제모델의 재현(再現)이라할 수 있을 것임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5개(대전, 세종-SKT / 대구, 경북-삼성 담당) 전담 대기업으로 하여금 기부금 및 프로그램(특화사업, 공모전, 해외진출 지원 등) 지원, 센터 건물 제공(대구) 등을 부담하도록 함
- 이 외에도 센터별 전담기업들은 그 센터와 관련하여 강제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및 융자 또는 보증을 위한 펀드 조성에 동원되어 그 규모는 총 조성액 1조7,384억3천만 원 중 7,328억 원에 이름. 이 중에서 박근혜정부에서의 조성된 규모는 6,078억 원 임
- 또한 AI분야 특화된 연구를 위해 '지능정보기술연구원'를 만들면서 7개의 대기업에게 각각 30억 원씩 출자하도록 하여 210억 원을 자본금으로 만들어 출범시킴

센터는 비정규직이 46.2%, '비창조확산센터'로 개명(改名) 필요

- 전국 센터에 채용된 총 234명의 직원 중 정규직은 126명(53.8%)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108명(46.2%)이나 됨('16. 8 기준)
- 일부 센터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더 많은 곳도 있음
  - 즉 전남센터는 정규직 1명에 비정규직 9명, 인천센터는 정규직 2명에 비정규직 9명, 울산센터 및 서울센터에는 정규직 5명에 비정규직 9명, 경기센터는 정규직 6명에 비정규직 10명, 경남센터의 경우는 정규직 6명에 비정규직이 9명, 충남센터는 정규직 5명에 비정규직 8명임
- 강원센터의 경우는 정규직은 아예 없고, 비정규직만 13명임
- 창조경제의 최선봉에 있다고 할 센터에, 자긍심과 의욕을 고취시킬 최소한의 조건인 정규직 채용은 외면한 채 값싼 노동력만 이용하고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는 불안한 비정규직으로 채워 놓은 이것이 창조경제센터의 민낯임
  - 창조경제를 주도한다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비창조확산(신)센터'로 전락했다는 실체를 확인해 주는 것임

센터장 연봉 1억400만원, 전체 업무추진비는 센터장의 품위유지비

- 각 센터별 센터장은 연봉이 1억400만 원(대구센터장은 1억1,4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이는 센터 실무 직원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임(2016년 기준)
  - 센터장의 업무추진비는 각 센터별로 300만 원(울산)~2,400만 원(충북)으로 정해 놓고 있음
  - 각 센터별 전체 기관업무추진비는 1,500만 원(경남, 세종)~3,000만 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음
- 그러나 울산센터는 센터장의 업무추진비가 명목상으로는 300만 원으로 가장 적게 책정되어 있지만, 기관 전체 업무추진비 1,600만 원 중 300만 원을 뺀 나머지 1,300만 원을 센터장이 언제든지 추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센터장이 전체 업무추진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됨

- 다른 센터로 마찬가지로 형식상 별도의 '센터장의 업무추진비' 명목을 정해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전체 업무추진비를 센터장이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특히 경남(1,500만 원), 세종(1,500만 원), 전북(2,000만 원), 충북(2,400만 원), 전남(1,860만 원), 제주(2,000만 원)센터는 기관 전체 업무추진비를 모두 센터장의 업무추진비로 책정하여 실질적으로 센터의 간부나 실무 책임자들은 업무추진비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음
  - 결국 센터 전체의 업무추진비는 센터장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됨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의 선봉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센터의 운영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센터장의 품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소요되고 있음
-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센터, 비정규직의 대우는 엉망인데 센터장의 연봉은 1억 원을 넘고 그기에 센터의 업무추진비를 실제로 센터장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것이 창조경제의 선봉대라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상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펀드 스토리는 "태산명동(泰山鳴動) 서일필(鼠一匹)"

1) 미완의 펀드 조성, 아직도 목표액 미달

- 청와대와 미래부가 대통령이 참석하는 거창하고도 야심차게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을 열면서 스타트업, 창조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각 센터별로 구체적인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출범 2~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펀드 조성과 집행(운용)은 빛 좋은 개살구였음이 입증되었음 (이하 '16. 8.26 기준)
  - 즉 '투자펀드' 조성은 전체 목표액이 8,316억 원 이었으나 실제 조성된 금액은 7,614억3천만 원으로 91.6%, '융자펀드'는 전체 목표액이 5,810억 원이었으나 실제 조성된 금액은 5,650억 원으로 97.8%, '보증펀드'는 전체 목표액이 4,920억 원이었으나 실제 조성된 금액은 4,120억 원으로 87.3% 달성에

그쳤음. 모두 목표액에 미달함

※ 총 목표액 1조9,046억 원 중 1조7,384억3천만 원 조성 (91.3% 달성)

- **일부 센터에서는 목표치에 턱없이 미달한 경우도 있었음**
  - ■ 인천센터의 경우 당초 투자펀드 목표액이 650억 원이었으나 실제 조성된 금액은 255억 원(조성률 39.2%)에 불과했고,
    - 전북센터의 경우는 투자펀드 목표액이 405억 원이었으나 실제 조성된 금액은 305억 원(75.3%)에 머물렀음
  - ■ 부산센터의 경우는 융자펀드 목표액이 800억 원이었으나 실제 조성된 금액은 640억 원(80%)으로 미달하였고, 투자펀드는 조성 목표액이 520억 원이었지만 실제 조성된 금액은 242억8천만 원(46.7%)에 그쳤음
    - 특히 보증펀드로 1,000억 원을 조성하기로 목표액을 잡았지만 전혀 펀드 조성이 되지 않아 zero 상태임

2) 정부 자체 분석 자료로 밝혀진 한심한 펀드 집행(운용) 현황

- **미래부에 펀드 운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지만, 지난 해 8월 말에 입수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간 운영현황'을 통해 조성된 펀드의 실제 운용(집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확인 결과 전체 조성펀드 중 실제로 펀드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투자펀드 '27.4%', 융자펀드 '21.2%', 보증펀드 '19.5%'에 불과하였음

※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간 운영현황'은 전국 17개 센터가 공통일반 지원 부문, 창업기업 육성 부문, 중소기업 혁신 부문, 펀드 운용 부문 등 9가지로 분류한 통계를 매주간 단위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으로 보내고, 추진단에서 전체 현황을 집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됨

- **그러나 이는 전체 조성규모 대비 집행 규모일 뿐이고 각 센터별로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그동안 정부가 엄청난 펀드 조성으로 창조기업, 벤처·중소기업들을 지원했다고 홍보해 왔던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음**
  - ■ 부산센터의 경우 보증펀드 목표액 1,000억 원 전부를 조성하지 못해 자동적으로 집행률은 zero이고,

- 대전센터는 융자펀드 150억 원을 조성하였으나 집행은 zero이고, 세종센터와 서울센터는 투자펀드를 각각 330억 원, 22억 원을 조성하였으나 역시 집행은 zero임

■ 펀드 집행률이 10%미만인 센터도 많음

- 투자펀드 부문에서 전남센터의 경우는 집행률이 2.7%였고, 융자펀드 부문에서는 전남센터가 0.22%, 울산센터는 2.2%, 제주센터 3.1%, 인천센터 4.1%, 충남센터는 6%에 불과하였음. 또한 보증펀드 부문에서는 전남센터의 펀드 집행률이 0.6%였음

■ 펀드 집행률이 10% 이상 20%이하인 센터도 적지 않음

- 투자펀드 부문에서 강원센터가 17.3%, 충남센터가 19%이었고, 융자펀드 부문에서는 강원센터가 10.5%이고, 보증펀드 부문에서는 광주센터가 18.6%였음

3) 1조7천억 원 펀드 중 실제 센터를 통해 조성된 것은 1조4천억 원에 불과

- **특히 정부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투자펀드' 7,614억3천만 원, '융자펀드' 5,650억 원, '보증펀드' 4.120억 원 등 총 1조7,384억3천만 원을 조성하였다고 함**

- **그러나 총 펀드 조성액 1조7,384억3천만 원 중에서 3,219억 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하기 前에 이미 조성되어 있던 것으로, 이를 각 센터로 배정시킨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조성된 것으로 포장시키고 있음**

  - 따라서 실제로 박근혜정부가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조성된 펀드 총액은 1조4,165억3천만 원 임

■ 즉 제주센터의 경우 2015년 6월26일에 개소식을 했는데, 1992년도에 조성되어 운용되어 온 '제주도 중소기업 지원기금' 300억 원(융자펀드), 2012년 5월에 조성된 '케이큐브 벤처투자 조합 펀드' 116억 원(투자펀드), 2013년 6월에 조성된 '카카오청년 창업펀드' 300억 원(투자펀드), 2014년 7월에 조성된 '다음청년투자조합펀드' 253억 원(투자펀드), 2015년 4월에 조성된 '아모레퍼시

픽중소기업상생펀드' 300억 원(융자펀드)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 대전센터의 경우는 2014년 3월26일에 개소식을 하고 다시 2014년 10월10일 확대 출범을 하였는데, 이명박정부하인 2009년 6월에 조성된 'SKT동반성장펀드' 150억 원(융자펀드)이 포함되어 있고,
- 충북센터의 경우는 2015년 2월4일에 개소식을 하였는데 2010년 9월에 조성된 '혁신기업펀드' 500억 원(보증펀드)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2015년 7월15일에 개소식을 하였던 울산센터의 경우는 2012년 11월에 조성된 '에코십·스마트십 특화 창조경제 동반성장펀드' 1,000억 원(융자펀드)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 인천센터의 경우는 2015년 7월22일에 맨 마지막으로 개소식을 하였는데 2014년 8월에 조성된 '창조경제성장펀드' 100억 원(투자펀드), 2014년 11월에 조성된 '물류혁신펀드' 200억 원(보증펀드)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미래부 제출 자료)

4) 투자받기 부담되는 융자·보증 펀드가 56.5% 차지

- **총 1조7,384억3천만 원 중 투자펀드 조성액은 7,614억3천만 원(43.8%)이고, 반면에 대출형(융자, 보증)펀드 조성액은 9,770억 원(56.2%) 임**
  - 이는 창업기업의 위험 부담률이 더 크다는 점에서 미래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창업기업들이 쉽게 투자를 받기 어려운 단점을 내포하고 있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숫자놀음식 창업보육기업 지원 통계

1) 센터지역 外 기업 지원 다수

- 미래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센터별 창업보육기업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1,102개 기업 지원 중 273개(25%)는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外의 지역의 창업보육기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16. 8.12 기준)
- 특히 현재 '입주기업' 중에 울산센터는 10개 중 8개(80%), 강원센터는 14개 중 11개(78.6%), 인천센터는 13개 중 10개(77%), 대구센터는 15개 기업 중

9개(60%)가 다른 지역 기업이고, 경기센터는 20개 중 11개(55%), 광주센터는 16개 중 6개(37.5%)가 타 지역 기업이 입주하고 있음

- 또한 '졸업기업'중에는 경기센터는 9개 중 7개(77.8%), 대구센터는 47개 중 21개(44.7%), 광주센터는 17개 중 6개(35.3%), 충남센터는 3개 중 1개(33%), 전북센터는 16개 중 5개(31.3%)가 타 지역 기업이었음
- '입주 외 기업' 지원 현황을 보면, 경기센터의 경우 45개 중 32개(71%), 강원센터는 13개 중 9개(69%), 세종센터는 12개 중 7개(58%), 충북센터는 59개 중 26개(44%), 경북센터는 55개 중 22개(40%), 인천센터는 32개 중 12개(37.5%), 울산센터는 37개 중 13개(35%), 서울센터는 63개 중 21개(33%)가 타 지역 기업이었음

2) 지원기업의 연락처도 불명인 유령지원

-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창업보육기업에 대해 센터가 지원을 했다고 하면서도 지원한 기업의 연락처도 모르고 있다는 것임
- 경기센터의 경우, 입주기업 20개 중 19개, 입주외기업 45개 중 40개가 연락처가 불명이고,
- 광주센터의 경우, 입주기업 16개 중 9개, 입주외기업 19개 중 16개가 연락처가 불명임
- 연락처가 전혀 없는 곳도 있음
  - 입주기업 중 경남센터(15개), 세종센터(7), 서울센터(72)
  - 졸업기업 중 광주센터(17), 경기센터(9), 서울센터(12)
  - 입주외기업 중 세종센터(12)
- 이 분석 자료는 미래부에 지난 해 8월3일 자료 요청을 통해 창업보육기업 지원현황 자료에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하여 제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다시 9월12일에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결과는 동일한 것이었음
  - 센터가 직접 지원해 놓고도 연락처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됨

3)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지원

- 창업보육기업들에 대해 각 센터가 입주기업이나 졸업기업들에게 도대체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언떤 지원 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면, 각 센터에서 지원한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지원의 실체를 보여 주고 있음
- 즉 모든 센터의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음
- 이 또한 미래부에 지난 8월3일 자료 요청을 통해 각 센터가 창업보육기업에 대한 지원 내역을 명기하여 제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원내역이 없었고, 이에 다시 9월12일에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결과는 동일한 것이었음
- 이는 결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거창한 이름만 달고 있었지 창업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육성·지원한 것은 매우 부실하였음을 입증해 주는 것임

4) 발표 통계와 실제 통계의 불일치, 주먹구구식 통계잡이 전형

- 미래부는 「성장동력 부처합동 점검 TF」 제3차회의('16. 8.18 보도자료)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후 2년 동안 2016년 7월29일 기준으로 〈창업보육기업〉 지원 수를 **1,136개**라고 발표하였지만, 실제 제출된 자료에서는 **1,063개**였고,
  - 〈중소기업〉 지원 수는 1,607개로 발표하였으나, 실제로 제출한 자료에서는 **1,550개**였음
- 또한 「창조경제 축제 한마당, '2016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16. 8.25 보도자료)을 개최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성과'로 2016년 8월12일 자 기준으로 〈창업보육기업〉 지원 수를 **1,175개**로 발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에서는 **1,102개**였고,
  - 〈중소기업〉지원 수는 **1,664개**로 발표하였으나 실제 제출된 자료에서는 **1,607개**였음
- 정부는 정확한 통계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요철형 자료를 발표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만 홍보하는데 급급한 것임

- 이는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통계잡이로 정부 스스로가 실체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5) 2017년 신규사업인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허구성

- 본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기획 및 지원, 지역 전략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임
  - 그러나 이미 지역혁신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18개 지역에서 시·도가 지정한 지역전략산업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실제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활성화 시켜 왔던 테크노 파크, 분야별 지역 클러스터들이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보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것임
-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굳이 창조경제혁신세터가 테크노파크 등에서 하고 있는 동일·유사한 사업을 중복해서 수행 할 의의가 없음. 즉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은 없는 구색맞추용 내지 보여주기식 사업에 불과함

구색맞추기용 고용존 설치

- 고용노동부의 지엽적 업무 수행, 있으나 마나한 「예산낭비존」
  - 현재 전국 17개 센터별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 받은 2명의 무기계약직 직원(고용존 상담사)이 고용존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
  - 고용존의 사업목표는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혁신센터의 역할 확대방침에 따라 취·창업 동시지원, 효과적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마련임
  - 그러나 실제로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고용존 상담사 2명의 역할은 취업상담이 대다수 이고, 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센터와 연계시켜 주는 것이 전부임
  - 한마디로 고용존은 고용노동부의 주요 업무 중 일부 지엽적인 부분을 중복하여 수행하는데 불과하여 굳이 별도의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고용존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

- 결국 구색맞추기용으로 실효성도 없는 고용존을 설치하여 고용노동부의 기본 업무를 흉내 내고 있는 것임

◎ **고용노동부 사업의 일부에 불과한 2017년도 신규사업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 본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존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신기술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2)창업 초기단계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 매칭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함
- 그러나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음**
- 전국 17개 센터에 평균 1억6,470만원(28억원÷17개)을 투입해서는 위와 같은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즉 위에서 제시하는 사업 목적은 지역혁신센터의 역량으로는 담당하기에 불가능함. 차라리 고용노동부에서 주도하여 현재 각 지방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확대·재편하여 수행함이 바람직함
- 고용존은 이미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청 내 고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즉 구직알선, 채용박람회를 통한 취업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과 다를 바 없어 중복사업, 중복 예산이 되므로 원천적으로 고용존 설치 의의가 없음
- 이러한 유형의 일자리사업 추진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신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7]'사업과 '**직업안정기관운영**[8]'사업을 통해서도 수

7)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1056-350)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1,323억 9,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자치단체지원사업 123,600백만원
- 지역고용인프라 확충사업 430백만원
- 운영경비 762백만원
- 고용환경개선지원5,553백만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지원사업 : 2,050백만원

8) 고용노동부의 '직업안정기관운영' 사업(1032-301)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596억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고용복지+센터 확대: 28,272백만원
- 고용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12,387백만원
- 사설보안요원 운영비 : 1,009백만원
- 고용센터운영: 13,562백만원
- 일일취업센터운영: 63백만원
-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2,235백만원

행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현재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30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각종 고용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음

- 특히,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고용노동부의 **'지역·신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중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지원 사업**(20억 5,000만 원)' 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계상된 이후 2017년도에 예산에도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동 사업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평균 1억2천만 원을 지원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혁신센터 간 연계를 통해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사업공모를 통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광역단체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연계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기획하여 신청하게 되면 고용노동부는 이를 심사하여 사업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함
- 미래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 동안 각 센터에서 고용존을 통해 17개 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했다고 하는 1,820여 명(각 센터 당 평균 107명)의 취업 내용은 위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청 내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한 것과 다를 바 없음
- 취업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청 내 고용지원센터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어느 쪽이나 취업 지원에 특별히 다른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임
- 결과적으로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직업안정기관운영'사업인 전국 지방청 고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역할 및 '지역·신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과의 일부로 중복된 사업에 불과함

확인되지 않는 신규 고용 창출

-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청와대와 미래부는 1,175개의 창업기업과 1,664개의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2,85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고, 혁신센터가 보육한 창업기업에서 '약 1,606억 원의 매출 증가'와 '1,360명**

•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2,076백만원

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함

- 그러나 2,839개 기업이 2,8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하면 기업 1개당 겨우 평균 1억 원에 불과함. 이것도 현금, 현물, 기술 등 어떤 식의 투자를 받았는지, 일부 기업에 쏠림형 투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창업기업의 1,606억 원의 매출 증가나, 1,36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제출하였으나 취업 기업에 대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 구체적인 조사가 불가능함

지역 창조경제 혁신거점 역할 측면에서 성과 미흡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성과에 있어 지역간 편차가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창조경제 혁신거점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
- 혁신센터 설립이 정부와 대기업 주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혁신센터 특화 전략산업과 지역산업생태계와의 연계성이 미흡함

보고하고 지시하는 획일적 센터 운영

- 민간 재단 형태로 설립된 혁신센터지만 '창조경제추진단'의 통제를 받아 자율성이 떨어짐
-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청와대 미래 수석실이 컨트롤하고 있으며 정부 유관부처와 지자체, 대기업과 전경련 등이 지원하고 있어, 센터 자율로 사업이 진행되기 보다는 정부의 획일적 지시에 따라 운영되는 상황임

공간 운영의 합리성 저하

- 특정 심야시간 이후에 건물 전체가 폐쇄되는 곳에 소재한 센터는 창업보육 활동에 있어서 시간적인 제약이 존재
- 일부 센터는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됨(이하 2016년 기준)
  - 서울센터의 경우, 메인센터(광화문 KT빌딩(1층)) 임대료가 月 1억1천만 원,

인큐베이팅센터(서울지방우정청(5층)) 임대료가 月 2,100만원으로 연간 임대료가 15억7,200만 원을 지출하고,

- 대구센터 및 경기센터는 月 4,000만 원, 연간 4억8,000만 원,
- 전북센터의 경우는 月 3,300만 원, 연간 3억9,600만 원,
- 부산센터는 月 2,900만 원, 연간 3억4,8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음

- 서울센터의 경우, 이 임대료(연간 15억7,200만 원)는 해당 센터의 연간 운영예산 28억3천만 원의 55.5%를 차지하며, 이 임대료를 창업기업 1곳당 3천만 원씩 나누어주면 총 52개 기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임

어이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 2016년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에는 센터별 특화기능에 대한 소개, 대표 보육기업의 제품 체험을 위해 19개 혁신센터(18개 혁신센터+문화창조융합센터)를 독립부스로 구성하였으며, 스타트업 행복나눔 · 청년 아이디어 마켓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였음
- 2015년 7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불과 1개월 만에 축제를 열었고, 2016년 8월에는 전국 센터가 엄청난 실적, 성과를 올린 것처럼 홍보하기 위해 두 번째 축제를 열었음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발표하는 이런 저런 실적들은 과거 정보통신부나 기존의 중기청이나 산업부 등이 평소에 지원해 오던 내용들을 마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등장한 결과 새롭게 만들어진 업적인양 홍보하는 축제를 개최한 것임
- 특히 지방에 소재하는 센터에 입주해 있는 일부 기업이나 외부 일부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정부(미래부) 주도로 열리는 페스티벌 등 각종 홍보 전시성 행사에 동원되는 것에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대통령 치적 홍보, 국민 호도용 축제에 불과한 곳에 아까운 혈세(5억9천만+8억1500만 원 = 15억 원)를 낭비하는 미래부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할 것임

(3) 정권 도구화용 공영방송 이사 추천

현황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015년 8월13일(목) 제4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 이사 1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함) 이사 9명 및 감사 1명을 선임하기로 의결
- 정부 여당이 추천한 이사의 면면을 보면, 공영방송을 공공·공익성 및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감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공영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고착화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임

주요 인사

- 당시 차기환 방문진 이사는 '극우 성향'으로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일간베스트 글을 퍼 날라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방문진 이사에서 KBS 이사로 갈아타면서 초유의 '3연임' 이사가 됐음
- 극우적 발언으로 물의 빚은 조우석도 KBS 이사로 선임됐음. 또한 강규형은 기존 교과서가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해왔던 교과서포럼의 운영위원 출신
- 공안검사 출신으로 재직 시절 '부림사건' 담당 검사 출신으로 세월호 유족을 '떼쓰는 사람들'에 비유하며 파문을 일으켰던 고영주 당시 방문진 감사가 이사로 선임(이사장 선임)되었고, 그는 2015년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임명됐던 자임
- 노무현 정권을 '수구좌파'라고 규정하는 자유주의연대 창립에 참여했으며, 보수성향의 인터넷신문 프리존뉴스의 대표필진으로 활동해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인 김광동 이사는 방문진에서만 '3연임'을 한 인사가 됐고, 정수장학회 장학생 출신으로 알려진 '친박' 김원배 이사 또한 연임되었음
- EBS에서는EBS 간판 프로그램 〈지식채널 e〉와 〈다큐프라임〉이 편향됐다고 주장한 이력에다'한국사 교과서 논쟁'을 다룬 EBS 심야 생방송 〈교육대토론회〉에

나와 (당시)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에게 '미친 여성'이라고 막말을 해 EBS에서 영구출연정지 조치를 받은 인물인 조형곤과 EBS 이사로 재임중 다른 이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16개월 만에 자진사퇴했다가 다시 이사가 된 안양옥(새누리당 비례대표 지원으로 2016. 3 사임)이 있음

- 특히 방문지 이사(이사장) 고영주는 편협된 극우적 이념에 빠져 민주인사들을 좌경세력으로 호도한 장본인으로 결코 공영방송 이사를 맡을 수 없는 자임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입증됨
- 또한 2014년 9월 이길영 이사 사임으로 보궐 임명된 독재·친일미화주도 사학자 이인호가 연임되었지만 여당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여 주었음
- 앞서 2014년 6월 정권대변 편파적 정치심의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약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박효종을 위원장으로 앉히고, 극우 편향된 성향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는 함귀용 심의위원,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대표적 인물로 최근 논란이 뜨거웠던 '대북전단 살포' 필요성을 역설해온 인물인 조용기 심의위원을 일찌감치 배치한 바 있음

(4) 부끄러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민낯

현 황

- 2016년 5월 3일은 세계언론자유의 날(World Press Freedom Day)을 맞아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2002년 이후 매년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wide press freedom index)[9]'를 발표함

※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RWB), Reporters sans frontières(RSF)) : 1985년 프랑스의 라디오 기자 '로베르 메나르'가 창설한 비정부 국제기구. 전세계 언론인들의 인권 보호 및 언론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세계 각국 언론인들의 연대 및 언론인들의

9)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지수로, 조사 방법은 기자 살해·체포 및 투옥·협박·고문 등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행위와 검열·압수·수색·규제 등 미디어에 관한 사항 등을 50개 항목으로 세분화 하여 산출함

인권 보호, 투옥된 언론인들의 변호와 세계언론자유지수 발표 등의 활동을 함.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9개 지부 및 130여개국에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음

-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6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총 180개국 중 2015년 보다 10계단 떨어진 70위로 역대 최저 순위를 기록함**[10)]
  -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는 2010년 42위, 2011~2012년 44위,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도에는 무려 10단계나 추락한 70위로 최악의 기록임
  - 우리나라는 언론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 39위로 출발해 참여정부시절인 2006년 31위에 올라 최고를 기록하였음
- **미국의 국제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016년 4월28일 발표한 〈2016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은 총 199개국 중 66위를 차지해 6년 연속'부분적 언론 자유국'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음**

3 박근혜정부 공약 미이행, 파기 실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公約의 空約化

- **대통령 후보 공약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공약에서 '방송은 공공성을 지닌 미디어이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로 독립성, 중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고 진단하면서,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국민 앞에 엄숙하게 약속하였음
- **표 구걸용 거짓공약 입증**
  - 박근혜대통령은 당선 후 자신이 약속한 공영방송의 지재구조를 개선 공약 이행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언급한 적이 없음
  - 지난 2013년 3월 정부조직협상에서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담보를

10) 1위-핀란드, 2위-네덜란드, 3위-노르웨이, 4위-덴마크, 5위-뉴질랜드, 6위-코스타리카, 7위-스위스, 8위-스웨덴, 9위-아일랜드, 10위-자메이카, 41위-미국, 70위-한국, 72위-일본, 176위-중국, 179위-북한, 180위-에리트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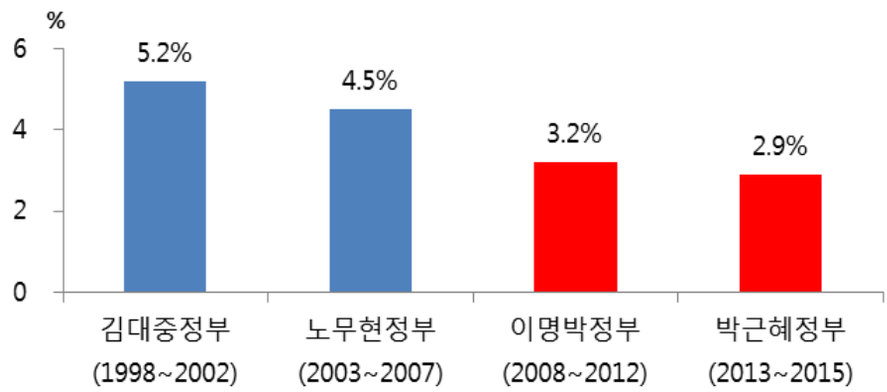
위해 여야합의로 구성한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새누리당은 전혀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여 방송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계속 악용하려는 의지만 보여주었음

- 특위 자문교수단에서 제시한 절충안마저도 일언지하에 거부하며 방송장악의 마각을 드러내었음
- 또한 여야가 합의한 사측과 종사자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법률안마저도 종편채널이 무서워서 뒤집고 거부한 바 있음
- 결국 박근혜대통령의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공약은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구걸하기 위한 동냥공약, 위장공약이었음이 명백함

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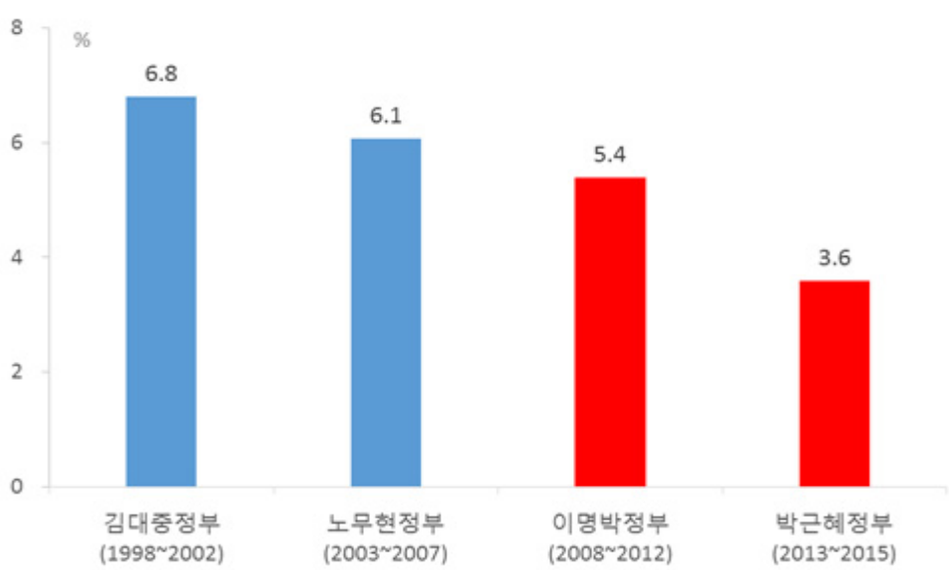
통계로 본 박근혜정부

정부별 연평균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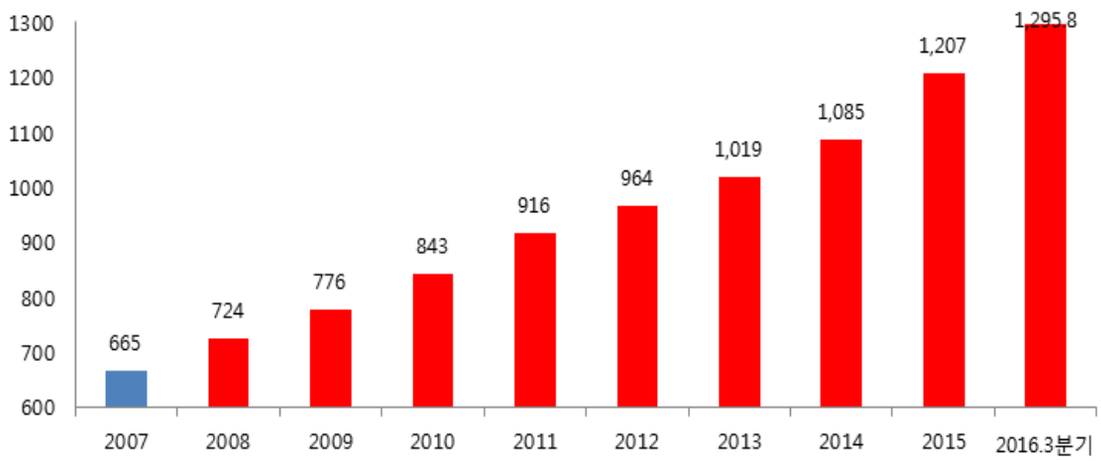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10년 기준(연쇄가격, 2008 S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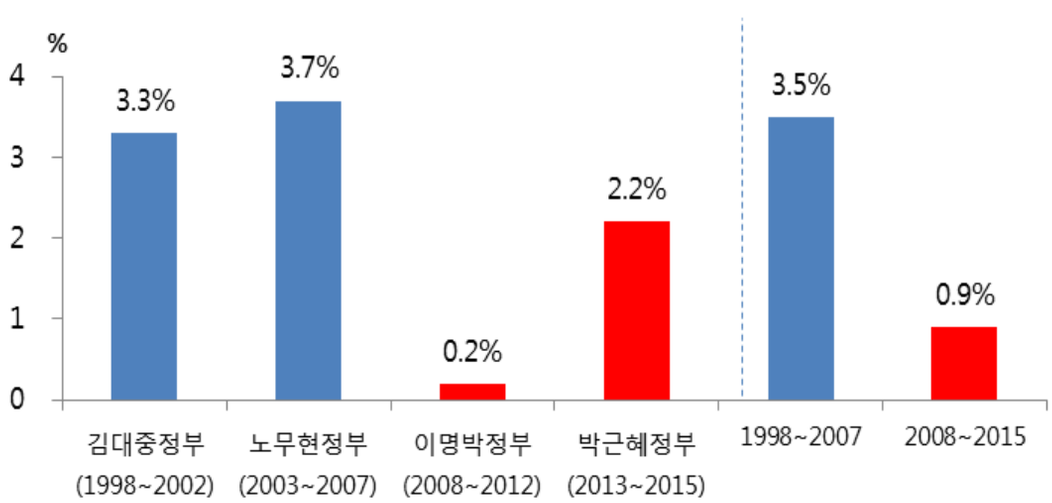
정부별 연평균 1인당 명목소득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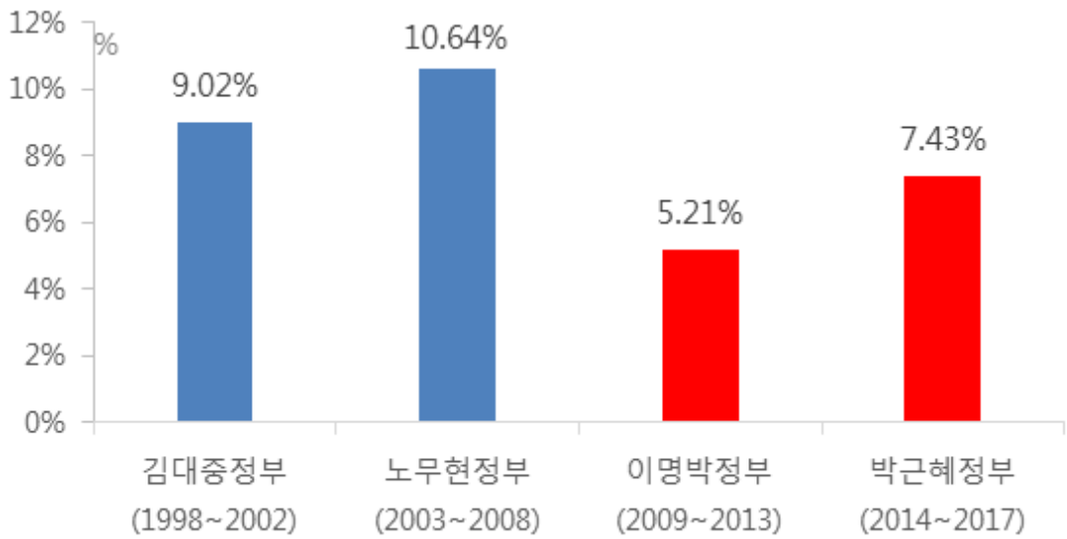
가계부채 규모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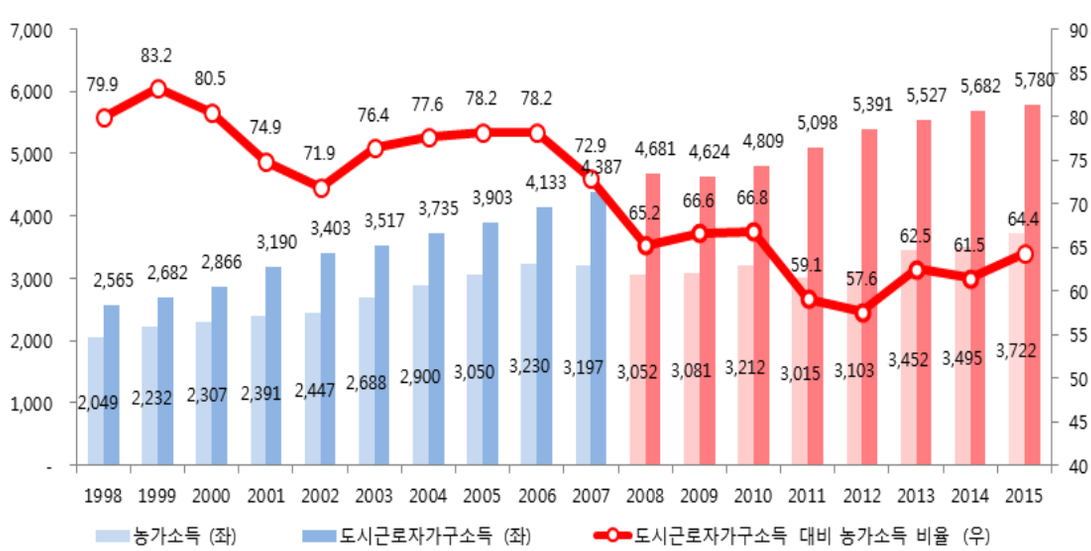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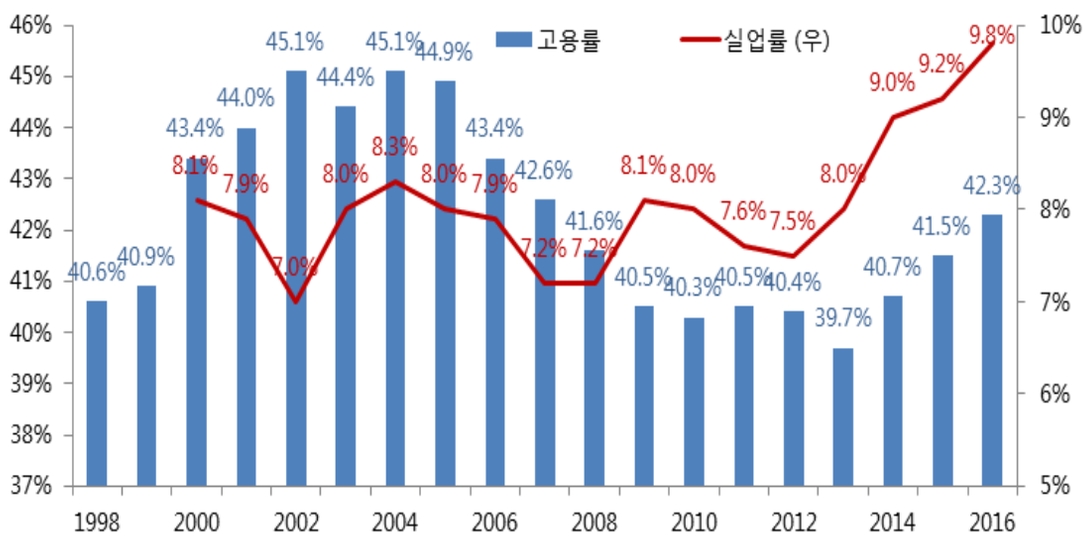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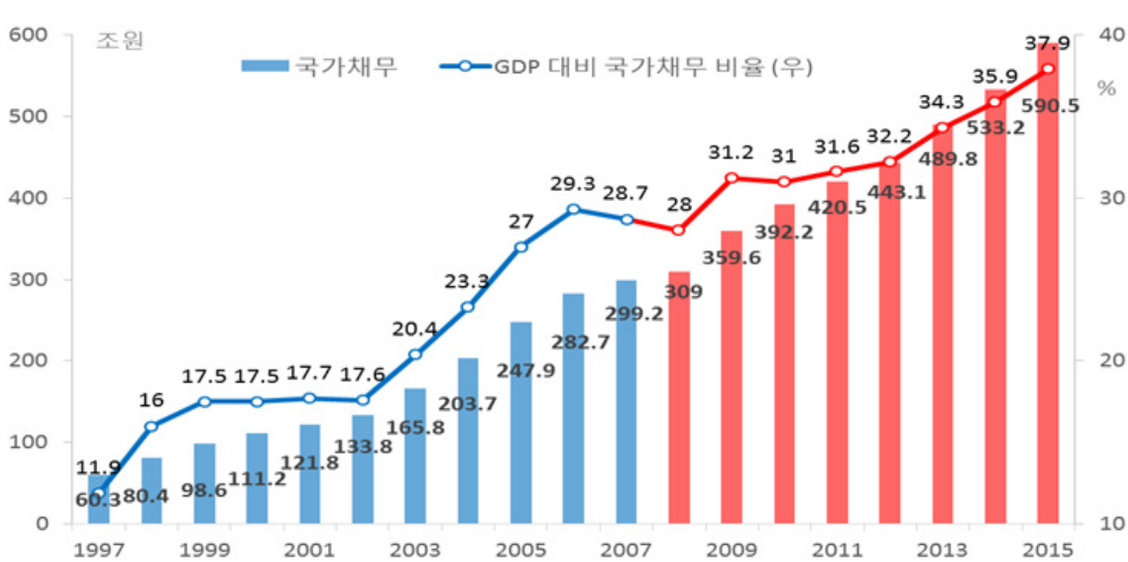
도시소득 대비 농가소득



청년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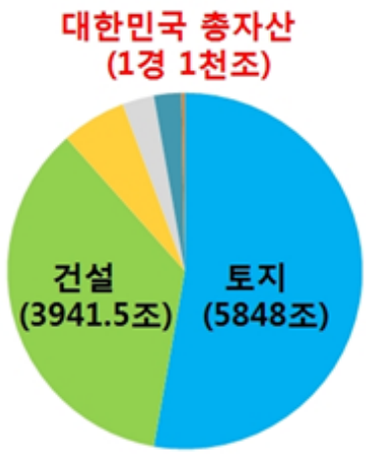
국가 채무 규모와 비율 추이



대한민국 자산현황

❖ 대한민국 총자산에서 토지자산(52.8%)과 건설자산(35.6%)을 합치면 전체의 88.4%를 점유

❖ 이밖에 설비자산 648.7조(5.9%), 재고자산 321.6조(2.9%), 지식재산생산물 273.2조(2.5%), 기타 32.8조(0.3%)로 나머지 자산을 합쳐도 전체의 11.6%에 불과



국가투명성·부패지수

구분	2007년 (참여정부)	2016년 (박근혜정부)	분석
세계경제포럼 (WEF) 국가경쟁력 평가 중 기업지배구조 및 사법체계 독립성, 정부정책결정의 투명성 순위	86위 (기업 이사회의 효율성)	109위 (기업 이사회의 효율성)	• WEF가 발표한 201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박근혜정부는 참여정부 말기(2007년)에 비해 ▲기업이사회의 효율성은 23단계, ▲소수주주 이익보호는 21단계, ▲사법체계의 독립성은21단계,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무려 81단계나 하락
	76위 (소수주주 이익보호)	97위 (소수주주이익 보호)	
	51위 (사법체계의 독립성)	72위 (사법체계의 독립성)	
	34위 (정부정책결정의 투명성)	115위 (정부정책결정의 투명성)	
국제투명성 기구 부패인식지수	27위	52위	• 박근혜정부의 부패인식지수는 참여정부 당시(2007년)보다 무려 25단계나 하락 •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발표결과 우리나라는 176개국 가운데 52위(100점 만점에 53점)를 기록하여'절대부패를 벗어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 2015년의 37위에서 무려 15계단을 하락하여 1995년 부패인식지수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OECD 순위도 35개국 중 29위로 2단계나 하락하여 하위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아시아권에서도 싱가포르(7위, 84점), 홍콩(15위, 77점), 일본(20위, 72점), 대만(31위, 61점)보다 낮은 수준이며, 보츠와나(35위, 60점), 브루나이(41위, 58점), 르완다(50위, 54점)보다 낮은 수준
국민과 기업인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및 부패 인식 수준	•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는 27%로 42개 조사국 중 39위로 최하위권 • 2015년 형사정책연구원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 법원의 신뢰도는 24.2%, 검찰의 신뢰도는 16.6%로 매우 낮은 실정 • 2016년 여론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7명(70.4%)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89,9%가 "검찰수사가 돈이나 인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응답하여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2016.9. 중앙일보 여론조사결과) • 2016.12.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결과 기업인(일반기업체와 자영업자 종사자)의 3명중		

구분	2007년 (참여정부)	2016년 (박근혜정부)	분석
	2명 꼴로(66.9%) 공공부문의 부패가 '심하다'라고 응답하여 2013년 57.6%에 비해 기업인의 공공부문 부패심각도가 현저히 악화 - 법조(법원·검찰)분야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와 관련, 기업인 가운데 72.2%가 법조분야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2013년 61.4%) - 공직내 직종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과 관련, 판사와 검사 등을 포함한 법조인의 부정부패 심각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9.1%가 법조인의 부정부패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 - 사법기관의 부패감시 및 통제기능의 숫행정도와 관련, 기업인의 79.7%가 부패감시 및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 감사원의 부패감시 및 통제 기능과 관련, 응답자의 73,4%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		

남북교류 통계

구분		2007년 (참여정부)	2016년 (박근혜정부)	분석
남북 인적 왕래		159,214명	14,787명	o 2016년 인적왕래 인원은 개성공단 폐쇄로 전년에 비해 절대적으로 감소. 2016년 방북자 전체(단 1명 이산가족, 북 류미영 청우당 위원장 아들)가 개성공단 방북자라고 볼 수 있음.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방북자 전무. o 2015년 132,097명. 이 중 절대다수는 개성공단 출입 인원임. 겨레말큰사전, 개성 만월대 참관, 유소년·노동자 축구단, 종교인 방북 등 총 1,610명을 제외한 방북자 절대 다수는 개성공단 근로자이며, 방남한 사람은 4명(광주 대표단장 사전회의 참가)에 불과. ☞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의 인적 왕래 전면 차단.**
남북 교역액		1,797백만 달러	333백만 달러	o 전체 교역액 333백만 달러 중 반입 186백만 달러는 전부 개성공단 관련 반입액이며, 반출액 147백만 달러 중 개성공단 반출액이 145백만 달러이고 비상업적 거래는 단 2백만 달러에 그침. o 2015년 2,714백만 달러. 이 중 2,703백만 달러는 개성공단 생산을 위한 반출입으로 인해 교역 통계에 잡힌 것임. 순수 일반교역과 민간지원액(934만 8천달러)에 그침. ☞ **5·24조치로 인해 순수 남북교역은 전무라고 평가. 이로 인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날로 심화.**
개성공단 생산액		18,478 만 달러	-	o 개성공단 폐쇄가 2월 11일에 이루어져 공식적인 통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2015년 생산액은 56,330만 달러이며 2005년~2015년 총 생산액은 323,303만 달러.
관광객	금강산	345,006명	0명	08년 7월 금강산관광 중단, 08년 12월 개성관광 중단
	개성	7,427명		
	계	352,433명		
쌀·비료 지원		쌀 40만톤 비료 30만톤	0	o 쌀 지원은 2002년 이후(2006년 제외) 지속적으로 실시. 비료는 2000년 이후 매년 지원. ☞ **MB 이후 지원 전무**

구분	2007년 (참여정부)	2016년 (박근혜정부)	분석
이산가족 상봉 (당국차원)	3,613명	0명	o 05년 이후 매년 3000명을 상회하는 이산가족 상봉.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010년 각 1회 상봉에 그침. 박근혜정부 시기에는 2014년813명(170가족), 2015년에 972명(186가족) 단 2차례에 그침. ☞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014년, 2015년 각 1차례 총 2차례 상봉에 그쳐.**
남북회담 (당국)	55회	0회	o 2016년 남북대화 전무.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남북대화가 한 차례가 없었던 해는 1996년 2012년, 2016년 단 3차례. 박근혜정부 출범(2013년) 이후 현재까지 총 40회.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 한 해 55회한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음. ☞ **남북당국 대화 제로 시대,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을 반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6년	분석
기업집단 및 계열사 수	79개집단 1,680개	41개집단 1,005개사	65개집단 1,736개사	• 7년여 사이에 대기업집단은 41개에서 65개로 59%가 증가하였으며, 대기업집단별 계열사 수는08년 24.5개에서 16년에는 26.7개로 증가 ☞ **08년4월 현재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이 79개, 1,680개였던 점을 감안할 때, 자산규모 2~5조원 사이에 있던 대기업들이 대폭적으로 몸집을 불린 것으로 보임**
자산총액	1,161.5조원 (79개집단)	1,137조원 (48개집단)	2,337조원 (65개집단)	• 집단별 평균 자산총액은 09년 27.3조원에서 16년에는 36조원으로 증가 ☞ **특히, 민간 4대기업(삼성·현대차·SK·LG)의 자산총액은 09년 416조원에서 16년에는 824.6조원으로 거의 두배가까이 증가**
매출액 총액	859.7조원 (79개집단)	1,009.8조원 (48개집단)	1,403조원 (65개집단)	• 집단별 평균 매출액은 09년 21조원에서 13년에는 24.8조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최근 감소하면서 16년에는 21.6조원으로 내려옴 ☞ **민간 4대기업의 매출총액은 09년 427조원에서 16년에는 630.6조원으로 47.7% 증가**
당기 순이익	57.8조원 (79개집단)	30.9조원 (48개집단)	54.9조원 (65개집단)	• 집단별 평균 당기순이익은 09년 0.64조원에서11년에는 1.49조원까지 증가하였으나 16년에는 0.85조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음 ☞ **민간 4대기업의 당기순이익은 09년 20.8조원에서 16년에는 44.8조원으로 두배이상 증가**

※ 매년 4월1일경에 정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2008년에는 4월3일에, 2015년에는 4월1일에 발표)

※ 08년 7월 1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되었음. 2008년은 2조원기준이고, 2009년부터는 5조원 기준임.

공공사회복지지출·국가 빈곤률

〈표〉 OECD 국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순위

(2014년 기준, 단위 : %)

1위 프랑스 31.9	2위 핀란드 31.0	3위 벨기에 30.7	4위 덴마크 30.1	5위 이탈리아 28.6
6위 오스트리아 28.4	7위 스웨덴 28.1	8위 스페인 26.8	9위 독일 25.8	10위 포르투갈 25.2
11위 네덜란드 24.7	12위 그리스 24.0	13위 슬로베니아 23.7	14위 룩셈부르크 23.5	15위 헝가리 22.1
일본 22.1	16위 노르웨이 22.0	17위 영국 21.7	18위 아일랜드 21.0	뉴질랜드 20.8
19위 체코 20.6	19위 폴란드 20.6	21위 스위스 19.4	22위 미국 19.2	23위 호주 19.0
24위 슬로바키아 18.4	25위 캐나다 17.0	26위 아이슬란드 16.5	27위 에스토니아 16.3	이스라엘 15.0
터키 12.5	28위 한국 10.4	칠레 10.0	멕시코 8.1	28개국('14년) 평균 21.6

※ 순위는 2014년 자료가 있는 국가만 부여. 연도를 무시하고 34개 국가 전체를 비교하면 한국은 34개국 중 32위

※ 일본, 뉴질랜드, 이스라엘, 터키, 칠레는 2013년 자료. 멕시코는 2010년 자료

〈표〉 OECD 국가 빈곤율 현황

구 분		OECD 평균※	한국※※
전체 인구	시장소득 기준 빈곤률(A)	28.4%	19.5%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률(B)	11.5%	16.0%
	개선 효과(A-B)	16.9%p	3.6%P
65세 이상 인구	시장소득 기준 빈곤률(A)	70.1%	61.7%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률(B)	11.2%	46.9%
	개선 효과(A-B)	58.9%p	14.8%p

※ OECD 평균은 OECD에서 발표한 34개국별 최근 빈곤률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 호주, 핀란드, 헝가리,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미국은 2012년 자료.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은 2011년 자료. 벨기에는 2010년 자료. 일본은 2009년 자료

※※ 한국 자료는 2016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서 발표된 수치

환경성과·신재생에너지 예산 비율

역대 정권별 환경성과 지수 변화

년도	노무현정부	MB정부		박근혜정부	
	2008	2010	2012	2014	2016
환경성과 지수 (순위/국가수)	79.4 (51/149)	57.0 (94/233)	57.2 (43/132)	63.79 (43/178)	70.61 (80/180)

※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100점 만점) : 세계경제포럼(WEF)이 2년마다 각국의 환경과 관련된 경제, 사회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

연도별 사전환경성 검토 부동의 비율

년도	노무현정부	MB정부				박근혜정부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부동의 비율(%)	2.7	0.8	0.9	0.6	0.5	0.5	0.69	0.38	0.53

※ 사전환경성 검토 부동의 비율 : 정부가 개발사업 전에 환경측면을 고려해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이 사업은 환경을 해쳐 곤란하다'고 사업에 제동을 건 '부동의' 결정 비율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규모 감소 추이표

(단위 : 억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박근혜정부		
					2014	2015	2016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1,202	1,290	1,340	1,319	1,120	1,183	1,009
태양광발전 보급지원	600	500	550	260	214	204	204
총계	1,802	1,790	1,890	1,580	1,334	1,183	1,009

※ 2015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 통합됨

성불평등 통계

성불평등지수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국 성격차지수 순위 (WEF Gender Gap Index)	108위	111위	117위	115위	116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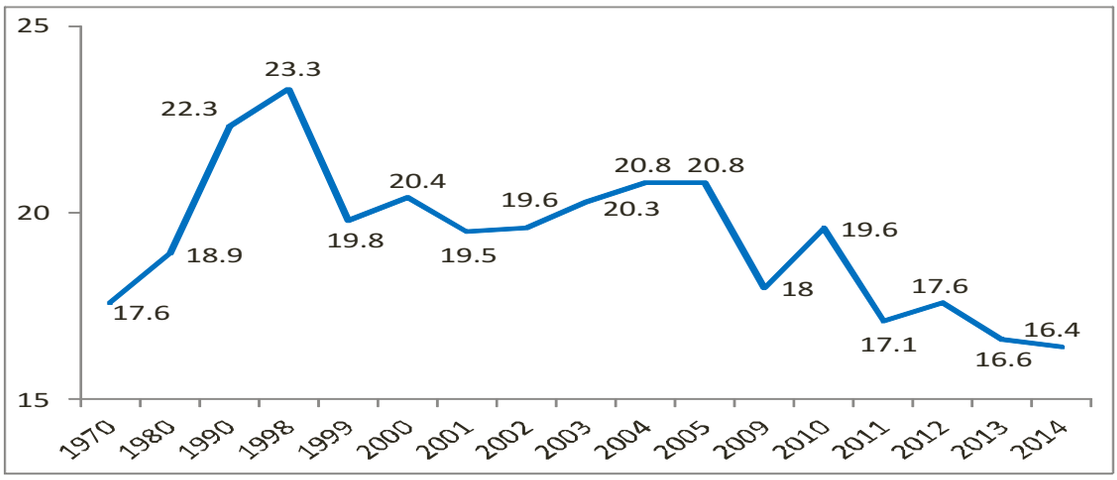
성별임금격차(남성 대비 여성임금 현황)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남녀임금격차(%)	64.4	64.0	63.1	62.5

교육예산·학자금 대출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변동 추이



* 반상진(2015). "지방교육재정 현실 파탄위기인가? 방만운영인가? "토론회자료집 p.33.

연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2,831	384,473	408,119	408,681	394,056	431,615
전년대비 증가(%)	9.2	9.0	6.2	0.1	△3.6	9.5

* 교육부자료. 2016.

'12~'15학년도 학자금 대출 실적

(단위 : 억원, 건)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취업후상환학자금	15,150	510,052	17,811	590,746	16,386	585,407	13,705	522,847
일반상환학자금	8,114	217,615	7,709	194,054	7,831	198,315	7,549	189,832
합계	23,264	727,667	25,520	784,800	24,217	783,722	21,254	712,679

* 저금리 전환대출 제외, 건수는 학기별 단순 합계임